제4부 심의 · 의결 사례

제1장 자체심의

제2장 시정요구심의

제3장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제1장 자체심의

1. 경고문 게재

의결번호	2008자심6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 종 선
심의대상기사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주 문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발행되는 주간 월요신문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게재는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그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을 그의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기획 연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게재는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그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을 그의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기획 연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기획연재 / 정청래 의원의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 ⑫잃은 자유, 얻은 자유

천정배 국회의원이 저술한 자전적 저서 '꽁지머리 묶은 인권 변호사'가 지난 353호를 끝으로 종연됨에 따라 금번 354호부터는 정청래 국회의원의 저서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를 연재합니다.

본 연재물은 정청래 의원의 개인사를 포함한 사회운동을 그린 저서로 그간의 인생 역정과 운동가의 역경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아울러 본 연재물은 작자의 기획의도와 에피소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만큼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그 사람과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순박하게 생긴 그와 짝을 이뤄 연식정구도 하면서 기운을 많이 차렸다. 그처럼 대다수 말단 교도관들은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었다.

개처럼 밥을 먹게 만들어

1사 1방으로 옮겨졌다. 1사는 재판 대기자들이 있는 미결 사동이었다. 보통 기결수들은 영선반, 취사반, 목공반, 미장반 등에서 일하는데 시국사범들은 제외되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화라도 할까봐 항상 독방에 가둬두는 것이다. 보안과장이 하루에 한 번씩 순시를 돌았다. 순시가 시작되면

32 연재

월요신문

연재 33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 에도 '민주화 바람'

천정배 정청래의원의 '사람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든다'

② 잃은 자유, 얻은 자유

목포교도소 보안과장이던 시절은 이중인격자로 소문난 시절

'언젠가 그 더러운 기면 벗겨주리라' 순시마다 등 돌리고 앉아

교도소에 연속나 투쟁한 것은 아니다. 그곳도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꾸려나가는 생활 공간이다. 내가 있던 1사 생층에는 변기를 덮고 올라서면 창살 너머로 밖이 훤히 보였다. 추석이나 설이 돌아오면 정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그럴 때면 괜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교도소에 연속나 투쟁한 것은 아니다. 그곳도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꾸려나가는 생활 공간이다. 내가 있던 1사 생층에는 변기를 덮고 올라서면 창살 너머로 밖이 훤히 보였다. 추석이나 설이 돌아오면 정모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그럴 때면 괜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인터폰이 울린다.

"보안과장 순시입니다!" 교도관들은 모자 쓰고 정돈을 하느라 난리가 난다.

"순시!"

"충성! 정원 ○명 중 ○명, 이상 무!"

담당자가 경례를 붙이고나면 재소자들 방 앞을 돌아본다.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은 가부좌로 앉아 보안과장의 '번호!' 하는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해야 했다. 당시 목포 교도소 보안과장이던 사람은 이중인격자로 소문이 났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재소자들이 조금이라도 규칙을 어겼다 싶으면 징벌 방에 보내 온몸을 묶어놓고 개처럼 입으로 밥을 먹게 만들었다.

'언젠가 그 더러운 가면을 벗겨주리라' 생각하면서 석 달 동안 순시를 돌 때 등을 돌리고 앉았다.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김남주 시인의 시집 〈조국은 하나다〉를 꺼내놓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읽거나 노래를 불렀다. '난 당신 얼굴보고 싶지 않다. 내 뒤통수나 보고 가라'는 소리없는 외침이었다.

첫 싸움의 패배는 큰 교훈을 남겼다. 철저히 준비하고 조직적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었다. 차근차근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가장 먼저 소지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30명 남짓 되던 소지들의 연애편지를 대신 써주었다. 30명의 여자들과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편지를 꽤 잘 쓴다는 소문이 나면서 너도나도 여자친구의 편지를 들고왔다. 최대한 애틋하고 감미롭게 써 보낸 편지에 감동했다는 애인들의 답장이 날아들자 소지들은 너무 좋아하고 우쭐해했다. 연애편지 대필 덕분에 나는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 (중략)

담배 한 개비에 5천원

한 개비에 5000원, 한 갑이면 10만원에 팔 수 있는 담배는 그들에게 좋은 수입원이었다. 예를 들어 재소자가 담배 한 갑을 원한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부탁해 교도관의 통장 계좌로 10만원을 입금한다. 교도관은 입금을 확인하고 담배 한 갑을 건네주는 것이다. 액수가 크다 보니 많은 교도관들이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방을 검사하는 '검방' 때 담배가 발견된 것이다.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하는 가운데 교도관은 빠지고 재소자들만 '통닭구이'나 물고문을 당했다는 이야기였다.

사람들을 취조하고 폭행한 담당은 내가 처음 이감 왔을 때 소년수의 따귀를 때려대던 서○○였다. 악명 높은 그를 이번 기회에 혼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바로 '비둘기를 날렸다.' 내 편이 된 소지들을 통해 모든 시국사범들에게 소식을 전했고, 특별 접견하는 사람들을 통해 밖에도 알렸다. 민가협어머니들, 한겨레신문, 목포대 민주화 교수들에게 소내에서 벌어진 일과 그 때문에 몇 날 몇 시에 소내 민주화 투쟁을 전개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번에는 지난 실패를 거울삼아 찬찬히 조직적으로 싸워나갈 작정이었다. 이렇게 터진 일은 신문에도 보도되었다. 담배 사건은 몇백만원 단위로 터지고 여러 교도관들이 연루되다 보니 한번나면 그 교도소는 아주 골치아픈 상황에 빠진다.

우리는 '폭력교도관 서○○를 퇴직시켜라. 교도소장이 공개 사과 방송하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연루된 교도관을 처벌하라.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을 징계하라' 등의 요구를 내걸고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각지에서 민가협 어머니들과 재소자의 가족들,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찾아와 안팎에서 동시에 문제를 터뜨렸다. 안에서만 했으면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이 심했을 텐데, 밖에서도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니 교도소 측에서 손을 들었다.

소장이 나를 불러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다. 우리의 요구를 말해주었다. 서○○는 퇴직시키기 어렵다고 하여 광주로 전출시켰다. 재소자들 폭행에 가담한 교도관들은 감봉 조치했다. 가장 큰 성과는 소장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공개 사과 방송을 한 것이었다. 사과 방송 내용도 내가 작성했다.

이후로 옥중투쟁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졌고, 목포교도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소내에도 점차 민주화 바람이 불며 숨통이 트였다. 교도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재소자 처우도 개선되었다. 상전벽해의 상황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정청래 의원 약력

- 1965년 충남 금산 출생
- 1984년 대전 보문고등학교 졸업
- 1992년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2000년 전대협 민주동우회 (청년 건대)초대 회장
- 2004년 (현)제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결정 후 보도문

〈6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희석)는 필요신문 2008년 1월 13일자 32-33면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게재는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그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비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필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을 그의 약력,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기획연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공직선거법 제 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0일자 2면

의결번호	2008자심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경향신문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기사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2008년 1월 17일자 W1~W2면)	
주 문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경향신문 2008년 1월 17일자 W1~W2면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향신문 주말섹션 W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히는 기획 인터뷰기사를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향신문 2008년 1월 17일자 W1~W2면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히는 기획 인터뷰기사를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그후 뉴스 속으로

안희정.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다. 하지만 가장 화려하게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을 법한 지난 5년간, 그는 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영화는커녕 감옥에 가야 했고, 나와서도 발이 묶여 정치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 퇴진을 한 달 남짓 남겨놓은 지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범여권의 대선 패배

가 노 대통령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 대선 후 친노세력을 '폐족(廢族)'이라며 반성의 뜻을 시사했던 그는 이런 분석에 얼마나 동의할까.

지난해말 활동 중단을 선언한 참평포럼의 마포 공덕동 사무실에서 지난 14일 그를 만났다. 그는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대선 범여권의 참패에 대해선 "민주개혁 세력의 종언"이라고 했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도 했다.(중략)

'새 진보개혁세력의 리더십 필요 … 미래와 싸울것'

그의 새 책 '담금질'의 제목과 발문을 써준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유명한 글씨 '처음처럼'이 걸려 있는 그의 책상 앞에서 인터뷰에 들어갔다.

-요즘 뭘 하고 있습니까. 얼굴이 검어진 것 같은데요.

"고향인 논산·계룡·금산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지역활동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거의 지역에 내려가 있습니다. 아마 논두렁 밭두렁 길을 다니면서 막걸리와 소주를 받아 마시느라 그을린 모양입니다."

-대통령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는데 감옥에 갔다왔고 공식적인 직함조차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섭섭하지 않습니까.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에서 배우 이영애 씨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그 대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2002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청문회에 3번 불려나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3번 섰는데….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수레를 밀고 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밟혀야 한다면 기꺼이 밟혀야죠. 연극에 비유하자면 무대에 오르자마자 바로 총탄에 맞고 죽는 것이 저의 배역이었죠." (중략)

-노대통령이 5년 동안 잘 했다고 보십니까.

"한국 사회를 위해 긍정적이고 역사 발전, 한국 사회 발전에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을 경과하면서 사회에서 없어진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정경유착, 권언유착, 빽, 측근정치, 부패, 관권선거, 공작정치 등 실제 이런 단어들이 지워졌습니다. 국민의 업적이고, 그런 국민의 요구를 따른 노 대통령의 용기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선진 민주주의 사회운영의 출발선을 참여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들을 매우 피곤하게 했다는 게 일반적 정서 아닌가요.

"제가 다녀보면 노 대통령이 일은 잘했는데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독선적이고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 그렇지, 일은 잘했다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현실적으로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 대통령이 현실적 인기를 포기하고 역사적 평가만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정치에서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 정당과 정치의 실패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뭐합니까? 영업조직이 뛰어나고 좋은 광고와 영업전술을 가지고 그야말로 알래스카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는 전술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후자의 영역에서 우리는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취약성을 말하는 것인가요. 국민들이 탄핵 이후 과반국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정당 구조의 취약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기 바라는 세력이나 지역이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돌아서는 정치적 구조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대북송금 특검을 받았을 때 호남이 그랬고, 영남 역시 우리 쪽 사람이 아니라고 본 것 아닙니까. 한·미 자유

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방폐장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이런 의제들에서 어느 정도 타협할 것인가 하는 정치망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FTA를 추진하니까 신자유주의 정책을 편다고 돌아섰습니다. 파병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정치와 정당구조의 한계가 어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지지자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지 혼자 정책을 추진하면 되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와 국민에게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손을 댔죠. 방폐장 같은 문제는 그냥 둬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미룰 수 있는 과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라살림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일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열을 내 설명했다.)

-한 · 미 FTA나 해외 파병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기를 노리고 눈치를 보았다면 사람들이 더 싫어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인기는 없지만 일은 잘했어'라는 평가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노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집권세력 내에서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당이 되면 대통령 밑에 있다가 나가서 비판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대립과 갈등구조 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다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야 극복도 가능합니다."

-노 대통령을 계승하면서도 다른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가 다르죠. '이제부터 내 실력이고 내 승부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내가 피해봤다고 생각하

경향신문 주말섹션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그 후

"새 진보개혁세력의 리더십 필요… 미래와 싸울것"

면 부끄러운 자식이 아닌가요. 그러나 이런 포부를 갖고 일하겠다는 것을 차별화다 뭐다 하면 저는 '노무현 가문의 후예' 임을 선언할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는 민주개혁세력에 거듭 촉구했다.)

"민주개혁세력이 어떤 정책이 국민과 합의 가능한 정책인지 좀더 고민했으면 합니다. 코너에 몰려 있는 부시 정부를 (이라크 파병으로) 도와서 남북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분단국가의 지도자가 그 정도 전술을 펴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 친미주의자가 됐느냐' 고 공격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의 과제를 가지고 싸울 때 승산이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 지지기반의 회복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향한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중략)

386운동권 출신…정치자금법 위반 감옥생활 안희정 누구인가

마땅히 그를 부를 호칭이 없었다. 지난해 말까지 참평포럼 상임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나마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무호칭, 무적이 낯설지 않다. 고향 논산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남대전고에 진학하면서부터 이어져온 이력이다. 고1 때 학내 시위를 기획하고, 운동권 대학생들과 교유하며 지하유인물을 보다 중정에 끌려갔다.

서울로 학교를 옮겼지만 곧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 철학과에 83학번으로 입학했다. 운동권 내 노선 투쟁이 극심하던 1987년 고려대 내 서클들을 모아 단일 지하조직을 만들었다. 이듬해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구속됐다. 남산 안기부에서 한 달 동안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 동료의 이름을 실토한 것이 지금도 화인처럼 가슴에 찍혀 있다.

이후 김덕룡 의원을 돕다 90년 1월 신혼여행 중 3당이 합당을 선언하자 '꼬마 민주당' 당직자로 옮겼다. 이때 소속 의원이던 노무현 대통령과 첫 인연을 맺는다. 3년여 동안 출판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다 94년 이광재 의원 등과 함께 노대통령을 주축으로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 줄곧 함께 했다. 2002년 대선 때 노대통령이 당선되자 '좌의정, 우광재' 로 불렸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0개월간 수감됐다 2004년 12월에 풀려났다. 인터뷰 후 "내가 잘 가는 집이 있다" 며 옆 건물 순대국집으로 이끌었다.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그에게서 정치에 대한 의욕이 느껴졌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64쪽 경고문 내용 참조〉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학석)는 경향신문 2008년 1월17일자 W1~2면 '노무현 왼팔 안희정, 민주개혁 시대는 죽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경향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밝히는 기획 인터뷰 기사를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두 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1월 31일자 W2면

의결번호	2008자심1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성주자치신문	(주)성주자치신문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791-8 대표이사 백 철 현
심의대상기사	-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2008년 1월 3일자 5면) -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2008년 1월 15일자 3면)	
주 문	(주)성주자치신문이 발행한 성주자치신문 2008년 1월 3일자 5면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1월 15일자 3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성주자치신문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성주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성주·칠곡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경력, 경영철학,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일정 및 개최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2회(162호, 163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성주자치신문 2008년 1월 3일자 5면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1월 15일자 3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성주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성주·칠곡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경력, 경영철학, 경영성과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일정 및 개최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2회(162호, 163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매출 1조원 달성 CEO상 수상"

"참치 명가서 식품 전문기업으로"

참치의 명가(名家) 사조그룹이 신동방, 대림수산, 오양수산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매출 1조원을 돌파하여 제일제당, 농심, 오리온, 동원그룹, 대상에 이어 식품전문기업으로 드디어 매출 1조원 클

럽에 가입했다.

그로 인하여 지난달 18일 서울대 국제 대학원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회 G,L,P(글로발 리더십 프로그램)CEO상을 수상했다.

주진우 회장은 1977년부터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78년 부친 주인용 창업주의 갑작스런 별세로 29세 나이에 사조산업 회장을 맡아 당시 규모 26억원의 회사를 오늘날 매출 1조원 규모로 일궈내어 대기업군으로 성큼 다가선 입지적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15, 16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과 정책위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하여 정치인 '주진우'로도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2004년 경영현장으로 복귀했다.

"정치과 경영의 차이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최우선시하며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인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합리적 사고보다는 상황에 대한 감각적 판단을 더 중요시 한다고 봅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만기총람(萬機總攬)형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무엇을 하고자 결단하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책임도 다 제가 집니다. 그동안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창업주도 아닌 경영2세도 아닌 1.5세라고 부른다.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매출 1조원 달성 CEO상 수상"

"참치 명가서 식품 전문기업으로"

경영철학은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 사람'

경제서적 출간 오는 8일 출판기념회 열어

△ 2008년 1월 3일자 5면

그리고 그의 기업 경영 철학을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수산업 가공분야에서 맛살, 원양어업, 참치, 젓갈 등 일류 브랜드만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100개가 넘는다 한들 전 세계적으로 사조를 이길 기업은 없을 것이라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M&A(인수합병)만 10여 건을 성사시킨 중견기업의 최대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전광석화와 같이 빨라야 한다는 지론이다.

지난해 9월 자회사 사조씨에스를 통해 오양수산의 지분 47.6%를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다.

단순히 사세를 키우기 위해 오양수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작고한 선친의 지인이자 주 회장의 후견인이며 스승이었던 오양수산 고(故) 김성수 회장의 '회사를 영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통합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라 한다.

주 회장의 첫인상은 거침없는 화술과 미소를 잃지 않는 다정다감함이 묻어나는 한편으로 카리스마형 보스의 기질도 엿볼 수 있다.

최근에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부제-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 경제가 산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발행)을 출간해 오는 8일 왜관 리베라웨딩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주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기업 경영의 바쁜 와중에도 명지대 초빙교수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49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자랑스러운 출향인이며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4년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작년에는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인 윤성애 씨와의 사이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주 회장은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 정 · 재 · 학계 인사 대거 참석, 인산인해

18대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고령 · 성주 · 칠곡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이 지난 8일 칠곡 왜관읍 한 예식장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공식 출정식을 가진 셈이다.

제15 ·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주진우 회장이 자신의 홈그라운드 격인 고령 · 성주가 아닌 원정지 격인 칠곡 지역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선거전략이란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칠곡지역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한껏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지난달 28일 일찌감치 한나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캠프를 왜관읍에 차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출판기념회 공동위원장은 최재영 · 김건영 · 이진환 전 칠곡 · 성주 · 고령 군수가 맡아 주 회장의 나가야 할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이날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정계, 재계, 학계인사는 물론, 고령 · 성주 · 칠곡 주민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정계에서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김광원 위원장, 양정규 · 김종하 · 윤영탁 · 김기배 · 하순봉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사돈 조광호 삼호물산 회장, 장경남 원양업협회장, 이인우 대림수산 · 신동방 사장, 박길수 사조산업 사장, 이병무 한국무역협회 대구 · 경북지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 정 · 재 · 학계 인사 대거 참석, 인산인해

기업의 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

현장에서 체험한 일화 소개 기업의 성공 · 실패 사례담아

△ 2008년 1월 15일자 3면

학계에서는 이정희 한국정치학회 회장, 이종광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이영용 국회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주 회장과 한나라당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인기 의원도 행사장을 찾아 입구에서 악수를 나누며 "축하한다. 행사 잘 하길 바란다"는 간단한 인사말을 건넨 뒤 발걸음을 돌렸다.

기업의 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
현장에서 체험한 일화 소개
기업의 성공 · 실패 사례담아

주 회장은 180쪽 분량의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저서를 통해 그동안 기업가로서 사조그룹을 연간 1조원대의 초일류 중견기업을 만들기까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일화를 소개했다.

또 그가 터득한 경제 전문가로서의 기업 성공철학과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어떻게 하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그동안 모아 둔 여러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례를 담았다.

특히 기업의 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 결정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이 세가지 경영 DNA야말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업환경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국제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문제지만 중 · 하위 기업군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부품소재산업에서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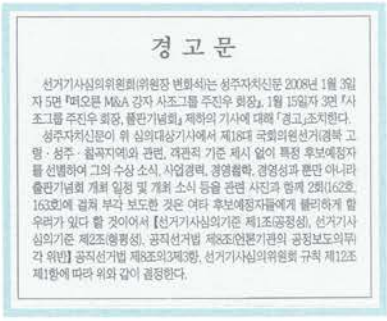
출자총액제한과 경제력 집중억제, 수도권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등의 나름대로의 대안도 제시했다.

주진우 회장은 또한 현재 한국무역협회와 중견기업 연합회의 부회장으로, 전경련 이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7,000억불을 달성하여 세계11위의 무역강국으로 우뚝 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사조그룹은 현재 사조참치, 해표 식용유, 대림수산, 오양수산 등의 회사를 거느리며 식품업계의 다크호스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하남, 제주, 중국 청도에 3개의 캐슬렉스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후략)

결정 후 보도문

〈6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희석)는 성주자치신문 2008년 1월 3일자 5면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1월 15일자 3면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플란기념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성주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경력, 경영철학, 경영성과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일정 및 개최 소식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2회(162호, 163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9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9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1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 종 선
심의대상기사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2008년 1월 20일자 54~55면)	
주 문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4~55면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월요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금정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4~55면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금정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화제집중 / '대운하 추진위원장'
박승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격동의 2007년, 12월 최후의 승자는 결국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됐다. 민심은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의 국정을 불도저 기업가 출신에게 쥐어줬다. 또 건국이래 군인을 제외한 비 정치인 출신 대통령의 첫 탄생이라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남다르다. 민심의 경기회복, 경제회생 의미가 담긴 선택이었다는 것엔 이견이 없다.

이처럼 이명박 당선자의 이미지는 경제다. 이는

향후 5년, 국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반증, 이 당선자가 내놓은 첫 번째 공약도 다름 아닌 거대 노동 창출이 예상되는 '대운하'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를 통해 국운을 융성하게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민이 바라는 경제 회생의 기대감엔 이 당선자가 있고 이 당선자의 중심엔 대운하가 있다. 그런데 이 당선자가 말하는 대운하의 중심엔 바로 박승환 의원이 있다.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대운하 견인차 박승환 의원에 대해 알아본다. (중략)

민변 출신 변호사 독특한 이력

73년 항도중학교를 졸업한 그는 이후 83년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다. 이어 85년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으로 법조계에 진출한 박 의원은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박승환 법률사무소를 개소운영한 법률가다. 건설분야 특히 토목공사와 는 별반 관련이 없는 전력이다. 더욱 박 의원은 2004년 총선을 통해 원내 진출해 줄곧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편다.

그나마 현재의 '대운하 전령사다운' 정치이력을 갖춘 것이다.

17대 국회 활동 기간, 그의 정치적 소견 중 핵심은 '현장 정치'였다. 국회가 현장정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정치철학이다. 평소 그는 "민생과 관련한 정책과 법안 결정을 탁상공론과 자료적 접근에 치우치면 제대로 되기 힘들고 국가적 피해도 만만찮기 때문"이라며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 산성터널 개통문제 때문에 직접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해 보니 문제점이 뭔지 쏙쏙 들어오더라"고 경험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의 이력에는 또하나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변호사 시절 당초 그는 한나라당에 몸담을 인사가 아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명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

'회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 운하 견인차

박승환

한나라당 제1 공약 '대운하' 주진, 박 의원의 '운하 사랑에' 덕

운하 건설 후 '다양한 소업 철기, 지방경제 활성화 도움' 밝혀

호사 모임'의 소위 '민변'의 회원 변호사라는 점이다.

민변은 대한변협과 쌍벽을 이르는 국내 법조인 조직이다. 반면 이들의 이념적 색채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로 대표될 만큼 판이한 것도 사실, 민변 출신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민변과 한나라당은 이념적 스펙트럼말고도 대립되는 요소가 더 있다. 일명 참여정부 인재 양성소라는 별칭이다. 한나라당과 참여정부가 지난 5년간 보여온 대립 관계에 비춰 박 의원의 현재 위치는 파격 그 자체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대 프로젝트인 '한반도 대운하' 특위를 이끌어온 박승환 의원의 간략한 이력이다.

대선 승리이후 박 의원은 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 불리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위원회에서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싸우고 또 싸웠는데 논란은 여전하다. 대운하가 계획단계에 들어선 현재 환경단체를 위시한 종전 범여권의 공세는 총선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난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다.

법령의 정비도 적지 않은 골칫거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강을 수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5월말까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통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해 조기착공은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운하, 지방경제 살릴 것" 주장

한편 일상에서 박 의원의 모습은 희생적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원내 진출하던 첫 해인 지난 2004년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명했다. 최근 복싱 챔피언이다 사망한 최요삼 선수에 의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장기기증 열풍'보다 박 의원이 행보가 사뭇 빠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몸을 바치겠다는 각오"라며 말한 바 있다. 사뭇 비장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정권은 쥐었고 박 의원이 주축이 된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도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은 국토를 가르는 대 역사라는 점이다. 국토를 파헤치고 물길을 다듬어야하는 작업인 만큼 후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한 사업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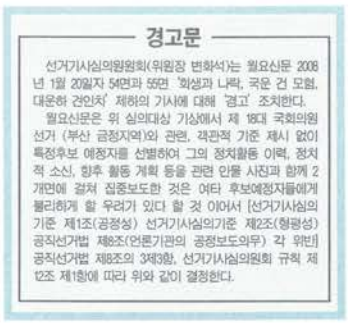
논란만큼 우려와 기대도 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경기는 건설산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경부 및 호남운하가 본격 개발되면 건설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방경기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이 같은 의견은 건설에 찬성하는 전문가들도 같다.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효과로 나타나지만 궁극적으로 각 지방의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운하 건설의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운을 융성하게 하겠다던 이 당선자의 말처럼, 대운하는 향후 국민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덩달아 대운하를 중추적으로 떠 받치고 있는 박승환 의원의 활동도 주목거리다.

결정 후 보도문

〈7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면과 5면면 '희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건인치'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요신문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금정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후보 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관련 인물 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7일자 54면

의결번호	2008자심15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2008년 1월 20일자 36~37, 39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1월 20일자 36~37, 39면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현대 3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부평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정치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3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1월 20일자 36~37, 39면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부평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정치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3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행정학 박사과정 → 자동차 공장 용접공
→ FTA 협상주역 → 그리고?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못말리는 갈등 해결사
홍영표 전 재경부 FTA 국내본부장

예나 지금이나 불 · 싸움 구경 좋아하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사람들. 하지만 작은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상 극명한 대립의 상황에서 그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 불씨가 번져 '아이들 싸움'이 '어른들 싸움'이 되곤 한다. 왜 그것뿐이랴. 역사적으로 봐도 그것이 곧 왕권이나 정권의 '흥망성쇠'를 쥐락펴락했던 사례가 이를 방증한다. 요즘은 어떤가. 정치 · 사회는 물론 세대 · 계층 간

대립이 어느 때보다 극명하다. 그 속에서 우린 더러는 새로운 '해결사'를 꿈꿔 온 게 사실. 여기서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인물이 있다. 최근 우리 정치 · 사회 · 경제의 가장 큰 화두를 손에 쥐고 그 과정에서 '해결사 · 분쟁해결 전문가'라는 특이한 별명을 얻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홍영표(51) 전 재경부 FTA대책본부장이다. 언뜻 홍 본부장의 이력을 살펴봐도 노동현장의 용접공, 굴지의 자동차 회사 영국주재원에서 몇 년 전부터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요직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준 그다. 그런 그가 최근엔 다른 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 기자의 구미를 당겼다. 때도 때인지라 새해부터 여간해선 쉽게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실타래'를 가지고 그를 만나 '씨줄날줄'의 '경제화두'를 풀어봤다. 그리고 입지전적의 인생역정 '제3막'을 들어봤다.

홍영표(이하 본부장으로 통일), 그가 누구인가.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가장 큰 핵심정책이었던 FTA 협상 실무를 총괄했던 그다. 하지만 이쯤의 이력서로는 성이 안 차는 그다. 그만큼 홍 본부장이 화려한 이력을 소유한 입지전적의 인물이기 때문. 아마 이력서 몇 장의 분량은 족히 나올 그의 '특이한' 이력이다.

38 신년 경제대담 주간현대

못말리는 원동 애갈시
홍영표 전 재경부 FTA대책본부장

행정학 박사과정—자동차 공장 용접공—FTA 협상주역—그리고?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용접공에서 재경부 고위관료로…가는 곳마다 '분쟁 해결사'라는 이름 얻어
홍영표 본부장 "용접공에서 재경부 FTA 국내본부장이면 출세한 건가요?"

△ 2008년 1월 20일자 36면

그는 올해 나이 51세로 출생지는 전북 고창이다. 그가 사회생활 '첫발'을 내디뎠던 1980년대 초, 학교에선 행정학 박사까지 수료한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대우자동차 생산직으로 투신한다. 이 대목에선 나름의 '의심'도 품어볼 법하다. 그 의심이 랄 만한 것이 바로 '위장취업'. 하지만 그런 성격은 아니었다고. 홍 본부장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만 해도 그것은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시대정신'의 발호였다는 것. 더 확실하게 그는 "그때는 내 신념에서 출발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때 생산직 용접공으로 출발하게 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지극히 평범한 답변으로 대신했다. 홍 본부장 본인의 말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정말 하고 싶어 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선 홍 본부장의 '담백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그렇게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 문짝을 용접하던 용접공은 1985년 노조대표로 시민사회 영역(당시엔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없었음)의 '지도자'로 등장한다. 이때 첨예한 대립과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노사협상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일등공신'이 된다. 이렇게 그는 노동계에서 '혜성'처럼 등장하며 주목을 받는다. 이때 현재의 '분쟁 해결사'의 'DNA'가 이식되는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 셈이다. 굳이 그의 인생역정을 3단계로 구분했을 때 이 시기는 '제1막'에 해당하는 시기다. 바로 이 시기가 그의 '출발점'인 셈이다. (중략)

용접공에서 재경부 고위관료로…가는 곳마다
'분쟁 해결사'라는 이름 얻어
홍영표 본부장 "용접공에서 재경부 FTA
국내본부장이면 출세한 건가요?"

그런 그가 또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그의 인생역정에서 이 시기를 구분하자면 '인생 2막' 쯤 된다. 바로 그것은 지난 2003년 참여정부에 '승선' 하게 된 것. 혹자들은 이를 두고 '제도권 편입' 이니 '마음이 바뀐 것 아니니' 하는 식의 곱지 않은 눈초리를 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신념이 강했던 터라 그 판단에 있어서도 단호했고 결심한 대로 밀어붙였다. 이는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홍영표' 라는 진면목을 새삼 다시 알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2003년 참여정부에 승선해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사회 · 문화 · 여성분과를 맡아 나라살림을 챙겼다. 이런 인연을 계기로 그는 이듬해인 2004년 9월 공무원 직급에서 2급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된다. 이때 그의 '인생 2막' 하이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주간현대

"이제는 인권 부랑이라는 제2의 고향에서 국민들께 보답할 기회를 찾고 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 '인생 3막' 을 준비하는 홍 본부장 "그래도 후회는 없다"

△ 2008년 1월 20일자 37면

이 당시 홍 본부장을 발탁한 국무총리가 홍 본부장과도 인연이 깊은 한명숙 전 총리였다. 이후 홍 본부장은 이때를 기점으로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이해찬, 한덕수 등 내리 3명의 총리를 보필했다.

혹자는 이 대목에서도 '관운이 좋다' 라는 '딴지' 도 걸 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의 능력이었다. 바로 그 기회 때마다 그는 능력을 발휘했고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받았다. 바로 협상가로서의 기질에다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바로 그것.

이때 발탁되자마자 그에게 던져진 '미션' 이 당시 대표적인 현안이었던 '방폐장 건설', '저출산 · 고령화 사회협약(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행정수도 이전', 'FTA(한미 · 한EU)' 등이었다. 이는 참여정부의 현안을 넘어 국가적으로 큰 '화두' 였고 '핵심 어젠더' 였다. 이 예민한 현안들은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거나 급기야 '충돌' 을 빚기 일쑤였다.

그런 상황에서 홍 본부장 특유의 '해결사' 기질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결국 홍 본부장은 경주 방폐장 건설이나 저출산 · 고령화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해결해냈다. 이런 그의 공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평가절하 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 와선 전문가들로부터 후한 점수를 받는 사안들이다. 또한 우여곡절이 많은 참여 정부에도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항목이다. 그만큼 홍 본부장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 기자의 질문에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홍 본부장은 먼저 '한숨' 부터 내쉬었다. "말 마라.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이야 그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그때 나에겐 매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다"는 말로 '혀' 를 내둘렀다. 당시의 부담감이나 중요성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고령화 · 저출산 대책협약과 관련해서는 당

시 극심한 대립관계에 있던 보 · 혁단체 관계자들은 물론 사회 각 분야를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서로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데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 필요했다는 것. 당시 종교계는 물론 민주노총 등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협약을 맺은 일이 그것이다. 하지만 홍 본부장은 각계의 대표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데 4박5일을 꼬박 새웠다는 전언이다. 그런 큰일에 오죽했으랴마는 어찌됐든 그 결과, 오늘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화되고 로드맵을 만들 수 있었다고.

홍 본부장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노력과 정성을 통해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어떤 정략적인 코드에 의해 '폄하'되고 '평가절하'되는 현실이 조금은 아쉽다는 여운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것은 그 사안의 '성격'으로도 어느 정부는 꼭 해내야 할 '미래가치' 즉 '국가 핵심어젠더'라는 설명이다.

이후 그는 경제 관료에서는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아 소위 '출세'의 기회도 잡는다. 당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출발했던 만큼 그의 능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신반의했던 것도 사실. 하지만 이에 '시위'라도 하듯 맡겨진 임무를 거뜬히 해결해낸다. 그렇게 되자 이후 여러 중책이 맡겨졌다.

바로 2006년 8월부터 시작한 외교통상업무의 가장 큰 핵심이자 우리나라 국운을 좌지우지할 사안으로 평가받는 FTA 관련 실무다.

이때 참여정부의 국민지지도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정치 · 사회 · 경제적으로도 논란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를 무난하게 성사시키는 '산파역할'을 해냈다. 물론 이 대목에서도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홍 본부장에게도 가장 힘든 상황으로 치달았던 시기였다. 당시 FTA를 반대하던 쪽에서는 연일 '반대집회'를 열었고 야당에서는 많은 주문을 쏟아내던 상황이었다.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 '홍영표'라는 '구원투수'가 투입되기에 이른다. 이때 바로 그는 지난 2006년 8월에 한미FTA체결지원단장으로 발탁된다. 당시는 '협상가'라는 임무에다 국가 중요정책을 도맡는 정치적 역량까지 발휘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진 셈. 이후 그는 보란 듯이 그 결과도 '합격점'. 연거푸 '홈런'을 친 것이다.

결과적으로 홍 본부장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된 때라 할 수 있다. 혼란 속에서 '영웅'이 나온다고. 이에 비춰보면 홍 본부장은 '음지'에서 뛴 '진정한 실력자'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게다가 홍 본부장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일자리 문제' 등의 사회복지 혹은 양극화를 언급하며, 목소리에 잔뜩 힘을 주어가며 "정책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는 기자가 이어 질문한 '차기정부의 FTA 계

주간연대 신년 경제대담 39

△ 2008년 1월 20일자 39면

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자연스레 연결됐다. 그는 "앞으로 차기 정부도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발전 ·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뿐더러 소외될 수 있는 중소기업 · 저소득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대목에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기보단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그의 배포가 오늘날의 '홍영표'를 있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중략)

그런 그가 이제는 '여의도 입성 꿈'을 펼친단다. 본인 말에 의하면, 개인적인 공명심의 발호가 아니라 내 맡은 바 일을 하다보니 우연치 않게 '정치를 해 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많이 들어왔단다. 하지만 정부 고위관료의 공무원인 탓에 그저 말뿐으로만 치부해 오다가 최근 통합신당 최용규 의원의 권유로 '작심'하고 끝내는 못이긴 척 '결심'하기에 이르렀단다.

정말 '희한하다' 못해 '신통할' 노릇이다. 자동차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해 노동운동을 한 전력은 그렇다 쳐도 '정치인'이라. 너무 큰 변화, 가늠이 쉽지 않은 그의 행보다. 여기선 그런 면모가 홍 본부장을 키워온 원동력이 됐을 것이라는 어렴풋한 짐작이 가능한 대목이다.

어찌됐든 간에 그는 대통합신당 최용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서 국회의원 출사표를 던졌다. (중략)

일부에서는 홍 본부장을 두고 어느 정권에서든 '큰 일'을 할 수 있는 '재목감'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만큼 굵직한 업적(?)에다 능력을 겸비한 홍 본부장을 두고 하는 말. 그런 연유로 최근 여권은 물론 각계로부터 '총선출마'를 권유받은 게 이번에 출마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그가 행한 업적이 곧 참여정부의 '공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더 중요하다. 그러기에 그의 어깨가 무겁다. 어쩌면 현재 그가 넘어야 할 가장 힘든 싸움은 바로 '홍영표' 자신이다. 그가 '분쟁해결사'라는 닉네임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해결사', '흑기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장 용접공'에서 이제는 한 나라의 국운을 쥔 '경제통'으로 '해결사'라는 험난한 역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홍영표 본부장. 이제 또 다른 '인생 3막'이 펼쳐지고 있다. 이제 막 마지막으로 그의 '공과'가 민심의 심판을 받는 '시험대'에 올랐다. 또 그것이 곧 그가 가려고 하는 '갈보리길'이다.

결정 후 보도문

〈7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은 주간현대 2008년 1월20일자 36~37, 39면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부평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정치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3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4일자 36면

의결번호	2008자심16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2008년 1월 20일자 76~77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1월 20일자 76~77면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현대 7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계룡·금산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저서 수록내용 및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라 성장과정, 정치역정, 총선 출마포부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1월 20일자 76~77면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계룡·금산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저서 수록내용 및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라 성장과정, 정치역정, 총선 출마포부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자전에세이 펴낸
안희정 이유있는 항변

참여정부 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았던 안희정은 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며 그와 함께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위해 헌신한 일등공신이다. 그런 그가 최근 〈담금질-안희정의 새로운 시작〉이란 책을 출간하고 1월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책에는 그의 학창시절부터 최

근까지의 생활이, 그리고 그 생활에서 생각하고 느낀 '그만의 것'이 가감없이 담겨 있다. 〈담금질〉을 통해 그가 좀더 많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18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안희정이 말하는 '새로운 시작'은 무엇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은 1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자신의 첫 저서 〈담금질-안희정의 새로운 시작〉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정세균 전 열린우리당 의장, 유시민 의원 등 친노그룹 인사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빛내줬다. 안희정은 자신의 저서 부제 '안희정의 새로운 시작'에서 짐작하듯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총선에 논산 · 금산 · 계룡시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그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다.

76 정치와 외제 주간현대

담금질

자전 에세이 펴낸
안희정 이유있는 행변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4월 총선 출마 앞두고 책을 통해 출정식…새로운 시작 창립까?
출판기념회 열리던 날 이해찬 · 정세균 · 유시민 등 친노인사 총출동

△ 2008월 1월 20일자 76면

안희정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노무현 가문의 후예로서 의리를 지키는 것은 기본으로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을 알리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담금질〉은 자서전 성격의 책으로 '1부 살아온 이야기', '2부 생각하기 2004년 옥중일기', '3부 살아갈 이야기'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책의 1부는 학창시절의 방황, 학생운동의 경험과 좌절,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진보개혁주의자로서 제2의 자각 등 안희정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 2부는 2004년 대선자금과 관련한 감옥생활을 할 때의 옥중일기로 인간관계에 대한 철학적 사색, 참여정부의 역사적 가치, 새로운 진보세력의 길에 대한 고민 등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풀어놓으며 안희정은 책에서 '경쟁'과 '협력'이라는 모순된 가치를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것을 좋은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또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제언이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중략)

▲"책임있는 정치에 관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기업이 시장에서 얻는 '신뢰'만큼 발전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의 신뢰도, 브랜드 가치가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책임있는 자세 때문입니다. 잘된 상품은 잘된 상품대로, 실패한 상품은 실패한 상품대로 소비자에게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축적해 나간 기업만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이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인기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자신이 국민에게 했던 약속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는 인기 있으면 그냥 가고 인기 없으면 나 몰라라 변신하는 게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닐 것입니다. (중략)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선거를 앞두고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묻는 일이 많아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 옳으냐'란 질문보다 '무엇이 더 이득이냐'란 질문을 더 자주 접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불리를 떠나, 이득과 손해를 떠나 우리는 원칙을 저버리는 정치행위에 대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겁니다.

민주당을 지키다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일은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 있다가 경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대통합신당에서 후보가 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책임 정당정치를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일입니다.

원칙과 소신으로 투쟁합시다. 역사의 전선 위에 대화와 타협합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흔드는 총대 거꾸로 메는…, 개인 입신 출세주의

주간현대

"참여정부 계승은지 않았고…역사발전 거꾸로 돌려놓을 잘못 없다"

"민족이란 단어에 이의있습니다!"

△ 2008년 1월 20일자 77면

자들의 행태를 허용하지 맙시다. 그들의 무원칙한 기회주의적 정치 투기행위, 대중에게 인기만 얻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맙시다.

▲"이기는 게 무조건 善인가?"

일제시대 매국노들에서부터 군사 쿠데타 세력과 1990년 3당 야합세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신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기는 게 무조건 선이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들의 이 믿음은 민주주의자의 제일의 투쟁대상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박애, 인권사상 등에 기초해서 수많은 정책과 노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과 노선에 기초해서 보수와 진보가 나뉩니다.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모두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과 정책을 표방한다고 해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박정희도 민주주의자이고 애국자고 민족주의자고 한국적 민주주의의 창시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당 야합을 통해 민주개혁을 표방한 김영삼 씨도 문민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여권 실패원인은 사분오열"

왜 우리는 잃고 한나라당은 땄을까요?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사분오열(四分五裂)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분오열로 인해 집권세력으로서 국민에게 얻었어야 할 '믿고 맡겨도 되겠다'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우리당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분오열은 주도세력의 부재와 주도세력의 민주적 리더십 부재로부터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분오열은 민주주의 정당의 조직윤리 부재로부터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분노"

정치세력과 정치인.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어떤 정치세력과 정치인이 역사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는 동량으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저는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정치의 DNA 구조가 됩니다. '분노'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상품과 화폐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와 정치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정치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패거리 정치, 계보정치, 보스정치에 분노했습니다. 부정과 부패의 돈 선거, 돈 정치에 분노했습니다. 특권정치, 반칙정치, 귀족정치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소신과 신념을 지킨 한 정치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의도의 틀에서 고립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와 자존심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사랑과 꿈으로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노사모가, 개혁당이, 우리당이, 참정연이, 참평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 "한나라당 주장에 속지 말자"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서민과 중산층, 국민 대다수의 행복과 번영에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지! 부패원조, 특권과 반칙세력-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독재와 특권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시장과 민주주의의 결합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켰고 민족의 번영과 통일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동체적 의무가 확대되었고, 복지가 성장과 대립 ·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아가는 새로운 진보개혁 세력의 길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진보개혁 세력의 새로운 탄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도합시다.

결정 후 보도문

〈8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은 주간현대 2008년 1월20일자 76~77면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논산 · 계룡 · 금산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저서 수록내용 및 출판기념회 개최 소식뿐만 아니라 성장과정, 정치역정, 총선 출마 포부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4일자 76면

의결번호	2008자심17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뉴스인 (주)스타코넷 / 서울시 양천구 신월1동 128 대표이사 권 태 문	
심의대상기사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2008년 1월 21일자 3면)	
주 문	(주)스타코넷이 발행한 뉴스인 2008년 1월 21일자 3면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 발행되는 뉴스인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강서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활동 실적,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인 2008년 1월 21일자 3면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강서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활동 실적,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강서구 복지와 전 국민 복지 향상 위해 열성 다할 것"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복지공약수립 · 정책틀 다듬어

고경화 의원은 국회에서 보건복지 전문가,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2000년 5월부터 한나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국회정책연구위원(2002. 9~2003. 9)으로 활동했다. 4년여 동안 당직자 생활을 한 그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전격 발탁됐고, 당선된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총 22건의 법률안 대표 발의, 공동발의 법률안 254건 등 왕성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법은 평균 1.7건에 불과하지만, 고 의원은 평균의 세 배가 넘는 6건의 법률이 통과돼 민생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매년 국감마다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는 등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문화일보, 매일경제, 경향신문 등 수많은 언론사들이 국감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고, 3년 연속 NGO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란 명예를 얻었다.

대표적인 국감활동으로는 2005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중국산 납 김치 문제를 최초로 밝혀 원산지 표시제란 개선책을 도입시켰다. 이밖에 '수입와인에서 발암물질 검출' (2007년),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2004년) 등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정책을 설계하는 등 MB의 핵심 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다. 그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직능정책본부 사회복지위원장을 맡아 핵심 공약을 만들고 복지정책의 골격을 다듬었다. 대표적으로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와 불임치료, 분만비용, 예방접종, 진료비 · 보육 및 교육비 등 6개 항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의 'Mom&Baby' 플랜을 한나라당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고경화(46) 한나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6일 이번 18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고 의원은 이날 강서구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진 뉴스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년 동안 국회에서 훈련받은 성과를 토대로 보다 풍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강서구 복지와 전 국민 복지 향상 위해 열성 다할 것"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복지공약수립 · 정책틀 다듬어

보건복지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복지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한 고 의원은 강서구의 복지 향상을 비롯, 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일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역구 출마 배경은.

"지난 국감이 끝나고 나서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부족했던 점,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

4년 동안 국회(보건복지위원

회)에서 훈련받고, 그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갖고 보다 풍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었다."

–강서을 지역을 택한 이유는.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집중돼있다.

서울시의 수급권자 세대가 전체 세대의 1%이지만, 강서을의 경우 세대수 대비 약 8%가 수급권자 세대다.

원래 저소득계층 복지에 관심이 많았고, 강서을 지역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했다.

앞으로의 복지 정책은 시혜차원을 넘어서 저소득 주민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동안 복지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이 같은 정책 기조를 강서을 지역이란 일정 지역에서 구현해 나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강서을 지역에 연고는 있나?

"지역적인 연고는 없다. 대학원 시절 영구임대아파트와 지역복지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개선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이를 강서을에서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역구를 선택했다."

(중략)

–강서구에 대한 정책적인 비젼은?

"국가 전체적인 계획과 맞물려 진행돼야겠지만, 강서구는 김포공항이 위치해 있고, 영종동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는 등 교통의 요충지대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운송과 물류와 관련한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외국인 방문이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유치도 가능하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대학생들과 일대 일 '멘토멘티'를 맺어 주고, 자활공동체 사업장 개설, 자활 시스템 구축 등 복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실현시키고 싶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상을 연구해 나갈 계획이다."

결정 후 보도문

〈8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인 2008년 1월21일자 3면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을 총선 출마 공식 선언/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보건복지 전문가 '정평'』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뉴스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강서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경력, 의정활동 실적, 향후 정치활동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8일자 3면

의결번호	2008자심1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상주신문	상주신문(주) / 경북 상주시 남성동 48-8 대표이사 이 사 윤
심의대상기사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2008년 1월 21일자 5면)	
주 문	상주신문(주)이 발행한 상주신문 2008년 1월 21일자 5면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발행되는 상주신문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인생담, 주요 경력, 사업성과 및 의정실적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한 면 전체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상주신문 2008년 1월 21일자 5면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인생담, 주요 경력, 사업성과 및 의정실적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한 면 전체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육만수 청학산업 회장의 드라마 같은 인생

사업가의 경륜과 정치적 감각을 두루 겸비한 지도자.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신화의 주인공. 상주출신 육만수(58세. 청학산업 회장) 씨가 18대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그동안 건설 등 사업으로 성공한 CEO. 최연소 서울 양천구 의장을 역임한 육만수 회장.

화합과 친화력의 소유자, 믿음과 신뢰가 있고 결단이 빠른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는다.

이제 그는 지역봉사를 위해 출마를 선언, 각오를 새로이 했다.

본지는 18일 오후 본사 회장실에서 육만수 회장을 만나 그의 드라마같은 인생여로를 들어봤다.

'상주 촌사람' 최고 성공

육만수 회장이 경영하는 사업체를 들여다보자.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오목교를 건너면 곧장 맞닥뜨리는 전철역이 오목교 역이다. 그 사거리 한 귀퉁이를 커다란 덩치를 하고서 버티고 있는 건물이 청학빌딩(대지 약 800평, 건평 약 4000평)이며 바로 청학산업주식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북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69층짜리 공룡같은 건물과 이웃에서 함께 서 있는 41층짜리 건물의 4층에 초대형 예식장(약2000평) 두 개가 또한 청학산업 사업장의 일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하여 화성, 가평 등지에 얼마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시작될 새로운 사업거리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부동산을 합치면 돈에 대하여 아둔하기 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그 자산이 꽤나 될 것이란 걸 금방 알아챌 수 있다. 건물에 들어서면 은행, 자동차 대리점, 보험회사 등 일부만 임대를 하고 지하에 사우나, 수영장, 헬스센터를 4, 5, 6, 7층에는 예식장 2개를 9, 10층에는 초대형 식당을 직영하고 있다. 8층에는 사업 본부가 자리잡고 있으며 장학재단 사무실도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한 마디로 표현하여 '상주 촌사람' 치고 성공했다는 소릴 들을 만하다.(중략)

아내의 고마움 지금도 느껴

육만수 회장은 늘 '인간 육만수'의 삶이 결혼을 하면서 큰 타래가 풀리기 시작하였다고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육십을 바라보는 지금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드러내는 편이다. 선 볼 때에 하던 이야기처럼, 그들의 신접살림은 쌀과 연탄을 팔면서 시작하였다.

'쌀과 기름'을 팔자던 계획이 '쌀과 연탄' 장사로 바뀌었지만 두 사람이 부지런을 떨면서 동네를 주름잡기 시작하자 일년도 지나지 않아 그 골목안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안정을 찾자 그는 다시 일을 저질렀다. 주택공사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뒷날의 평가지만 그는 동네에서 쌀 팔고 연탄 팔면서 지낼 그릇이 아니었던 것이다. 1977년 봄. 동네에서 잘 아는 사람이 땅을 제공하고 그는 공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주택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선 가게가 없는 집으로 옮기고 그 차액과 이종형님으로부터 지원 받은 자금을 합쳐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 새벽부터 밤까지 흘린 땀 덕분에 집은 완성이 되었고, 땅을 제공한 사람은 다시 다른 땅을 제공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주택 사업이 일취월장하여 1년이 지난 78년 봄까지 지은 주택만 50채 가량이었으니 대단한 노력이었다. 호사다마랄까. 힘을 얻은 '주택사업가 육만수'는 인천 주안 지구에 5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었고 모델하우스를 열던 78년 8월 3일 정부에서 취한 사채동결조치 이른바 '8.3조치'로 그만 뼈아픈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큰딸을 안고 모델하우스 앞에서 '증명사진'을 찍은 그는 눈물을 삼켜야 했다.(중략)

슬픔딛고 청학빌딩 건설

슬픔을 털고 일어나 시작한 것이 지금의 청학빌딩 건설이었다. 그리고는 사업가로서 잠시 정리의 시간을 가졌다. 거울에 비치는 희끗희끗한 머리는 벌써 불혹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89년 청학빌딩을 준공한 뒤 주변을 추스르고는 1991년 양천구 의회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기 구의회의장에 취임하여 전국 최연소 의장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2년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목5동 어린이 유치원 부지 확보, 주차장 부지 개발, 자전거타기 운동 등 의

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구청장 같은 역할을 하며 임기를 마쳤다. 공직수행도 마치 전문경영인(CEO)처럼 한 것이다. 퇴임 후 1년쯤 휴면기를 가진 뒤 다시 건설을 시작하였다. 양천구에 '현대41타워'와 영등포 신길동에 250세대의 오피스텔을 또 건설하였던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IMF관리체제)로 인하여 너나없이 엄청난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고, 특히 부동산 업계는 치명적이었다. 그 역시 악화된 금융환경 때문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무난히 분양을 마치는 수완을 보여 주었다.

'블루 버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의 신길동 오피스텔의 분양이 부진하자 전격적으로 'n-city'로 개명하고 여의도에 마련한 모델하우스를 철거, 신축 중인 건물 2층에 모델하우스를 여는 과감하고 신속한 순발력을 발휘하였고 '1억에 5채'라는 황당한 구호로 순식간에 분양을 완료하였던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업수완이 아닐 수 없다. IMF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만도 대단하던 시절인데 말이다.

청학빌딩에 스포츠센터 설립

그는 다시 건설부문을 잠시 접고 문화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청학빌딩에 스포츠센터를 설립하여 당시에 열악한 주변의 주거환경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지금도 학생들을 상대로 수영선수 육성을 하고 있다. 기존의 예식장 외에 약 1000평 규모의 예식장을 2개소 더 설립하여 바른 결혼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약 700평 규모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2003년에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2004년에 20명의 학생에게, 2005년에는 40명의 학생에게 학비 혜택을 주고 있다. 재단의 기금은 총 50억을 목표로 매년 5억씩 육만수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기증하고 있다. '양궁의 나라' 한국에 대학양궁이 부진하다며 '대한민국 대학양궁협회'를 결성하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참가케 하고 활과 화살의 국산품 장려에 적극 노력하기도 하였다.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육만수 청학산업 회장의 드라마같은 인생

목동 '41타워' 당시 3번째 높은건물 '화제'
최연소 구의회의장 역임 … 장학재단 설립

'신화의 주인공' 육만수는 누구인가

"육만수는 반드시 성공한다" - 김안과 지도자
"서울시에는 이명박, 양천구엔 육만수 있다"

'상주 총사령' 최고 성공

아름다운 자금도 노려

민원주택 건설로 기틀 다져

청학빌딩에 스포츠센터 설립

'자랑스런 상주인' 변신

'자랑스런 상주인' 변신

그는 사업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맞았으며 그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자랑하였다. 하긴 어려움이 없으면 성공을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순간의 기지로 헤쳐 나오길 손으로 대충 꼽아도 열 번이 넘는다고 하니 그는 천부적 사업가이고 수단가임에 틀림없다. 새벽5시, 어둠을 헤집고 현장에 도착하여 그날 작업을 지시하고 챙기고 뒷바라지하다보면 어느새 날이 저물고… 그렇게 쌓은 부(富)의 일부를 지금 그는 지역 주민을 위해, 그리고 후진들의 학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파 농사짓던 열혈청년이 이제는 중년의 사업가로 우리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다. 감동으로 점철된 줄거리로 엮어진 신화의 주인공으로, 자랑스러운 '상주인'으로 나타난 것이다.

상주농잠고 나온 중견 사업가

육만수 회장의 고향은 상주시 남성동이다. 중앙초등, 상산중학을 거쳐 상주농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향 상주에는 부친이 살고 있고 친구들이 많아 일년에 10여 차례 고향을 방문하고 있다. 취미는 마라톤 · 등산으로 건강을 다지고 생활신조는 '정직하게 살자'이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1남 2녀를 두고 있다.

'신화의 주인공' 육만수는 누구인가
화합과 친화력의 인물

양천구 의회는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여야의 대결구도가 팽팽하고 다툼도 많다. 그러나 육만수 후보가 2대 구의회 의장을 맡았던 시절만큼은 남달랐다.

육만수 의장은 전국 최연소 구의회 의장으로서, 정쟁보다는 '자전거 보급'과 같이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의회의 상을 정립코자 노력했다.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제1기 의정동우회는 여전히 화기애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정쟁보다는 구민을 생각하는 지도자이다.

양천구의 자산을 늘린 CEO

육만수 의장의 아이디어와 추진력은 오늘날 양천구의 재정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의 제안으로 양천구 내 서울시 소유 부지를 양천구가 대규모로 매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삼성문화재단, 까르푸 부지 등등 양천구는 수천억대의 재정적 이익을 보았다.

그대로 두었다면 오늘날 서울시에서 임대하거나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땅이었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육 의장의 한 발 앞선 판단력이 현재 양천구의 커다란 자산을 가져다준 것이다.

한발앞선 판단력과 결단의 소유자

그는 평생을 실물 경제의 현장에서 몸으로 뛰며 경제의 감을 체득한 지도자이다. 이렇게 체득한 한발 앞선 판단력 때문에 '육만수는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변의 평을 낳았다. 목동41타워는 91년 건설당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빌딩이었다. 개인으로서는 상상치 못할 일을 성공시킨 것이다. 첫번째가 63빌딩, 두번째가 코엑스 건물이었다. 80년대 중반, 육만수는 그동안 매달려온 건축 사업을 잠시 접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청학'을 건축했다. 달동네에 무슨 양옥집이냐는 불신과 조소가 뒤따랐지만, 그는 실행에 옮겼고, 오늘날 청학은 양천구 주민의 사랑을 받는 오목교의 랜드마크가 되었다.(중략)

한땐 지방자치 책임자 도전의사도

육만수는 양천구 지방자치의 책임을 맡을 적임자이다.

지방자치 시행 10년이 흐르면서 바야흐로 시민의 요구는 '정치인'이 아닌 '실사구시형'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양천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임자는 바로 육만수인 것이다.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 성공을 위해 가장 어

려웠던 점은, "청계천 주변의 22만 상인들, 1500여 명의 노점상인들과 4,200번 만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이처럼 앞서가는 발상과 추진력을 겸비한 CEO가 바로 육만수 회장이다.

결정 후 보도문

〈8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치)는 상주신문 2008년 1월 21일자 5면 『자수성가한 C"O, 어렌 고향서 '지역봉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인생담, 주요경력, 사업 성과 및 의정심적 등을 관련 인물사진과 함께 한 면 전체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9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18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27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아림신문	(주)아림신문사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90-2 대표이사 윤 구
심의대상기사	-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2008년 1월 18일자 8면) - 『이 사진의 의미는?』(2008년 1월 25일자 12면)	
주 문	(주)아림신문사가 발행한 아림신문 2008년 1월 18일자 8면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1월 25일자 12면 『이 사진의 의미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아림신문 1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아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창·함양·산청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지역 발전방안 및 총선 전망 등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인물 사진 등을 2회(754호, 755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아림신문 2008년 1월 18일자 8면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1월 25일자 12면 『이 사진의 의미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아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창·함양·산청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지역 발전방안 및 총선 전망 등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인물 사진 등을 2회(754호, 755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문) 이명박 당선인의 압도적 승리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무능을 지칭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다. 사업가의 인생을 살아온 당선인의 인생 역정을 악용해 온갖 음해·비방 등 정치공작이 많았지만 큰 표 차이로 압승한 이유는 이제 국민들은 '일할 수 있는 검증된 경력과 능력'을 가장 중

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유권자는 무섭도록 현명해졌다.

한국 정치계의 지형이 대대적으로 급변할 것이다. 유권자에게 달콤한 말로 현혹하는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오직 개인의 영달이나 출세에 매달려서 경쟁 상대를 비방 · 음해하는 낡고 오염된 정치인이 퇴출되는 유권자 혁명의 시대가 왔음이 확인되었다. 구태정치는 종막을 고했다.

문) 거창 정치의 현실은?

88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1988년부터 외부와의 소통이 쉬워져서 발전할 기회가 있었고, 2차적으로는 2001년 대전-통영 고속도로 완공 직후 크게 약진할 수 있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우리 거창을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군민과 단합하여 노력하면 한국 최고의 행복 고장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활용치 못했다. 젊은이는 타지로 떠나가고, 인구는 나날이 줄어가고, 주민 생활 형편은 항상 그 수준이고….

거창은 "잃어버린 20년"이다. 거창인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한다. 바로 지금 우리 거창은 계속 답보할 것인지 발전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군민들의 현명한 선택만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문) 거창 발전 대안은?

일하는 정부, 실용 정치의 이명박정부 출범을 맞아 우리 거창은 대약진의 계기를 잡아야 한다. 그 기회는 바로 지금이다.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거창을 발전시킬 능력과 경력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이다. 거창의 대표 정치인이 군민들과 단합하여 외부의 유력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부자본을 유치하여 청정지역의 여건을 활용한 리조트 개발 등 관광개발을 하며, 해외 명문대학의 스쿨(관광 · 음악 · 요리전문 등)을 유치하면 지금의 2배 이상 인구 증가와 소득 향상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예를 들면, 독일 남서부 인구 14만의 하이델베르크 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오래된 성(古城)과 아주 큰 술통(6만 배럴) 등 특화된 요소로 인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이며 산속의 청정대학타운으로서 좋은 공기와 높은 소득, 학구적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그야말로 웰빙 생활을 즐기고 있다.

우리 거창도 무공해 기업, 관광리조트 개발, 특화된 해외스쿨 유치 등을 실천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 행복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예시는 대단한 대안도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말로는 수 십년 간 해온 이야기가 아

특별대담 - 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 2008년 1월 18일자 8면

닌가? 기 편성된 정부예산 집행해 놓고 이것이 내 업적이요 하고 떠들면 군민들은 속아 넘어가고 그런 현상의 반복은 이제 끝장을 내야 한다. 말로만 텅빈 공약을 되풀이하는 정치인이 나오면 이 모든 꿈은 상상으로 끝날 것이다. 감언이설과 개인 연고를 근거로 사술을 부리는 정치인이 아닌 그 사람의 과거 경력과 거창 발전의 구체적 대안을 갖춘 정치 지도자감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면 거창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잃어버린 20년"의 거창을 영남의 알프스로 만들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거창의 새 정치 지도자가 탄생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한다.

△ 2008년 1월 25일자 12면

문) 4월 총선 전망은?

거창 정치의 현실은 한나라당 공천 없이는 정치 신인이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성 정치인은 의정보고, 군정보고 명분으로 면마다 돌면서 자신을 선전하고 업무비를 활용해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게 줄서기하고, 국가예산을 활용해 자신의 이미지를 광고하고, 조직을 이용해 1년 365일 항상 선전하고 있으니 어떤 영웅이 나와도 대적할 수 없지 않은가? 기성 정치인처럼 조직하고 활동하려면 재벌이라도 당할 수 없고 수 천 명의 조직원이 있어도 불가능하다. 현행 선거법으로는 평상시 정치 신인이 명함 한 장 못 돌린다.

한나라당 공천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기성 정치인은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하면 당적을 바꿔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오직 기성 정치인만이 가능할 뿐 정치 신인은 어떤 능력이 있어도 무소속 출마나 비 한나라당 출마가 불가능할 것이다. 기성 정치인은 이미 전 군민에게 자신을 잘 알려 놓았으니 자신이 올바르게 정치를 해 왔다면 당적을 걱정할 것이 없지 않은가? (후략)

이 사진의 의미는?

사진은 지난 대선에서 MB 선대본부 7개 위원장 중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유일한 민간인 신분으로 직능본부특별위원장으로 활동, 대통령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강호양 씨가 MB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다.

강호양 씨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거친, 굳이 학맥으로 따진다면 고대 동문의 연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진에 깊은 속뜻이 있다고 측근은 얘기한다.

결정 후 보도문

〈9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희재)는 이하신문 2008년 1월 18일자 8면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특별위원장」, 1월 25일자 12면 「이 사진의 의미는?」 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조치한다.

이들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거창 · 합양 · 산청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지역 일정행위 및 총선 전망 등에 관한 그의 견해와 인물사진 등을 2회(754호, 755호)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 제1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고한다.

△ 2008년 2월 22일자 15면

의결번호	2008자심28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부안저널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심의대상기사	『내가 본 김춘진 의원』 (2008년 1월 23일자 5면)	
주 문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1월 23일자 5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담은 자사 편집인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1월 23일자 5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담은 자사 편집인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내가 본 김춘진 의원

박재순 / 본지 사장 · 편집인

지배(紙背)를 보기 위해

이 글은 지난 7일(월) 부안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춘진 의원의 저서 《함께하는 그곳의 건강함을 꿈꾼다》 출판기념회에서 그 동안 김춘진 의원과의 관계와 활동상, 그리고 책에 실리지 않은 내용을 축사로 말하려고 했던 것을 글로 쓴 것입니다. 책은 읽으면 되지만 '지배(紙背)를 뚫다'란 말처럼 책에 활자로 된 이상의 것을 찾아 들려주는 것이 축사자나 서평자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될 수 있는 한 책에 없는 것을 골라 썼습니다.

김춘진 의원과의 첫 대면

제가 김춘진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꼭 십년 전 부안저널을 창간하고 재경향우회들이 마련한 신년 하례식에서 둥근 테이블에 함께 앉게 되어서입니다. 그때도 김 의원은 고향 부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특히 지역신문에 관해서도 이것저것을 묻기에 조금은 특이한 치과의사구나 하고 고개를 갸우뚱 했었습니다.

뭔가 해낼 일꾼이라는 예감

그리고 김 의원이 뭔가 해낼 일꾼이 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치과주치의이기도 한 김 의원이 제게 자주 전화로 자신이 주관하거나 주도하는 행사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카메라를 갖고 고속버스를 타고 저녁에 서울에 도착해보면 하는 일은 금연대회, 절주운동, 마약퇴치운동, 그리고 장애인 등 불우이웃돕기 행사였습니다. 장애인을 돕는 행사는 한때 유명한 개그맨 조정현이 건강을 잃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장애인들을 위해 그가 운영하는 예식장에서 뷔페를 마련 대접하기도 했는데 김 의원과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김의원이 단순히 치과의사로 머물지 않고 나라나 국민을 위해 뭔가 큰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아니나 다를까 김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부안 · 고창지구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집을 짓는데 목수나 미장이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 국회의원을 뽑는데 치과의사라니 처음 군민들은 황당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치과의사인 김 의원이 나라와 국민을 튼튼하게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임을 알았기에 많은 정치가를 제치고 공천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과의사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일찍이 신영균 씨가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는 치과의사라기보다도 탤런트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았지만 비범한 인물

김 의원은 작은 시골에서 내성적인 소년으로 평범하게 자라면서도 장학금을 나누어주는 등 조금

단상 | 斷想 |

박 | 제 | 순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지리멸렬을 보기 위해

성을 가장 많이 받은 무수의원

보건복지위원이자는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

실을 가장 많이 한 의원

의원님 감춘진 지원

"학이" 를 "자동한 사신으로"

농 현장을 찾고 귀를 기울이는 의원

우리지역은 국회의원이 두 분

잠못 이루고 고민

"고맙다. 사랑한다. 오늘도 예쁘다 그리고 날마다 업어주고 싶다"

"학한대로을 지원 받는 무독한 배정

은 별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오랫동안 자주 만나게되면 틀림없는 진국이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해가 안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가는 김 의원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김 의원은 그가 살아온 것처럼 4년간을 의원으로서 일하면서 적과 동지가 없이 모두가 같은 군민이었습니다.

같은 당 출신인 군수후보나 도의원, 그리고 군의원 후보에게 특별히 배려하는 법이 없이 모든 후보들을 모두 한결같이 대했습니다. 같은 당이라고 특별히 관심을 두거나 챙기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동지를 얻기 위해 열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한 식구 같이 대하며 군민의 소리는 아무리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일본에까지 가서 싸워

김 의원은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여 억울한 한센인들의 한을 풀어주는 한센인 특별법을 대표발의하였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한일의원연맹 등 국제협력을 통하여 한센인 특별법 통과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 9월 한센인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까지 가서 한센인들을 위해 보상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김 의원이 한센인 환자의 휠체어를 밀고 재판장으로 향했는데 이 모습은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상을 가장 많이 받은 우수의원

김 의원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의정활동에 다바쳐 최선을 다한 결과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로부터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보건복지분야 의원이 농어업인을 위해 면세유제도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그대로 유지시켜 농협과 수협에서 감사패를 받은 외에 많은 기관에서 감사패를 받아 가장 감사패를 많이 받은 의원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2년 연속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시민단체에서는 4년 연속 국정 감사 우수의원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이지만 농촌문제 해결에 앞장

처음에는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자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농해수위에서 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면세유문제나 농업기반시설부담금문제, 눈피해보상 등 농업계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김 의원의 모습을 보고 역시 열심히 일하는 의원은 소속위원회와 상관없이 지역현안해결에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입법화함으로써 농촌의 생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농촌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농촌의 살길입니다.

일을 가장 많이 한 의원

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많은 법률안을 새로 내거나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린 의원으로서 첫 손가락을 뽑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물론 농어업분야,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도 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략)

잠못 이루고 고민

저는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치를 4월 9일 18대 총선이 가까웠는데 '김

춘진 의원'의 적나라(赤裸裸)한 진면목(眞面目)을 모르는 군민들이 김춘진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틀림없이 재선의 영광을 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곧바로 편히 잠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재선을 떠나 지금까지 일해온 것만으로도 김 의원은 부안군민으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18대 국회에서도 지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금 저도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결정 후 보도문

〈9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1월 23일자 5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의 칼럼에 대한 「경고」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부안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지극히 우호적인 평가를 담은 자사 편집인 명의의 칼럼을 여과 없이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0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2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종로신문	(주)종로신문사 / 서울 종로구 관철동 252-1 대표이사 김 화 조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터』(2008년 1월 23일자 5면)	
주 문	(주)종로신문사가 발행한 종로신문 2008년 1월 23일자 5면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종로신문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종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종로신문 2008년 1월 23일자 5면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종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특집/새해에 만난 사람-박진 (국회의원 · 한나라당) 한국 정치를 빛내다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 터

'국민 성공시대' '종로구민 행복시대' 함께 오도록

새해 들어 종로 정가(政街)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단연 박진 국회의원(종로 · 한나라당)이다. 다가오는 총선과 지난해 12.19 대선 등 이른바 '정치의 계절'임을 감안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그가 종로에서 주목받는 것은 당연

한 일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 박 의원에 집중된 종로사람들의 관심은 여느 지역에서나 있을 법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일상적 관심을 뛰어넘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상한 관심'이다. 사람들은 그가 코앞에 다가온 4.9총선에 출마할 것인가, 또 당선될 것인가 등의 1차적 관심보다 그가 정권교체의 주역으로서, 전격 발탁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분과 간사로서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또 4.9총선에서 새 정권의 안정적이며 혁신적인 국정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의석확보에 어떻게 역할할 것인가 등을 놓고 이른바 '박진 역할論'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정치인 박진이 지역을 너머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기대감이 깔린 '역할論'이다. 젊은 시절 미국 영국 등에서 공부하며 해외 엘리트 인맥을 두루 섭렵한 박 의원이 세계화시대에 국가의 동량으로 큰 일을 할 것이며, 정치1번지 출신으로서 한국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이다.

겸손모드로

하지만 이 같은 역할론을 대하는 박진 의원 진영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담담할 뿐이다. 새 대통령이 등장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칫 두드러지게 보이거나 튀게 보이는 것도 새 대통령이나, 함께 고생하며 보좌하는 동료 의원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다는 나름의 '겸손 모드'이다. 박 의원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입지와 분수에 맞는 역할로서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에 최선을 다한 후 4월 9일 총선에 의연하게 임한다는 각오이다. 박 의원의 이런 '겸손 모드'나 분수에 맞는 역할론은 그러나 그가 현재의 입지에 안주하며 주어진 일이나 하고, 분수나 지키고 있겠다는 소극적인 행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12.19대선을 치르며 행한 거리 유세 연설이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직후 축하연에서 행한 연설,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후 종로 당원 신년회 등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향후 한국정치 속에서의 자신의 입지와 역할에 대한 나름의 희망과 포부, 새 정부를 통한 국정운영의 큰 틀에 대한 바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중략)

실용 국익외교 기틀 놓을터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 통일 안보 간사로서의 박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 국익외교'라는 기본틀 안에 한 · 미 동맹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일본과의 협력, 중국 · 러시아 등과의 경제통상 지원외교

특집/ 새해에 만난 사람-박진(국회의원 · 한나라당) 한국 정치를 빛내다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 터

'국민 성공시대' '종로구민 행복시대' 함께 오도록

박진 국회의원

혜화고가 철거확정 중앙고 인조잔디구장 개장 큰 성과

종로구 교육행문구 회복위해 국제고교 유치등 안간힘

주민 생활 환경개선위한 정부 지원 줄기차게 요구할터

를 강화하는 틀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新 아시아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면서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교역량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선 입체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폐기와 불능화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되면 남북경협과 교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입장이 남북관계를 과거 60~80년대처럼 대결 냉전 기류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보수 꼴통 대결세력으로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한반도 평화를 이끄는 한나라당'論을 펼친 바 있기 때문이다. 분단에서 통일로, 냉전에서 화해로, 대결에서 평화로, 단절에서 협력으로 가야 하는 한반도 공동 번영의 시대정신을 그가 모를 리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역 민원은 100% 해결 원칙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의 박 의원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보다 지역 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다. 후원회 사무실을 시 · 구의원 합동 민원실로 운영할 만큼 지역민원에 대해 시 · 구의원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춘 후 아주 민감하며 적극적 구체적으로 대응해 왔다. 때로 지역 민원은 100% 해결한다는 원칙을 강조할 만큼 집요하며 섬세한 자세로 민원 챙기기에 나서기도 한다. 예컨대 혜화고가 철거나 평창동 CNG가스 충전소 유치 저지, 내자동 육교 철거 및 종로구 사업예산 확보, 국제고교 유치를 통한 교육 명문구 회복 등을 위해 그는 직접 시 · 구의원들과 함께 서울시장을 만나거나 교육감 또는 경찰청장을 만나기까지 했다. 결과 그는 2008년 새해 아침과 함께 종로구민들께 올리는 인사용 팜플렛에 ▲종로구 특별 교육예산 증액 추진 ▲종로구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중앙고교 인조잔디구장 개장 ▲국제고교 개교 및 스타스쿨 프로젝트 추진 ▲혜화고가 철거 확정 등의 지역 민원 해결 목록을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전국민 성공시대'라는 슬로건에 맞춰 '새시대 종로구민 행복시대'라는 기치도 내걸 수 있게 됐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년간 국회의원에게 주는 여러 가지 상들 중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주는 '우수 국회의원상'을 비롯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백봉 신사상' 등을 휩쓸었다. 이른바 4관왕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현안 문제에 대해 정책 자료집을 발간해 시민단체와 언론, 피감기관으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종로구민들은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 국제위원장으로서,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일 안보분과 간사로 진출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며, 대내적으론 '동십자각 新 정치' '종로구민 행복시대'를 표방한 박진 의원을 통해 정치 1번지의 자부심과 명맥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을 듯 보인다. 다만 겸손 모드 속에서도 자신의 입지와 역할, 미래의 포부를 동십자각에 비유해 암시한 박진 의원의 향후 성공여부는 그의 인식대로 이명박 새 대통령이 국민성공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공산이다.

결정 후 보도문

〈99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종로신문 2008년 1월 23일자 5면『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터』제하의 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종로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정치적 소신,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6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3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남도일보	(주)남도일보 / 광주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2008년 1월 24일자 5면)	
주 문	(주)남도일보가 발행한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남도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보성 출신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

전남 보성 출신으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고문으로 활동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했던 유준상(65)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이번 4월 총선에서 호남은 '묻지마 투표'를 지양하고 당적을 떠나 유능한 인재에게 표를 던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산강 운하와 관련해 그는 "정부에서 운송, 관광, 부대시설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해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오는 2월 25일 출범한다. 호남정권에서 영남정권으로 교체된 상황에서 호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명박 정부는 영남정권이라는 지역정권보다는 국민들이 선택한 실용주의정권이라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오랜 기간 이명박 당선인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지만, 이 당선인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지도자다.

또한 이 당선인은 대기업 CEO출신으로서 누구보다도 경제개념이 확고하며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국익우선의 실용주의 노선에 치중할 것으로 본다. 그 예로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그의 활동을 살펴보면 될 것이다. 호남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호남인들의 지지율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문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광운대 동영상파문이 있기 전 호남에서의 부재자투표 결과를 보면 두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여줬다. 그런데 동영상 파문이 나면서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지지도가 10% 미만이 되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만약 동영상 파문이 없었더라면 이명박 당선인의 지지도가 호남에서도 20%, 아니 25% 정도의 지지율까지도 나왔을 것이다.

이는 지역선거에서 정책선거로 선거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그 시작이 이명박 정부라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변화의 시작에 호남인과 이명박 당선이 있다고 확신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묻지마 투표'를 지양하고 유능한 인재에게 표를 던져줘야 한다.(중략)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전남은 2012 여수박람회와 F1 그랑프리대회, 서남해안 개발 사업 등이 주요 현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감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수도권이나 일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더딘 광주가 독자적인 문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 모델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사업이다. 문화가 바탕인 관광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남이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전남의 천혜자원 또한 좋은 관광상품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잠재하고 있으므로 이런 문화와 자연을 하나의 관광단지로 조성해 놓으면 여수박람회나 F1대회 같은 행사를 유치했을 때 일회성 행사가 아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 일부에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누구보다도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을 중시하는 정부다. 지역차별이나 인재차별이 없이 가능성과 해당지역의 노력에 비례해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될 것이다.

과거처럼 그냥 퍼주기식 지원은 물론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에서도 막연히 그런 의심을 갖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갖고 중앙정부에 접근하고 설득하면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나은 지원과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이 공약한 '영산강 운하' 개발 사업은 낙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예산으로 추진하겠다던 공약이 대통령인수위에서 민자유치쪽으로 급선회했다. 그 배경을 놓고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지?

▶영산강 운하 개발 방식을 놓고 요즘 민자방식이냐 아니면 정부예산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영산강운하는 일단 오염된 강을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 생태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개발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아주 크리라 본다. 또 경부운하에 비해 호남운하는 그 실효성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한다. 영산강운하는 운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효과보다는 관광 개발에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데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과 연계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

영산강 운하사업도 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 정부예산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절반 정도 섞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이 사업은 국고가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했을 때의 여러 다른 효과나 비용절감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운송, 관광, 부대시설을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해서 하나의 테마파크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는 4·9 총선에서 서울 광진구 출마가 유력하다. 하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10년의 집권을 야당에게 넘겨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와 광주·전남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신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을 위한 제3의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가?

▶국회를 떠난 지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그동안 일본과 중국 유학생활, 만학의 정치학 박사과정을 통해 미진했던 학업도 열심히 하였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많은 분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진정한 정치란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정치라는 교훈도 얻었다. 이에 지난 2006년 12월에 좋은나라포럼을 발족시켜 학술토론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개발을 했으며 독거노인, 장애우, 불우이웃 등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펼치는 것이 생활의 기쁨이었다.

내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으며 한나라당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든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보성 출신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

이명박 정부에 마음 열고 믿음으로 지지 보내고
정부가 나서 영산강 운하 테마파크로 조성해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 갖고 정부 설득 필요

유준상은 누구
李당선인과 고려大서 인연

유준상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광주서석초, 광주서중 · 북중, 광주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대학졸업 후 대농그룹에 입사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에서 유망받는 사원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외자과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경영인으로서 자질을 보여준 그는 1974년 (주)해동유조의 대표이사로 10여 년간 경제CEO로 활동했다. 1980년 5 · 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켜본 그는 한국 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태웠으며, 1981 전남 보성 · 고흥에서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1~14대 4선 의원으로 국회 경제과학위원장을 거쳐 신민당 정책위의장,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적 르네상스시대를 열었지만 1996년 뜻하지 않은 공천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한나라당 중앙당과 서울시당의 상임고문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10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준문희도 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출마변 등을 밝히는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1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31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남도일보	(주)남도일보 / 광주 남구 사동 84-6 대표이사 박 성 호
심의대상기사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2008년 2월 1일자 5면)	
주 문	(주)남도일보가 발행한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남도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출마변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출마변 등을 밝히는 인터뷰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조영택 위원장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문화관광부 내 추진기획단 폐지가 지역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시작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성장동력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의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반발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남도일보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조정 · 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조성위원회 조영택 위원장을 31일 만나 위원회 폐지에 따른 우려와 해결방안 등을 들어봤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조성위원회의 역할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글로벌 문화경쟁 시대에 아시아의 문화자원을 매개로 한국이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도약하고 새로운 미래형 도시발전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수립된 국책사업이다. 조성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 정부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이다. 위원회는 13개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및 조정, 지역인사들의 참여를 통한 소통과 교류의 채널 역할을 수행했다. 또 조성사업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기구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결정과 종합 계획 수립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심의 · 의결기능을 맡고 있다.

광주시민 한결같이 우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조성위 폐지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인수위의 결정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 기구가 효율적 운영과 예산의 절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21세기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문화가 지니고 있는 '연성적 힘'을 국가의 전략적 가치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돼 있다. 또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전략적 의미는 도외시한 채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일방적 논리에 기초한 성급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조성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조성위원회는 그동안 종합계획의 확정과 정부와 지역간 가교역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갈등조정 등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역할을 다해 왔다. 일부에서는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표류하던 종합계획을 지난해 확정 · 발표했

"亞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조영택 위원장

조성위 폐지는 일방논리 앞세운 성급한 결정
정통 행정관료 전문성 살려 광주발전에 밀알
문화수도 결자해지 차원서 광주 서갑 출사표

광주시민 한결같이 우려

문화콘텐츠 만들어야

지역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

지역적 손해 있은 적 없어

'강력한 리더십 · 행정의 달인' 평가

다. 종합계획은 20년간 사업비만도 5조3천억 규모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와 추진단 폐지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광주시민 모두 위원회 폐지에 한결같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광주 ·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으로 확정시킨다는 방침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폐지키로 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문화콘텐츠 만들어야

–지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안대로 강행될 경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은가.

▶조성사업은 특별법으로 확정된 국책사업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전략산업'과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이라는 정책의지를 갖고 시작됐다. 조성위가 폐지될 경우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야심찬 국가계획의 추진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새 정부에서도 여야의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성위원회의 폐지는 국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

▶조성위원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20년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민의의 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에 앞서 청문회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

–이제 문화는 상품이자 경제이다. 광주문화중심도시가 나가야 할 방향은.

▶광주문화중심도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데 기본을 둬야 한다. 각종 음악과 미술 등 모든 분야의 문화를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국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인이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갖추지 못하면 '문화로 먹고사는 광주'란 이미지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술관과 전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한 용역비가 확보된 만큼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민 은혜 잊은 적 없어

–조 위원장께서는 31일 조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4 · 9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만약 여의도에 입성한다면 할일이 많을 것 같은데….

▶총선 출마는 그동안 30여 년이 넘는 국정운영의 경험을 지역에 봉사하고자 하는 작은 바람에서 비롯됐다. 또 능력중심의 정치풍토를 확립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정치인상을 구현하고자 출사표를 던졌다.

특히 조성위원장으로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성공적 완결을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호남지역은 10년만에 여당에서 야당으로 전락했다. 자칫 지역의 대규모 현안사업들이 정치적 논리에 휩싸여 좌초될 우려가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산증인으로서 광주의 미래발전을 구심점이 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감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자 18대 총

선 예비후보로 각오는.

▶먼저 2006년 5 · 31 광주광역시장선거에서 34%에 이르는 지지를 보내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2006년 5월 선거 때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열정과 사랑을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예산집행 등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광주 발전의 밀알이 되고 싶다.

조영택은 누구
'강력한 리더십 · 행정의 달인' 평가

조영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30여년 공직의 외길을 걸어온 '행정의 달인'이다. 대학을 졸업하던 지난 73년 22세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34세에는 전국 최연소 군수로 장성군수에 부임하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부 차관,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지방행정과 국정의 조율자로서 일익을 담당했다.

조 위원장은 '조직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비전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

실제로 김완기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지역 언론에 기고한 글을 통해 "남의 눈에 띄는 이유는 아무나 하루 아침에 따라갈 수 없는 그의 타고난 자질이요 갈고 닦은 능력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가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이다.

당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문광부와 광주시, 조성위원회와 문광부 추진기획단간 내홍 등에 시달리면서 표류했다.

2006년 8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07년 3월 특별법이 발효되는 등 제도적 틀을 갖췄으나 방향과 전망,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급기야 제2기 조성위원회가 조정기능을 상실한 채 추진본부와 불협화음에 휩싸이면서 본부장 사퇴와 조정위원장 해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조 위원장의 타고난 리더십은 이처럼 표류하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본궤도로 진입하는 데 빛을 발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10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1월 24일자 5면 "4월 총선땐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용진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정치적 포부 등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남도일보 2008년 2월 1일자 5면 "호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남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의정활동계획, 출마변 등을 밝히는 인터뷰 기사를 그의 경력,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1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32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2008년 1월 25일자 5면)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2008년 1월 30일자 5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5면『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1월 30일자 5면『'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시민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영등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시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5면『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1월 30일자 5면『'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영등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고 진 화/ 국회의원

서해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100만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로 바다의 기름띠가 사라지고 검은 모래가 하얗게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자원봉사 대열에 합류한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다.

시프린스호 사고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전대미문의 11만 톤 원유유출로 서해안에 들이닥친 환경 대재앙은 5159ha의 양식어장을 폐허로 만들었고, 황금어장을 자랑하며 25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태안해안국립공원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유출된 원유는 태안 일대뿐만 아니라 멀리는 제주도 연안까지 수산자원을 오염시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던 주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또한 기름 유출은 어장피해 외에도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긴다. 갯벌이 초토화되고, 바다 생물이 몰살되며, 철새의 떼죽음도 예상된다. 태안을 넘어 서남해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고 여파가 복구되어 지역주민이 다시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가 될지, 파괴된 생태계가 언제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한번 훼손된 자연과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번 사고는 유출된 기름 양에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규모인 만큼 직·간접적인 피해액도 천문학적 규모가 될 전망이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였지만, 원인은 결국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이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분명한 인재라는 뜻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질서 의식, 위험 불감증, 방재대처 시스템의 부실 등이 곧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 너무 안이하고 소홀한 사후 수습책으로 그보다 몇 배 큰 피해를 부르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초대형 단일선체 유조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 사고가 인재였음을 말해준다.

태안은 지금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기름오염으로 생계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연이어 삶을 포기하고 5만 가구에 이르는 피해 주민들은 당장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에도 숨가쁜 상황이다. 서해안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정부는 어민들의 생계 및 생존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세워야 한다. 더는 탁상공론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급히 현실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사고책임회사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만전을 다하길 촉구한다. 또한 효과적이고 책임 있는 방제대책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제도개선이 병행되길 바란다. (후략)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단 상

고 진 화
(국회의원)

△ 2008년 1월 25일자 5면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고 진 화 / 국회의원

지난 25일 우리 한나라당은 '4·9 총선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들을 임명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치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국민공천', 경선 때 누구를 지지했는지에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공명공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공헌을 했는지를 따지는 '실적공천' 등의 세가지 공천기준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이어 압도적인 표차로 10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한 이래로 당내에서는 괴이한 소문과

억측, 계파의 유 · 불리 등 여러 가지 잡음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공천 기준의 천명은 바람직한 것이다.

공천기준이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재해석되고 또한 방향, 목표, 제도 등으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공천 결과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계파에 기대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루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노선에 희망을 보낸 것이며, 4.9 총선의 시대정신도 그에 다름 없다. '탈여의도 정치에의 희망'이 바로 그것이다. 여의도 정치는 배신의 정치, 철새들의 정치, 계파중심의 정치로 규정되어 왔다. 따로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들은 구태 정치의 핵심이고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장본인이었으며 청산해야 할 과거의 유물들이다. 방향타를 '혁신'에 둬야 한다. 공천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에 다시금 희망을 걸어보게 하려면, '신뢰의 정치', '소신정치', '상생의 정치' 구조로의 변화를 보여줘야만 한다.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단 상

고진화

△ 2008년 1월 30일자 5면

이러한 정치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국민공천, 공명공천, 실적공천'의 공천기준은 투명성, 민주적 절차, 객관적 기준, 인재영입과 기반확대, 민주적 승복이라는 다섯가지 원칙으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중략)

한나라당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검증청문회의 개최는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18대 총선에서 당헌과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을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당의 현실적 역량을 고려하여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공천심의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의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공천에 반영하면 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신뢰감을 형성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한나라당이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공천에 대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밀실에서 광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정당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로 한국정치를 선진화해야 한다.

결정 후 보도문

<110쪽 경고문 내용 참조>

- 경 고 문 -

△ 2008년 2월 20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3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2008년 1월 31일자 5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31일자 5면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시민일보 5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시민일보 2008년 1월 31일자 5면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이 낙 연 / 대통합신당 국회의원

저는 5년 전 이맘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변인으로서 날마다 인수위에 출근했습니다. 10년 전 이맘 때에 저는 신문기자로서 김대중 당선자의 인수위에 들러 직접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에 관한한

저는 꽤 익숙한 편입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꽤 어수선하게 느껴집니다. 대단히 이른 시기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의 모든 것이 비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인수위에 비해 이명박 인수위가 더 광범위한 비판을 더 이른 시기부터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인수위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우선 김대중 인수위가 조심스럽게 일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의 스타일도 그랬습니다. 게다가 당시는 외환위기로 IMF 위기의 극복이 누구에게나 최우선의 과제였습니다.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단 상

이 낙 연
(대통합민당 국회의원)

김대중 당선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최초의 정권교체를 당한 측에서 보면 당선자나 인수위를 향해 뭔가 시비를 걸거나 공격을 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IMF 상황과 당선자의 일하는 방식 등이 인수위를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많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일부 보수언론과의 긴장 속에서 출범했습니다. 보수언론의 공격은 인수위 출범 이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공격의 표적도 노무현 당선자의 언동에 집중됐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란스럽다면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뒤뚱거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명박 인수위가 이처럼 뒤뚱거리는 것으로 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의 일하는 방식에서 연유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대중 인수위는 IMF 상황과 당선자의 용의주도함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노무현 인수위는 정책 노선과 인력 탱크의 계승과 확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명박 인수위는 정책 노선과 인력 탱크의 전면적 단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의 거의 모든 중요 정책들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노무현 정부를 놀랍게도 닮아가고 있습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의 어느 날 진보적 신문사를 불쑥 방문했습니다. 대변인인 저도 사전에 전혀 몰랐습니다. 당선자는 "대변인이 반대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노무현 당선자의 그런 행동이 그러잖아도 비우호적이었던 보수언론을 얼마나 자극했을지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그 대신에 GM 대우자동차 인천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영어 공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열면서 진보적 교육단체들을 굳이 배제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는 진보적 교육단체들을 공청회에서 배제하는 대신에 다른 참가자들을 하루 전에 따로 소집해 뭔가를 사전 협의했습니다. 공청회를 코드에 맞게 기획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을 만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를 '코드 정부'라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코드 정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으로만 본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인수위는 지난 10년을 '잘못'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이 10년의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정도(程度)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지난 10년의 정부가 선택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일정한 희생을 지불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으로 우리 사회는 또다른 희생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명박 당선자도 인수위도 그런 기류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정책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그늘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눈물이 시대의 멍에가 되곤 하는 법입니다.

결정 후 보도문

〈113쪽 경고문 내용 참조〉

- 경 고 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삭)는 시민일보 2008년 1월 28일자 5면 「○명박인수위을보비_태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관념이 주될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3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0일자 5면

의결번호	2008자심3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전북도민일보	(주)전북도민일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2008년 1월 25일자 13면)	
주 문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13면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전북도민일보 1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13면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김 춘 진/국회의원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

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칼 럼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김 춘 진
국회의원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생명연구소 등 5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중앙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 연구개발·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농촌에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개방이라는 파고 속에서 우리 농촌이 기술농업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농업과 관련한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 또한 확대하는 추세이다.

OECD국가의 농업R&D 투자비율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3.5%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크게 가까이 있다.

시대 흐름의 역행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검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맞긴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중략)

이러한 시점에 기술농업을 추구해 왔던 조직을 폐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중략)

선진국 농업정책 반면교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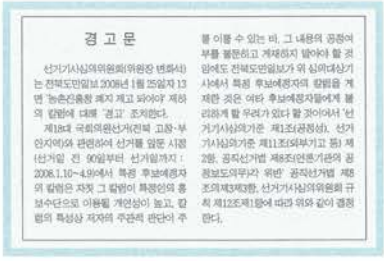
지금 필자는 국회 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잣대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결정 후 보도문

〈11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희재)는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25일자 13면 '농촌진흥청 폐지 제고 촉구해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법 앞문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1.16~4.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6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가'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제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고한다.

△ 2008년 2월 19일자 15면

의결번호	2008자심35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아침신문	(주)아침신문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대표이사 박 국 태
심의대상기사	-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2008년 1월 28일자 3면) - 『남·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2008년 2월 4일자 3면)	
주 문	(주)아침신문이 발행한 서남일보 2008년 1월 28일자 3면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 2월 4일자 3면 『남·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아침신문(舊 서남일보)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서남일보 2008년 1월 28일자 3면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 2월 4일자 3면 『남·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반복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재심1	결정유형 / 인 용
재심청구인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주)일간아침신문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대표이사 박 국 태
주 문	(주)일간아침신문의 위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한 2008자심35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위 칼럼을 게재할 당시 정호선 씨가 중앙선관위에 제18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실이 없었고, 정씨 또한 '자신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출마예정자가 아닌 정씨의 칼럼게재는 문제가 없으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 위원회는 정호선 씨가 제15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으로 활동하였고 제17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다는 점과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초까지 연합뉴스, 한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경제 등 언론의 제18대 총선 출마예정자 명단에 지속적으로 게재된 점 그리고 당 위원회의 지난 결정인 2008자심20호(서남일보 08. 1. 21.자 정호선 씨 칼럼)에 대해 재심청구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였으나 정씨가 제18대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바,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

정호선 /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 UN본부 유사 이래로부터 20세기까지는 아날로그시대였으며 이제 21세기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디지털시대는 시공을 초월하는 유비쿼터스 사이버 혁명 시대이므로 사고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우리는 천손민족으로서 세계 모범이 되어 상생의 남북평화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시대를 열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번 17대 대통령은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 세계관, 우주관을 바로 세워 세계적인 전략과 비전으로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남북한 상생의 통일을 이룩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

국가를 통치하는 형태에는 크게 세 종류의 시스템이 있다.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신정정치와 신분의 차별을 둔 왕정정치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창출되는 민주정치가 있다.

우리나라 정치시스템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9,200년 전부터 시작된 환인, 환웅, 단군시대는 신정정치라고 볼 수 있고, 3국 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까지는 왕정정치이고 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정치 국가 체제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 국가시스템을 고찰해 보면 신정정치를 하는 나라는 로마교황청이고 왕정국가는 영국과 일본 및 태국 등이 있고 대부분의 나라는 민주국가이거나, 두 가지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각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우리나라 왕정 정치사를 보면 혈통주의로서 대를 잇기 위한 황실 내에 불륜이 빈번했으며, 왕권 다툼을 위한 왕자들의 난과 신하들의 싸움으로 당쟁이 다반사였다.

지금까지 강대국들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로마는 군대의 힘으로, 영국은 식민지 정책으로, 소비에트는 독재로, 미국은 경찰국가로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힘으로는 통치할 수 없으며 차원 높은 의식으로 전 세계인을 같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세계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인류를 위해 오직 봉사만을 하는 세계 지도자가 통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민족이 통일을 이룩하여 세계정부를 세울 수 있는 정신적인 지도 국가로서 동방의 등불국가를 세운다면 어떤 정치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될 수 있는 세계국가 형태를 위해서 새로운 통치철학과 사상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구상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공존공생, 공익을 추구하는 우리의 홍익인간, 이화세계, 성통광명 사상이 적합하리라 본다.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권력 구조를 전부 도입하는 즉 삼위일체 정치시스템을 제안한다. 신권, 왕권, 민권이 가위, 바위, 보 게임처럼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통치시스템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후략)

남 · 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정호선 / 15대국회의원 · 세계학생UN본부장

2007년 8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한정상의 만남은 앞으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평화통일로 성큼 다가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세계평화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계인이 깜짝 놀랄 만한 큰 회담 결과를 이루어 내어 역사에 길이 빛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국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해 본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상생의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요구하는 명분 즉,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한다.

이 두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베트남식 적화통일도 아니고 독일식 흡수 통일이 아닌 우리 한민족식 천부(天符)사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이다.

천부평화통일 방안은 2단계 통일방안으로서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교와 국방만을 통일하는 분권형집정제통일 즉, 1국가, 2체제, 3행정부 연합국가 체제이다. 국가 체제는 현 남북한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휴전선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1국가의 대표는 아버지 역할인 영수회의(남북대표)가 외교, 국방, 통일을 담당하며 의사결정은 화백회의체제로 한다. 또한 3행정부는 남한(공주)과 북한(평양) 제주에 별도로 세 개의 행정부를 두고 어머니 역할로서 각각 수상이 행정을 담당하며 국가의 예산과 행정은 두개의 법률체제로 한다.

또한 국회는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특 별 기 고

정 호 선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 UN본부

남북평화통일국가의 통치시스템과 세계정부

△ 2008년 1월 28일자 3면

특별기고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 UN본부장)

남 · 북 평화통일과 천부 평화 사상

△ 2008년 2월 4일자 3면

를 건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제조한 남한의 상품이 Made in Corea가 되어 하나의 국가 상품으로 인정되어 북한은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이 동시에 이룩되고, 남한도 통일국가로서 신용도가 올라가 많은 해외자본이 유치될 것이며 국민 소득 3만불 시대가 쉽게 열려 동북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중략)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우선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앞으로 남북한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한 통일협의기구로서 남북 동수 『남북통일민관평의회』를 결성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민관평의회』를 결성하여 남북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남한도 일본과 중국에 샌드위치 경제상태가 되어 이대로 간다면 5년 내에 철강, 자동차, 선박, 정보통신 분야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잃어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북한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길밖에 없다.

남북한 중심인 비무장지대 근처에 국회의사당과 화백궁(영수들의 집무실)을 새로 지어 새로운 정치도시를 건설한다.

영수 및 수상과 상 · 하 국회의원선거는 남북한 분리 동시선거를 실시한다. 휴전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통일이므로 통일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 군인 수를 줄일 수 있고 경제협력을 하게 되므로 오히려 돈을 버는 통일이 된다.

한민족평화통일을 가능한 빨리 이룩하여 위대한 한민족국가(Grand Corea)를 건설하기 위해 천부평화통일 방식의 통일헌법을 2008년부터 논의하여 국회의원 임기 4년 내에 제정하여 조선이 일본에 패망한지 100년이 되는 2012년에 통일 국가

셋째, 비무장지대 일대를 세계평화지역으로 선포하여 동, 서간 도로, 철로 등 SOC 시설을 하여 한반도 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그 단지 내에 미국의 자유여신상, 프랑스 에펠탑, 피라미드, 만리장성 일부를 건설하여 세계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협의하길 바란다.

의결번호	2008자심4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 종 선
심의대상기사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2008년 2월 3일자 54~55면)	
주 문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8년 2월 3일자 54~55면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월요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성북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2월 3일자 54~55면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성북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화제집중 / IPU(국제의원연맹)집행위원

유재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국내 정치 상황이 급변하는 국제 외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더욱 국민 1인당 총생산 GNP 2만 달러 시대를 맞은 국력의 욕구는 한반도를 넘어 좁게는 동북아와 넓게는 세계 중심을 향하는 시점, 국내 외교력도 이에 걸맞

는 국제적 위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

이를 반증하듯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종욱 WHO(세계보건건기구) 사무총장을 배출한 데 이어 2006년에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을 UN 사무총장으로 선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한편 최근에는 UN 평화유지군에 적극 참여, 국제 리더로서의 면모를 쌓아가고 있다.

여기에 또 하나의 UN 즉, 국제의원연맹이 가세하면서 한국은 다시 한번 세계 외교사를 새로 쓰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주인공은 지난해 10월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으로 피선된 유재건 의원, 유 의원은 96년 국회 입성 이후 줄곧 정치권에서 '외교통'으로 통해 온 유력 인사 중 한 명이다. 법조인 출신이지만 탁월한 언변과 국제 감각으로 IPU 집행위원에 선출돼 일명 '의원외교'를 활발하게 펴고 있는 유재건 의원을 만나 보았다.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도 현 정치 상황이 국내 의원 외교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다." 3선의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유재건 의원의 말이다.

유 의원의 이 말은 총선을 앞둔 현재의 정치상황과는 괘를 달리하는 발언이다. 더욱 이 말은 이념 지향적 정치지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기문 총장 이은 또 하나의 성과

얼핏 외교와 총선의 관계에 깊은 이해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 정치와는 분명 동떨어진 발언임엔 분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3선 중진으로 외교와 국방, 법조계 여기에 방송계와도 깊은 연을 갖고 있는 3선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IPU가 마련한 지구온난화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이 IPU가 마련한 의제를 공동 협의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유재건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화제집중

UN과 더불어 국제 외교계 양대산맥 국제의원연맹(IPU) 집행위원 피선

"반드시 평화-외교통상, 정부만의 일 아니다" 의원 외교 필요성 강조

"정치 상황 따라 총선이 외교력에 영향 줄 수 있어" 안타까움 피력

중진급 의원의 아쉬운 토로에는 자칫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활을 거는 우리 정치현실에 대한 자조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중략)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17차 국제의원연맹(IPU)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 국내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유 의원의 IPU 집행위원 피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외교력과 아울러 또 하나의 국제 외교라인을 형성하게 됐다고 반겼다.

유 의원이 집행의원으로 선출된 IPU는 현재 150개 국가가 참여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130년 전통을 가진 전 세계의회 연합체인 IPU는 유럽,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중심이 돼 이끌어온 국제기구로 외교 전문가들은 IPU를 UN과 더불어 국제 외교의 '양대산맥'이라고 일컫는 조직이기도 하다.

UN과 IPU의 공동 협력

당시 총회를 통해 집행위원으로 피선된 후 유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위상, 한국 국회의 위상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다"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덕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감격을 표현한 바 있다.

유 의원은 IPU 집행위원으로 향후 4년간 150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빈곤과 전염병, 인권, 기후변화 등 인류 공통 관심사를 두고 대응방안을 찾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유 의원의 이번 피선으로 IPU 내 한국의 역할이 적지않게 확대된 만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폭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터, 사실상의 의원외교가 닻을 올렸다는 평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지난 10월 열렸다.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이 IPU가 마련한 지구온난화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UN 사무총장이 IPU가 마련한 의제를 공동 협의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국내 외교통상부장관 시절, 유 의원과의 친분과 아울러 IPU 의제가 UN을 움직였다는 말이다. 이를 통해 유 의원은 "국제기구의 양대 산맥인 IPU와 UN이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명실상부한 양대 기구의 위상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함께 이어졌다. (중략)

유재건 의원의 이 같은 IPU 가능성은 그의 정치이력에도 잘 드러난다. 지난 77년부터 89년까지 미국연방정부 지역사회 변호사를 역임한 유 의원은 90년 영풍 사장을 거쳐 93년까지 MBC 시사토론을 진행하며 일반에 알려진다. 그러나 95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를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96년 제15대(서울 성북구 갑)를 통해 국회에 입성, 97년부터 김대중 총재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연이어 재선과 3선 고지를 밟았고 2006년 1월부터 약 2개월 간,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역임한다.

그러나 정작 그가 자랑하는 정치이력은 이것이 아니다. 유 의원은 초선이던 지난 96년부터 3선으로 발돋움한 지난 해까지 국제의원연맹에 꾸준히 얼굴을 내밀었다. 그가 외교통, 특히 미국에서의 변호사 생활이 힘이 돼 정치권에서도 '미국통'으로 통하는 만큼, 외교적 수완이 남다르다는 지적이다.

유럽, 집행위원에 '비례대표' 할애

그의 정치적 성공도 여기서 비롯된다. 특별히 계파에 소속되지 않았고 3선을 오는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외교와 정보 분야에서 탁월한 의정활동을 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도 "3선 기간 동안 10여 차례 총회와 회의를 다녀왔다"며 "당내에서도 많은 배

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제무대의 감각과 식견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한마디로 국제적 전문성을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다져온 셈이다.

외교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고 향후 IPU를 통해 국가외교력 강화에 힘쓰겠다는 유 의원에겐 최근 깊은 고민이 생겼다. 현실 정치의 벽이 그것이다. 소속 정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민심을 잃고 사분오열, 현직 의원에게만 허락돼 어렵사리 얻어낸 IPU 집행위원의 자리가 위협받게 됐다. 유 의원은 "이제야 비로소 의원 외교의 시동이 걸렸는데…"라고 말끝을 흐리면서도 "국내 정치에 몰입해 이 같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자리를 내동댕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기구를 이끌어온 유럽의 예를 들며 "기구에 대한 인식과 집행위원의 위상을 잘 아는 유럽의 경우 IPU 집행위원에 대해 비례대표 등을 통해 자격을 유지하게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국제 사회 조정 역할이 활성화된 유럽의 사례를 들어 소속 당에서도 이 같은 배려를 해주길 소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그의 이러한 바램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기구에 대한 인식이 일천한 데다 당의 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이다. 그의 정치적 고민도 여기서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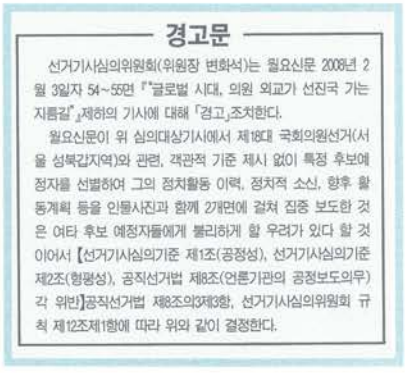
대선 당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의 고민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대목,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외교라인에 합류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대선 이전 이 후보는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계획 취소로 곤혹을 겪는 상황, 미국에 밝은 외교통이 절실했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선택한 카드로 유 의원을 합류시키는 것. 그러나 당내 중진이라는 점과 정치적 소신은 그의 선택을 당에 머물게 했다고 한다.

모처럼만의 외교력 강화 기회가 정치적 상황에 의해 날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그의 고민은 나날이 깊어간다. 개인적으로 탈당을 고민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가 이끄는 당내 모임(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 모임)과의 협의과정도 거쳐야하는 상황이다.

'의원 외교'에 시동을 건 시점에 닥친 정치적 위기, 국제 전문가로 국익을 꿈꾸는 한 중진 정치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결정 후 보도문

〈122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요신문 2008년 2월 3일자 54~55면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성북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활동 이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일자 54면

의결번호	2008자심4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성주신문	(주)성주신문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2-6 대표이사 최 성 고
심의대상기사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2008년 2월 5일~11일자 8면)	
주 문	(주)성주신문사가 발행한 성주신문 2008년 2월 5일~11일자 8면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 발행되는 주간 성주신문 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성주신문 2008년 2월 5일~11일자 8면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Global Leadship Program CEO상 수상한
주진우 회장을 찾아서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매출 1조원 달성…식품업계 새 강자로 부상
변화 · 스피드 · 사람 강조한 경영철학 돋보여

참치의 명가(名家) 사조그룹이 신동방, 대림수산, 오양수산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드디어 매출 1조원을 돌파해 재계 '매출 1조원 클럽'에 가입했다. 식품전문기업 군(群)에서는 제일제당, 농

심, 대상, 오리온, 동원그룹에 이어 6번째로 이룬 쾌거이다.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은 이로 인해 지난달 18일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수여하는 제3회 GLP(Global Leadship Program) CEO상을 수상했다.

주 회장은 1977년부터 부사장, 사장을 거쳐 1978년 부친 주인용 창업주의 갑작스런 별세로 29세의 나이에 사조산업 회장을 맡아 당시 규모 26억원의 회사를 오늘날 매출 1조원 규모로 일궈내어 대기업군으로 성큼 다가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15, 16대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비서실장과 정책위 부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기도 해 정치인 '주진우'로서도 확고히 자리 매김한 후 2004년 경영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사람장사(정치)보다 고기장사가 낫다'는 결론으로 다시 기업인으로 돌아온 정치인 출신 기업인이다. "정치와 경영의 차이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최우선시 하며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결정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정치인은 결과보다는 과정의 정당성 그리고 합리적 사고보다는 상황에 대한 감각적 판단을 더 중요시 한다고 봅니다."라며 정치와 경영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또 자신의 경영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는 만기총람(萬機總攬)형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 무엇을 하고자 결단하면 거기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책임도 제가 다 집니다. 그동안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고독한 결단도 이와 유관하다"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실제 그는 '창업주'도 '경영 2세'도 아닌 '1.5세대'라고 자처하며, 21세기에 걸맞은 기업경영 철학으로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A(인수합병) 10여건에 일류 브랜드만 4개 보유

수산업 가공분야에서 맛살, 원양어업, 참치, 젓갈 등 일류 브랜드만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가 1백 개가 넘는다고 한들 전세계적으로 '사조를 이길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금까지 M&A(인수합병)만 10여 건을 성사시킨 중견기업의 최대 장점은 의사결정 과정이 전광석화와 같이 빨라야 한다는 지론이다. 지난 9월 자회사 사조CS를 통해 오양수산의 지분 47.6%를 취득, 경영권을 인수했다.

단순히 사세(社勢)를 키우기 위해 오양수산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작고한 선친의 지인(知人)이자 주 회장의 후견인이며, 스승이었던 오양수산 고(故) 김성수 회장의 '회사를 영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또한 통합으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주 회장의 첫인상은 거침없는 화술과 미소를 잃지 않는 다정다감함이 묻어있는 한편, 카리스마형 보스의 기질도 엿볼 수 있었다.

최근에 '초일류 중견기업으로 가는 길'(부제-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산다)이라는 경제서적을 출간했다. 지난달 8일 왜관읍 리베라 웨딩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는데 2천여 명의 하객이 운집해 그의 정치적 기반과 떠오르는 CEO로서의 유명세를 유감 없이 과시했다.

주 회장은 2005년부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한국원양어업협회 고문, 한국정치학회 이사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21C에 도전하는 우리농민들,

2000년대 일본농업, 파란들 파란바다, 농심천심 등이 있다. 기업 경영의 바쁜 와중에도 주 회장은 명지대 초빙교수 등 활발한 사회 활동과 드러내지 않는 나눔의 실천을 하고 있다.

1949년 경북 성주에서 출생한 자랑스러운 출향인이며,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를 취득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4년에는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작년에는 러시아 극동국립인문대학교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구열도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그의 생활신조는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의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 이라고 한다. 다년간의 정치생활 동안 공인이나 지도자에게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윤리적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1970년대는 한국의 건설업체가 중동에 진출할 때 가장 큰 경쟁력이 값싼 노동력이었지요. 그런데 이번 중동 방문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시공, 검사, 공사 감독까지 건축의 전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습니다. 더불어 업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만 형성된다면 우리의 훌륭한 인력을 갑절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주 회장은 오늘날 국내의 산업구조가 서비스업과 IT 등에 치우치는 추세지만 3차 산업을 키우더라도 제조업, 즉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든든히 바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에 오양수산을 인수하면서 한계산업이라고 평가받던 수산 및 냉장 식품 사업에서 블루오션을 찾은 느낌입니다"며 사조의 러시아 지사를 오양의 미국 지사와 연결해 글로벌 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고자 한다는 주 회장은 아버지가 물려준 기업, 나아가 한국 원양어업을 되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넘어 제조업에서 성공신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인 윤성애 여사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고, 고향 발전에도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전천후

Global Leadship Program CEO상 수상한 주진우 회장을 찾아서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 입니다"

매출 1조원 달성…식품업계 새 강자로 부상
변화·스피드·사람 강조한 경영철학 돋보여

▲시조그룹 사옥

▲주진우 시조그룹 회장이 한양대 한양인상 수상

기업인이다. 18대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한다.

고향 어르신들께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각별한 각오와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로 새해 인사를 대신했다.

결정 후 보도문

〈12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섭)는 성주신문 2008년 2월 5일~11일자 8면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입니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 · 성주 · 칠곡지역)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수상 소식, 사업 경력, 경영성과, 포부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2월 26일자 8면

의결번호	2008자심4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부안저널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심의대상기사	-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2008년 2월 6일자 4면) -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2008년 2월 6일자 4면) -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2008년 2월 6일자 6면)	
주 문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2월 6일자 4면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제하의 기사 및 2008년 2월 6일자 6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제하의 칼럼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동정을 상하로 배치해 보도하고 그의 칼럼{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게재하는 등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2월 6일자 4면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제하의 기사 및 2008년 2월 6일자 6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동정을 상하로 배치해 보도하고 그의 칼럼{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게재하는 등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156명 동참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9일(화) "농촌 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총 15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혀,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고되었다.

김춘진 의원은 "건국이래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신분을 민간신분으로 바꾸어 연구와 기술보급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꼭 필요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어, 종자안보를 포함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시름하는 농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농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후략)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국회의원 156명 동참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 어려울 듯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9일(화)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를 위한 서명에 총 156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혀, 농촌진흥청 폐지 법안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고되었다.

김춘진 의원은 "건국이래 농촌진흥청은 국가 농업기술을 개발보급과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하루 아침에 공무원신분을 민간신분으로 바꾸어 연구와 기술보급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연구분야를 출연연구기관화 할 경우 수익성 있는 연구에만 집중하여 꼭 필요한 연구가 부족할 수 있어, 종자안보를 포함한 식량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개방화 시대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으로 존속시키고, 기술연구 및 보급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 개방화의 파고 속에 시름하는 농업인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것만이 정부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농촌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명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앞으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후략)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지난달 21일(월)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부안지사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정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발전과 부안지역 농업인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지역농촌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노력하는 김영길 지사장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며, 특히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에 농업분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예측불허의 재해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대책과 철저한 물관리로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후략)

△ 2008년 2월 6일자 4면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지난달 21일(월)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부안지사 2008년도 주요 업무현황과 정부예산확보 및 신규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 발전과 부안지역 농업인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김춘진 국회의원은 지역농촌을 책임지고 일선에서 노력하는 김영길 지사장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농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생각이며, 특히 농림부 및 기획예산처에 농업분야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며, 예측불허의 재해상황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대책과 철저한 물관리로 고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노력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후략)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국회의원 김 춘 진 / 고창 · 부안

인수위원회와 농진청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농업의 강화

현재 농산물 수입 등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농업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을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이 담당하여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를 무작위로 적용한 잘못된 농업관에 기인한다고 본다.(중략)

우리 농촌의 현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라는 큰 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맡긴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지금 필자는 국회 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으며, 1월 31일 현재 국회의원 157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특별기고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국회의원 김춘진 (고창 · 부안)

인수위원회와 농진청

지난 1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인 농업기술원, 작물과학원, 축산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9개 연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산림과학원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농업의 강화

현재 농산물 수입 등 우리 농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술농업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을 우리나라 농업기술 개발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이 담당하여 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직 인수위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관련 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화 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를 무작위로 적용한 잘못된 농업관에 기인한다고 본다.

시대흐름에 역행

세계 각부분의 나라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과 투자 또한 확대하는 추세이다. OECD국가의 농업에 산 중 R&D 투자비율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3.5%수준인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높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2001년부터 모든 국가연구기관을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로 평가되어 국가연구기관으로 환원을 결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폐지와 산하 연구기관을 정부출연기관화 한다는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농촌 현실

우리 농촌은 산업화를 지나면서 소외되어 왔다.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속에서 매번 양보해야 했고 또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정부는 매번 예산지원과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농촌현실은 나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 농촌은 한-미 FTA 라는 큰산을 만났다. 이는 농민들이 홀로 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이야 말로 그동안 피해 받아 왔던 농촌에 정부가 나서서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어도 모자랄 시기에 기존에 있던 농업관련 조직을 폐지하고 민간에게 이를 맡긴 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물론 경쟁을 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원칙일수도 있다. 하지만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의 식량안보를 걱정해야 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농업분야를 경제논리로 재단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서구 선진국의 농업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지금 필자는 국회 내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모임 결성을 통해, 관련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농촌진흥청 폐지반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으며, 1월 31일 현재 국회의원 157명의 서명을 이끌어 내었다. 농촌진흥청 폐지문제는 비단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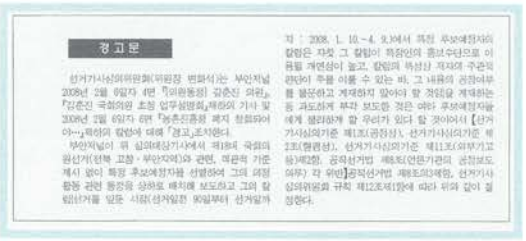
우리 농업과 농촌의 문제는 경제성이라는 잣대가 아닌 식량안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농업의 경쟁력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높여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2008년 2월 6일자 6면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당선인께 농촌진흥청 폐지에 대하여 재고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13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M언지님 2008년 2월 9일자 4면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제하의 기사 및 2008년 2월 6일자 6면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하여야…」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M언지님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부안지역)와 관련, 해당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동정을 상하로 배치해 보도하고 그의 칼럼난거를 입은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객자의 주관적 관점이 투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계재하는 등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5일자 6면

의결번호	2008자심4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민주신문	(주)이십일세기뉴스 / 서울 중구 중림동 500 대표이사 강 상 숙
심의대상기사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주 문	(주)이십일세기뉴스가 발행한 민주신문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민주신문 5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정치활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민주신문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정치활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인물탐구 / 한나라당 김무성 최고의원

(전략)

'박근혜계 좌장', 'YS계', '민추협 공신', '민주계' 등은 15, 16, 17대(부산 남) 국회 3선 중진인 김무성 의원을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김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시점은 1996년 YS가 대통령 때인 신한국당 시절이지만, 그의 정치인생은 이보다 한참 더 거슬러 올라간다. 김 의원의 정치 뿌리는 민

주화추진협의회에 있다.

동해제강(주) 전무이사, 삼동산업(주)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성공한 젊은 기업인으로 잘 나가던 그는 민주화추진협의회에 몸담으면서 야당정치판에 뛰어들었다.

1984년 발족한 민추협은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 YS계와 DJ계 야당인사들이 연합해 발족한 재야정치 단체. 김 의원은 민추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추협동지회 공동대표 등 민추협 중심부에서 활약하면서 정치를 익혔다.

민추협 핵심인사들은 85년 신한민주당을 창당했고, 구성원 대다수가 신민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민추협은 원외에 남아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지만,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 때 YS와 DJ가 대립하면서 사실상 해체됐다.

김 의원은 민추협에서의 인연으로 아직까지 민주계 혹은 YS계로 불린다. 김 의원은 13대 대선 당시, 통일민주당 후보 YS의 선거대책본부 재정국장으로 일하며 캠프의 핵심부에서 활약했다.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당시 정치 환경에서 대선 캠프의 재정국장직은 '보스'의 확실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근접하기 어려운 자리였다. 대선 이후에도 김 의원은 당 총무국장과 국회행정실장, 기조실차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14대 대선을 겨냥해 1992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에선 의사국장과 의원국장,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후보 추대위 총괄국장 등을 지내며 핵심부 자리를 굳혀나갔다. 14대 대선 때도 후보 정책보좌역을 지내면서 YS의 지근거리에서 활동했다.

젊은 시절부터 윗분에게 인정

YS의 대선 승리 후, 김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으로 활약했고, 곧이어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사정비서관 등을 지내며 권력핵심부로 진입했다. 내무부의 '실세 차관'을 지내기도 했다. 96년 치러진 15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처음 진입했고, 한 지역에서 현재 내리 3차례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다.

김 의원은 16대 대선 당시 또 한번의 정권창출을 위해 총력을 쏟았다. 이회창 총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 라면 죄'

인물탐구

감무성 최고의원

젊은 기업인서 정치가로 변신, 84년 발족한 '민추협'이 뿌리
YS 집권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거치며 권력핵심부로 진입

재 비서실장,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대선기획단 미디어대책 본부장 등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았고, 대선 후 권력핵심부로 이동하는가 싶었지만, 대선 패배로 좌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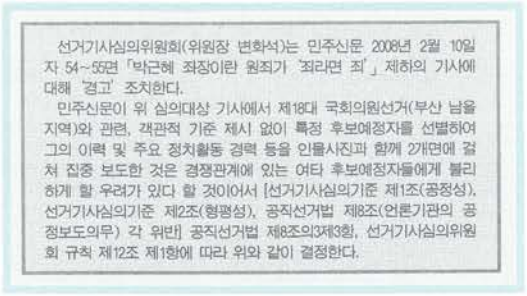
2004년 총선 이후 김 의원은 당시 당 대표로 선출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적극 도와 당 재건에 앞장섰다. 이 때부터 그는 박근혜계 좌장으로서의 입지를 만들어갔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 때 친박 핵심 인사로 이미지가 굳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최고의원직을 맡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나라당 공천 갈등의 정점에 서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가 지난 29일 '부정부패'로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해 공천심사를 불허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 그 이유이다. 이는 당규 3조 2항에 근거한 결정이다. 김 최고 의원은 1996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10년 전 일이고 16 · 17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김 최고위원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당의 이런 처사가 정치보복이며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하며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은 최악의 상황인 '분당사태'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국면에 처해 있어 김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134쪽 경고문 내용 참조〉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학석)는 민주신문 2008년 2월 10일자 54~55면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민주신문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 남을 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이력 및 주요 정치활동 경력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13일자 54면

의결번호	2008자심5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중앙SUNDAY	(주)중앙일보사 /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심의대상기사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2008년 2월 10일자 2면)	
주 문	(주)중앙일보사가 발행한 중앙SUNDAY 2008년 2월 10일자 2면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중앙SUNDAY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중앙SUNDAY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면서 출마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중앙SUNDAY 2008년 2월 10일자 2면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앙SUNDAY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면서 출마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총선출마 나선 『7막7장』의 주인공 홍정욱씨 단독 인터뷰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계 진출을 전격 선언한 홍정욱(38) 전 헤럴드 미디어 대표이사 회장이 8일 중앙 SUNDAY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4일 회장에서 물러나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다. 이 지역 현역 의원

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여당 대변인을 지낸 대통합민주신당 전병헌(50) 의원. 인기 아나운서 출신인 유정현(41)씨, 서장은(43) 당협위원장 등과의 한나라당 공천 경쟁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 씨의 아들로 미국 하버드대 우수 졸업생으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그는 "평생을 한 마리 양으로 편안히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다"며 정치권 도전의 포부를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는데 미리 자문이나 추천을 한 사람이 있나.

"솔직히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양쪽 모두와 오랜 접촉이 있었다. 선거 때마다 '콜'이 있었다. 그때마다 내가 기업을 살려야 했고 경험을 쌓아야 해서 거절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고민했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한나라당 내 여러 세력과 골고루 만났다. 누구 라인을 타고 갔다는 얘기는 안 들을 것이다."

-처 이모부인 정몽준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함께 데려가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 의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회사에서 퇴임하고 모든 신문에 내가 정계 진출한다고 나온 다음에야 아차, 가족인데 상의를 안 드렸구나 싶어서 전화로 인사를 드렸다."

-많은 사람이 대권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다.

"초등학교도 입학 안 한 사람한테 대학 수석 합격 비전을 물어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찬이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떻게, 어떤 직책에 도전하느냐는 유권자의 뜻이고 하늘의 뜻이다."

-귀족적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나에 대한 부정적 평가 중 부모님께 죄송스럽고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표현이 바로 이거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영화배우의 아들이 귀족이 됐는지 잘 모르겠다." (중략)

-언론사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왜 정치권으로 가나.

"나는 오래전부터 공직 참여를 중요 목표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걱정이나 우려보다는 속 시원한 후련함이 있다. 20세기 대한민국 엘리트의 중요한 사명이 입신양명(立身揚名)이었다면 21세기형 엘리트의 사명은 선공후사(先公後私)여야 한다."

-언론사를 인수할 때부터 정치를 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는데.

"언론사 경영이 정치의 지름길이라고는 한번도 생각을 안 했다. 언론사 경영은 참으로 어렵다. 결국에 언론사 인수보다 정치의 뜻을 펴고 싶어 참여를 선언하는 것

수보다 훨씬 쉬운 게 많다."

–언론사 경영에서는 손을 떼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주식을 갖고 있으니 좋은 투자자 영입 등 주주로서 역할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를 하는 목표는.

"정치는 결국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도전이 아니겠나.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코드는 경제 · 교육 · 외교라고 생각한다."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인가.

"나는 진보나 보수 같은 이념적 틀에는 거의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다. 이것이 우리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이다. 실용주의에 근거해 선진 대한민국을 이룬다는 이명박 당선인 비전에 공감했다. 실용주의에 근거한 선진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면 10~15년 후 이어받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좀 더 품위 있는 민주주의, 좀 더 인간적인 시장경제, 좀 더 개인의 개성 · 창조성이 강조되는 사회가 10년 후의 실용노선이라고 생각해 지금 들어오게 된 것이다."

–중학교 때부터 케네디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는데.

"느낌이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거다. 배경도 완벽하고 학벌 · 가족 · 재력도 갖추고 아름다운 아내까지 있고, 죽는 것도 그렇게 멋있게 죽고, 죽어서도 멋진 상징으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희열을 주는 사람이구나 하는 소년기적 환상이 분명히 있다.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공직이 그렇게 멋지고 명예로운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기독교 신자인가.

"모태 신앙이다. 교회 집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앙의 제일 중요한 가치는 결국 겸손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한계를 자각하고, 그럼에도 나를 지탱해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두 가지 요소다."

–공천을 신청한 동작갑 지역구와 어떤 인연이 있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던 곳이고 나도 거기서 태어났다. 본적이 상도동이다."

결정 후 보도문

〈13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중앙SUNDAY 2008년 2월 10일자 2면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야돌이 무슨…"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앙SUNDAY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위원선거(서울 동작갑 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 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하면서 출마 예정인 지역구의 경쟁자들에 대해서는 단신으로 처리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일자 2면

의결번호	2008자심5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나주투데이	(주)나주투데이 / 전남 나주시 이창동 134-42 대표이사 민 달 수
심의대상기사	-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2008년 1월 21일자 2면) -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008년 1월 28일자 1면) -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2008년 2월 4일자 1면)	
주 문	(주)나주투데이가 발행한 나주투데이 2008년 1월 21일자 2면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1월 28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월 4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나주투데이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화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나주투데이 2008년 1월 21일자 2면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1월 28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월 4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화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영산강운하는 기존의 영산강고대문화 특정지역 사업과 결합된 복합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당 대표실에서 만난 최인기 의원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운하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주문하고 조기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산강운하의 조기착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영산강운하는 영산강 뱃길복원, 강변도로건설, 생태공원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국제물류기지건설 등을 포함한 사업이 동시 추진돼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은 마한시대부터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보호가치가 큰 문화유적지로 이 지역의 생태보호 및 수질개선 노력과 함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의원, 영산강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영산강운하는 기존의 영산강고대문화 특정지역 사업과 결합된 복합프로젝트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당 대표실에서 만난 최인기 의원은 공약사업 중 하나인 영산강운하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주문하고 조기추진 약속을 받아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산강운하의 조기착공에 대한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면서 "영산강운하는 영산강 뱃길복원, 강변도로건설, 생태공원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국제물류기지건설 등을 포함한 사업이 동시 추진돼야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나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산강 유역은 마한시대부터

최인기국회의원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보호가치가 큰 문화유적지로 이 지역의 생태보호 및 수질개선 노력과 함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영산강운하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기존 환경부의 하천관리사업비 등 관련예산과 일부 민자유치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개편방향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과 합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편안에 포함된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 통일이라는 국가 지상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성부와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도 양성평등 실현, 해양자원개발·개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촌진흥청 폐지를 거론하면서 "농업기술개발과 보급, 시험, 농사지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민의 의존도가 큰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08년 1월 21일자 2면

이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영산강운하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기존 환경부의 하천관리사업비 등 관련예산과 일부 민자유치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최인기 원내대표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다.(후략)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대통령직인수위…한전 민영화 계획 없다
농진청 연구기관 전환 반대 성명도 발표

최인기 의원이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전 등 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의 민영화가 과거에도 중단됐었던 이유는 민간과의 경쟁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였다"면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전의 경우 일반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전력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 대량생산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설립 취지로 볼 때 민영화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계획은 전문적영역으로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장기연구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대통령직인수위…한전 민영화 계획 없다
농진청 연구기관 전환 반대 성명도 발표

최인기 의원이 최근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 계획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이경숙 인수위원장에게 강력히 건의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 이 위원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전 등 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의 민영화가 과거에도 중단됐었던 이유는 민간과의 경쟁여건이 미성숙한 상태였다"면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면 요금이 올라가고 수급이 불안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한전의 경우 일반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전력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 대량생산을 통해 국민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도모한다는 설립취지로 볼 때 민영화는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급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계획은 전문적

최인기의원

영역으로서 인수위 차원에서 논의해 본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에 따라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한전 등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장기연구 과제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최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문호 부사장과의 전화를 통해 인수위 방침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이에 한전으로부터 "한전 입장에서도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어렵고, 나주 혁신도시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연구기관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농진청을 폐지하고 연구기관화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잘못된 판단이다"며 농진청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농업을 강화해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농진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국가의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해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농진청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면 FTA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며 농진청 연구기관화를 강력 반대했다.

△ 2008년 1월 28일자 1면

이와 관련해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도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공기업 민영화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현재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최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우려된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전 문호 부사장과의 전화를 통해 인수위 방침을 확인시켜 주기도 했다.

이에 한전으로부터 "한전 입장에서도 국가에너지원 공기업 민영화는 사실상 어렵고, 나주 혁신도시 이전계획은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농촌진흥청 정부출연 연구기관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농진청을 폐지하고 연구기관화 하는 것은 지금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잘못된 판단이다"며 농진청이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술농업을 강화해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야 하는데 농진청을 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면서 "국가의 농업정책 방향과 연계해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기술지도를 담당하는 농진청의 기능 자체가 없어지면 FTA에 대비할 수 없게 된다"며 농진청 연구기관화를 강력 반대했다.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호남 동반자 약속' 없어졌다" 일갈

(전략)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로운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는 '국민통합 아젠다'가 없어 약자와 소수, 서민과 빈곤층 특히 농어민 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앞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이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호남 동반자 약속' 없어졌다" 일갈

민주당 원내대표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1일 제271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연설을 했다. 최 의원은 대표연설을 통해 새로운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는 "국민통합 어젠다가 사라졌다"며 "약자와 소수, 서민과 빈곤층, 농어민, 복지와 노동, 환경과 여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치지 조차 않고 호남동반자 약속이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최인기 의원의 민주당 대표 연설의 요지를 정리해 본다.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새로운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는 '국민통합 아젠다'가 없어 약자와 소수, 서민과 빈곤층 특히 농어민 등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17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에 앞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이명박 당선인은 집권하면 호남을 동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지만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내놓은 이른바 5+2 광역권 구상에서 영남은 두 개로 구분하고 호남은 하나로 묶어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정작 국가 자원과 예산배분의 영호남불균형 초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 던져준 호남지역에 대한 소외와 푸대접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의 화살을 날렸다.

또한 최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것은 더 합쳐게 만들고 약한 것은 더 약하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공룡처럼 국정을 와지무지하게 되는 과두각료(寡頭閣僚) 독주체제가 형성되어 40여 년전 개발독재시대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해체해 버린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보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 시대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천성할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천박한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해양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향이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해 죽을힘을 다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진청 부력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끝으로 최 원내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는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민주개혁세력은 대동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정신을 차려서 하나가 된다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의석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 2008년 2월 4일자 1면

명박 당선인은 집권하면 호남을 동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지만 이 당선자와 인수위가 내놓은 이른바 5+2 광역권 구상에서 영남은 두 개로 구분하고 호남은 하나로 묶어 차별화하고 있다"면서 "장차 국가 자원과 예산배분의 영호남불균형 초래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 당선자에게 표를 던져준 호남지역에 대한 소외와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의 화살을 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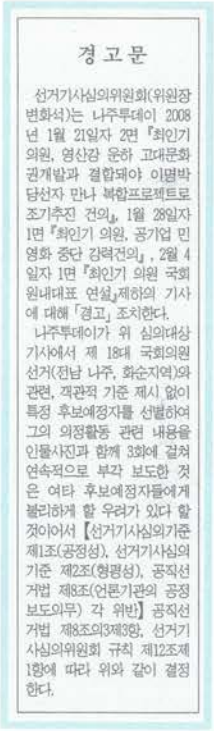
또한 최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것은 더 힘세게 만들고 약한 것은 더 약하게 만들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가 공룡처럼 국정을 좌지우지 하게 되는 과두각료(寡頭閣僚)독주체제가 형성되어 40여 년 전 개발독재시대의 부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통일부를 해체해 버린 것은 "지난 정부에 대한 폄훼(貶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 시대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면서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천박한 포퓰리즘의 결과"이고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해양에 대한 비전을 포기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했다.

특히 "농업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발상으로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한미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농민들을 위해 농진청 무력화는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돋우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14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나주투데이 2008년 1월 21일자 2면 『최인기 의원, 영산강 운하 고대문화 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1월 28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월 4일자 1면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나주투데이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전남 나주, 화순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활동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10일자 2면

의결번호	2008자심6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호남일보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심의대상기사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2008년 2월 18일자 3면)	
주 문	(주)호남일보사가 발행한 호남일보 2008년 2월 18일자 3면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호남일보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18일자 3면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26년간의 국민께 받은 성원 정치로 보답
튼실한 인맥으로 예산확보 · 민간유치 전력

사회악을 바로잡고 약한 자의 설움을 달래주던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 고향과 지역발전을 목표로 또 다시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오는 4 · 9총선에서 광주 북구 을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민주신당 임내현 예비후보.

바쁜 검사 시절 속에서도 지역갈등 해소와 노사평화 정착에 힘써온 그가 새로운 변신을 통해 진정한 광주의 일꾼, 심부름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지 지역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임 예비후보는 '섬기는 일꾼 임내현의 행복한 세상 만들기'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편집자 주〉

◆광주 태생이지만 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교를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타 후보에 비해 지역색채가 엷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출마 소감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태어난 저는 학창시절 꿈꾸었던 검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79년 서울 동부지검을 시작으로 약 26년간의 검사시절은 깨끗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정말 행운스럽게도 퇴임 전 8년간을 광주전남지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지역색채가 엷다는 지적은 맞지 않습니다.

지난 98년 순천지청장, 2001년 광주고검 차장, 2002년 전주지검장, 2004년 광주고검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생활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젠 지역민들에 대해 그 마음의 빚을 갚을 차례입니다.

◆약 26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은?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26년간의 국민께 받은 성원 정치로 보답

튼실한 인맥으로 예산확보 · 민간유치 전력

임내현이 걸어온 길

▶글쎄요. 참 많은 일들이 생각나네요. 제 자랑 좀 해도 되죠(웃음).

주민을 섬기며 하나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왔고 신뢰와 믿음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영 · 호남 교류에 대한 물꼬를 조금이나마 텄다고 생각합니다.

영남대학교와 전남대학교 학생들간의 교환 학생 제도를 도입했고 지난 1998년 제가 순천지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순천, 진주, 거창, 남원지청이 참여한 제1회 영호남화합 자연보호 범죄 예방 대회를 열고 검찰 내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8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었던 금호타이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재직시 구미공단의 노사평화선언을 이끌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법조인 임내현은 잘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 임내현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방안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 지역민들을 만나보면 '아 그러세요'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저를 많이 알아보십니다. 주민들이 제 명함이나 홍보물을 보면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검사 이미지하면 왠지 모르게 깐깐하고 권위적일 것 같았는데 편안한 동네 친구 후배 같다고들 해요.

또 매일 빠짐없이 시장, 상가, 목욕탕, 정류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는 주민들도 생겨나 우리말로 '이물' 이 와졌습니다. 특히 선거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주시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행복합니다.

◆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공천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졌습니다. 공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후보들이 많이 몰렸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중앙당에서 공정한 공천심사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동안 당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뛰어온 후보가 공천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대통합민주신당 창당 이래 공명선거관리원장, 부정선거감시위원장, 법률구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당의 개혁과 발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중앙당에서도 이러한 점을 높게 평가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차기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호남홀대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차기정부와의 통로 부재로 인한 지역 현안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분명히 지난 정부 때와는 달리 특정지역에 대한 편중인사가 이뤄져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사회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도 지역안배 인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 만큼 차기정부와의 통로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근무지 경험으로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현안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임 후보님의 북구 지역 발전 정책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저는 경제발전, 교육 발전, 복지향상, 지역공약 등 4가지 정책을 가지고 새롭고 행복한 북구의 미래를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창업, 운영지원 강화, 광주첨단 과학단지 R&D특구 조성, 비엔날레 타운조성 등 경제발전을 통해 북구의 도약에 힘쓰겠습니다.

또 산업 재교육 센터 설립,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명문 대학 육성, 교육센터 설립으로 서민 자녀교육 지원 대폭 강화로 교육 발전을 이루겠으

며, 종합복지관 설립, 노인복지수당 인상지원, 독거노인 지원 강화, 결식 아동 지원 확대, 장애우 복지 지원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지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우선 용봉 IC상행선 개통, 31사단 이전 적극 추진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보장, 전남 · 일신 방직 이전 검토, 운암도서관 조기완공, 오치-자연과학고-문흥간 도로 조기 개설,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후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의 예산과 민간 투자를 대폭 유치할 수 있는 힘있는 일꾼입니다. 다양한 인맥과 전국 각지의 근무경력들과 각종 사회운동을 통한 강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갖고 모두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14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변화이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고무가 환영한 북구 만들겠습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해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예비후보예정자들에게 불공정에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6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의제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변화이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해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예비후보예정자들에게 불공정에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6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의제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12일자 3면

의결번호	2008자심61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호남일보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심의대상기사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2008년 2월 20일자 3면)	
주 문	(주)호남일보사가 발행한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호남일보 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0일자 3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교육도시 광주 부활' 선언한 북갑 임현모 예비후보
입시교육 지양 공교육 활성화 총력,

북구에 교육 특구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 했다.

그러나 최근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최근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다.

현직 교육대학교 임현모 총장이 이러한 교육계의 현실을 바라보다 '교육도시 광주 부활'을 주창

하며 국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20여 년간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지역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다는 광주 북갑에 출사표를 던진 통합민주당 임현모 예비후보가 한국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현직 총장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입문 배경과 북구지역에 출마한 배경은?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출범하며 '러브콜'이 상당했습니다.

현직 교육대학 총장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일인가를 두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정치입문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민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정치문화를 꽃 피우고자 대통합민주신당 광주시당 위원장직을 수락했습니다.

저는 20여 년간 교육전문가로서 활동해왔고 정치학을 전공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호남소외론이 우려되는 상황에 국가 통합 · 지역 통합의 밑거름이 되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교육도시 광주 부활' 선언한 북갑 임현모 예비후보

입시교육 지양 공교육 활성화 총력, 북구에 교육 특구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 교육 발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나 교육당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현실이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분명히 이 문제 풀어 나가겠습니다.

또 저는 북구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어떤 후보보다도 북구의 문제를 꿰뚫고 있고 해결방안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전 지금이 북구 지역발전을 위해 '보따리를 풀 때다' 라고 생각합니다.(중략)

◆임 예비후보께서는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능력있고 실천하는 교육전문가' 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계를 바라보는 철학과 신념이 있다면?

▶첫번째 '참신하고 능력있는 사람' 과 관련 저는 교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배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 예산을 밑거름으로 해서 친환경적이고 품격있는 캠퍼스 조성에 주력했습니다.

두번째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란 저는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곳 북구에서 졸업했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이곳에서 자라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능력있고 실천하는 교육 전문가'는 저는 교육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난 2002년 교육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과의 접촉이 활발했습니다.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중앙부처와 교육당국 등 다양한 인맥을 구축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저는 광주를 교육도시로 부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북갑 지역에서는 전남대학교, 동강대학 등 교육시설이 많은 장점을 살려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지역 교육 발전과 관련한 정책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학력위주, 대학입시의 교육을 지양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방송(EBS) 등의 'e-Learning'을 통한 사이버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을 자율적으로 실시, 교과 과외를 학교에서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행 교원 평가제도를 개선해 우수교원을 확보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특히 대입전형제도의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등학교 교육체제가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국사 교육 강화하고 방과 후 활동으로 예체능 관련 및 외국어수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북구를 평생교육의 도시화를 추진해 북구주민이 보다 넓고 깊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과학분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취업 장려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 학자금 대출 완전 저리 전환을 추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유권자에게 한말씀 한다면?

▶저는 이 지역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고 활동했습니다. 지역 토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역구에 출마를 한 후보는 누구보다도 지역을 잘 알고 지역민을 사랑하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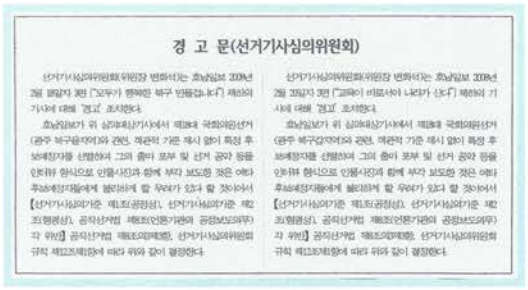
지금 나라의 주요 화두는 교육입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함께 지역 교육을 바로세워 북구가 새로운 교육 도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정 후 보도문

〈14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변화덕)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8일자 3면 「'보두기' 행태한 북구 민원담..초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언론매체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6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6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변화덕)는 호남일보 2008년 2월 28일자 3면 「'보두기' 행태한 북구 민원담..초구」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호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언론매체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6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6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12일자 3면

의결번호	2008자심6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2008년 3월 2일자 76~77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3월 2일자 76~77면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현대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산청 · 함양 · 거창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활동 사항 및 향후 정치적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3월 2일자 76~77면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산청 · 함양 · 거창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활동 사항 및 향후 정치적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이강두 한나라당 중앙위의장 밀착 인터뷰

이강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이 역사적인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중앙위 의장은 두 차례나 정책위 의장을 지냈으며 최고위원을 역임한 4선의 중진으로 이번 18대 총선을 통해 5선에 도전하고 있다. 한나라당 직능기구인 중앙위는 중소

기업가 등 수만 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한나라당 내 최대 조직으로 이 의원이 중앙위 의장을 맡은 것도 그만큼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도가 두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이 경선룰 문제로 혼란스럽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엄정중립을 선언하며 당내 화합을 이끌어내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주간현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고생하던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나의 정치역정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선 승리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금은 총선 승리를 위해 쉴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이 중앙위 의장의 행보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내 최대조직 이끄는 야전사령관으로 정권 재창출 밑거름 한몫

지역 직능단체와 협력체제 구축해 4 · 9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 중심역할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데 소감은.

▲중책을 맡아서 책임감이 무겁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국의 각종 단체를 총괄하는 직능 대표조직인 동시에 당의 핵심조직인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중앙위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전위대로서 기능에 충실했다. 앞으로도 당 직능분야를 총괄하는 중앙위와 수만 개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중앙위와 시 · 도연합회, 각 지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앙위는 지역별 각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중앙은 전국의 각종 단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전국 각 시 · 도당 지방 조직은 지역 직능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 · 9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라는 지상목표 달성에 중앙위가 중심 역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이강두 한나라당 중앙위의장 일학 인터뷰
한나라당 내 최대조직 이끄는 야전사령관으로 정권 재창출 밑거름 한몫
지역 직능단체와 협력체제 구축해 4 · 9 총선에서 안정의석 확보 중심역할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대한민국 아우를 통합형 대통령 시대 열려…이젠 올바른 정당 선택 중요
어려운 경제 윤기 돌게 하고 비전 제시하는 집권정당 를 마련하는 대 전력

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앙위 의장으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나.

▲한나라당 중앙당 선대위 부위원장 겸 이명박 당선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았던 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경남지회장으로서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원래 임기가 작년 12월 19일로 끝나게 되어 있었지만 정권 초반기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위해서는 총선 압승을 통한 원내 과반의석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권교체의 중심세력이며, 당의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최대 조직인 중앙위원회의 역할이 또 한번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까지로 나의 임기를 연장할 것을 결의해 계속해서 중앙위 의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당 전체의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는 데 중앙위 의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국민 모두의 피부와 마음 속에 깊이 파고든 살림살이 문제, 세금 문제, 주거 문제, 육아 문제 등과 같은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국민이 잘 알고 있고 한나라당이 이를 정책에 착실히 반영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감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국민의 실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 시행을 실시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략)

–이 의원은 농업 문제 해결사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한 · 미 FTA 타결에 따른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강화를 주문했으며, 농업이 생명 · 환경산업으로서 2차 가공산업과 3차 산업을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농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발전 방안들을 다듬어 한나라당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켰다.

특히 국비 31억5000만원(총액 70억원)이 지원되는 서북부경남한우클러스터 사업이 정부기관 시행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수 있게 지원역할을 함으로써 한 · 미 FTA 체결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중략)

–앞으로의 목표와 각오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살리고 모든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갖는 함께 잘살고 함께 화합하고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와 함께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이 경선룰 문제로 혼란스럽던 대선후보 당 경선 과정에서 엄정중립을 선언하며 당내 화합을 이끌어 내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었다.

전국 1800만 생활체육인의 수장인 국민생활체육협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2006년 6월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돼 대의원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지만 문화관광부가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겼다며 승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문화부가 항소해 회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2008년 세계사회체육대회 부산 유치로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나락에서 고생하던 국민이 꿈과 희망을 가

질 수 있게 된 것을 나의 정치역정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어려워진 경제에 윤기가 돌게 하고,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밝고 희망찬 선진조국의 미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국민에게 비전을 주는 집권정당의 틀을 마련하는 데 결연하고 굳은 의지로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정 후 보도문

〈151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식)는 주간현대 2008년 3월 2일자 76~77면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산청 · 함양 · 거창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활동 사항 및 향후 정치적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공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 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0일자 77면

의결번호	2008자심6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레이디경향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기사	『「7막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2008년 3월호 228~231면)	
주 문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레이디경향 2008년 3월호 228~231면 『「7막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레이디경향 4월호 22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레이디경향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레이디경향 2008년 3월호 228~231면 『「7막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레이디경향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치인으로 첫발 내딛는 「7막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베스트셀러 「7막7장」의 저자이자 헤럴드미디어 대표였던 홍정욱이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4월에 있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동작 갑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홍정욱의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헌신적인 부모님, 고마운 아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 이야기.

케네디 전기를 읽은 15세 소년의 꿈

홍정욱(38)은 이제 헤럴드미디어의 대표가 아니다. 그가 건넨 명함에는 '한나라당 동작 갑 예비 후보'라고 적혀 있었다. 그동안 '정치 입문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열어놓고 싶다'고 말해왔던 그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소식이 놀랍지 않은 이유다. 단지, 그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았다.

"아주 어릴 적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누구나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열다섯 살 때 읽은 케네디 전기의 영향이 컸어요. 케네디 책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궁극적으로 택하는 가장 영예로운 직이 공직이었는데, 그들의 삶이 참으로 멋져 보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언젠가 선진국이 되면 공직 참여가 가장 영예로운 직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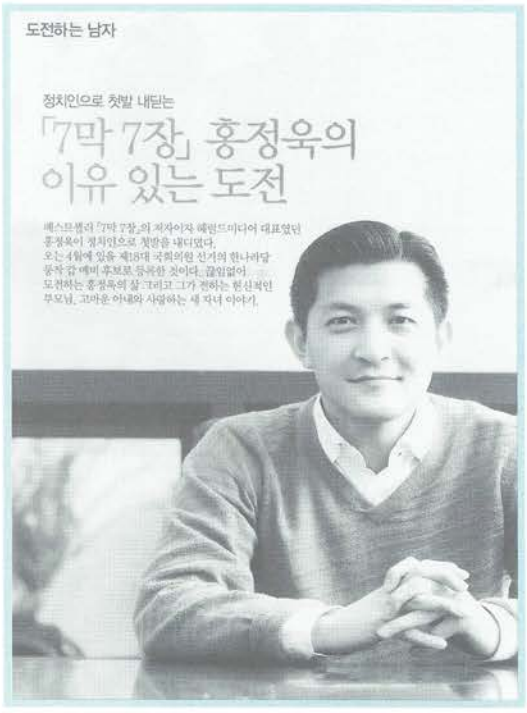
우리 사회는 지난 5년간 굉장한 성장을 거두었다. 홍정욱은 이를 두고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 진보와 보수의 틀을 넘어 실용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지금 진행되는 이 실용주의 노선이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 즉, 포스트 386세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공직 참여라는 것은 자신이 바꾸고 싶은 게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하고,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착각일지 몰라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말을 잇던 그는 "지루한 얘기죠?"라며 웃었다.

많은 사람들이 홍정욱을 두고 '정계에 진출할 만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38세의 젊은 나이에 보수 정당인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한민국에서 과연 진정한 진보란 무엇일까요?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겪어온 사회를 진보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 있


도전하는 남자

정치인으로 첫발 내딛는

「7막 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베스트셀러 「7막 7장」의 저자이자 헤럴드미디어 대표였던 홍정욱이 정치인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오는 4월에 있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동작 갑 예비 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홍정욱의 삶 그리고 그가 전하는 헌신적인 부모님, 고마운 어내와 사랑하는 세 자녀 이야기.

"유학 당시 학비 걱정하는 제게 아버지는 '배우 장사를 해서라도 뒷바라지할 테니 걱정 말라'고 하셨죠. 부모님의 헌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 2008년 3월호 228~229면

습니다.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리더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과 사회를 함께 격상시켜야 해요. 서민을 부르짖던 참여정부가 서민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건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무능함일 뿐이에요. 저는 제가 속한 조직 혹은 회사를 항상 업그레이드 시켜왔다는 자부심이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실용주의 노선을 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죠."

헤럴드미디어에 미련은 남지만 복귀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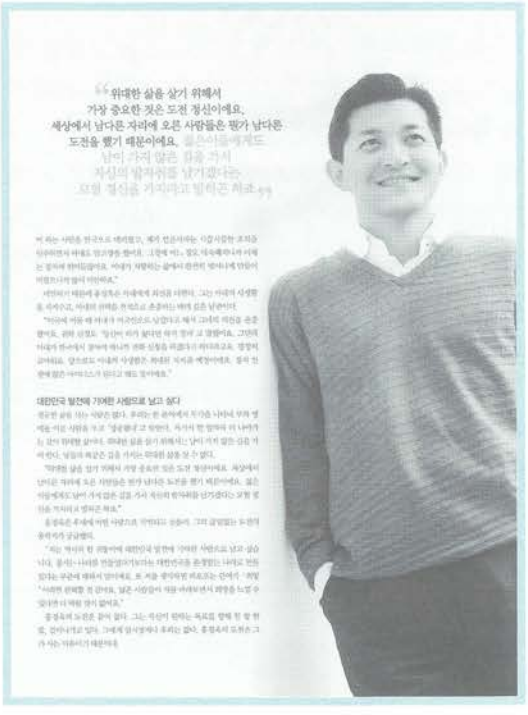
홍정욱의 과거는 화려하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학교 동북아지역학과를 졸업했고, 중국 북경대학원에서 동북아 정세를 공부한 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의 다국적 투자 금융 기업인 리만브러더스에서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했고, 벤처 회사인 스트럭시콘을 창업한 뒤 CEO로 지냈다. 그리고 2002년 헤럴드미디어를 인수했다.

그가 인수할 당시 헤럴드미디어는 50년 동안 적자를 반복하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홍정욱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헤럴드미디어를 흑자 기업으로 전환시켰다. 사람들은 그의 경영 수완과 추진력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중략)

헌신적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은 축복

아직도 '홍정욱' 하면 「7막7장」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책은 1993년 출간 당시 1백만 부가 팔렸다. 그 뒤 홍정욱이 수많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됐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홍정욱은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는 의외의 고백을 들려주었다.

"「7막7장」이라는 책이 주는 이미지가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저를 '초엘리트' '대중과 호흡할 줄 모르는 귀족'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집에 돈이 차고 넘쳐서 미국 유학을 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이를 악물고 저를 지원



△ 2008년 3월호 230~231면

해줬고, 저도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미화돼서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그려졌다는 게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에요."

홍정욱은 헌신적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신성일과 함께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영화배우 남궁원이다. '무조건 케네디가 나온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던 홍정욱은 학비가 천만원대인 것을 알고 잠시 머뭇거렸다. 아버지는 '배추 장사를 해서라도 학비를 댈 테니 걱정 말라'며 화를 내셨다. 아들은 예정대로 유학을 떠났다.

"재벌도 아닌 집에서 자식을 외국에 유학 보내 지원해줄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당시 영화배우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밤무대 출연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에도 출연하지 않을 정도로 영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한 분이셨는데, 아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서울에서 하면 아들의 장래에 누가 될까 봐 그것도 지방으로만 다니면서 말이에요."

그의 말을 통해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홍정욱은 지금도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대개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족 대표로 선거 운동을 하는데 그는 배우자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아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생각하신 아버지 덕분이다. 남궁원은 그동안 다른 사람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서 아들의 선거 운동에 뛰어들 날만 고대했다고 한다. 홍정욱은 아버지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했다.(중략)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다. 우리는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을 두고 '성공했다'고 말한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이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없다.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전 정신이에요. 세상에서 남다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뭔가 남다른 도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젊은 이들에게도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서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는 모험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곤 하죠."

홍정욱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을까. 그의 끊임없는 도전의 종착지가 궁금했다.

"저는 역사의 한 귀퉁이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또 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희망'이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느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홍정욱의 도전은 끝이 없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나가고 있다. 그에게 일시정지나 후퇴는 없다. 홍정욱의 도전은 그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결정 후 보도문

〈15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식)는 레이디경향 2008년 3월호 228~231면 「7막 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레이디경향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호 228면

의결번호	2008자심65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여성동아	(주)동아일보사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학 준
심의대상기사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2008년 3월호 396~399면)	
주 문	(주)동아일보사가 발행한 여성동아 2008년 3월호 396~399면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여성동아 4월호 396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여성동아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여성동아 2008년 3월호 396~399면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여성동아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헤럴드미디어 대표직 사임하고 정계 진출 선언한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베스트셀러 〈7막7장〉의 저자로 유명한 홍정욱 헤럴드미디어 대표가 언론사 CEO 자리에서 물러나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도전이며,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겠다"는 그를 만나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와 궁금한 가족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제18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일선에 뛰어든 홍정욱 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회장

(38)을 만난 건 2월 중순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밤 10시를 향해가는 시간이었지만, 서울 동작구에 있는 그의 선거 사무실은 대낮처럼 북적였다. 그 한가운데,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된 거리 유세를 마치고 막 돌아온 홍 전 대표가 있었다.

"동틀 무렵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출발해 여성복지센터, 노량진역, 상도역 등 지역구 곳곳을 돌았어요. 많은 분들을 뵙고 인사드리려 했는데, 지금 보니 명함을 1천 장 정도밖에 못 돌렸네요(웃음)."

활짝 웃으며 손을 내미는 모습에서 피로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오랜 시간 꿈꿨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며 다시 한 번 환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홍 전 대표는 지난 93년 출간한 자전 에세이 〈7막7장〉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 그가 중학교 재학 중 홀로 미국 유학을 떠나 하버드대를 졸업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이 책은 당시 1백만 부 이상 팔리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기업인수합병(M&A) 전문가로 활동한 홍 전 대표가 다시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지난 2002년. 코리아헤럴드, 헤럴드경제(당시 내외경제) 등이 속해 있는 헤럴드미디어 그룹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는 '촉망받는 젊은이'에서 '30대 언론사 CEO'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홍 전 대표는 영화배우 남궁원 씨(본명 홍경일)의 아들이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처조카 사위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훤칠한 외모, 남다른 이력과 가정 배경 등으로 일찍부터 정계 진출이 예상되던 그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건 지난 2월초. 그는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바로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지역구 공천을 신청함으로써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동작갑은 인기 아나운서 출신 유정현 씨 등 쟁쟁한 경쟁자가 몰려 있어 당내 공천 여부도 확신하기 어려

△ 2008년 3월호 396~397면

운 지역.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당연히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죠. 물론 제가 승리를 확신하듯, 다른 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웃음)."

"난 '귀족'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최선 다해 성취해온 평범한 사람"

홍 전 대표는 "언론사 최고경영자로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정치에 입문할 수도 있었지만,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사람과 삶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공천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시장에서, 병원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며 배우는 세상은 신문을 통해 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

서울 동작구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고, 그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홍 전 대표의 본적지는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한다. 그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여겨지는 이곳 사람들에게 지역적 자부심을 심어주면서 오랫동안 생각해온 정치인의 꿈을 펼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전 대표가 처음 정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건 열다섯 살 때. 존 F. 케네디의 전기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서다. 그는 "어린 내 눈에 케네디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으로 보였다. 완벽한 배경, 최고의 학벌, 아름다운 아내까지 가진 그가 공직에 참여하는 걸 보며 '공직은 정말 멋지고 영예로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그전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공직에 나서는 게 '입신양명'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케네디 전기를 읽으며 정치는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고마움을 되갚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죠."

홍 전 대표는 바로 그 길을 걷기 위해 지난 85년 케네디의 모교인 미국 초우트 로즈마리홀 고등학교로 유학을 떠났고, 졸업 뒤엔 역시 케네디가 나

△ 2008년 3월호 398~399면

온 하버드대에 진학했다. 그가 언론사를 경영한 것도 정치를 하기 위한 수순이었다고 한다.

"정치를 하려면 경영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회사보다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회사를 원했고요. 2002년 12월 적자투성이던 헤럴드미디어를 인수했을 때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했지만, 제가 경영을 맡은 뒤 회사가 5년 연속 성장,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걸 보며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 경험이 '이젠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정치를 할 수 있겠다'는 용기의 밑거름이 됐죠."

그는 자신이 정치인으로 출발선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왔음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자신을 '귀족적'이라고 보는 세간의 시선이 불만스러운 듯했다. "귀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데,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전 대표는 "언제부터 대한민국 영화배우가 '귀족'이었느냐"며 "자라는 동안 밥 한 번 굶지 않았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유복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부모님은 세상 어느 부모 못지않은 헌신적 노력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가 아직도 가장 마음 아픈 기억으로 떠올리는 건 아버지 남궁원 씨가 자신의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무대에 선 일이다.

"아버지는 배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평생 밤무대 출연을 삼가셨어요. 그런데 저를 유학 보낸 뒤 그 일을 시작하셨죠. 서울에서 출연하면 혹시라도 제 미래에 누가 될까봐 지방 유흥업소만 돌며 노래를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제겐 비밀로 하셨는데, 고등학교 때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대전 거리에서 아버지가 출연한다는 카바레 포스터를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략)

홍 전 대표는 지난 2003년 펴낸 에세이 〈7막7장 그리고 그 후〉에서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설정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해 나가다 보면 행복은 성취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굳이 삶의 목표를 행복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쓴 적이 있다.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바로 "아유~ 철없을 때 한 바보 같은 얘기죠"라며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다시 묻는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하겠죠(웃음). 전 지금도 여전히 도전하고 성취하는 데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성취라는 결과뿐 아니라 도전의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일상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게 그 사이 가장 달라진 점이겠죠."

그가 정치인으로서 꿈꾸는 것도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부나 성공 같은 목적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데서 벗어나 좀 더 품위 있고, 따뜻하고, 개성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정치인은 비전을 보여주고 성과를 이뤄내는 사람이죠. 제 목표는 품격 있는 정치, 인간적인 시장경제, 개인의 개성이 강조되는 실용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바탕 위에서 우리나라가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존경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만들고 싶어요." 일찍이 자신의 인생을 '7막7장'이라고 표현했던 그는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막이 시작됐다. 이 막은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예전엔 홈런왕 베이브 루스가 '저쪽으로 홈런 치겠다'고 말한 뒤 정확히 그쪽으로 친 게 멋있어 보였지만, 요즘은 '그냥 조용히 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웃음)"고만 했다.

"지금 중요한 건 먼 훗날의 목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주어진 과제와 도전에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직책을 맡게 되느냐는 유권자와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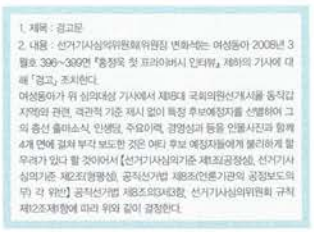
봅니다."

홍 전 대표는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살아가며 어떤 굴곡을 거치든, 끝없이 도전하고 성취해온 지금까지의 색깔을 지킬 것이라는 점"이라며 "먼 훗날 사람들이 '도전'이라는 단어에서 나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마침표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인생관을 물었다. 그의 대답은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였다.

결정 후 보도문

〈159쪽 경고문 내용 참조〉



1. 제목 : 경고문
2. 내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여성동아 2008년 3월호 396~399면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여성동아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시를 동작갑 지역의 권력,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신 출마소식, 인생담, 주요이력, 경쟁심과 등등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호 396면

의결번호	2008자심66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우먼센스	(주)서울문화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대표이사 조 대 웅
심의대상기사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생 '7막8장'』(2008년 3월호 370~373면)	
주 문	(주)서울문화사가 발행한 우먼센스 2008년 3월호 370~373면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생 '7막8장'』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우먼센스 4월호 370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우먼센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우먼센스 2008년 3월호 370~373면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생 '7막8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우먼센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출마소식, 인생담, 주요 이력, 경영성과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재심3	결정유형 / 기 각
재심청구인	우먼센스	(주)서울문화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5 대표이사 조 대 웅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우먼센스가 시사성이 전혀 없는 생활정보 중심의 잡지라고 주장하면서, 홍정욱 씨 인터뷰가 이번 총선과는 무관하게 주부독자들의 관심사인 그의 사적 성장 이력에 초점을 맞추었고 그와 같은 지역구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출마예정자들은 주 독자층인 주부들의 관심도가 낮아 다루지 않았다는 등 우먼센스 고유의 편집권한을 강조하며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66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인터뷰가 이번 총선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도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홍정욱 씨가 언론을 통해 자신의 출마변을 공표한 이상 홍씨 관련 기사는 그 내용이 사생활에 국한되었다 하더라도 선거관련 보도임에 분명하며 그러한 내용은 홍씨에게 유리하게 작용됨은 물론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듯 매체의 주된 독자층이 주부들이고 그 매체가 시사성이 전혀 없는 생활정보중심의 잡지라 하더라도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고, 그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에서 이 건 보도가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선거보도에 대해 고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언론은 선거보도의 편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은 적합하다고 할 것이어서 당위원회는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생 '7막8장'

왕년의 명배우 남궁원의 아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대 출신에 배우 뺨치는 수려한 외모, 신문사 CEO…. 홍정욱(39세)을 둘러싼 내 · 외적인 조건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 그는 케네디를 모델 삼아 완벽한 삶을 꿈꿨고, 그러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화배우 아들이 언제부터 귀족이었나

하지만 그러한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빈틈없는 삶이 대중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인 동시에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는 자전 에세이 〈7막7장〉을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해 들인 눈물겨운 노력을 이야기했다. 그는 유학 시절 수업을 못 따라가 밤을 새우며 책을 통째로 외우는 노력파였으며 서울대학교에 편입학한 후 같은 과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하는 숫기 없는 청년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꿈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그는 여전히 '딴 세상' 사람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가 살아온 족적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귀족적 이미지 때문이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혹여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와의 인터뷰는 많이 알려진 성공 스토리는 가급적 배제하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간적인 면모, 고뇌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를 좀더 깊이 알고자 간혹 곤혹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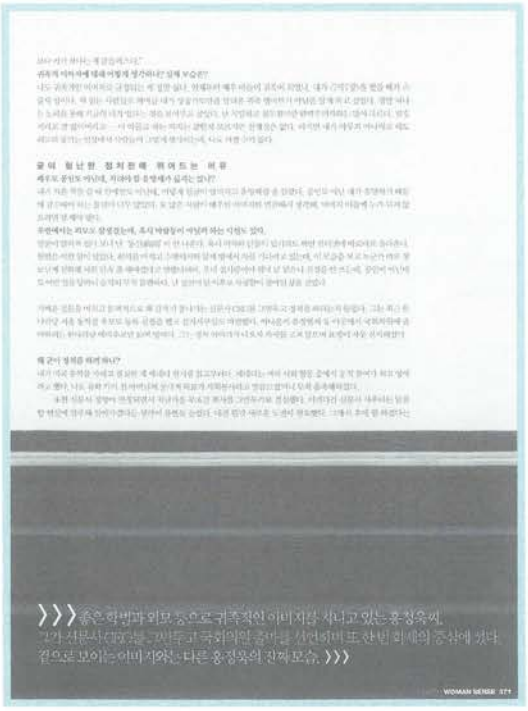
실제 만나 보니 정말 잘생겼다. 스스로 만족스러운가? 혹시 콤플렉스는 없는가?

사실 주변에서도 배우해도 되겠다며 잘생겼다는 말 많이 듣고 자랐다. 기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외모 갖고 먹고사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 외모 때문에 덕 본 일도 손해 본 일도 없는 것 같다. 굳이 콤플렉스를 꼽자면 2:8 가르마의 헤어스타일?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부터 빗어주신 이 2:8 가르마 때문에 지금껏 스타일을 깨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서 왜 2:8이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3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스타일을 바꾸기가 두렵다. 옷도 심지어 20년 전에 입은 체육복을 그대로 입는다. 낡아 못 입으면 스타일이 똑같은 옷을 산다. 삶은 늘 도전하고 변화를 꿈꾸면서 스타일은 고루하다. 또 하나, 아버지보다 키가 작다는 게 콤플렉스다."

귀족적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 모습은?

나도 귀족적인 이미지로 규정되는 게 정말 싫다. 언제부터 배우 아들이 귀족이 되었나. 내가 〈7막7장〉을 썼을 때가 스물세 살이다. 책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성공가도만을 달려온 귀족 엘리트가 아님을 알게 하고 싶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난 치밀하고 철두철미한 완벽주의자와는 많이 다르다. 덜렁거리고 잘 잃어버리고…. 이 악물고 하는 의지는 강할지 모르지만 천재성은 없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외모와 풍기는 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중략)

가벼운 질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왜 갑자기 잘 나가는 신문사 CEO를 그만두고 정치를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최근 한나라당 서울 동작갑 후보로 등록 신청을 했고 선거사무실도 마련했다. 아나운서 유정현 씨 등 이곳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는 한나라당 예비후보만 10여 명이다. 그는 정치 이야기가 나오자 자세를 고쳐 앉으며 표정이 자못



△ 2008년 3월호 370~371면

진지해졌다.

왜 굳이 정치를 하려 하나?

내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결심한 게 케네디 전기를 읽고부터다. 케네디는 여러 사회 활동 중에서 공직 참여가 최고 영예라고 했다. 나도 유학 가기 전 아버님께 궁극적 목표가 사회봉사라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흡족해하셨다.

또한 신문사 경영이 안정되면서 지난 가을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이러다간 신문사 사주라는 달콤한 현실에 안주해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내겐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다. 그래서 후에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런데 마침 정치권에서 콜이 와 오랜 고민 끝에 정치에 도전해보기로 했다. 나폴레옹의 말대로 '희망을 파는 장사꾼'이 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 (중략)

실패로 인한 좌절을 겪은 적이 있는가? 반대로 보람을 느꼈을 때는?

물론 있다. 다들 순탄하게 성공한 이미지로 보는데, 나도 두 번이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강남에 '원스 인 어 블루문'이란 카페를 열었지만 실패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잘나갈 때 벤처기업을 창업했지만 파산했다.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도산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과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처리하는 데 무척 고통스러웠다. 미국에선 도저히 월세 낼 돈도 없어 한국으로 돌아와 한동안 부모님 집 문간 방에 얹혀살았다. 그런데도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 취직하지 않고 있으니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한국에서 살 결심을 하고 영주권을 반납했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군에 입대했다. 그때가 무직, 군입대,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내게 가장 힘들던 시절인 것 같다. 다행히 군대를 '짧게'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 2008년 3월호 372~373면

에서 자금을 끌어 모아 신문사를 인수했다. 50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신문사를 정상으로 올려놔야겠다는 생각에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일했다. 구조조정을 하느라 직원들을 내보냈고 그러나 노조와 싸우고,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금도 그때 나간 직원들 얼굴이 어른거리며 가슴이 아프다. 보람이라면 창간 후 50년간 적자를 기록하던 회사를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다.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나?

신앙과 가족이 가장 큰 힘이다.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아닌 힘들 때 안식처가 되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낸 것 같다.

가정에서는 좋은 가장인가? 가족 이야기 좀 해달라.

좋은 남편인지는 몰라도 좋은 아빠다. 아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예술가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 고생시키고 지금은 정치까지 한다고 하니…. '고맙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니 무척 고맙더라. 부부싸움은 거의 하지 않는다.

지금 아이가 셋이다. 딸 둘, 아들 하나. 늘 바쁘기 때문에 솔직히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한다. 그런데 바쁜 아버지들의 특징이 평소 잘 못해준다는 이유로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잘못해도 그대로 넘어간다. 하지만 난 그렇지 않다. 언제나 균형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낸다.(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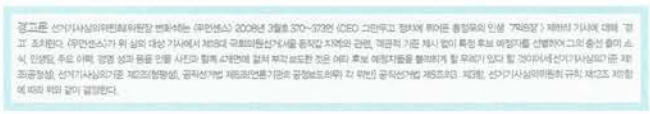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사회가 좀더 품위 있고,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성과 위주의 실용주의가 대세인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성과와 실적만을 중시하다 보면 사람이 소외되고 따뜻함을 잃을 수 있다. 나 혼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실용과 사람, 그 조화를 잘 이뤄내고 싶다.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다 접고 산으로 들어가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다. 내 인생의 7막 8장은 가족을 위해, 나를 위해 살고 싶다.

서른아홉 홍정욱의 지나온 삶은 그야말로 치열했고, 앞으로 그가 도전하는 새로운 길 또한 험난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 그 쉼 없는 질주(疾走) 속에서 그는 행복의 참 의미를 찾는 것 같았다.

결정 후 보도문

〈164쪽 경고문 내용 참조〉



△ 2008년 4월호 367면

의결번호	2008자심67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주부생활	(주)학원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대표이사 김 영 수
심의대상기사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2008년 3월호 310~317면)	
주 문	(주)학원사가 발행한 주부생활 2008년 3월호 310~317면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제하의 기사와 관련, 월간 주부생활 4월호 310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주부생활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서초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인생관,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8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부생활 2008년 3월호 310~317면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부생활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서초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인생관,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8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재심4	결정유형 / 기 각
재심청구인	주부생활	(주)학원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 대표이사 김 영 수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 건 기사가 고승덕 씨의 개인사생활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제8조의 '후보예정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체 기사에서 정치 관련 언급은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고승덕 씨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선거기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4월호에 게재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3월호에 싣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67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른바 공직선거법 제8조의 '기타사항에 관한 보도'는 후보예정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규정으로서 이번 총선 출마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천명한 고승덕 씨에 관련된 모든 보도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선거보도라 할 것이며 따라서 해당 법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승덕 씨 부부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관련 언급을 최소한도로 줄이는 등 선거보도로 오인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할지라도 이 건 기사가 총선 입후보 예정자를 다루었고 그러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배포된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재심청구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고려하여 이 건 기사를 4월호가 아닌 3월호에 게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당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였다면 고씨와의 대담 내용을 선거 후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 건 심의대상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린 원심의 결정이 적합하다고 보고 참석위원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고시도 일도 결혼도 노력의 결과물이다! 결혼 4년 11세 연하 아내 첫 공개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에 이 사람만큼 타이틀이 많은 이가 있을까. 놀라운 '공부의 기술'로 '패스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남자, 고승덕이다. 남들은 평생 하나 따기도 힘든, 높디높은 국가 자격증을 몇 개나 거머쥐었다. 그의 이력을 열거하려면 입이 아플 지경이고 배는 또 얼마나 아픈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먹었으니. 초등 · 중등 수석 졸업, 경기고 4등 졸업, 서울대 재학생 시절 3개 고시 합격(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시험 최연소),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예일 · 하버드 로스쿨 석사, 콜롬비아 로스쿨 박사, 펀드매니저, 그도 모자라 올해 '정치 자격증'에까지 도전장을 냈다.

이 사람,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이 시대에 천재 고승덕을 서초동 집에서 만났다. 4년 전, 그에게 '남편 자격증'을 수여한, 꼭꼭 숨겨놓은 아내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인터뷰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두 사람은 전혀 '엘리트적'이지 않았고, 간질간질 닭살스러웠다. 이 또한 배가 너무 아팠다.

나도 떨어진 시험이 있다

신은 누구에게나 한 가지 재주는 내린다고 했다.

그 하나를 평생 업으로 삼기 위해 사람들은 수년을 매진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마침내 자리를 잡으면, 이제 그 분야에서 죽어라 일하며 일생을 보낸다. 그런데 신의 실수인가. 이 남자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고승덕.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선 '능력'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평생에 하나 따기도 힘든 자격증을 몇 개나 쥐고서 이곳저곳을 누비고 있으니, 과연 그는 천재다.

"천재요? 어휴, 제가 아둔하기로 따지면 1등할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천재와는 거리가 멀어요. '고시 3관왕'이라는 그 고승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조화인지 생화인지도 구별 못해요. 하루는 사무실에 누가 꽃병을 들고 찾아왔는데 너무 예뻐서 물을 열심히 줬어요. 물을 주면서 왜 이 난 꽃은 시들지도 않을까 신기했어요. 한데 1주일이 지나도 꽃잎 하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기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잎을 이래저래 만져 보니 세상에, 플라스틱이었어요. 감쪽같이 속은 거죠. 그것도 모르고 1주일 넘게 물을 주고 있었으니, 남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떨한' 구석이 많아요."

원래 천재는 당신처럼 생활에선 좀 엉뚱한 면이 있지 않나. 일이나 공부할 땐 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고, 당신은 무슨 일이든 별 노력을 안 해도 척척 해낼 것 같다.

"저는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책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에도 썼지만 노력파입니다. 요즘은 가칭 〈노력의 기술〉이란 책도 쓰고 있고요. 단지 저는 노력하면 결과가 좋은 편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봐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또 막상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거죠. 노력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공하는 노력의 비밀은 속도가 아니라 가속도입니다. 뉴턴도 물리학에서 속도가 힘이 아니라 가속도가 힘이라고 했잖아요. 젓가락을 쥐고 적은 힘으로 유리를 아무리 두드려도 깨지지 않아요. 하지만 마음먹고 어느 날 세게 한 번 딱 때리면 유리는 깨져요. 하루 10시간씩 꾸준히 10년을 공부한 사람과 하루 17시간씩 1년을 공부한 사람을 놓고 보면 후자가 합격합니다. 가속도를 점점 높여 시험 보는 날 최대 힘을 발휘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죠. 책을 읽을 때 한 번 두 번 계속 읽으면서 가속도를 내야 합니다. 그럼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시험 보는 전날에 두 번 더 읽을 수 있어요. 시험날 기억이 생생할 수밖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속도를 붙여야 빛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요. 그리고 노력에 하나 더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꿈이죠. 꿈을 가진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10년 후를 꿈꾸면서 노력하면 힘이 더해져 결국 더 빨리 이루게 됩니다. 꿈을 꾸며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결론입니다."

당신을 보면 도전이 삶의 목표인 양 항상 무엇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는 희열감으로 사는 사람 같다. 도전이 즐거운가

"아내도 제게 왜 그리 일을 만들면서 사느냐고 나무랄 때가 있어요. 제 인생철학 때문입니다. 인간은 A형, B형, C형, D형, 네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되돌아보며 살죠. D등급은 시키는 일에 꾀를 부리는 사람, C등급은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B등급은 시키는 것을 조금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A등급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A형 인간이 성공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저 또한 그런 인간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늘 제 곁에 일이 있나 봐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고요. 저는 여러 곳에서 강연 초청을 자주 받습니다. 학생들에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키는 공부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목표를 정하라 이야기합니다. 직장인에겐 윗사람이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보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는 사람이 성공하니까요." (중략)

'정치 자격증'까지 따겠다고

공천 시즌만 되면 '러브콜'을 받아온 그지만, 그래도 이번 결정은 의외다. 정치를 하겠다니.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겠단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딴지를 걸었다. 왜?

"제가 귀가 얇은가 봐요. 주위에서 자꾸 하라니까(웃음). 1월 내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에요. 주위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지금 제 나이에 하지 않으면 4년 후나 그 후는 늦은 감이 있다고.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니겠냐고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제 인생철학 중에 'T1T2' 판단법이란 게 있어요. 이제껏 그 방법에 근거해 일을 결정했는데, 결과가 좋았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선택하지 말고 이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을 하자는 원칙입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다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하자는 거죠. 지금 정치는 제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도 몰라요.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마이너스라면 마이너스예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못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결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청소년나비운동본부' (www.nabinet.org)를 발족해, 청소년 자원봉사를 하면서 봉사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섰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

△ 2008년 3월호 310~315면

△ 2008년 3월호 316~317면

이 없어요.

변호사는 하늘을 바라보는 직업이니까. 사건 의뢰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불확실한 게 많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정규직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정치는 그동안 놀던 물이 아니지 않나. 적응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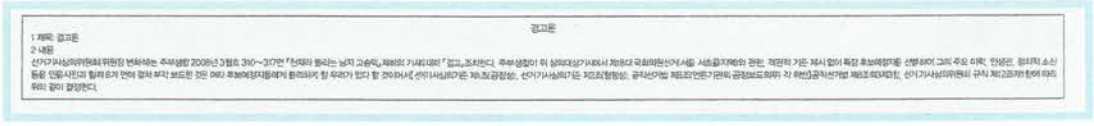
"말하자면 전혀 낯선 곳에 이민을 가는 셈이죠. 이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일단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본받고 적응하는 것이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 모빌리티 시대 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봉사활동을 해왔으니까요."

정치는 잘해도 본전,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을 받는다. 욕 많이 얻어먹는 대표적인 직업이 아닌가

"조금만 말 실수해도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요즘 말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잠언을 읽습니다. 정치는 편하게 생활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며칠 출퇴근 안 해도 나무랄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는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왔죠. 그런 점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주도적으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주택청약제도도 바꿀 거고요. 현행 청약가점제를 보면 근로자의 근로연수가 빠져 있는데, 큰 문제입니다. 일하지 않는 강남 부자 자녀와 근로자의 점수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근로연수를 청약가점에 넣으면 많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후략)

결정 후 보도문

〈169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1 제목: 경고문

2 내용:

△ 2008년 4월호 310면

의결번호	2008자심68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경상매일신문	(주)경상매일신문 / 경북 경주시 노서동 121-21 대표이사 김 달 호
심의대상기사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2008년 2월 20일자 1면)	
주 문	(주)경상매일신문이 발행한 경상매일신문 2008년 2월 20일자 1면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경상매일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경상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상매일신문 2008년 2월 20일자 1면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상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3선 수성 이병석 의원에 초선 도전나선 허명환 예비후보

극비 실시 여론조사 李11% 許56% 집계 경북도당 고심

18대 포항 북구 국회의원 금배지는 누가 가슴에 달 수 있을까?

재선에서 3선을 거머쥐려는 현역 이병석 의원과 야심찬 초선 도전에 나선 허명환 예비후보와 수성이냐 입성을 놓고 한판 공천 경쟁이 뜨겁다.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현역의원이자 당내 기득권과 이명박 당선자를 잘게 한 이병석 의원과 처녀출전이지만 허화평 전 의원의 조카라는 점과 신선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3선수성 이병석의원에 초선 도전나선 허명환 예비후보

극비실시 여론조사 李11% 許56% 집계 경북도당 고심

이병석 의원

허명환 예비후보

한 인물이라는 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지난달 극비리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병석 의원이 11%, 허명환 예비후보가 56%로 조사돼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의원이 공천에 낙점이 된다 해도 허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도 신중히 고려돼야 할 점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포항지역에서는 대통령이 나온 만큼 이번 기회에 초선보다는 3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후에 포항만 바라보고 정치를 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3.6.5」 운동을 펴서라도 이 의원을 3선으로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3.6.5」 운동은 이병석 의원을 3선에 포항남 울릉 이상득 의원을 6선으로 당선시켜 이 기회에 5년 동안 포항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 포항발전을 앞당기자는 것이다.

이병석 의원은 음으로 양으로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될 이명박 당선자를 만든 장본인으로 같은 동향인 흥해 출신이자 동지상고와 고려대학교 동문이다.

이에 맞서는 허명환 예비후보도 이에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 예비후보는 『매번 국회 입성이 절반이 초선으로 물갈이 되는데 초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자신감으로 도전하고 있다.

허 예비후보는 국무총리실 자치분권국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포항에 내려왔다.

한나라당 인재영입 케이스로 제17대 대통령 중앙대책위원 대책회의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현재 뉴라이트 포항연합 상임대표로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포항북구 지역은 예전과 달리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되던 지역 예비 정치인들이 일찌감치 출마를 포기 해 18대 한나라당 공천은 받기만 하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현재 포항북구 18대 국회의원 출마예상자는 한나라당 공천승리자와 이에 불복하고 공천에 탈락 무소속 출마 준비 중인 통합민주신당 오준기 예비후보(41) 등 3명 정도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 후 보도문

〈17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상매일신문 2008년 2월 20일자 1면「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제하의 기사에 대해「경고」조치한다.

경상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도당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 일시 · 방법, 표본오차를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선거기사 심의기준 제3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5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1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71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뉴시스아이즈	(주)뉴시스 / 서울 종로구 경운동 91-1 대표이사 배 기 철
심의대상기사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2008년 3월 3일자 28~29면)	
주 문	(주)뉴시스가 발행한 뉴시스아이즈 2008년 3월 3일자 제71호 28~29면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시스아이즈 2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뉴시스아이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양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시스아이즈 2008년 3월 3일자 제71호 28~29면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시스아이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양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터뷰/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철학과 역사 · 스토리 담긴 도시개발 등 시민의 만족도 우선한 정책 필요

당 최고위원까지 했고, 17대 대선후보 경선도 완주했지만 여전히 개혁만 외치는 '철없는 소장파', 심지어는 '친북좌파' 취급을 받는 한나라당 원희룡(45 · 서울 양천갑) 의원.

그러나 측근들은 당리당략대로 빈틈없이 한팀처럼 움직이는 당정 정치에서, 유독 자신의 소신대로의 길을 고집하다보니 씌어진 '굴레'일 뿐이라

고 말한다. 4 · 9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바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원 의원을 만나 새 정부와 서울시 등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생각과 속내를 들어봤다.

–새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디자인 부문에 상당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 같다. 당연히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창출하자는 데 적극 찬성이다. 서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새롭게 하자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실 그간의 도시생활은 복잡하고도 일률적인 환경 속에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었다. 개발 일변도의 정책과 문화가 낳은 비극인 셈인데, 이제는 기능과 자연이 공존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야만 한다. 단, 내실 없이 외형에만 치우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철학과 역사 그리고 스토리를 내포한 도시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시민의 만족도도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자 공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청자가 많이 몰렸다. 다른 신청자보다는 느긋한 입장 같은데.

"선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경합이자 전투이다. 경쟁자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이 20명이면 다급하고 적이 1명이면 느긋하다고 할 수 있을까.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학력고사 전국수석, 서울대 수석입학, 사법고시 수석합격, 검사 등 국회의원 이전의 면면도 거의가 엘리트코스인데, 중고교 시절 사교육비로 꽤나 많은 돈을 지출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질문은 처음 받아보는데 좀 당혹스럽다. 사교육비라. 사실 내가 살던 집에 전기불이 처음 들어온 것이 중3 때였다. 문명의 혜택과도 멀었고 지독하게 가난했던 가정에서 성장했다. 사교육비라니, 꿈도 꾸지 못했다."

–현재 재산은 얼마나 되나.

"거주용으로 양천구 목동에 집 한 채 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한 재산보유신고에도 명확히 나와 있다. 또 알다시피 나는 이미 1가구 1주택 운동에 서명한 사람이다. 주거용 집 한 채면 족하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철학과 역사 · 스토리 담긴 도시개발 등 시민의 만족도 우선한 정책 필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17대 재임 중 최고의원을 맡는 영광과 책임을 함께 했었다. 당시 당은 탄핵 후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연거푸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후유증이 큰 시점이었다. 새롭게 바꿔야한다는

당내의 기류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줬던 셈이다. 18대도 그런 맥락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한나라당은 여당으로서 다수 의석 확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국회 본연의 입법 및 행정력 견제의 기능을 해내야 한다."

–최근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한 단체가 '친북좌파'라며 공직부적격자로 지적했는데.

"알고 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가치와 이념을 존중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억울하긴 하지만 민주사회 아닌가.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공존하고 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다만 원희룡이란 정치인이 밟아온 실제적 내용을 살펴보기보다 그동안 덧씌워진 빨간 딱지와 네거티브적 이미지에 근거해 다짜고짜 몰아세우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껏 일부 극우단체들이 지적했던 문제들 중 사실관계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사람이다. 다만 국가보안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자고 주장했을 뿐이다. 극우단체가 주장하는 또 다른 사안으로 낮은 단계 연방체제에 대한 찬성여부가 있다. 나는 결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찬성한 적도 없거니와, 그러한 추모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사란 점에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향후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관과 관련 공약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본 요체는 '무조건적인 햇볕'이 아니고 전략적 상호주의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일구어내는 '비핵개방3000플랜'이다.

이를 골간으로 한다면 한미공조는 강화될 것이며 북한의 적극적 개방 정도에 따라 통일 정책은 실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방안의 큰 그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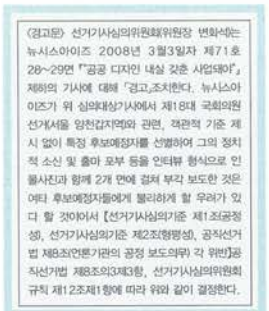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그 속에 들어 있는 국가연합단계를 거친 남북통일, 그것이 나의 통일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소위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비전이나 의견이 있다면.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데 매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공정한 평가기능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야 한다. 글로벌기준에 맞지 않는 비자금문화도 없애며 합리적인 평가가 안착되는 시장친화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물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 상대적 약자를 국가에서 끌어안는 노력도 해야만 할 것이다."

결정 후 보도문

〈176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선)는 뉴시스아이즈 2008년 3월3일자 제71호 28~29면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뉴시스아이즈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서울 양천갑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정치적 소신 및 출마 포부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 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5일자 28면

의결번호	2008자심72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뉴스메이커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기사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2008년 3월 4일자 14~19면)	
주 문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4일자 제764호 14~19면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스메이커 1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갑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탈당 및 정당 창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4일자 제764호 14~19면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갑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탈당 및 정당 창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주연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 상 정 의원

"민노당의 가장 큰 패착은 민생을 위한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

심상정 의원(49)을 만난 곳은 고양시 덕양의 선거사무실이다. 인터뷰 약속시간을 정확히 맞춰 출근한 심 의원은 기자와 악수를 나눈 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라며 미리 보낸 질문지를 10분간 꼼꼼히 들여다본다. 닥종이 인형을 연상시키는 오목조목한 얼굴은 경직됐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러 활짝 핀다. 잠깐이지만 "큭

큭…"거리며 웃기도 한다. 차를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큰 것도 인상적이다. '후루룩…후루룩…' 하는 도드라지는 소리가 작은 실내공간을 울린다.

심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민노당 탈당 선언과 새로운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연대회의를 제안했다. 노회찬 · 단병호 의원 등 당내 평등파가 심 의원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집단탈당 러시에 가세했다. 지난 17대 대선에서의 참패 이후 당내 파열음은 거셌고, 급기야 탈당과 분당(分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것이 자주파와 평등파의 갈등이다. 자주파는 NL(민족해방-통일운동과 학생운동 강조) 그룹, 평등파는 PD(민중민주-노동운동이핵심)그룹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중반부터 불거진 해묵은 노선투쟁이 이처럼 당을 와해시킬 만큼 심각했던 것일까. 심 의원은 "내분이 심해 민노당이 망한 게 아니라 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내분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에는 여러 의견 그룹이나 정파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정파활동이 당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의 부재예요. 그러다보니 민노당 내의 정파다툼은 당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보다 당이 퇴행하게 하는 기능을 해왔고 대선 참패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거죠. 민노당의 가장 큰 패착은 고착된 엘리트 중심의 운영체제가 갖는 한계와 소모적인 논쟁이 맞물려 민생을 위한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이에요." (중략)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과 관련해 "대중적 진보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가 말한 대중적 진보정당은 최근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한 유시민 의원이 말한 '유연한 진보'와 민노당이 내건 '진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념도 진보정당도 서민을 위해 있는 거예요. 대중적 진보는 실제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진보를 말하는 것으로 진보신당은 88만 원 세대로 통칭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88만 원 세대를 조직화하는 게 전략의 핵심이지요. 반면 유시민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노무현 정권의 노선이에요. 민생을 개혁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이 노무현 씨에게 표를 몰아줬지만 노 정권은 결과적으로 개혁과 민생을 외면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냉혹한 외면을 받았고요. 따라서 유 의원의 유연한 진보는 사이비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심 의원은 "새로 창당할 진보정당은 생태, 여성, 인권, 평화 등 21세기의 가치를 포괄하고 풀뿌리 진보운동은 물론 신자유주의 진보세력까지 연대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일 지상주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의 교류를 통해 점차적으로 통일을 이뤄가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략)

2004년 국회에 진출한 이래 심 의원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재경위에서 그는 날카롭기로 명성이 자자하다. 2005년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파생상품 시장을 통한 정부의 외환 개입으로 1조8000억 원대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든 일화는 유명하다. 한 · 미 FTA협상 과정에서도 논리적 주장으로 서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목소리만 큰' 정치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똑똑하고 바른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의정활동 잘한 국회의원으로 4년 연속 뽑히기도 했다. 실제 그의 의정활동 보고서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다른 국회의원들의 그것에 비해 유난히 두껍기 때

문이다.

경제를 모르던 심 의원이 재정경제위원회를 선택한 것은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경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게 경제잖아요. 제가 능력과 자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하며 조력을 구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에 누구를 대변하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서민의 대표예요. 서민의 대표로서 자기소임을 분명히 자각하면 많은 조력자들을 조직해 공부하고 주장을 펼칠 수 있어요."

심 의원은 경기도 파주 휴전선 근처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사올 때까지 산나물을 캐며 성장했다. 어린 시절 그는 반에서 1, 2번을 다툴 정도로 키가 작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의 기억 속에 그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로 각인돼 있다고 한다. 잠재돼 있던 그의 리더십이 분출되기 시작한 것은 충암여중에 다닐 때다. 당시는 고교야구가 큰 인기를 누리던 시절이다.

"충암고등학교가 야구를 잘해서 동대문 운동장에서 경기가 있는 날이면 학생들이 동원됐어요. 그때 전 야구가 좋아 야구 학생기자를 하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야구장을 찾아다녔어요. 워낙 놀기를 좋아해 서클활동에도 적극적이었죠. 공부는 좀 하는 편이었는데, 우수학생이라기보다

는 비주류 학생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일은 KBS 여고생 퀴즈에 제가 다닌 명지여고 대표로 출전했는데 잘 알고 있던 야구관련 문제를 부저를 늦게 누르는 바람에 못 맞춰 두고두고 속상해했던 일이에요. 답이 '덕아웃'이었어요."

1년 재수 후 1978년 서울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교사의 꿈을 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1학년 때 구로동에서 노동야학인 '한얼야학' 교사로 활동한 데 이어 2학년 때 공활(대학생들이 방학 때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하면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역군으로 불리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을 목격하며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깨달았고, 뭔가 굉장히 잘못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회고했다.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근면 성실한 노동자들을 보면서 이런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는 것이 사회정의이고 민주주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모하는 게 지식인의 몫이라고 판단했죠. 제가 노동운동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요. 노동운동가로 산 25년 동안 제 선택에 대해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 없어요."

대학 3학년 때인 1980년 구로공단 미싱사로 취직하면서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 물론 부모님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1985년 구로동맹 파업으로 그가 전국에 지명수배되면서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는다. 파업3일째 저녁 TV 9시 뉴스에서 딸의 얼굴이 구로동맹파업 주모자로 1계급 특진에 5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린 채 나온 것이다. 심 의원은 "충격을 받았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남편 이승배 씨(52)는 1986년, 당시 노동운동을 함께한 김문수 경기지사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인 이씨는 시위로 무기정학을 당한 후 노동운동의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다. 두 사람은 1992년 늦깎이 결혼했다. 심 의원은 "여성이 결혼을 해서 노동운동가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우리 아저씨(남편을 지칭)는 제 가능성이나 역할을 인정해줘 제가 노동운동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들 우균 군(중3)이 있다. 우균 군은 대안학교인 '이우학교'에 재학 중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부모의 한 사람인 심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일까. 심 의원은 "모든 아들 딸의 부모라는 자세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있는 집 아이들만 위한 정책을 만듦으로써 교육에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아이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세에 대학입시로 자기 인생이 결단이 나는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해요. 프랑스처럼 대학이 평준화돼 일정 자격만 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대학을 개방해야 하죠. 진로는 대학에 들어간 후 공부하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이처럼 대학진학을 열어 놓으면 중·고등학교 과정도 인문학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간과 세계에 폭넓은 사고를 하고 인간존중,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 눈을 뜨게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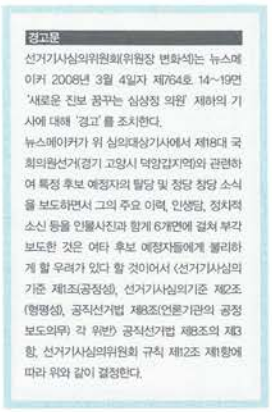
'성공'과 '경쟁'을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 의원은 "한마디로 신권위주의"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대는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심 의원과의 인터뷰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그는 역시 시원시원하고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지혜로움에 뚝심까지 갖추고 있어 흡입력이 대단한 인물이다. 지역구 주민들과 윷놀이 약속이 있다며 총총히 사라지는 그의 어깨 위에 소외된 대한민국 서민들의 희망의 등불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179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4일자 제764호 14~19면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를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고양시 덕양갑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 예정자의 탈당 및 창당 창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그의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 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25일자 21면

의결번호	2008자심7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부안저널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심의대상기사	-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2008년 2월 20일자 3면) - 『의원동정』(2008년 2월 20일자 4면)	
주 문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2월 20일자 제368호 3면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4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소식을 다루면서 그의 주요 이력 및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동정란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2월 20일자 제368호 3면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4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소식을 다루면서 그의 주요 이력 및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동정란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뉴스메이커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메이커가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뉴스메이커는 최근 한달여 동안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경력, 법안 발의 횟수, 발의 법안 원안 통과 횟수, 본회의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최우수의원 9명 우수의원 12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4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과 더불어 농어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져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으로서도 유일하게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아래 글은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 '뉴스메이커' 761호 (2008년 2월 5일자)에 게재된 글이다. (편집자)〉

한센병 환자 인권신장 · 생활안정 기여

보건학 · 치의학 박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보건학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 및 의학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한 번 지적한 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지는 의정활동으로 피감기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김 의원은 2007년 6월 12일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기존의 쌀과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까지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도 규모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어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경지 · 폐경지, 수익성이 없어 폐업한 축사, 임야, 트랙터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정부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업 발전을 위한 김 의원의 공로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뉴스메이커 선정 최우수 국회의원

경향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메이커가 17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 평가에서 299명의 국회의원 중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뉴스메이커는 최근 한 달여 동안 17대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펼친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경력, 법안 발의 횟수, 발의 법안 원안 통과 횟수, 본회의 출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최우수의원 9명 우수의원 12명을 각각 선정하였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4년 연속 시민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됨과 더불어 농어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져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중에는 유일하게, 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으로서도 유일하게 최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아래 글은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주간 '뉴스메이커' 761호 (2008년 2월 5일자)에 게재된 글이다. (편집자)〉

최우수의원 김 춘 진
대통합민주신당 전북 고창 · 부안

한센병 환자 인권신장 · 생활안정 기여

보건학 · 치의학박사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드물게 보건학과 치의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 및 의학에 대한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해 뛰어난 평가를 받았다. 한 번 지적한 사항은 해결될 때까지 물고늘어지는 의정활동으로 피감기관이 가장 무서워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2004년부터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김 의원은 2007년 6월 12일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기존의 쌀과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산물까지 포함시키고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도 규모 300㎡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해 중소형 음식점에서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같은 달 14일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농어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감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그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부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휴경지 · 폐경지, 수익성이 없어 폐업한 축사, 임야, 트랙터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농어민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처라며 정부가 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는 농업 발전을 위한 김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를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발의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입법활동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기이기 전부터 가정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2006년 8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5년에는 한센병 환자의 과거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지원, 특별한 지원 책을 포함 베네토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을 발의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도 우수 입법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문제와 관련, 난민법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엄격하면 규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에관한법률' 을 입안했다. 200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의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발의

농업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먼저 경쟁력을 확보한 후 개방할 것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는 농어민을 유류에 대한 면세 혜택을 5년 연장하는 법률안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중심외과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35건의 법률안 발의

김춘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모두 3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가운데 1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기본법,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모두 제정법으로, 6.9시간이 소요 시간의 연구와 의견 수렴과 산물이다.

△ 2008년 2월 20일자 3면

를 인정하여 그를 2007년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표발의

김춘진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향한 입법활동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려 2006년 8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5년에는 한센병 환자의 피해 사건 진상 규명,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자금 지원, 적절한 치료 제공 등을 뼈대로 하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법'을 발의하여 한센병 환자의 인권 신장과 생활 안정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도 우수 입법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또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국제결혼 문제와 관련, 난립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를 설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에 관한법률'을 발의했다. 200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외국인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략)

35건의 법률안 발의

김춘진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모두 35건의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 가운데 12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사회기본법,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은 모두 제정법으로, 하나같이 오랜 시간의 연구와 의견 수렴의 산물이다.

의원동정 / 기초노령연금제도 불만족 응답 더 많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응답자 64.6% 모른다
김춘진의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김춘진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를 통한 고창과 부안을 대상으로 한 정책여론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자가 64.6%나 되어, 기초노령연금제도 불만을 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하여 원만한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만족한다가 35.2%,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로 불만족 응답자가 더 많았다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첫째, 정부가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각종 현금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고, 둘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벌어졌으며, 셋째, 기초 노령연금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종친회, 문중 재산, 도시자녀가 농어촌 부모 명의로 들어놓은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예금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

의원동정

기초노령연금제도 불만족 응답 더 많아

노인장기요양보험 응답자 64.6% 모른다
김춘진의원,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김춘진 의원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뷰」를 통한 고창과 부안을 대상으로 한 정책여론조사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하여 만족한다보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모른다는 응답자가 64.6%나 되어, 기초노령연금제도 불만을 줄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하여 원만한 제도 시행을 위한 정부대책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만족한다가 35.2%, 만족하지 않는다가 37.4%로 불만족 응답자가 더 많았다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 첫째, 정부가 별도 재원마련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보다는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으로 부담하는 각종 현금 급여를 기초노령연금재원으로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이고, 둘째,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가 벌어졌으며, 셋째, 기초 노령연금 관련 법령 제정 과정에서 종친회, 문중 재산, 도시자녀가 농어촌 부모 명의로 들어놓은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예금 등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간과

김춘진 의원은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가 제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근인의 80%가량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신청의 시행을 위한 홍보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의원은 이보다 앞서 2006년 8월 11일 노인 65세 장애인과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동 법안은 정부 법안과 병합되어 지금, 그 결과물인 한센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김예이뷰트사는 고창과 부안군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최근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종오차는 ±3.1%였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의원총회 발언

김춘진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과 출연연구기관들은 현장을 모르는 경쟁으로 한-미 FTA협상도 가속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정부 내부에서 농업산업계를 국가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개발 ·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과 지도 · 교육기능이 결합된 세계는 이 심적인 성공모델로 검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 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예정 20번째 목원의원은 17일에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서명을 받아, 청나라당과 여론형성주무 지당 하나 지도부에 전달하였다.

△ 2008년 2월 20일자 4면

하여 만든 치밀하지 못한 세부 집행 규정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교통수당, 장수수당 등 각종 현금급여는 국고가 보조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7년 8월 17일자 「2008년도 노인대상 현금 급여제도 일원화 지침」을 통하여 관련 지침을 미준수시 보건복지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가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침을 내려보내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올 하반기부터 실시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하여 "군민의 65% 가량이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홍보 등 새로운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2006년 8월 11일 노인 외에 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동 법안은 정부법안과 병합심사 되고, 그 결과물인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정책여론조사는 고창과 부안군 만 19세 이상 남여를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최근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이며, 허용오차는 ±2.1%였다.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당론채택 촉구 의원총회 발언

김춘진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줄것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농촌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현장을 모르는 결정으로, 한-미 FTA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진흥청은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농업선진국은 국가기관 중심의 효율적인 농업기술개발 · 보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과 지도 · 교육 기능이 결합된 체계는 이상적인 성공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시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지난 2월 1일 재적 298명의 국회의원 중 157명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였다.

결정 후 보도문

〈184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2월 20일자 제368호 3면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4면 「의원동정」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의 관련하여 지난 1월 29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최우수의원, 국감 베스트의원 선정 소식을 다루면서 그의 주요 이력 및 의정 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의원동정란을 통해 그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2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7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부안저널	부안저널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157-4 대표 김부미자
심의대상기사	『의원동정』(2008년 3월 5일자 8면)	
주 문	부안저널이 발행한 부안저널 2008년 3월 5일자 제369호 8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부안저널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여야 한다.	
이 유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월 20일자(제368호)에 연속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3월 5일자 제369호 8면 『의원동정』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칼럼(2008자심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칼럼(2008자심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월 20일자(제368호)에 연속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원동정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 탄력
농림부 협의의견 긍정적으로 선회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이 김춘진 의원의 노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10월 부안군은 전라북도에 변산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와 농지분야 협의가 난항에 빠져 관광지 지정이 불투명했다.

농림부는 농지분야 협의와 관련하여 경지정리되

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춘진 의원이 임상규 농림부장관과 박해상 농림부 차관에게 관광지 지정의 필요성 등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관광지가 지정되면, 변산일대 597,668제곱미터 면적에 2011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 캠핑장, 공원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권침해문제 일부 개선 기대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의무화, 무연고 정신질환자 신상조회 의무화,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귀시설 종류 다양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대안)은 5건의 의원입법 법안과 2건의 정부 법안이 병합심사된 결과로 정신보건서비스는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단체와 복지 관련단체의 이해와 조정을 통한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입법 소회를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법문제 등은 향후 제18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제18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남은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포부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2006년 11월 9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4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보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의원동정

변산해수욕장 관광지지정 탄력
농림부 협의의견 긍정적으로 선회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지정이 김춘진 의원의 노력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07년 10월 부안군은 전라북도에 변산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농림부와 농지보수 협의가 난항에 빠져 공공지 지정이 불투명했다.

농림부는 농지분야 협의와 관련하여 결지정리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김춘진 의원이 임상규 농림부장관과 박해상 농림부 차관에게 관광지지정의 필요성등 지역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농림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관광지가 지정되면, 변산일대 597,668제곱미터 면적에 2011년까지 숙박 및 휴양시설 , 캠핑장, 공원시설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인권침해문제 일부 개선 기대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자의입원자에 대한 퇴원의사 확인 의무화, 무연고 정신질환자 신상조회 의무화,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문제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복귀시설 종류 다양화, 정신보건시설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의무화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정신보건법 개정안(대안)은 5건의 의원입법 법안과 2건의 정부 법안이 병합심사된 결과로 정신보건서비스는 그 특성상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 관련단체와 복지 관련단체의 이해와 조정을 통한 절충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입법 소회를 밝혔다.

김의원은 개정된 정신보건법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법문제 등은 향후 제18대 국회의 입법과제로 남게 되었다며, 제18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면 남은 입법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향후 포부도 밝혔다. 김의원은 이에 앞서 2006년 11월 9일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과 4차례의 국정감사를 통해 정신보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농어민단체, 4·9 총선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예비 후보 지지 선언

농어민단체에서는 지난달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4.9 총선과 관련하여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향후 총선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번에 11개 농어민단체가 발표한 총선 지지 후보는 한나라당 홍문표(예산·홍성) 예비 후보와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부안) 예비 후보다.

이 두 예비 후보는 그동안 농어민단체와 정책 연대를 통해 ▲농어업을 면세유 5년 연장 ▲ 쌀 목표가격 5년 동결 ▲기한이설부담금 환급 활용 ▲추곡방칸기금 존치 노력 등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당선이 될 경우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 ▲농기부채 종결법 제정 ▲농업 직능 대표 비례 대표 우선 순위 배치 노력 ▲쌀, 시료가격 안정화 대책 공동 당면 농정 현안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농어민단체는 함후 이 두 예비 후보들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 연대 등 타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총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농업농어촌의 권익 보호에 앞장 선 후보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후보지지 활동을 적극 권장 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법 국회 통과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6일(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동 법안은 2007년 11월 20일 상임위 대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을 당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보호관찰명령제도가 있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호관찰명령제도 내용 중 일부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어 보호관찰명령제도가 삭제되었다.(중략)

이에 앞서 김춘진 의원은 마약류화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안을 2005년 3월 18일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다.

김 의원은 "이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나, 이번 개정 결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마약류중독자 예방사업은 식약청이 담당하도록 되어,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농어민단체, 4 · 9총선 지지선언 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 홍성)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 · 부안)
예비 후보 지지 선언

농어민단체에서는 지난달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4.9 총선과 관련하여 지지 후보를 발표하고 향후 총선 지원 방향에 대한 입장 표명을 했다.

이번에 11개 농어민단체가 발표한 총선 지지 후보는 한나라당 홍문표(예산 · 홍성) 예비 후보와 통합민주당 김춘진(고창 · 부안) 예비 후보다.

이 두 예비 후보는 그동안 농어민단체와 정책 연대를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5년 연장 ▲쌀 목표가격 5년 동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활동 ▲축산발전기금 존치 노력 등 농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당선이 될 경우 ▲한미FTA 국회 비준 반대 ▲농가부채 동결법 제정 ▲농업 직능 대표 비례대표 우선 순위 배치 노력 ▲비료, 사료가격 안정화 대책 등 당면 농정 현안 해결을 요구한다고 했다.

농어민단체는 향후 이 두 예비후보들에 대해서는 타 단체와 연대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총력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민단체에서는 앞으로도 농업농어촌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후보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후보지지 활동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결정 후 보도문

〈18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부안저널 2008년 3월 5일자 제368호 8면 「와원동정」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부안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고창 · 부안지역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3일자 같램2008자심 28 : 경고문게재 결정과 2월 6일자 기사 및 같램2008자심 44 : 경고문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두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월 20일자(제368호)에 연속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일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2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78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영광21	(주)영광21신문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도동리 174-3 대표이사 김 세 환
심의대상기사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2008년 3월 6일자 4~5면)	
주 문	(주)영광21신문이 발행한 영광21 2008년 3월 6일자 제271호 4~5면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영광21 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이낙연 국회의원…)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영광21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 · 장성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이력, 정치 역정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광21 2008년 3월 6일자 제271호 4~5면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영광21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함평 · 영광 · 장성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이력, 정치 역정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원전지역 지원제도 추진에 '무게' · 입법활동 우수

탄핵풍 견디고 17대 재선 · 5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낙연 의원(통합민주당)에 대한 의정평가에 있어 입법활동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줘야할 것 같다. 이 의원은 3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그 중 12건

(철회법안 제외)의 법안을 처리, 37.5%의 처리율을 보였다. 원안가결 된 법안이 1건, 대안폐기 8건, 폐기 1건 그리고 철회법안이 1건이다.

33건의 법안 가운데 1건의 법안(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은 철회 후 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했으므로 실제로는 32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

17대 전체 의원 평균 발의건수가 18건을 조금 상회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이 의원은 적어도 '입법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회의 출석율도 90%를 상회했다. 2004년 70%의 출석율에서 2005년 86%, 2006년도에는 100% 출석율을 보여 해가 거듭될수록 출석률이 높아졌다. 다만 상임위 출석율은 67%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국정감사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03년부터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히기도 했으며 뉴스메이커에서 실시한 17대 국회의원 의정 성적표에서 "빈곤층 주민 현장조사 '르포 전문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원전지역 지원제도 추진에 '무게' · 입법활동 우수

탄핵풍 견디고 17대 재선 · 5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2008년 3월 6일자 4면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법으로 이 의원 자신의 지역구(영광)에 대한 전형적인 지원법이라 볼 수 있다.

지역구 지원 관련 법안 많아

이 의원의 법안 발의 이유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기간 산업시설이라는 명분하에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왔고, 원자력발전설비의 내구연한이 가까워짐에 따라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체유해물질 누출우려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원전납부 지방세가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되어 재정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히려 정부의 각종 낙후지역 지원시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지역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판매수입의 100분의 5 이상~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발전소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략)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의원은 "섬 지역 농업인들이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도 지리적 여건에 따른 과다한 물류비용으로 생산품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또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어촌 거주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섬지역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섬지역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육지로 운송해 판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화물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섬지역 농축산물을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2006년 당시 총 61억8천여 만원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32억5천만원으로 최고치를 차지했다.

현재 법안이 통과되면 섬지역에 대한 해상화물운송비 지원금으로 연간 약 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발의해 지역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왔다.

탄핵 역풍 견디고 17대때 재선

전남에서 회생한 5명중 1명으로 능력 인정받아

△ 2008년 3월 6일자 5면

소수정당 지원 앞장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안만 3건을 발의했다. 3건의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기존 2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또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전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완화 ▲현행 교섭단체에만 정책연구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을 원내 진출한 모든 정당에 대해 정책연구위원을 두도록 함 ▲정보위원회의 경우 기존 교섭단체소속 의원 중에서만 위원을 선임 또는 개선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 ▲기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원내정당대표연설로 변경하여 1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인 원내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에게도 본회의에서 대표연설 기회를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법안들은 소수정당의 원내 활동을 지원해 그들의 국회 내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기존 거대정당들이 쉽게 협조하지 않으리란 부정적 전망이 많다. 실제로 3건 모두 계류 중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 또한 소수정당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법상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2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약 80% 이상이 배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배분방식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도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일정한 지지율을 상회하는 정당에 일정비율의 보조금을 균분하여 배정하고 그 나머지 보조금도 정당의 득표비율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탄핵 역풍 견디고 17대때 재선
전남에서 회생한 5명중 1명으로 능력 인정받아

광주제일고를 나와 서울대법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낙연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기 전 동아일보 정치부기자, 동경특파원, 정치부차장, 논설위원 등 언론인의 길을 걸어왔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문한 이 의원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2004년 민주당 원내대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등을 거치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중략)

주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이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찬성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반대 ▲한미FTA비준 동의안 반대 ▲사립학교법 표결 불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찬성 ▲국가보안법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다.

결정 후 보도문

〈191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남21 2008년 3월6일자 제271호 4~5면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영남21이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참평·영광·장성지역의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의정 실적뿐만 아니라 이력 정치역정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동 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2일자 4면

의결번호	2008자심7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영주신문	(주)영주신문사 /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1-278 대표이사 권 오 섭
심의대상기사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2008년 3월 12일자 6면)	
주 문	(주)영주신문사가 발행한 영주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제552호 6면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영주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및 총선 출마변, 선거공약, 포부 등을 밝히는 출마선언문 전문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주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제552호 6면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및 총선 출마변, 선거공약, 포부 등을 밝히는 출마선언문 전문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마지막으로 지역위해 봉사하고 싶다"

(전략)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832번지에 출생하여 하망동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중앙통신, 천주교교리통신 수료 후 제일고(농고), 경북전문대학, 영남대, 계명대 최고경영자과정, 동양대학

교와 동양대학원 석사과정까지 만학으로 어렵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영세 상인으로 출발하여 철물점, 콘크리트제조 레미콘, 아스콘, 건설 등으로 발전시켜 왔고 봉화, 예천까지 기업 확장 등으로 한국 경영학 학회로부터 경영전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역경에 역경을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활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주부대학, 각종 봉사단체, 각종 체육단체, 각종 농업단체와 각종 동창회 등 열성적인 참여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민선3대 시장선거에도 압승으로 당선되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간승리와 같은 값진 체험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출마의 동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은 좌파정권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한나라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영주시지역발전위원장, 6.3동지회 자문위원(중앙)으로 참여하여 정권교체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0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유학까지 다녀와도 일자리 없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며 특히 우리 영주는 국가로부터 소외되어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과 상업인, 기업인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인구는 크게 감소되고 상경기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에는 영주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철새 정치인들이 모여들어 표를 구걸하는 중앙인사들의 뒷모습은 씁쓸하기만 하고 지역발전은 내가 적임자다 하며 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저 권영창이라도 영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시민들의 올바른 심판을 받고자 상대후보가 누구가 되든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18대국회의원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영주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인근 시군의 발전 속도와 계획을 볼 때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영주도 새롭게 금년을 경제살리기 원년이 되도록 하고, 저! 권영창이 앞장서면 어떠한 일이라도 전국 최고, 최초, 최우수로 만들어왔으며 첫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경험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저! 권영창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속가능도시대상, 3년 연속수상, 바르게살기운동, 주부대학, JC활동 등 전국 최고로 만들어내었으며 전국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초대회장,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노인육묘권 시행 그리고 시장협급모아 좋은 일한 것이라는 약속으로 선거 시 공약한 영어마을을 민간최초 실입하고 오래오래 기억될 화려했던 전국최초 도민체전이라는 개막식, 시집늘백만 책별교부세 200억 이상 확보 등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지역경제도 분명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재임 시 못 다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영광된 미래를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시켜나가며,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약가고시 되도록 추진하였던 소백산주변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는 풍부내륙광역권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또한 국가원로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도의국가 건설을 위해 소수각학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실립위원인 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당선 즉시 정당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당적도 선택하겠으며, 증앙정치인맥과 시장재임 시 정부 각 부처 인맥과 친분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여러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검증되고 인정받는 지역 일꾼과 검증되지 않은 철새정치인들과의 대결이며 낙하산 공천은 지역실정도 모르고 발만 앞세우고 지역발전은커녕 당선만 되면 빌 공자 공약만 만들어내어 시민들을 속이고 속고 하는 출향인들의 발목난 속셔가 되고 있어 행정경험과 경영 전문분을 갖추고 있는 지역실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 그리고 역내외적인 농축산물을 통해 살기 좋고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백산 시대를 만들고 영주에 서천과 풍기에 남원천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데 저! 권영창이가 인생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현명한 영주시민들의 힘으로 후회 없는 지역일꾼을 뽑아 주인 일은 영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시민들의 기쁨에 환한 웃음을 시민들과 공직자와 함께 하여 십승지 중 제일승지가 더욱 살기 좋은 봄으로은 영주로 민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영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창

全文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마지막으로 지역위해 봉사하고 싶다"

• 성명 : 권영창
• 주소 : 영주시 휴천1동 1800번지
• 학력 : 영주중앙초등, 영주중, 영주고, 경북전문대학, 동양대학교, 동양대학교보대학원(경영학석사), 일한국립대학교(명예경영학 박사)
• 경력 : 영주그린국제영어아솔원장(현), 바르게살기경북부회장(현), 사단법고문(현), 소수국학대학원실립위원(현), 한중교류협회부 회장(현), 6.3동지회(중앙회) 자문위원(현), 영주시체육회 민선시장, 경상북도의회 의원, 영주시체육회 회장, 축구협회 회장, 영주청년회의소 회장, 제15, 16대 국회의원 출마, 한나라당 정치대학원 수료, 한나라당중앙상임위원, 제17대 대선한나라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 영주시발전위원장, 한국사과주산지시장 · 군수협의회 초대회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영주시 이산면 용상리 852번지에 출생하여 하망동에서 초 · 중학교를 관입하고 풍양동신, 한중교교리봉산 수료후 제일고(법고), 경북전문대학, 영남대, 계명대 최고경영자과정, 동양대학교와 영양대학원 최시과정까지 만학으로 이렇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으로는 영세 상인으로 출발하여 철물점, 콘크리트제조 레미콘, 아스콘, 건설 등으로 발전시켜 왔고 봉화, 예천까지 기업 확장 등으로 한국경영학 학회로부터 경영전문인으로 인정받기까지 여경에 여경을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활동으로 바르게살기운동주부대학, 각종 봉사단체, 각종 체육단체, 각종 농업단체와 각종 동창회 등 열성적인 참여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민선3대 시장선거에도 압승으로 당선되어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인간승리와 같은 값진 체험을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출마의 동기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은 좌파정권을 엄중하게 단죄하고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한나라당 경북선대위부위원장과 한나라당 영주시지역발전위원장, 6.3동지회 자문위원(중앙)으로 참여하여 정권교체에 앞장서왔습니다.

지난 10년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고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유학까지 다녀와도 일자리 없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며 특히 우리 영주는 국가로부터 소외되어 낙후지역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인들과 상업인, 기업인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지고 공직자들의 사기저하와 인구는 크게 감소되고 상경기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에는 영주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철새 정치인들이 모여들어 표를 구걸하는 중앙인사들의 뒷모습은 씁쓸하기만 하고 지역발전은 내가 적임자다 하며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저 권영창이라도 영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시민들의 올바른 심판을 받고자 상대후보가 누구가 되든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철회하고 무소속으로 18대국회의원에 출마를 선언합니다.

영주의 당면과제는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하며 인근 시군의 발전 속도와 계획을 볼 때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 영주도 새롭게 금년을 경제살리기 원년이 되도록 하고, 저! 권영창이 앞장서면 어떠한 일이라도 전국 최고, 최초, 최우수로 만들어왔으며 첫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경험과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저! 권영창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속가능도시대상, 3년 연속수상, 바르게살기운동, 주부대학, JC활동 등 전국 최고로 만들어내었으며 전국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 초대회장,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노인육묘권 시행 그리고 시장협급모아 좋은 일한 것이라는 약속으로 선거 시 공약한 영어마을을 민간최초 실입하고 오래오래 기억될 화려했던 전국최초 도민체전이라는 개막식, 시집늘백만 책별교부세 200억 이상 확보 등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지역경제도 분명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재임 시 못 다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영광된 미래를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시켜나가며,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로 약가고시 되도록 추진하였던 소백산주변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는 풍부내륙광역권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시키는데 앞장서고 또한 국가원로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도의국가 건설을 위해 소수각학대학원을 설립하는데 실립위원인 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당선 즉시 정당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당적도 선택하겠으며, 증앙정치인맥과 시장재임 시 정부 각 부처 인맥과 친분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여러분!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검증되고 인정받는 지역 일꾼과 검증되지 않은 철새정치인들과의 대결이며 낙하산 공천은 지역실정도 모르고 발만 앞세우고 지역발전은커녕 당선만 되면 빌 공자 공약만 만들어내어 시민들을 속이고 속고 하는 출향인들의 발목난 속셔가 되고 있어 행정경험과 경영 전문분을 갖추고 있는 지역실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 그리고 역내외적인 농축산물을 통해 살기 좋고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백산 시대를 만들고 영주에 서천과 풍기에 남원천의 기적을 만들어 내는데 저! 권영창이가 인생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현명한 영주시민들의 힘으로 후회 없는 지역일꾼을 뽑아 주인 일은 영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시민들의 기쁨에 환한 웃음을 시민들과 공직자와 함께 하여 십승지 중 제일승지가 더욱 살기 좋은 봄으로은 영주로 민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영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창

국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초대회장,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최초로 노인목욕권 시행 그리고 시장 월급모아 좋은 일 하겠다는 약속으로 선거 시 공약한 영어마을을 민간 최초로 설립하고 오래오래 기억될 화려했던 전국 최초 도민체전 야간개막식, 시장능력인 특별교부세 200억 이상 확보 등 무엇이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지역 경제도 분명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재임 시 못 다한 많은 일들을 마무리 짓고, 영광된 미래를 계획했던 비전을 실현시켜나가며,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로 국가고시 되도록 추진하였던 소백산 주변도시의 중심도시가 되는 중부내륙광역권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시키는데 앞장서고 또한 국가 원로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도덕국가 건설을 위해 소수 국학대학원을 설립하는 데 설립위원인 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당선 즉시 정당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 당적도 선택하겠으며, 중앙정치인맥과 시장재임 시 정부 각 부처 인맥과 친분을 통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중략)

우리 영주는 천혜의 자연과 관광자원 그리고 국내외적인 농축산물을 통해 살기 좋고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재임 시 의욕적으로 추진한 소백산 시대를 만들고 영주에 서천과 풍기에 남원천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 저! 권영창이가 인생에서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현명한 영주시민들의 힘으로 후회 없는 지역일꾼을 뽑아 주인 잃은 영주의 자존심을 되찾고 서민들의 기쁨에 환한 웃음을 시민들과 공직자와 함께 하여 십승지 중 제일승지가 더욱 살기 좋은 풍요로운 영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큰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29일

영주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영창

결정 후 보도문

〈19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영주신문 2008년 3월 12일자 제552호 6면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영주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및 총선출마변, 선거공약, 포부 등을 밝히는 출마선언문 전문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31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8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아시아일보	아세아일보(주)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 대표이사 권 기 호
심의대상기사	『〈알려드립니다〉』 (2008년 3월 19일자 1면)	
주 문	아세아일보(주)가 발행한 아시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1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광고 형태 안내문과 관련하여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아시아일보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알려드립니다)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아시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지역)와 관련,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로 볼 수 있고 이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아시아일보 2008년 3월 19일자 1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광고 형태 안내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아시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시 단원구을지역)와 관련,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로써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로 볼 수 있고 이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알려드립니다〉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단원을 후보가 20일 오후 3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박순자 한나라당 안산단원을 **후보<사진>**가 20일 오후 3시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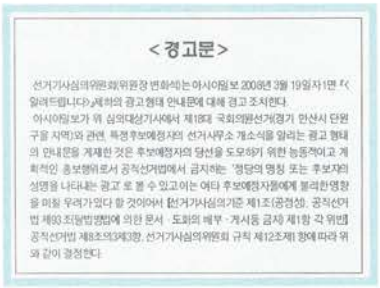
이날 개소식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경기 과천의왕)를 비롯하여 남경필 경기도당위원장(경기 수원팔달),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인천 남동갑), 원희룡 前최고위원(서울양천갑), 최순식 前경기부지사(경기 오산), 고승덕 변호사(서울 서초을), 개그맨 김종석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7217

갖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안상수 원내대표(경기 과천의왕)를 비롯하여 남경필 경기도당위원장(경기 수원팔달),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인천 남동갑), 원희룡 前 최고위원(서울 양천갑), 최순식 前 경기부지사(경기 오산), 고승덕 변호사(서울 서초을), 개그맨 김종석 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03-7217

결정 후 보도문

〈19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섭)는 아시아뉴보 2008년 3월 19일자 1면 「<알려드립니다>」제하의 광고형태 안내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아시아뉴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와 관련, 특정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광고 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한 것은 후보예정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홍보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로 볼 수 있고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한영향을 미칠 우려가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공직선거법 제93조(당법명칭)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정한다.

△ 2008년 4월 16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83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뉴스메이커	(주)경향신문사 /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심의대상기사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2008년 3월 25일자 16~21면)	
주 문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한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25일자 제767호 16~21면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발행되는 주간 뉴스메이커 '목차' 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제목(지역구 배지 도전…)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3월 4일자 제764호 기사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2008자심72 :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뉴스메이커 2008년 3월 25일자 제767호 16~21면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3월 4일자 제764호 기사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2008자심72 :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재심5	결정유형 / 일부인용
재심청구인	뉴스메이커	(주)경향신문사 / 서울시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고 영 재

주 문	(주)경향신문사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뉴스메이커 "박주연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작 면에 별지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재심청구대상기사의 제목(지역구 배지 도전…) 크기로, 본문활자는 재심청구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대상기사에 대해 당 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에 내린 2008자심83결정의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편집방식은 시사주간신문인 뉴스메이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결정사항 중 일부에 대한 변경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대상기사에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한 후 그의 총선 출마소식 및 주요 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만을 유리하게 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재심청구인은 지난 3월 4일자 제764호 기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위원회의 제재(2008자심72 : 경고문게재 결정)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해당 결정사항이 결코 과하지는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재심청구인 매체의 지면 편집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원심 결정의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원회는 게재면을 조정하여 참석위원 전원 일치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주연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지역구 배지 도전 전 여 옥 의원

(전략)

'따르릉~'

"네, 전여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뉴스메이커의…"

"아, 안녕하세요?"

수화기 너머 전 의원의 목소리는 약간 고음으로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다. 평소 토론회나 국회 질의 때 보이는 딱딱하거나 날선 느낌이 아닌 상냥함이 묻은 가벼운 톤이다. 하지만 단번에 인터뷰 요청을 수락하지는 않는다. 즉흥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하는 타입이다. A형 여자. 그는 자신의 성격을 "침착하다"고 표현했다.

전 의원과 인터뷰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전 의원은 사진 촬영 도중 '지역 구민'이라며 인사를 건네는 유권자들을 만나자,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허리를 90도로 굽혀 화답했다. 화사하게 웃는 그에게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전 의원은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한다. 영등포 갑에서 현역의원인 고진화 의원을 물리치고 당의 공천도 따냈다. 이미지로는 강남에서 나올 것 같은 전 의원이 영등포에서 출마한 이유는 뭘까.

"한나라당의 이미지가 강남당 또는 웰빙당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어요. 희생하는 우파 또는 보수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영등포는 양천구, 구로구 등 주변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덜 된 곳이에요.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계천을 만들었듯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등포에서 출마한 이유죠. 또 한 가지는, 어느 지역구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출마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강남에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다는 전 의원은 자신은 '보통사람의 딸'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에 처음 입당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도 '출신'으로 인한 괴리감이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이 누구의 아들 또는 며느리 혹은 사돈의 팔촌이라도 정계 실세나 재계인사와 이래저래 얽혀 있더라고요. 저만 관련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지위가 높건 낮건,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교훈이에요. 부모님은 똑똑한 분들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 집안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적도 있어요. 저도 가난이 뭔지 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늘 자신의 재능을 확신하고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저를 있게 한 토대가 됐어요."

흔히 비례대표를 '은배지', 지역구를 '금배지'라 하지만 전 의원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둘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설명이다.

"17대 국회에서 제가 만약 지역구 의원이었으면 시간의 절반은 지역에 쏟아야 해 정권교체에 온몸을 던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례대표를 독신생활에, 지역구를 결혼생활에 비유해요. 독신일 때는 모든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 쓰듯 정치에 쏟을 수 있지만 결혼하면 남편과 아이를 돌보듯 지역을 챙겨야 하거든요. 하지만 지역민들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죠.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정치와 뜨거운 연애를 했지만 이번엔 지역구에 출마함으로써 전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중략)

전 의원은 누구보다 정권교체를 열망한 인물이다. 그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가 입당 직전인 2004년 3월 SBS '대토론 이것이 여론이다'에 출연, 유시민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은 전여옥이라는 이름 석자를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당시 유 의원이 "어떤 분이 평하기를 노 대통령은 시대정신이 낳은 미숙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 질 것"이라고 말하자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운 뒤에 나와야지"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유 의원은 "매우 비열한 인용방식"이라고 쏘아붙였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팽팽하게 맞선 두 사람의 입심은 논리적이면서도 거침없었다.

△ 2008년 3월 25일자 16~17면

전 의원은 토론한 날 새벽부터 협박 메일과 전화가 빗발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디라도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심정이었고, 마침 최병렬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전화를 걸어와 입당했다고 한다. 더불어 탄핵정국의 판도를 지켜보며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탄핵상황이 진행되는 형국을 보고 이러다가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전 제 아이

를 대한민국에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입당한 거예요. 공중파 TV가 19시간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고 남상우 대우 사장(2004년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에게 3000만 원을 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한강에 뛰어들어 자살)의 빈소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줬어도 언론의 향방과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했어요. TV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강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가장과 그 비참한 가족의 모습을 조명하지 않았어요."

결국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전 의원은 구원투수로 나서 한나라당의 입(대변인)이 됐다. 타고난 영리함과 부지런함 그리고 꼼꼼함과 논리정연함을 바탕으로 당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변인 시절 그는 참모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손수 논평을 작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논평을 낼 만큼 열정적이었다. 기자들과 회식을 하느라 밤 늦게 귀가한 날도 매일 새벽 2, 3시까지 기사를 검색하고 나서야 잠을 잤다. 물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달변가라는 점도 유능한 대변인으로 인정받는 데 한몫 했다.

그의 달변은 방대한 독서량에서 기인한다. 어려서부터 소설부터 과학서적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독(多讀)했다. 대학 시절에는 국가에서 금서(禁書)로 지정한 사회과학 서적들을 열독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학생이던 그는 학보사 편집장을 맡았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나 싶기도 해요. 제가 1980년대에 읽었던 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 후 읽고 있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죠. 당시 일본어로 된 금서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말은 잘 하지 못했죠. 말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KBS 기자로 재직할 때 도쿄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일본어를 구사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어요. 다행히 저는 언어공부를 취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해요. 현재 영어나 일어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불어는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같은 그의 독서 사랑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는 국회도서관에서 책을 가장 자주 빌려

"강남 아파트라고요? 저기선 한 번도 산 적 없어요"

△ 2008년 3월 25일자 18~19면

"정치인, 부유층, 국민도 인식을 바꿔야"

△ 2008년 3월 25일자 20~21면

가는 의원 중 하나로 통한다.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네티즌과 함께 하는 독서모임인 '북클럽'을 운영하고 있기도하다.

잠시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리면 그가 오늘날 왜 대표적인 보수인사가 됐는지에 대한 윤곽이 조금은 드러난다. 그는 "학창 시절 사회문제나 여성문제에 관심이 있었지만 학생운동의 역량에 한계를 느꼈다"고 회고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유신 말기였어요. 당시 많은 친구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제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시절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을 통해 뭔가를 이루고 사회를 변혁시킨다는 게 저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생의 힘에 모든 것을 의존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다변화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에요. 당시 학생운동은 4·19정신의 계승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모든 사회 변혁이 학생들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죠.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많은 친구가 공장으로 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과연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를 느꼈어요. 학교에 있기 괴로워 일단 사회에 나가 현실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겠다고 판단했어요. 자기 성장을 더 치열하게 도모하면서 제2라운드로 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 문을 두드린 겁니다."

신문사 시험에 두 번 낙방한 뒤 1981년 KBS 9기 기자로 발탁됐다. 1991년 방송사 여기자 최초로 특파원이 돼 일본에서 생활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1994년 출판한 저서 '일본은 없다'는 100만부가 판매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었다.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인 친 박근혜 인사로 분류됐으나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 주목을 끌었다. 그 후 박근혜 의원과 전 의원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표(전 의원은 박 의원을 여전히 박 대표로 호칭한다)와 굉장히 각별했어요. 박 대표가 여성 대통령이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박 대표, 이명박 대통령을 떠나 전 정권교체를 강렬히 원했어요. 많은 서민의 어려움을 누가 빨리 해결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죠. 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박 대표는 패배를 깨끗이 승복함으로써 아름답게 승화했어요. 그 경험이 그 분의 인생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믿어요. 차기 대선에서는 꼭 그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대선 전에 비해 떨어졌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3~5% 떨어진 반면 통합민주당의 지지도는 그만큼 올랐다. 전 의원은 "전체적으로는 미약한 움직임"이라면서도 "인수위 활동과 장관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로, 10년 만의 정권교체였다는 점에서 초기의 시행착오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3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열성적인 전 의원이 꿈꾸는 한국사회는 어떤 것일까. 그는 "직장이든 라이프스타일이든 누구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 후 보도문

〈20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식은 뉴스메이커 2008년 3월25일자 제767호 16~21면 '지역구 베지 도전 전여옥 의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뉴스메이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지난 3월4일자 제764호 기사(2008자심의72 : 경고문 게재 결정에 대해 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결정을 불성실하게 이행경고문 게재면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출산 출마소식 및 주요이력, 인생담,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6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며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15일자 목차면

의결번호	2008자심84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금천뉴스	금천뉴스 / 서울 금천구 시흥1동 109-1 대표 김 홍 년
심의대상기사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2008년 3월 17일자 A8면)	
주 문	금천뉴스가 발행한 금천뉴스 2008년 3월 17일자 제172 · 173호 A8면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금천뉴스 A8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중간제목("이목희 의원이 반드시…")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금천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금천구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인사들의 지지발언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금천뉴스 2008년 3월 17일자 제172 · 173호 A8면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금천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금천구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실적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인사들의 지지발언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통합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열려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

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14일, 대통합민주당 금천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목희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금천구 서복성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강금실 전 법무장관, 이계안 의원, 이미경 의원, 박영선 의원, 서혜석 의원, 신국환 의원, 장복심 의원, 장향숙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나이균 예비후보, 김만채 금천호남향우회 회장, 최병순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천구의회 김훈 구의원, 서복성 구의원, 오봉수 구의원 등 주최측에 의하면 7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이목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민주당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쳤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집권 초기부터 오만과 독선으로 부자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서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통해 견제야당, 수권정당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는 금천구는 대표적인 서민정치 1번지"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 몰입식 영어교육, 비리 내각 구성 등 막가는 이명박 정부를 민주개혁구 금천구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목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무도 해내지 못한 금천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 안산선 건설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금천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큰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경제가 살아나는 첨단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도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도시로 금천구를 바꿔나갈 진짜 금천후보 이목희를 지지해달라"고 역설했다.

통합민주당 이목희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열려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 이목희 국회의원

요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인 지난 14일, 대통합민주당 금천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목희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금천구 서복성 구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 강금실 전 법무장관, 이계안 의원, 이미경 의원, 박영선 의원, 서혜석 의원, 신국환 의원, 장복심 의원, 장향숙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참여해 축하했다. 또한 지역에서는 나이균 예비후보, 김만채 금천호남향우회 회장, 최병순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금천구의회 김훈 구의원, 서복성 구의원, 오봉수 구의원 등 주최측에 의하면 700여명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했다.

이목희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통합민주당으로 민주평화개혁세력이 하나로 뭉쳤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집권 초기부터 오만과 독선으로 부자들만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속셈을 드러내, 서민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냉혹한 심판을 통해 견제야당, 수권정당을 반드시 만들어 내자."고 강조했다.

정동영 전 대통령후보 "이목희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강한 추진력을 갖춘 대표적인 서민정치인"

또한 그는 "민주와 정의가 살아있는 금천구는 대표적인 서민정치 1번지"라며 "국민을 무시하고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 대운하, 몰입식 영어교육, 비리 내각 구성 등 막가는 이명박 정부를 민주개혁구 금천구민의 힘으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이목희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아무도 해내지 못한 금천구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신 안산선 건설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하고, 금천구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큰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이제는 경제가 살아나는 첨단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도시,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도시로 금천구를 바꿔나갈 진짜 금천후보 이목희를 지지해달라"고 역설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목희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수배되고 감옥에 가고 일터에서 쫓겨나면서 서민들의 삶과 애환을 같이 해온 대표적인 서민정치인이다."면서 "이목희 의원이 보여준 발군의 의정활동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 서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하루에 한 삽씩이라도 떠서 끝내는 태산을 평지로 만들 만큼 쇠심줄 같이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갖춘 정치인으로 통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후보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을 힘도와만 지지로 국회에 보내 금천구 발전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 정동영 전 대통령후보는 "한국정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을 힘도와만 지지로 국회에 보내 금천구 발전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 이목희 국회의원이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와 김원기 전 의장과 발을을 다짐했다.

▲ 천안식을 마치고 관내 측에 인사들과 함을을 다짐했다.

▲ 이목희 국회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소외된 이웃이 없는 복지도시로 금천구를 바꿔나갈 진짜 금천후보 이목희를 지지해달라"고 했다.

지고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정당, 통합민주당을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목희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특히, 전북 순창이 고향인 나보다 훨씬 호남사람들의 가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헌신해 온 국민통합형 정치인이다"고 소개했다.

특히 정 전 후보는 "지금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공천쇄신의 출발은 이목희 의원이 주도한 쇄신위원회의 당 쇄신안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이처럼 한국정치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이목희 의원을 압도적인 지지로 국회에 보내 금천구 발전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해 온 이미경 의원도 "피감기관이 선정한 최우수의원이 이목희 의원이다. 양극화 해소, 서민경제 활성화, 빈부격차 시정,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이목희 의원이 보여준 헌신은,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노동에 대한 각별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으로 서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책임져 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지를 보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장(보건복지 환경 노동), 전략기획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위원회 집행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 대통합민주신당 쇄신위원 등을 역임했다.

결정 후 보도문

〈205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금천뉴스 2008년 3월17일자 제 172. 173호 A8면 '금천구를 뜸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금천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을 금천구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정당 소속 후보자를 선별하여 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주요 이력, 의정심적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 인사들의 지지발언 등을 관련 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 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7일자 A8면

의결번호	2008자심86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2008년 3월 23일자 10~11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8년 3월 23일자 제554호 10~11면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의 기고문과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현대 2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삐딱하게 바라본…)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구을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2개 면에 걸쳐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고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주간현대 2008년 3월 23일자 제554호 10~11면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구을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2개 면에 걸쳐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삐딱하게 바라본 한국정치 현상

(전략)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좌파세력이 무조건 싫어서 선택한 여당이고 정부인데, 실제로 국민들의 지지와 인기를 내팽개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어느날 일방적으

로 영입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남한에서 축구경기를 개최하기 위하여 인정하겠다고 달려드는 망동을 보이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남한의 태극기와 애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축구경기도 포기하는데,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남북한 축구경기를 위해서 인공기를 남한에서 게양하고 북한 국가를 남한에서 연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몽준은 노무현을 당선시켜서 친북정권을 수립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전력을 잘 살려서 아직까지도 친북 · 반한적(親北 反韓的) 행각을 연출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한다.

좌파성향 정당으로 퇴출시켜야

정몽준 최고위원의 망동은 정상적인 애국심과 자존심이 있는 국민들에게 용납되지 못한 행동이다. 한나라당이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졌다면, 정몽준 최고위원은 반드시 좌파성향의 민노당이나 통합민주당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진 정치인이기는커녕 정상적인 자존심과 판단력을 가진 인간으로도 보기 힘들다.

희생과 양보가 미덕인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정몽준 의원의 일방적 양보는 멍청한 짓인데, 철저한 타산과 주고받기식 정의만 통하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남한의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남한만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남한을 무시하는 공작을 하는 북한의 프락치 이상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국제축구연맹의 원칙에 따라 인공기와 북한 국가를 연주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하는 한국의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분노했다. 그리고 정몽준 협회장의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이러한 노예적 양보는 북한 정권의 남한 국가와 국기 불인정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나 공정한 대응도 아니다.

정몽준의 굴종적 북한 국기와 국가 인정은 좌파세력이 싫어서 묻지마 식으로 지지했던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으로서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정몽준 협회장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칙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북한에 그 FIFA의 원칙을 포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삐딱하게 바라본 한국정치 현상

조 영 완

"남한에서 축구경기 개최 위해 북한 국기와 국가 인정 햄릿인가" 정몽준 최고위원까지 가세 이명박 정부 정체성 흐리게 만들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자존심을 짓밟은 정몽준을 퇴출시키고 현재의 친북행각과 부정부패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추대 없는 정몽준, 한나라 최고위원 · 축구협회 회장직 내놓아야

권력기생 현대그룹 재벌 유지시킨 정몽준의 정신구조 '이리송'

기하지 말고 관철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과 판단을 가진 스포츠맨의 행동이 아닌가? 축구인들이 정상적인 정의와 용기를 가졌다면, 정몽준을 축구협회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남한에 FIFA의 원칙을 적용시키겠다는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북한에 FIFA의 원칙을 강요하지 못했다. 북한 정권의 남한 태극기와 애국가 부정에는 엉거주춤하게 반응하다가, 남한이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축구경기에서 인정하라고 매우 용감하게 나서서 주장한 친북 반한적(親北反韓的)성향을 가진 정치인과 축구인이 바로 정몽준의 실체이다.

북한의 공작원 역할을 수행?

많은 국민들은 이제 정몽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며, 정몽준을 최고 위원으로 영입한 한나라당의 정체를 묻고 있다. 과연 정몽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북한의 공작원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세간의 소문대로 남한에서 활약하는 세계지배 세력의 프락치인가? 북한이 남한의 국기와 국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한만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인정하겠다고 달려드는 정몽준의 실체는 무엇인가?

건국이념을 포함한 이념을 포기하고, 한글을 이등언어로 만들고, 기회주의적 궁몰족과 좌파족을 대거 정부의 각료로 내정하려다가 국민들의 인기와 지지를 잃은 이명박 정부는 이제 북한의 국기와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정몽준 최고위원의 친북 반한적 언동으로 더 정체가 애매모호한 정권으로 의심받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몽준 최고위원에게 엄중한 징계와 경고를 보내야 한다. 국민정서를 이 정도로 파악하지 못한 정몽준 의원은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런 줏대도 배짱도 애국심도 없는 정몽준과 같은 정치꾼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회복된다. 정몽준은 북한 김정일에게 굽신대고 남한 국민들에게 으스댄 노무현과 같은 종류의 친북 반한적 인사가 아닌가? (중략)

한국인 자존심 짓밟아

이념이 지도자의 전략을 결정하는 방향타라면, 타산적 정의는 지도자의 전술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다. 이념과 원칙 그리고 타산과 정의를 잃은 사이비 평화주의자 정몽준은 대한민국의 국리민복에 해로운 몽상한 넋두리를 국민들에게 늘어놓았다.

권력에 기생하며 현대그룹의 재벌을 유지시킨 정몽준의 기생적 혹은 노예적 정신구조가 이번 '북한 국기와 국가를 남한에서 연주하겠다'는 정몽준의 망언에 잘 스며 있는 것 같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자존심을 짓밟은 정몽준을 퇴출시키고 현대의 친북 행각과 부정부패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한국경제와 정의에 제대로 된 실리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결정 후 보도문

〈208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식)는 주간현대 2008년 3월 23일자 제554호 10~11면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동작구을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괴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2개면에 걸쳐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를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13일자 11면

의결번호	2008자심87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중부신문	(주)경북중부신문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41-12 대표이사 김 락 환
심의대상기사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2008년 3월 26일자 1면)	
주 문	(주)경북중부신문이 발행한 중부신문 2008년 3월 26일자 1면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간 중부신문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무소속 김태환…)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중부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 후보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북중부신문 2008년 3월 26일자 1면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중부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부 지역 후보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무소속 김태환 후보 '천군만마'
박근혜 전 대표, 구미생가 방문

구미 을을 필두로 김천, 칠곡-고령-성주에서 불고 있는 무소속 바람이 태풍으로 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지역 정가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근, 지역의 모 일간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구미 을 선거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태환 후보가 한나라당 공천을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무소속 김태환 후보 '천군만마'
박근혜 전 대표, 구미생가 방문

지난 25일 박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맞이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알리는 분향시에도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들만 참석, 자신들을 위해 박 전 대표가 생가를 방문했다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했다.

분향 이후 박 전 대표는 귀경길에 김태환 국회의원과 동행, 가산휴게소에서 5분간의 환담을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김 의원에게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성공, 살아서 돌아오라"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태환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친박 무소속 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공동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받은 이재순 후보에 6% 앞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무소속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김천의 박팔용 후보는 한나라당 이철우 후보에 2배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칠곡-성주-고령의 이인기 국회의원 역시, 한나라당 석호익 후보에 비해 4.3%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지역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 정서가 한나라당 정서임을 감안할 때 다소 변화의 조짐은 있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돌출 변수로 인해 오히려 친박 무소속 후보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가 없은 구미 갑 선거구는 김성조 한나라 후보가 절대적으로 우세한 분위기)

특히, 이 같은 조짐은 지난 25일 박근혜 전 대표의 구미생가 방문과 맞물려 앞으로 지역 정가 분위기를 확실하게 반전시켰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중략)

박 전 대표가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선 출마를 알리는 분향 시에도 친박 무소속 연대 후보들만 참석, 자신들을 위해 박 전 대표가 생가를 방문했다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기도 했다.

분향 이후 박 전 대표는 귀경길에 김태환 국회의원과 동행, 가산휴게소에서 5분간의 환담을 나누

결정 후 보도문

<211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하석)는 본지 2008년 3월 26일자 1면 박팔용,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본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일부 자여 후보별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고한다.

△ 2008년 4월 16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88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경북도민일보	(주)동남일보 / 경북 포항시 남구 해도2동 82-4 대표이사 김 공 가
심의대상기사	-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2008년 3월 31일자 1면) -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구도』(2008년 3월 31일자 2면)	
주 문	(주)동남일보가 발행한 경북도민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면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면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구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북도민일보 1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TK텃밭 관심지역…)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경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TK 텃밭 관심지역'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대구 서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머리컷과 본문내용에서 서로 상반되게 기술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함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북도민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면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면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구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종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TK 텃밭 관심지역'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대구 서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머리컷과 본문내용에서 서로 상반되게 기술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함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대구 서구 / 이종현(한나라) 34.0%,
홍사덕(친박연대) 31.6%
구미을 / 이재순(한나라) 30.3%,
김태환(친박 무소속) 28.6%,
고령 · 성주 · 칠곡 / 석호익(한나라)35.6%,
이인기(친박 무소속) 41.6%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4 · 9총선 D-9 TK 텃밭 관심지역 여론조사

대구 서구
이종현(한나라) 34.0%
홍사덕(친박연대) 31.6%
구미을
이재순(한나라) 30.3%
김태환(친박 무소속) 28.6%
고령·성주·칠곡
석호익(한나라) 35.6%
이인기(친박 무소속) 41.6%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4·9총선 D-9 TK 텃밭 관심지역 여론조사

(4·9)총선이 29일 주말과 30일 3월 마지막 휴일을 기점으로 중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여야 수뇌부가 공식 선거전 첫 주말·휴일을 맞아 전력지역을 찾아 집중공략, 중반 판세 굳히기 유세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텃밭 대구·경북은 친박연대 및 친박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면서 한나라당 아성이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주말 대구경북에 강재섭 대표를 긴급 투입, 친박정서 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4·9총선을 열흘 앞둔 30일 현재 본보가 창간 4주년을 맞아 판세분석을 벌인 결과 상당수 지역에서 친박연대 및 무소속으로 출마한 '친박근혜' 성향의 후보들이 선전하는 등 영남권 민심이반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자체 분석에서도 대구·경북지역 27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 가량을 경합지역으로 분석, 텃밭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친박 성향 출마자는 홍사덕(대구 서구),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상 친박연대), 이해봉(대구 달서을), 김태환(구미을),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이상 친박 무소속연대) 등 5명이나 된다. 무소속 후보인 김광림(안동), 박팔용(김천), 정해걸(군위·의성·청송) 후보도 한나라당 후보를 맞서 선전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번 18대 총선이 '한나라당이냐', '박근혜냐'를 뽑는 선거로 선거구도가 바뀌면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친박후보가 한나라당 후보를 큰 차로 앞서거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산하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구 서구의 경우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가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를 앞서거나, 김태환, 이인기 등 대부분의 현역 무소속 후보들도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3월 31일자 1면

특히 대구 서구에서는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가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대구일보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8일자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49.3%의 지지율로 32.9%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나라당 이종현 후보를 오차범위보다 다소 앞섰다.

또 고령 · 성주 · 칠곡에서도 대구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박계 무소속 이인기 후보가 41.6%의 지지율을 얻어 35.6%의 지지율을 보인 한나라당 석호익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을에서도 친박 무소속연대 김태환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자 중앙선데이 또 25일자 TBC와 영남일보 여론조사(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서는 김태환 후보가 32.8%의 지지율을 얻어 26.8%를 얻은 이재순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이 바람에 강재섭 대표는 대구경북서 사흘째 친박정서 차단에 나섰다. 강 대표는 29일 오전 경북 고령, 왜관, 구미 시장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한나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벌인 데 이어 오후에는 김천역 광장, 상주 중앙시장, 의성 염매시장과 안동 신한은행 앞에서 친박정서를 차단하는 데 힘썼다.

18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4 · 9총선 D-9 구미을 선거구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 구도

朴風어디로

현재 구미을 선거구에는 허주의 동생으로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한 현역 의원 김태환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재순 후보 간 양강 구도를 형성,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격전지다.

이외에도 지난 5 · 3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김경훈 통합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과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최근성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서한구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등 5파전이 불붙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주말 29일과 휴일 30일을 기점으로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표심잡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여성장군 출신이라는 점과 한나라당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태환 후보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공천당시 김성조 의원이 있는 구미갑지역에 공천했으나, 이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구미을지역에 공천을 받으면서 김태환 후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한 치 양보없는 피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태환 후보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운 친박근혜계 인사여서 '친박근혜계 죽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친박 정서를 등에

18대 총선 격전지를 가다
4·9총선 D-9 구미을 선거구

구미지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어느 지역보다 강한 곳이다. 따라서 박근혜 경선도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친박 김태환 전 의원의 지역구로 친박 정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곳이다.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 구도

朴風어디로

현재 구미을 선거구에는 허주의 동생으로 (친박 무소속연대)로 출마한 현역 의원 김태환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이재순 후보 간 양강 구도를 형성,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격전지다.

이외에도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출마한 김경훈 통합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과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최근성 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서한구 평화통일가정당 후보 등 5파전이 불붙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주말 29일과 휴일 30일을 기점으로 중반전에 접어들면서 표심잡기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여성장군 출신이라는 점과 한나라당 후보라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태환 후보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한나라당 이재순 후보는 공천당시 김성조 의원이 있는 구미갑지역에 공천했으나, 이 후보가 전략공천으로 구미을지역에 공천을 받으면서 김태환 후보가 크게 반발하는 등 한 치 양보없는 피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태환 후보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도운 친박근혜계 인사여서 '친박근혜계 죽이기'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친박 정서를 등에

△ 2008년 3월 31일자 2면

업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도 두 후보간의 치열한 각축전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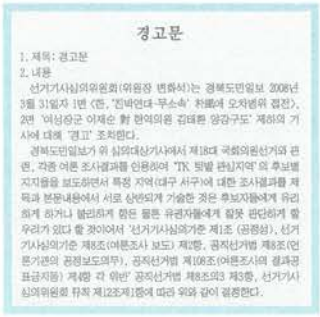
지난 21일 중앙선데이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30.3%의 지지율로 28.6%에 그친 김 후보를 1.7%P차로 약간 우세를 보였다. 투표 확실층에 대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8.4%로 29.4%에 머무른 이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또한 25일자 TBC와 영남일보 여론조사(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에서도 김 후보가 32.8%의 지지율을 얻어 26.8%를 얻은 이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그러나 두 여론조사 모두 후보 등록전에 실시한 것들이어서 후보등록 후 중반전 지역표심이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아직 예측 불허인 상태다.(후략)

결정 후 보도문

〈213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1. 제목: 경고문
2. 내용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식)는 경북도민일보 2008년 3월 31일자 1면 〈전, '집박연대-무소속' 차별에 오차범위 접전〉, 2면 '여성장군 이재순 野 한의의원 김태환 양강구도'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각종 여론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TK 텃밭 판심지역'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정 지역(대구 서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목과 본문내용에서 시로 상반되게 기술한 것은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함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4월 15일자 1면

의결번호	2008자심89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수도권일보	(주)수도권일보사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39-3 대표이사 강 신 한
심의대상기사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2008년 4월 1일자 13면)	
주 문	(주)수도권일보사가 발행한 수도권일보 2008년 4월 1일자 13면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수도권일보 13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한나라당, 人心의 동태를…)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풀이를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등을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3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수도권일보 2008년 4월 1일자 13면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풀이를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등을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여과 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사실보도) 제3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18대 총선 각 당 대표주자들 성명과 당명풀이〉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한나라당, 人心의 동태를 예의 주시 할때

통합민주당, 주변정리와 마음 안전시킬때
자유선진당, 상승운 화합의 길 모색 할때

지난 1월 1일자 언론 국운기사를 통해 한나라 공천파동의 소용돌이와 민주당 합당 17대와 달리 기성정치인들의 대거 당선율과 각 당 젊은 신진후보들의 대거탈락을 예견한 한국국운연구소장이자 성명학자인 이상현 박사를 통해 각 당의 대표주자들의 성명과 당명(黨名)풀이로 향후 총선전후의 운세판도 및 정계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중략)

〈한나라당〉
人心의 동태를 예의 주시 할 때

한나라당은 대통령선거 압승의 탄력과 높은 당지지도와 더불어 상반기 상당히 강하고 유리한 호운인데 공천불만의 후유증과 새 정부의 독선적 이미지 부각과 함께 약 30석 정도를 당초보다 잃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애당초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과반수 턱걸이를 겨우 넘긴 145~155석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당외 당선자를 흡수해 결국 과반 이상 안정의석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3월말에서 4월 5일까지 표심 지지율 하락조짐 보인다. 6일부터 선거일까지 반등을 할 기운이다.

4월 중순부터 당의 안정을 찾게 되며 5,6,7,8월 지지율상승과 의원 입당자와 협조자가 생기고 순조로운 행진을 하게 된다. 9월에서 4분기 사이 당내 계파 간 내분이나 스캔들이 터지고 정책적 저항으로 고뇌에 빠지는 시기.

총선 후 강재섭(姜在涉) 대표는 사퇴하고 다음 직위를 기다릴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서 무성하게 거론되는 박근혜(朴謹惠) 후보의 선거후 탈당과 창당예측설은 박근혜후보 스스로 고민은 하겠지만 오히려 4월 중순부터 위축된 입지를 벗어나서 8월 사이 당권은 물론 아주 강한 전화위복의 최상의 운을 맞이할 것이며 4분기는 힘들고 불안정하고 불리한 시기.

〈통합민주당〉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전시킬때

비교적 한나라당보다 공천 불만은 적은 가운데 선거결과로 성공한 공천이란 평을 듣게 될 것이다.

당초 목표의석 70석도 가능할까 했는데 85~95석 사이에서 당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5월부터 3분기는 정부여당의 정책과 대치견제하면서 어려움 예상되고 당내 불만적 내분도 염두에 둬야 한다. 4분기는 호운을 만나 안정적 정치순항을 하게 된다.

손학규(孫鶴圭) 대표는 정치1번지라 할 수 있는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한나라당, 人心의 동태를 예의 주시 할때
통합민주당, 주변정리와 마음 안전시킬때
자유선진당, 상승운 화합의 길 모색 할때

종로구에서 한나라당 박진(朴振) 후보와 힘겹게 격전을 벌이고 있으며 3월말에서 4월 5일 사이 좀처럼 표심이 살아나지 않는다. 이 시기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반기 형통 대길한 시기이지만 4월부터 지지율이 상승하므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쉽지는 않을 전망이나 총선 후 비교적 당의 선전을 평가받으며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어 갈 것이나 8월 중순 후 하반기는 반대계파 또는 배신자들을 경계할 시기.

〈자유선진당〉

귀인이 도우니 화합의 길을 모색 할때

자유선진당 및 기타 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와 선진당은 충청권과 중부 일부에서는 선전하겠으나 예상목표 50석은 물론 원내 교섭단체 의석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과 이회창 총재는 4월 5일부터 표심이 살아나며 2분기 3분기는 형통한 운으로서 보수결집의 기회가 올 것이며 상승운을 맞이하겠다. 8월과 하반기는 당내 어려움 분리발생시기.

친박연대 등 무소속의원들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며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

박진(朴振) 후보는 4월 5일부터 소폭의(-3% 내외) 지지율 변화를 줄 것이다. 당선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인다.

오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춘다면 앞으로 몇 년 내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서울 종로구와 함께 이번 선거의 최대의 관심지역이자 이슈지라 할 수 있는 서울 동작구을.

두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鄭東泳) 후보와 정몽준(鄭夢準) 후보와의 싸움이 볼 만하다. 개인 자신은 물론 소속당의 간판격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정동영 후보는 3월 24일부터 4월 5일 사이 운기가 살아나서 지지율이 상승하겠는데 이 때까지 정몽준 후보를 +3% 추월하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6일부터 운기가 쇠해지기 때문에 매사 경거망동 스캔들 주의 시기.

4월 중순에서 7월까지 주변여건과 정치적 어려움 예상. 하반기는 매사 형통으로 새로운 시작의 시기이다.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상반기는 형통대길하고 하반기는 경영이나 정치환경 모두 어려움이 예상되며 후퇴하는 운기.

이번 선거판세는 정동영 후보와 반대로 3월 하순과 4월 5일까지 지지율 변동시기이고 6일부터 상승운으로 박빙 접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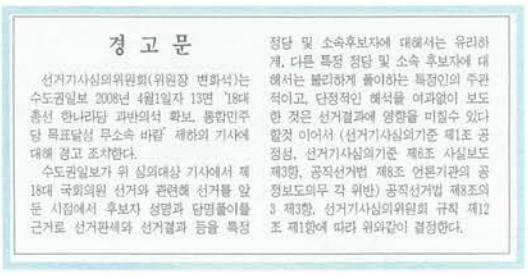
정동영 후보에 4월 5일까지 -3% 이상만 뒤지지 않으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 6일부터 상승 운이다.

문국현(文國現) 후보의 당선은 확실하며 타당과 연합전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대한성명학 회장

결정 후 보도문

〈21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수도권일보 2008년 4월1일자 13면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합니다.

수도권일보가 위 심의대상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 성명과 당명을 이를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 등을 특정 정당 및 소속후보자에 대해서는 유리하게, 다른 특정 정당 및 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풀이하는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여과없이 보도한 것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할것 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6조 사실보도 제3항,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 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같이 결정합니다.

△ 2008년 4월 16일자 13면

의결번호	2008자심90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언 론 사	월간 말	(주)월간 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대표이사 윤 원 석
심의대상기사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2008년 4월호 84~87면)	
주 문	(주)월간 말이 발행한 월간 말 2008년 4월호 84~87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 결정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월간 말 84면에 별지 기재 「경고문」을 상자기사로 1회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부제목(진성호 중랑을 한나라당…) 크기로, 본문활자는 심의대상기사의 본문 크기로 한다.	
이 유	월간 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랑구을지역)와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자만을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간 말 2008년 4월호 84~87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간 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랑구을지역)와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자만을 선별하여 그의 주요 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4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의결번호	2008재심6	결정유형 / 기 각
재심청구인	월간 말	(주)월간 말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대표이사 윤 원 석

주 문	이 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이 건 기사의 게재는 언론사 자체의 고유 편집 권한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위원회가 지적하듯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이루어진 인터뷰 기사'라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역시 내부 편집 기준에 맞춰 독자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다룬 것으로 이를 '부각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기사와 관련한 2008자심90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이 인터뷰기사를 기획하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재심청구인의 고유한 편집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보도와는 달리 선거보도는 그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이 막대함을 고려할 때 특정 후보만을 선정 보도하게 된 계기와 시의성이 충분하였다 하더라도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재심청구인은 이 건 관련 4월호와 선거관련기간에 발행된 그 전호까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일지역구 여타 후보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전혀 다루지 않았고, 설령 5월호에 다룬다 하더라도 5월호의 기사는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그 직접성도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고유 편집권한'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해당 기사가 선거에 미치게 되는 파급력을 고려하고, 선거보도에 요구되는 고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그 제한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이건 관련 기사를 편집 보도한 재심청구인에게 선거보도가 갖춰야 할 공정성 및 형평성 준수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음을 재차 인정하고 원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인터뷰 / 진성호 중랑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한나라당의 정치신인이자 MB측근인 '턱수염' 진성호가 과연 5선의 통합민주당 김덕규 의원을 제치고 중랑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성호(46) 후보는 62년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문화부 기자를 거쳐 인터넷 뉴스 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하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총선 공천에서 중랑을 지역에 낙점됐다.

18일 오후 진성호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 있는 중랑구 묵동을 찾았다.

진 후보를 직접 대면하자 너무 놀란 사실은 대통령 당선자 앞에서도 깎지 않았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턱수염을 말끔히 밀었다는 것이다. "와이프와 딸이 이제 공직에 나서려면 수염 깎아야 한다고 해서… 또 중랑구 정서도 있고… "라고 말하며 진 후보는 수염이 있던 자리를 쓰다듬었다.(중략)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많은 서울 다른 지역이나 고향인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

역이다. 그런데 정치 신인으로서 서울지역도 생각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남자가 정치를 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이 떨어졌던 지역에서 시작하면 그 지역은 확실히 내가 일군 것이 된다. 그래야 말발도 서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신인으로서 위험성이 있지만 해보라고 해서 1순위로 꼽은 지역이 중랑을"이라고 말했다.

MB측근에 대통령 선거 동안의 공로가 있어서 그랬을까?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완승하면서 국회의원 되기보다 지역구 공천 받기가 더 힘들다는 소문 속에서도 2월 29일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1차 공천 내정자를 발표할 때 진 후보는 당당하게 중랑을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총 11차에 걸쳐서 지역구 공천 내정자를 발표했었다.

진 후보는 MB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부터 같이 일하기 시작해서 대선 후보가 된 이후 인터넷 미디어 팀장으로 선본에서 일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 후보는 "2006년 말부터 이명박 캠프에서 같이 일하자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자생활이 좋다고 계속 거절했었다. 2007년 7월경에 캠프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때가 이명박 후보가 위장전입 사건이 터져서 처음으로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을 때다. 그때 이동관 대변인, 전여옥 의원, 김덕룡 의원 등과 함께 시리즈로 들어가게 되었다"며 "그때는 아무생각 없이 10년 만에 정권교체 해보자 이거였으니까 12월 19일까지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이겼고 그 이후 원래 비서실 들어오라고 했는데 내 성격이 비서체질도 아니고 심지어는 MB한테 대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내 전문성이 문화, 언론, 미디어, 문화 컨텐츠 쪽이라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자 해서 인수위 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후 진 후보는 청와대 문화비서관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역시 비서관 체질은 아니었나 보다.

조선일보에서 인터넷뉴스 부장을 역임하면서 미

인터뷰

진성호 중랑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한나라당의 정치신인이자 MB 측근인 '박수영' 공보보좌관의 5선의 통합민주당 김재균 의원을 제치고 중랑을 지역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성호(49) 후보는 02년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금융부 기자를 지낸 인터넷 뉴스 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팀장으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공을 세웠고 대통령직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전문위원으로 한 달간 활동하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 신청에서 중랑을 지역에서 나설 뜻을 밝혔다.

18일 오후 진성호 후보를 만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 있는 중랑구 묵동을 찾았다.

선 후보를 직접 대면하자 너무 늦은 사십은 대통령 당선자 앞에서도 작지 말았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직수염을 말끔히 밀었다는 것이다. "외이프와 맡이 이제 공작에 나서려면 수염 깍아야 한다고 해서... 또 중랑구 정서도 있고..."라고 말하며 전 후보는 수염이 일면 자리는 스타 듯했다.

서울 중랑을은 상봉1동, 중화동, 묵동, 망우본동, 신내동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경기도 구리와 접해있고 산업시설 없이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이루어졌다. 중랑을 지역에 대해 진 후보는 "서울지역 지도를 펴놓고 보면 정동의 위치는 좋은데 상대적으로 발전은 안 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 평균인 53.9%보다 떨어지는 30.0%로 나와 있다. 이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의 29.1%를 제외하고 전국의 실정이다. 지역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그것에 국회의원 타성도 분명해 물어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노원구에 기반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학원들도 들어서고 베드타운으로서 안정감이 있는데 이 동네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낙후 되었다. 2003년에 중화동 일대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단데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공적사업을 잘 나간다.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은 5선의 통합민주당 김재균 의원이다. 김 의원은 국회부의장까지 역임한 거물 정치인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지지세력이 많은 서울 다른 지역이나 고향인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가에 대해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지역은 공천만 받으면 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정치 신인으로서 서울지역도 생각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남자가 정치를 하려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이 떨어졌던 지역에서 시작하면 그 지역은 확실히 내가 일군 것이 된다. 그래야 말발도 서고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신인으로서 위험성이 있지만 해보라고 해서 1순위로 꼽은 지역이 중랑을"이라고 말했다.

MB 측근에 대통령 선거 동안의 공로가 있어서 그랬을까?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완승하면서 국회의원 되기보다

△ 2008년 4월호 84~85면

디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진 후보는 처음 인터넷뉴스부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 "신문은 과거에는 인터넷을 부정했었다. 그런데 현실이 되어버리니까 부정할 수 없어서 조선일보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당시에 '디조'라고 디지털 조선일보에 맡겼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정보교환도 안 되고 획일적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사내에 인터넷을 다루는 부서를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터넷뉴스부(조선 닷컴)다. 젊은 기자들을 뽑아서 운영했는데 내 이미지가 유연해보이고 (턱수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에도 아이디어, 기획 쪽을 많이 해서 인터넷뉴스부장이 되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진 후보는 인터넷뉴스부로 가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조선닷컴은 매우 엄숙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치뉴스 등은 안 먹혔다. 인터넷 유저들하고 신문독자들 분석해보니까 겹치는 부분 있지만 많이 달랐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나 연예 등 사회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올렸지만 종이신문에서는 안 썼다. 예를 들어 영화배우 이은주 자살 사건 같은 경우 톱을 올린 정도가 아니라 관련기사를 20개 정도를 한꺼번에 올렸다. 회사에서는 난리가 나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장한테 불려가서 설명했더니 이해하시고 했다."

그러다 인터넷 뉴스의 장점이 발휘되는 사건이 있었다. "5.31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테러 사건이 있었다.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어서 신문이 안 나오는 날이었다. 정치부 후배가 전화해서 알려줬다. 사회부기자 때의 정신이 발동해서 일단 우리가 인터넷으로 쓰자고 해서 사회부에 전화해서 서대문으로 가라하고 세브란스 병원에 붙으라고 했다. 우리는 인터넷용 기사만 쭉 만들어서 계속 올렸다. 그랬더니 중앙일보에서 난리가 났다. 당시 홍석현 사장이 왜 우리는 안 했냐고 호통을 쳤다고 한다. 그 사건이 신문사 인터넷 부분에 상당한 자극을 주었다."

△ 2008년 4월호 86~87면

이렇게 미디어의 발전은 계속되었는데 진 후보는 앞으로 미디어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신문도 언젠가 방송을 해야 한다. 지금은 법이 안 좋아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안할 수가 없다. 세계적 추세고 우리만 안하고 있다"며 신문 · 방송겸업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 후보는 조선일보 재직시 '갈아만든 이슈'란 동영상팀을 운영했고, 케이블 채널 준비도 했었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제시한 언론정책에서 신문법 개정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됐던 것이 바로 방송겸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언론이 재벌에 의해 장악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를 했다. 이에 대해 진 후보는 "신문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다양한 윈도우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공중파와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공중파는 채널수가 한정되어 있어 신문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위헌적인 문제도 있는데 아예 못하는 거와 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것은 다르다. 조선일보도 뉴욕타임즈처럼 방송해보다가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면 철수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언론 문제를 이야기하다보니 이번 한나라당 공천에서 조선일보 출신 기자가 4명이나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서 고도의 중립성을 요하는 언론인이 정계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대해 물어봤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경제부 기자가 취재원의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하면 문제가 되지만 저는 정치부 기자 근처에도 안 가봤고 기자를 하다가 바로 공천 받았던 것도 아니다"며 그런 비판은 이해되지만 자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문광위에서 일하고 싶다는 진 후보는 문화정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인수위 때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창작하는 사람들 즉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이 너무 강해 컨텐츠를 아주 헐값에 쓰고 있고, 또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사들이 만든 컨텐츠를 싼값에 틀고, 음반유통시장은 자신의 저작권 70% 이상을 도둑질 당한다"며 "창작하는 사람, 컨텐츠 만드는 사람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컨텐츠가 발전하는데 한국은 유통계를 장악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돈을 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어떤 식으로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법, 인력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한다. 심지어 마피아도 자기상인들의 권리 보장하고 돈 뜯는데 세금도 받는 정부가 최소한의 그걸 못해주냐"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단 지역에서 당선되어야 하는데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진 후보는 "지금까지 제일 많이 만난 분들이 학부모들이다. 이 지역 특성은 학부모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다. 학원이 없어서 다들 중계동, 노원구로 학원을 간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문화시설이 참 부족하다. 그래서 교육공약 몇 개 준비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문화와 관련해서 엄청난 시설을 들여오려고 추진하고 있다. 내가 내세울 것은 MB랑 같이 일했고 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이 정부와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MB의 특징인데 '액션'을 해야 한다. 지역 발전에 대한 진도가 너무 늦다.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두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화끈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신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물었다. "참 이상한 것이 공천 받으니까 소위 정치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내 밑에 몇 표 있다 또는 시의원, 구의원 공천 몇 개 주면 표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정치 신인이고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조건 거는 것은 절대 안한

다. 만약 처음 시작하면서 누구한테 발목 잡히고 이렇게 당하면 영원히 내가 하고 싶은 정치 못한다 제발 꺼져라라고 말했다. 이런 것은 어디나 다 있는 일일 것이다. 정치판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나 애매하다. 그런 것은 팍 끊으려고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록의 5선 의원과 MB 측근이자 언론인 출신의 정치신인이 어떠한 대결을 벌일지 중량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정 후 보도문

〈220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고문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월간 말 2008년 4월호 84~87면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월간 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랑구을지역)와 관련,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집기획기사를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자만을 선별하여 그의 주요이력, 재직 시 실적, 정치적 포부,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4개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2조(특집기획기사),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6월호 84면

2. 경 고

의결번호	2008자심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울산매일	(주)울산매일신문사 / 울산 남구 삼산동 1488-4 대표이사 정 길 남
심의대상기사	- 『당권경쟁 '다크호스' … 최고위원 물망』 (2007년 12월 21일자 3면) -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2007년 12월 24일자 3면)	
주 문	(주)울산매일신문사가 발행한 울산매일 『당권경쟁 '다크호스' … 최고위원 물망』(2007. 12. 21자 3면),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2007. 12. 24자 3면)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울산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특정 정당 입당 후 행적 및 향후 정치행보에 대해 지극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기사를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3조(객관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이명박대통령만들기…정몽준의원 '위상 껑충'
당권경쟁 '다크호스' …최고위원 물망

BBK사건 요동속 막강한 버팀목
'입각설'에 '포스트이명박' 관측도

지난 12월 3일 한나라당 입당 이후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일등 공신인 정몽준(동구) 의원이 급기야 당권 경쟁의 다크호스로 부상하는 등 주가가 치솟고 있다.

정 의원은 무소속 이회창 후보 출마와 BBK 주가조작 의혹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 씨 귀국 등으로 정국이 요동칠 때마다 경선승복이라는 원칙에서 한 치의 벗어남 없는 행보를 보여 사실상 이 후보의 가장 막강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이후 정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자 이 당선자와 함께 전국을 누비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말을 잘 못하는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정 의원은 재치있는 순발력과 유모를 겸비, 유세장을 웃음바다로 몰아넣는 등 분위기 메이커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이다. 또 지난 2002년 대선 유세 때와는 달리 이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진행된 18일 밤 서울 청계천 유세에는 이 후보와 정 의원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어깨춤도 선사했다.

이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19일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상황실에서는 한나라당 관계자들도 정 의원에게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 후보가 앉을 상황실 맨 앞줄에 '얌체족'들이 대거 포진하자 당 관계자들은 별도 맨 앞줄을 마련해 이 후보 옆에 정 의원을 앉힐 정도로 신경을

쏟았다. 이어 도착한 이 후보는 정 의원을 포옹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 의원의 당내 입지는 상당히 탄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당 대표에 정 의원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의 경우 당장 당내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5선 의원이지만 '정당정치' 경력이 일천하고, 정 의원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원측도 20일 "대가를 바라고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 의원은 경쟁하는 것보다는 대외 활동면에서 역할이 주어지면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최고위원직 또는 차기 내각(외교통상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당장 당권 경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울산 정치권의 '맹주'에 이어 결국 5년 뒤인 '차기대선'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막판 정권창출의 공신으로 한나라당에 뿌리를 내려 차기 대선까지 장기 승부를 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원충원 울배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오전 정몽준 의원 등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들과 당선 및 입원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 참배하고 있다.

■ 이명박대통령만들기…정몽준의원 '위상 껑충'

당권경쟁 '다크호스'…최고위원 물망

BBK사건 요동속 막강한 버팀목
'입각설'에 '포스트이명박' 관측도

△ 2007년 12월 21일자 3면

■ 한나라 시당 '이명박 대통령만들기' 어떻게 했나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대선의 큰 파도가 지나갔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경선과 대선의 격랑을 헤쳐오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온 힘을 기울였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까지 시당 당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표밭 다지기에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만큼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의 밑그림을 살짝 들여다본다. 〈편집자 주〉

54%지지 얻어 역대 최고 득표율
막판 정몽준의원 입당등 큰 영향
각당 겉으론 평온…물밑 힘겨루기 돌입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기까지 경선 과정은 말 그대로 치열한 싸움판이었다.

경선 당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 4명 가운데 정갑윤(중구) 의원을 제외한 최병국(남갑) 김기현(남을) 윤두환(북구) 의원이 이명박 경선 후보를 지지했다. 세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승산이 없었지만 투표 결과는 예상 밖으로 정갑윤 의원 혼자 고군분투하며 지지를 호소한 박근혜 전 대표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전국적으로 울산 중구가 뉴스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때 이야기가 분분했다.

그러다보니 지역 국회의원들의 심기가 결코 불편하지만은 않았다. 어딘지 어색하고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감출 수 없었다. 그러나 경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패인 골은 8월 19일 전당대회에서 패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아름다운 승복으로 곧바로 메워졌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정갑윤 의원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시당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좌장격인 최병국 의원이 맡고 윤 위원장에게는 총괄위원장 소임이 주어지는 틀로 인선이 이뤄진 가운데 불평 없이 정권교체의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냈다.

더욱이 중앙당 차원에서 대선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구에서 노력한 결과를 제18대 총선 공천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한 만큼 의원들의 활약상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였다.

어느 누구도 몸을 사리지 않고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다.

■ 한나라 시당 '이명박 대통령만들기' 어떻게 했나

국회의원 헌신적 표밭갈이 성과

54%지지 얻어 역대 최고 득표율

막판 정몽준의원 입당등 큰 영향

각당 겉으론 평온…물밑 힘겨루기 들입

△ 2007년 12월 24일자 3면

그런 가운데 대선 막바지(12월 3일)에 지역 최다선 의원인 정몽준(동구) 의원이 한나라당에 입당하고 그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에 몸담고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한나라당에 가깝다는 평을 줄곧 들어온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탈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도 역대 어느 대선보다 높은 54%의 지지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정몽준 의원의 역할이 커진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가 지난 8일 울산을 방문, 거리유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울산은 정몽준 의원 중심으로 열심히 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정 의원에게 당부한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 의원의 입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뤄졌지만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울산시민들로부터 역대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54%의 지지를 얻게 돼 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슴 뿌듯하다"고 총평한 윤두환 시당 위원장은 "정몽준 의원이 대선 전에 입당해 분위기를 띄우는 데 일조한 것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대선은 끝났지만 지역 정가에는 대규모 쓰나미가 밀려올 징후가 짙다.

겉으로는 평온한 지역 정가, 10년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하는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지역 정가가 저마다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속을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이미 시작돼 벌써부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결번호	2008자심3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주간현대	(주)펜그리고자유 / 서울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심의대상기사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2007년 12월 30일자 76~77면)	
주 문	(주)펜그리고자유가 발행한 주간현대 2007년 12월 30일자 76~77면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주간현대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부산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소속 정당의 향후 국정 정책방향 및 그의 약력, 성과, 정치적 소신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집중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

이슈 정치인 인터뷰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

김무성(부산 남구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대선을 기점으로 당 추스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선의 김 최고위원은 겉으로 풍기는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추진력과 돌파력을 갖춘 실리형 용장, 실무형 지장이라는 평을 얻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재야부터 시작해 청와대 민정 · 사정비서관, 내무부 차관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보수 정치판의 맥을 짚고 있는 뉴 리더로 인정받고 있다.

-대선이 끝났다. 앞으로의 정국 전망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치러졌다. 우리 한나라당은 유력 후보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선거, 공작정치, 네거티브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재외국민도 모두 함께 참여하는 국민적 여망과 시대적 소명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현안에 대한 이견 등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패자는 깨끗하게 승복을 하고 또 승자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승자의 아량으로 패자의 입장을 위로하고 반대파에 대한 배려로 서로 화합을 함으로써 평상시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가 되는 성숙한 선진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변화가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필요하고 공통분모가 무엇인지 찾아내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의 공동체는 흔들리고 있다. 편가르기식 패거리 정치, 야당과 언론에 대

한 적대정책이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다. 탕평책을 펼쳐 인재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국내 기업마저 몰아내는 잘못된 정책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실업률을 낮추고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 미관계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는 현금 베이스로 들어온 미국 자금이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 이 같은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위상이 강화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을 개발, 일부는 이미 국민 앞에 제시했다. 앞으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절차와 단계를 밟아 시급한 것부터 먼저 차례차례 해결하면서 추진력과 지속성 있는 정책 시행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중략)

-침체된 경제 재건을 위한 대안은.

▲IT · NT · BT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강력하게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해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들고, 국내 기업마저 몰아내는 노사문화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선진 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법질서를 엄격하게 지켜 사회정의도 확립해야 한다.

미래형 신산업 전략 육성에 정부 · 재계 · 학계 · 노동계 · 정치권 등 사회 각층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여야를 초월해 정치권 모두 앞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국민이라는 실제 수요자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을 공급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새로 가동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얼마 전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안을 제안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중략)

평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위상에 맞는 역할과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당시 UN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나라였지만, 현재는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발전했으며, 이제는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받는 국가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UN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UN의 PKO 활동은 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다. 다목적군 활동과는 달리 UN헌장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설치하고 UN이 주체가 되어 운영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법적 ·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활동이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법률의 규정 범위를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거 설치되고 유엔이 직접 통제 및 예산 부담하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한정하여 다국적 군을 제외했고,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회 사전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350명의 범위 내에서 익년도 부대파견 계획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는 경우, 위험도와 논란의 여지가 낮은 임무의 PKO로 파견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00명 이하 소규모 파견의 경우 최대 3년 단위 최초 파견과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고, PKO 참여에 대비하여 상비부대를 설치 · 운영하여, 향후 우리의 유엔 상비체제 참여수준 격상에 대비하도록 했다.

-6 · 25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6 · 25 한국전쟁 당시 8만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들이 납북되었지만 반세기가 더 지난 지금까지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납북인사들의 가족들은 수십년 동안 사랑하는 이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국가로부터는 보호와 지원보다는 각종 감시와 통제에 시달렸다. 납북자는 법률적으로 국가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이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아직까지도 납북자들의 행방이나 생사확인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납북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역시 전후 납북자 문제와 함께 6 · 25전쟁 당시의 납북자와 가족 문제에 대해서 반세기가 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 남북한 간의 인식차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정부가 납북자들이 강제 납치되었다는 사실적인 근거를 북한에 제시하여 북한을 설득시키고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동시에 정확한 실태파악, 관련법 제정과 납북자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각종 국제법적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인권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영호남 화합을 위해 정당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영호남의 화합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지역적 기반이 아닌 정치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당이 좀더 적극적으로 호남을 안을 수 있는 지역 통합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당 주요 당직에 능력 있는 호남출신 인사를 픽업해 기용하는 등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일정 부분을 호남출신에 보장하는 등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당의 안정적 운영과 결속 강화를 위해 당내 중

진의 역할론을 강조했는데.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끈끈한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는 평소 덕망이 있고 경험이 많은 당 중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고 활력 있는 신진 의원들 옆에서 잘할 때는 맏형처럼 격려하고 지원하고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할 때는 조언과 따끔한 충고를 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무성은 누구?

그는 친화력이 강해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지키는 스타일로 지인들 사이에서 의리파로 통한다. 인맥을 관리할 때 말보다는 스킨십을 중요시한다. 김 의원은 사업을 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이 닿아 정치에 입문했다.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분방함과 직관적 판단력과 상대적 유연성이라는 융통성 있는 꼼꼼한 실무형 스타일은 그를 선이 굵은 정치인으로 평가받게 했다. 그는 패션모델 전문기업 모델라인이 선정한 올해의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정치부문에서 수상자로 선정되는 등 의상 감각도 뛰어난 신사풍의 정치인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재경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5년, 박 전 대표가 당 사무총장을 제안하자 임기를 중단하고 자리를 옮겼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아 사실상 좌장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측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이 후보를 돕는 게 대의명분에 맞다며 적극적인 화합을 주문했으며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이 전 총재 출마 반대를 선언하고 박 전 대표를 설득해 이 전 총재의 출마가 정도는 아니라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의결번호	2008자심4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중부일보	(주)중부일보 /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 대표이사 임 재 율
심의대상기사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2008년 1월 8일자 25면)	
주 문	(주)중부일보가 발행한 중부일보 2008년 1월 8일자 25면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중부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양평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그의 의정실적 및 향후 계획 등을 3컷의 인물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양평지역 각종 규제 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

정병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지난 2000년 정치활동에 입문해서 16~17대 국정에서 맹활약을 해왔다. 현재는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성특위위원과 새정치수요모임 등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를 만나 정치 고향인 양평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고 10년 만에 되찾은 여당 의원으로서의 활동계획도 들어본다.

지자체장과의 유기적 공조로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

지역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정치후배 키울것

-16대와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데 가장 큰 요인이 어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처음 도전했던 16대의 경우 전임자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17대 때도 제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16대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선된 뒤에 선거 지역구인 양평과 가평의 단체장 선거 과정에서 공천 후유증이 엄청난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 '정병국 의원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국 그러한 부분이 여론을 악화시켰다고 봅니다. 조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 중 반드시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지역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조가 필요합니다. 양평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3~4월에 단체장, 군 의원, 도 의원이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편성해 5월에 도로 넘겨 확정되면 6월 중앙부처로 올라갈 때까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에만 최선을 다해도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역을 위해 신진 정치인을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 정치를 이끌어갈 후배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를 믿고 신뢰해 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는 세력이 많아야 합니다.

당내에는 소위 소장파라고 불리죠.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대통령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 이명박 당선자를 만드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운하공약이 양평군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양평 · 가평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그 이유가 대운하 공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평지역은 근본적인 취수원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법개정을 올려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반대하며 뭉치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은 양평지역의 취수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리 생태신도시를 만든다 해도 수도권 규제 때문에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들을 뛰어 넘으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자연 환경과 어우러진 명품 신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문화, 관광, 자연, 생태가 어우러져 있는 친환경적 관광도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

지자체장과의 유기적 공조로 지역 예산 확보에 최선

지역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정치후배 키울것

의결번호	2008자심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충청일보	(주)대한뉴스공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4 대표이사 이 규 택
심의대상기사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2008년 1월 16일자 18면)	
주 문	(주)대한뉴스공사가 발행한 충청일보 2008년 1월 16일자 18면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충청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청원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를 통해 그의 약력, 공직재임 시 추진실적, 향후 계획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 서규용 전 농림부차관 인터뷰

날로 의미가 높아지고 있는 쌀 농업 직불제와 농작물 피해 보험제도 도입에 큰 족적을 남긴 장본인이 충북 청원군 출신으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전 농림부 차관을 지내고 농촌발전에 기여한 서규용 씨(59 · 한국농어민신문 대표)는 비록 현재는 공직을 떠났으나 아직도 농업에 많은 애정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서 전 농림부 차관은 충북 청원군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기술고시에 합격한 후 26세의 나이에 농산물 파주검사소장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에 발을 들여 논 이후 신념과 청렴결백의 신조로 더불어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한 평생 노력을 기울였고 지난 2002년 농림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서 전 차관은 특히 농림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남다른 열성과 노력으로 많은 일을 했다. 농림부에 있는 동안 일이 많기로 소문난 채소과장, 농산원예국장, 식량생산국장을 거쳐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등 농림부의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다. 서 전 차관은 농민의 아들로 농정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동료나 주위 사람들의 평가이다. 퇴직 후에도 열정은 식지 않아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서 전 차관을 만나 그의 열정을 들어 본다. /편집자주

(중략)

-미래의 꿈은 무엇이었나.

▲제가 태어난 곳은 충북 청원군 사주면 율량리이다. 지금은 행정구역이 청주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덕성초등학교를 거쳐 청주 중 ·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0리가 넘는 등 · 하교길을 교통수단이 없어 무심천변을 걸어 다녔다. 무심천변을 걸어 다니면서 나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고 사색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

당시 "우리 농촌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는 없을까? 매일 꽁보리밥에 떨어진 옷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해도 왜 못하는 것일까? 우리 농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정책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무심천 길을 걸으면서 나에게는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농촌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그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아들이 농사짓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등골이 휘어지도록 일만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농사를 바라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학마저 농과대학 진학을 반대했다. 그러나 나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위한 꿈을 펼치기 위해 고려대 농대에 진학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을 농업과 함께 하고 있다.

-공직생활은 어떻게 보냈으며 향후 계획은.

▲군대를 제대한 후 저는 농촌을 위한 열정을 불사르기 위해선 농림부 공무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파묻혀 기술고시 공부에 진력했다. 농촌을 위해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마침내 1972년 11월 제8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어느 곳에서든지 공평무사한 신념과 청렴결백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해왔다.

농림부에서 이런 열정으로 근무한 후 3년간 마사회 상임감사로 재직했다. 마사회도 농업과 관계가 깊은 곳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면서도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마사회를 그만둔 뒤 한농연 회장의 권유로 한국농어민신문사 사장직을 맡았다. 농민 권익 보호의 선봉에 있는 한국농어민신문의 활동상을 잘 알기에 흔쾌히 사장직을 수락해 지금까지 근무해오고 있다.(중략)

-공직생활 중 기억에 남는 일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농림부차관보 시절 쌀 직불제를 도입했던 일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성사시킨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정책이기에 추진하기에도 어려웠지만 성심을 가지고 임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청원생명 쌀을 유명브랜드로 키운 것이 보람이다. 쌀 브랜드사업 초기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 지역에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왔다. 또 충북농정이 전국의 최우수 자리를 차지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도민과 함께 한 것이지만 충북도가 농정 최우수와 우수상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 서규용 전 농림부차관 인터뷰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쌀 농업 직불제·농작물 재해 보험제 도입 산파 공본인

'청원생명쌀' 브랜드 격상…퇴직후 장학사업등 맹활약

–현재 지역사회에서 하시는 활동은.

▲농림부에 재직하면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부의금으로 어머님의 함자를 따서 '정성분 기금'을 만들어 어려운 동료를 도왔으며 모교인 덕성초등학교 총동문회 장학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을 돕기 위함이다. 많은 장학생을 배출했고 그들이 미래 지역을 이끌 인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또 충북의 실버예술단 이사를 맡고 있으며, 청풍비전21과 속리산경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밖에 청주고와 고려대 출신의 모임인 고청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며, 청주 중 · 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부하실 말씀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하나로 묶는 인적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 지역 출신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발전은 정책이나 계획의 입안도 중요하지만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하우도 가진 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류와 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은…

1948년생으로 충북 청원군 사주면 율량리가 고향이며, 청주 중 · 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제8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1972년 농산물파주검사소장을 시작으로 농림부 공직을 출발한 서 사장은 채소과장, 농산원예국장, 식량생산국장, 차관보, 농촌진흥청장 등 농림부의 주요 부서를 모두 거쳤다.

'불도저' 또는 '독일병정'으로 소문난 서 사장은 일 앞에서는 공선사후의 신념과 청렴결백의 신조로 주변의 귀감이 되기도 했다.

주량은 소주 1병이지만 장관을 보좌하던 시절에는 술을 극복하는 능력이 뛰어나 기자사회에서 주당으로 소문나기도 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지만 농림부에서 구제역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습에 여념이 없던 시절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슬픔은 깊게 간직하고 있다.

존경하는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 애창곡은 '흙에 살리라', 혈액형은 B형으로 성격은 약간 급한 편이다.

가족으로는 부인 고용순 여사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의결번호	2008자심1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성주신문	(주)성주신문사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42-6번지 대표이사 최 성 고
심의대상기사	『주진우, 경제서적 출간』(2008년 1월 15일자 12면)	
주 문	(주)성주신문사가 발행한 성주신문 2008년 1월 15일자 12면 『주진우, 경제서적 출간』 제하의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고령·성주·칠곡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성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조그룹 회장
주진우, 경제서적 출간

매출 1조원을 달성한 성공 기업인!
경제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탁월한 분석!

기업성패는 변화,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 결정요인이다

대부분의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경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전략용어가 있다. 변화와 스피드 그리고 사람이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분들도 즐겨 쓰는 용어이다.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이 세 가지 경영 DNA야말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이 해법이다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은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샌드위치 신세가 장기화되면서 국제경쟁에서 탈락하는 기업들도 문제지만, 중하위 기업군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성장·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과 부품소재 산업에서 중견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이 나와야 한다. 출자총액제한과 경제력 집중 억제,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 〈본문 중에서〉

주진우가 걸어온 길

▶학력사항
- 경북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학사
- 미국Columbia 대학원 정치학석사 · 박사과정 수료
- 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학박사, 러시아 EasternState대학 명예 경제학박사
- 서울대 경영대학원 AMP과정수료
-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언론과정 수료

▶경력사항
- 15,16대 국회의원, 국회 원내부총무
-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 총재비서실장 · 국가혁신위원회 행정실장 · 정책위 부의장
- 사조그룹 부사장-사장-회장(1977.11~현재)
- 한국무역협회 부회장(2005.3~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2004.11~현재)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1995.3~현재), 한국원양어업협회 고문(1995.3~현재)
- 한국정치학회 이사(2004.3~현재)

▶상훈
- 수출의날 대통령 표창수상(1979.11), 수산물 수출공적 수산청장 표창 수상(1982.2)
- 석탑 산업훈장 및 2천만불 수출의 탑(1985.11) · 5천만불 수출의 탑(1988.11) · 금탑 산업훈장(1992.12) · 7천만불 수출의 탑(2001.11)수상

▶주요저서
- 1995 21C에 도전하는 우리 농민들
  2000년대 일본농업
  파란들 파란바다
  농심천심
- 2004 대한민국 국회의 행정통제에 관한 연구

의결번호	2008자심1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월요신문	(주)월요문화사 / 서울 노원구 공릉동 312-3 대표이사 박 종 선
심의대상기사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2008년 1월 20일자 5면)	
주 문	(주)월요문화사가 발행한 월요신문 2008년 1월 20일자 5면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대구 수성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월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이한구 /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온갖 실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달픔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평균에도 미달하는 경제성장, 청년 일자리 감소, 서민경제 악화, 전국의 집값 · 땅값 · 전세값 상승' 등 과거 어느 정권에서 겪지 않은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빈곤층 비율은 높아져만 가고 '神이 내린 직장(도덕적 해이의 표본인 정부기관)'이 많이 탄생되었으며 부동산 · 주식 · 복권 · 사행성게임 등 '투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17대 대통령선거는 이 같은 노무현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저 이한구는 17대 국회 초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정부 여당의 국가정체성 유린 공작을 막아내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는 쓴 소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대선을 앞두고 만장일치로 다시 정책위의장에 선임되어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 개발(한나라당의 10대 기본정책 및 20대 핵심공약 등)을 주도함으로써 정권 창출에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땀과 노력,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침체 일로에 있던 대구경북 지역이 역동적이고 희망찬 2008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대구경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수성구에서는 '수성의료교육지구'가 들어서게 되어 외국의료기관, 의료관광단지, 국제화교육단지 등이 건설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 ·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와 추락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선진 대한민국을 향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월요칼럼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먼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정권 창출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온갖 실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고달픔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4강'이 될 것이라는 경제성장, 참년 일자리 감소, 서민경제 악화, 전국의 집값 · 땅값 · 전세값 상승' 등 크게 어느 정권에서 겪지 않은 복합적인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빈곤층 비율은 늘어만 가고 부동산 · 주식 · 복권 · 사행성게임 등 '투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번 17대 대통령선거는 이 같은 노무현정부의 실정(失政)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저 이한구는 17대 국회 초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여당의 국가정책성 무리 공작을 막아내고 서민생활 안정과 국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끊임없는 쓴 소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으며 대신을 압두고 민심잃지도 다시 정책위의장에 선임되어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 개발(한나라당의 10대 기본정책 및 20대 핵심공약 등)을 주도함으로써 정권 창출에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조한 저의 땀과 노력, 그리고 대구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함께 일조에 있는 대구경북 지역이 역동적이고 희망찬 2008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8년 대구경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입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인 수성구에는 '수성의료교육지구'가 들어서게 되어 외국의료기관, 의료관광단지, 국제화교육단지 등이 건설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 · 교육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08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0년간의 좌파정권에 따른 대한민국의 경제 침체와 추락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선진 대한민국을 향하는 이명박 정부에 국민의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큰 성원과 사랑을 염원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한나라당의 대표 경제전문가로서 저 이한구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해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흥을 위해, 대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저 이한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 뜻하신 모든 일마다 좋은 결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사랑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결번호	2008자심1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상주신문	상주신문(주) / 경북 상주시 남성동 48-8 대표이사 이 사 윤
심의대상기사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2008년 1월 21일자 2면)	
주 문	상주신문(주)이 발행한 상주신문 2008년 1월 21일자 2면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상주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상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손승태 / 경영학 박사 / 한나라당 국책위원

무자년 새해! 상주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며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상주에도 경부대운하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신년 벽두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부대운하 청사진에 따르면, 상주시에는 화물터미널 1개소, 여객터미널 2개소 총 3개소에 터미널이 설치되며, 터미널을 포함한 대운하 수변지구에는 대규모 수변테마파크, 낙동강 생물자원관, 에코컨벤션 등 국제 비즈니스 관광레저 타운은 물론 농특산물 유통 및 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부대운하 약 212km 한강과 약 288km의 낙동강 사이의 조령산 인근 40km를 인공수로로 연결시키고 하상이 낮은 일부 구간을 준설하여 총 540km의 종단수로(縱斷水路)의 운하를 건설하는 것으로, 투자비용은 약 16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도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너무 성급하게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 오히려 실망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2천년에 걸친 우리 고장의 오랜 전통문화 · 예술에서 창조정신을 찾아, 지역경제에 접목시키는 '창조 · 문화정신'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경부대운하 및 낙동강 3대 프로젝트와 어우러지는 종합레저타운 및 뉴타운조성은 물론, 우리고장의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친환경 산업체를 유치하며, 삶의 질과 젊은 문화공간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문고교를 중점 육성함은 물론 외국어 특목고를 유치함과 동시에 축산분뇨활용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시설도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정신과 화합·단결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도·시의원들은 고객이신 시민들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들어 섬기는 「시민만족·감동경영」을 해야 되며,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화단결"하는 화합의 장도 열어야 합니다.

금년 4월 9일은 제18대 총선일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도록 가장 앞장서서 일할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새 일꾼은 우선 자신에게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하며, 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실행해야 되며, 「시민들을 받들어 섬기고 인화단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며 만사형통하는 무자년이 되시기를 비오며, 불우이웃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기고

무자년 새해! 상주시민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며 기쁨에 만복이 깃드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상주에도 경부대운하건설이 구체화되면서 신년 벽두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경부대운하 청사진에 따르면, 상주시에는 화물터미널 1개소, 여객터미널 2개소 총 3개소에 터미널이 설치되며, 터미널을 포함한 대운하 수변지구에는 대규모 수변테마파크, 낙동강 생물자원관, 에코리버 변션 등 국제 비즈니스 관광레저 타운이 들어 설 뿐 농특산물 유통 및 물류단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부대운하 약 212km 한강과 약 288km의 낙동강 사이의 조망산 인근 40km를 인공수로로 연결시키고 하상이 낮은 일부구간을 준설하여 총 540km의 종단수로(縱斷水路)의 운하를 건설하는것으로, 투자비용은 약 16조 3천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인 중대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대운하 건설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 영향평가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할 때까지도 많은 사업이 소요될 것이므로 지금부터 너무 성급하게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 오히려 실망이 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2천년에 걸친 우리 고장의 오랜 전통문화·예술에서 창조정신을 찾아, 지역경제에 접목시키는 '창조·문화정신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경부대운하 및 낙동강 3대 프로젝트와 어우러지는 종합레저타운 및 뉴타운조성은 물론, 우리고장의 농·축산물을 브랜드화 하고 친환경산업체를 유치하며, 삶의 질과 젊은 문화공간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문고교를 중점 육성함은 물론 외국어 특목고를 유치함과 동시에 축산분뇨활용 바이오에너지등 신재생에너지산업시설도 육성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정신과 화합·단결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도·시의원들은 고객이신 시민들께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들어 섬기는 「시민만족·감동경영」을 해야 되며, 모든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화단결"하는 화합의 장도 열어야 합니다.

금년 4월 9일은 제18대 총선일입니다. 우리 상주시가 변화되어 새롭게 태어나도록 가장 앞장서서 일할 일꾼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새 일꾼은 우선 자신에게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해야 하며, 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실행해야 되며, 「시민들을 받들어 섬기고 인화단결」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며 만사형통하는 무자년이 되시기를 비오며, 불우이웃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승태
경영학 박사
한나라당 국책위원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의결번호	2008자심20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서남일보	(주)서남일보사 / 광주 동구 호남동 14-1 대표이사 박 국 태
심의대상기사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2008년 1월 21일자 3면)	
주 문	(주)서남일보사가 발행한 서남일보 2008년 1월 21일자 3면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제하의 기고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나주 · 화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서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기고문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정호선 /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UN본부장

금년은 한국전쟁(1950.6.25)이 일어난 지 58년째이며 휴전상태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며, 벌써 끝나야 했는데도 끝이 나지 않은, 반드시 끝나야만 하는 전쟁인데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는가? 하여간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삼고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중략)

금년 10월 24일 UN의 날 기념행사로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 및 영적 세계의 평화를 위해 85만 명의 영령(英靈)들을 위로하는 "한국전쟁세계평화대회(Korean War & World Peace Festival)"를 주한 외국대사관과 함께 범세계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행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추모의례를 갖추면서 참전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민의 이름으로 명예훈장을 수여하자. 예를 들면, 전쟁에서 희생된 벤 프리트 장군과 워커 대장,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 벤 프리트 장군 아들, 클라크 UN군 사령관 아들, 워커 대장 아들, 모택동 아들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참전국의 장례문화예술제와 같은 추모예술제(Soul of Corea, Soul of UN)를 개최하도록 하자.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인 상여(喪輿)와 만장행렬을 포함하여 각국 장례예식행렬을 광화문 거리에서 하고 매년 정례 행사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승화시켜나가자. 행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타 종교의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서 영혼문제로 인한 종교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자.

또한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참전국과 함께 DMZ에 세계평화도시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이 땅에서 전쟁, 기아, 공해를 영원히 추방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주평화 및 영계평화로 연계해 나가자.

세 번째 행사는 금년 UN의 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80개 UN회원국의 고등학생 대표로 "제1회 세계학생UN총회"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자. 전 세계 초.중.고등학교 학생회장단으로 세계학생UN을 활성화 시켜 UN산하 단체로 가입하고 전 세계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되어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을 교류하도록 하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한국전쟁세계평화대회"의 장례예산은 총 29억으로 10대 기업은 5,000만원, 50대 기업은 3,000만원, 100대 기업은 2,000만원, 종교단체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풍의 카오스바람을 일으켜 나가자. 지출 내역은 국회의원회관 추모행사에서 1억원, 서울시청 앞 추모 예술제 5억원, 세계고등학생UN총회비 11억원, 한국전쟁디지털자료관 7억원 및 세계평화추모공원 및 평화도시 설계비용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4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만 한다고 풀리겠는가? 종교를 초월하여 한국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어 이승에서 풀지 못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어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시켜 국운을 살려 나가자.

특별기고

정호선
15대 국회의원 · 세계학생UN본부장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금년은 한국전쟁(1950.6.25)이 일어난지 58년째이며 휴전상태로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제 이와 같은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며, 빌써 끝나야 했는데도 끝이 나지 않은, 반드시 끝나야만 하는 전쟁인데 왜? 우리들 못 살게 굴고 있는가? 하여간 더 이상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장 큰 교훈으로 삼고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한국전에 참가한 UN군은 정부 지원국(16개국)으로서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영국, 벨기에, 룩셈비아, 에티오피아, 그리스, 룩셈부르크, 필리핀이고, 의료 지원국(3개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인도, 이탈리아이며, 물자지원국은 13개국이나 되어 세계각국의 도움을 받았었다. 군사력면에서 이와같이 미국의 참사자는 $7,000명, UN군 4,000명, 한국군 시망자는 136,000명이고 북한 전사자는 52만명, 중국군은 15만 명으로, 총 80만여 명이 희사한 셈이다.

58? 57년이나 지났는데도, 이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가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 전쟁에서 희생된 수십만 명의 남북한 영혼들이 천당이나 천상세계에서 재대로 안식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구천에서 떠돌면서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신이 없어 제대로 장례의식을 치루지 못해 혹시나 한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알렉산더 버시비우(Alexander R. Vershinin)주한미국대사가 이태식 주미한국대사와 함께 2007년 4월 20일 댄버와 시카고에서 한국전 참전지와 매콜레 아들, 밴 프리트 장군 아들, 클라크 UN군 사령관 아들, 워커대장 아들, 모택동 아들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행사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민국의 강래문화예술제와 같은 추모예술제(Soul of Corea, Soul of UN)를 개최하도록 하자.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인 상여(喪輿)와 만장행렬을 포함하여 각국 장례의식행렬을 광화문 거리에서 하고 매년 정례 행사로서 우리나라 전통문화 예술축제로 승화시켜나가자. 행사를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타 종교의 장례문화를 이해하면서 영혼문제로 인한 종교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자.

또한 한국전쟁을 세계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해 참전국과 함께 DMZ에 세계평화도시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이 땅에서 전쟁, 기아, 공해를 영원히 추방하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주평화 및 영계평화로 연계해 나가자.

세 번째 행사는 금년 UN의 날,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80개 UN회원국의 고등학생 대표로 "제1회 세계학생UN총회"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자. 전 세계 초. 중.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으로 세계학생UN을 활성화 시켜 UN산하 단체로 가입하고 전 세계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친구가 되어 하나의 지구촌을 만들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사상을 교류하도록 하여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아름다운 지구촌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한국전쟁세계평화대회"의 장례예산은 총 29억으로 10대 기업은 5,000만원, 50대 기업은 3,000만원, 100대기업은 2,000만원, 종교단체와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국풍의 카오스바람을 일으켜 나가자. 지출 내역은 국회의원회관추모행사에 1억원, 서울시청 앞 추모 예술제 5억원, 세계고등학생UN총회비 11억원, 한국전쟁디지털자료관 7억원 및 세계평화추모공원 및 평화도시 설계비용 5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4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한반도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만 한다고 풀리겠는가? 종교를 초월하여 한국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어 이승에서 풀지 못한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어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고,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시켜 국운을 살려 나가자.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의결번호	2008자심2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시민일보	(주)시민일보사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대표이사 최 정 호
심의대상기사	『통일부 폐지 논란』(2008년 1월 21일자 5면)	
주 문	(주)시민일보사가 발행한 시민일보 2008년 1월 21일자 5면 『통일부 폐지 논란』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계양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통일부 폐지 논란

송영길 / 대통합신당 국회의원

최고위원 구성관련 쇄신이 안보인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번 최고위원은 변화와 쇄신을 당대표가 추동할 때 생기는 파열음과 분열을 막아주고 대표의 추동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천쇄신과 인재영입이다. 아무리 공천쇄신을 하고 싶어도 기존 인물을 대체할 새로운 인재,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 없으면 쉽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공천의 쇄신과 혁명을 누가 공평무사하고 단호하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손 대표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곡물가도 오른다. 밀가루 한 포대 20킬로그램짜리가 15,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경제의 불황을 예고한다.

주가는 1700 밑으로 떨어졌다. 올해 경제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남북 관계를 잘못 다루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 판에 경부운하 운운하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정통부, 과기부를 없앤다고 한다. 통일부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1969년 국토통일원 시절부터 유지해오던 통일부를 없애겠다니. 북한 통전부 맛을 봐야 안다며 정세현 전 장관이 일갈한다. 만일 외교적 역량이 축적된 북한을 상대로 신임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부서들이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만나게 될 때 이용되기 십상이다.

박촌동 30년 영구임대주택 건설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였다. 박촌동 30번지이다. 235세대 3개동을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남양건

설이 시공사이다. 발주처는 대한주택공사이다. 주민들은 킹스빌라를 비롯한 인근 노후된 아름, 대부, 은성, 하트빌라 등과 함께 합동개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1평, 13평형 서민아파트만 들어올 경우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를 표시한다. 503 탄약부대 때문에 탄약안전거리 845미터 규정에 저촉된 지역이 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통화하였다. 사업본부장과 길학균 보좌관을 만나도록 하였다. 당장 공사현장 차단막이 투명한 아크릴 등으로 되어 있지 않아 주변 햇볕이 차단되어 빌라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통일부 폐지 논란

단 상

송영길
(더통합신당 국회의원)

최고위원 구성관련 재신이 안보와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이번 최고위원은 변화와 쇄신을 단대표가 추동할 때 생기는 파열음과 분열을 막아주고 대표의 추동을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끊임 쇄신과 인재영입이다. 아무리 공천쇄신을 하고 살아도 기존 인물을 대체할 새로운 인재,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지지도 없으면 쉽지 않는 일이다. 문제는 공천의 쇄신과 혁명을 누가 공평무사하고 단호하게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손 대표의 운명은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심상치 않다. 폭풍가도 오른다. 밀가루 한포대 20킬로그램짜리가 15,000원에서 21,0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가 바국경제의 불황을 예고한다.

우가는 1700 밀으로 필어졌다. 올해 경제가 심상치 않다. 여기에 이명박정부가 남북관계를 잘못 다루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 이탈한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에 경부운하 문문산마 옮여들는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정동부 교기무를 없앤다고 한다. 통일부도 없애버리겠다고 한다. 1969년 국토통일원이 설부터 유지해오면 통일부를 없애겠다니. 북한 동전부약을 10이 인도하 정세면 정 장관이 임명한다. 만일 외교의 역할이 축소될 때 한을 상대로 신일경부가 북한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부서들이 함구가 일원화되지 않고 충구난망으로 만나게 될 때 이용되기 쉽상이다.

박촌동 30년 영구임대주택 건설관련 민원현장을 방문하였다. 박촌동 30년 지이다. 235세대 2개동을 내년 9월 완공목표로 공사하고 있다. 남양건설이 시공사이다. 발주처는 대한주택공사이다. 주민들은 킹스빌라를 비롯한 인근 노후된 아름, 대부, 은성, 하트빌라 등과 함께 합동개발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11평, 13평형 서민아파트만 들어올 경우 지역이 슬럼화될 우려를 표시한다. 503 탄약부대문제로 탄약안전거리 845미터 규정에 저촉된 지역이 있다.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통화하였다. 사업본부장과 길학균 보좌관을 만나도록 하였다. 당장 공사현장 차단막이 투명한 아크릴등으로 되어 있지 않아 주변 햇볕이 차단되어 빌라주민들의 고통이 심하다.

박촌동 주변에는 노인정 하나 없어 노인들이 쉴 곳이 없다. 콘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쓰고 있는데 철거요구가 온다고 한다. 구청에서 주는 노인정에 대한 지원혜택도 없다. 지역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박촌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없어 노인들이 고생이다. 이번 시예산에 반영토록 하였다. 약 25억 예산이 소요된다. 박촌 앞에는 시내버스 30번, 81번 등이 타는 정류장은 있어도 내리는 곳이 없다.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

박촌지역 주변 상가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503 탄약부대 이전이 논란이다. 원래 안산에 있던 것이 귤현역 앞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 부대의 존재로 인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이 생겼다. 귤현역과 박촌역 역세권 개발의 제한요소이다. 남북관계가 풀려야 이 문제도 해결된다. 최소한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라도 바뀌어야 이전여부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현재상태로는 탄약추진거리 등의 이유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 미군부대 탄약까지 보관하고 있다.

저녁 계양구축구연합회 회장들 시무식에 참석하였다. 카리스호텔에서 있었다. 카리스호텔이 증축이 되어 좋아졌다. 김원국 회장, 박재광 사무총장과 김경범, 김두환, 노순철, 최병기, 이유재, 조은직, 정인상 부회장을 비롯한 각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축구연합회에 오면 항상 부채의식이 생긴다. 아직도 계양구에 잔디구장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이클 경기장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때 잔디구장을 같이 만들 생각이다. 100억 예산 중 10억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였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시 서운동지역에 만들어야 한다.

의결번호	2008자심2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전북도민일보	(주)전북도민일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2동 417-62 대표이사 임 병 찬
심의대상기사	『서부 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2008년 1월 21일자 15면)	
주 문	(주)전북도민일보가 발행한 전북도민일보 2008년 1월 21일자 15면 『서부 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덕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북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서부 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채수찬 / 국회의원

전주의 대표적인 행정관청 밀집지인 6지구(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인근 백제로변)의 도심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기 시작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의해 전주 동부권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속속 떠나갈 전망이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떠나간 자리에 휑뎅그렁하게 남은 구도심 상가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이 떠나간 이후의 공동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전주시 각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체 규모의 10배가 넘고, 종합경기장 전체부지의 2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주시가 추진해 온 무리한 택지개발은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전주시 8개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수천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도 무리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 해봐야 한다.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93년도 '신전주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총 4천185억원이 투자돼 지장물과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해 우려되는 6지구 공동화

그런데 2000년 초반 50%대에 머무는 저조한 분양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옮기게 된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계획을 유보하거나 속

도조절을 하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 6지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전주 6지구는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지난 80년대 초부터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속속 입주, 현재 20여 개 관공서 타운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서부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3, 4년 동안 이곳을 빠져나가는 곳은 농촌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완주군청, 전북체신청, 북전주세무서 등 6개에 이른다.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에 조성 중인 새 건물로 내년 6월 이전하게 된다. 전북체신청도 오는 2009년 서부 신시가지로 옮긴다.

서부 신시가지 새 청사에는 전북체신청과 전주우체국이 입주하게 되며 현 전북체신청 건물은 동전주우체국이 사용하게 된다.

농촌공사 전북본부는 2009년 10월에 서부 신시가지로, 토공 전북본부는 2010년 상반기에 역시 서부 신시가지로 옮긴다.

주공은 2010년에 효자 4 · 5지구로, 완주군청은 곧 부지선정 작업을 거쳐 2011년에 완주군 지역 내로 옮기게 된다. 대한지적공사 역시 본사 이전과 함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대비 이익 생각해야

현재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제로섬(zero sum)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투자 대비 이익'을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자리를 뜬 이후에 발생한 도시공동화를 경험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고, 거리는 썰렁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마치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고심(苦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은 환하게 웃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쪽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우산과 소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두 형제의 어머니가 환히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칼 럼

서부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채 수 찬

국회의원

전주의 대표적인 통공련정 법공지인 6지구(우아동, 인후동, 금암동 인근 백제로변의 도심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조성되기 시작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의해 전주 동부권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들이 속속 떠나갈 전망이다.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떠나간 지역에 몰려그림하게 남은 구도심 상가를 지켜본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이 떠나간 이후의 공동화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전주시 각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전주종합경기장 전체 규모의 10배가 넘고, 종합경기장 전체부지의 2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전주시내 주변에 온 무리한 택지개발은 외해가 편심를 되고 있다. 전주시 6개 지역에서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수돈세대에 이르는 미분양 사태가 초래했다. 이런 배경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도 무리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

서부신시가지는 지난 80년도 '신전주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본격화되기 시작했으며, 총 4천185억원이 투자돼 지정돼과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다.

피해 우려되는 6지구 공동화

그런데 2000년 초반 50%대에 머무는 저조한 분양율을 타개하기 위해 무리하게 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이전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을 위해 옮기게 된다면 필요로 큰 문제가 아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없던 계획을 무리하거나 속도조절을 하면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주 6지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전주 6지구는 백제로변을 중심으로 지난 80년대 초부터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이 속속 입주, 현재 20여개 관공서 타운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서부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3, 4년동안에 이곳을 빠져나가는 곳은 농촌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완주군청, 전북체신청, 북전주세무서 등 6개에 이른다.

전주세무서는 서곡지구에 조성중인 새 건물로 내년 6월 이전하게 된다. 전북체신청도 오는 2009년 서부신시가지로 옮긴다.

서부신시가지 새 청사에는 전북체신청과 전주우체국이 입주하게 되며 현 전북체신청 건물은 동전주우체국이 사용하게 된다.

농촌공사 전북본부는 2009년 10월에 서부신시가지로, 토공 전북본부는 2010년 상반기에 역시 서부신시가지로 옮긴다.

주공은 2010년에 효자 4·5지구로, 완주군청은 곧 부지선정 작업을 거쳐 2011년에 완주군 지역내로 옮기게 된다. 대한지적공사 역시 본사 이전과 함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투자대비 이익 생각해야

현재 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제로섬(zero sum)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앞서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투자 대비 이익'을 검토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전주시는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이 자리를 뜬 이후에 발생한 도시공동화를 경험한 바 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고 있고, 거리는 썰렁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마치 소금장수와 우산장수를 둔 어머니의 고심(苦心)처럼,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은 환하게 웃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은 일단 유보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양쪽 지역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계획을 마련하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우산과 소금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두 형제의 어머니가 환히 웃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결번호	2008자심23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전라일보	(주)전라일보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 140-1 대표이사 유 춘 택
심의대상기사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다』(2008년 1월 22일자 15면)	
주 문	(주)전라일보가 발행한 전라일보 2008년 1월 22일자 15면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전주 완산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전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다

이광철 / 국회의원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물론이고 농업관련 연구단체들과 전국의 농업계대학 학장단들도 긴급히 모임을 갖고 농촌진흥청의 존치와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농도 전북 쇠락 불보듯

산업화 이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갈수록 정체와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의 시장개방과 향후 비준 · 발효될 한미 FTA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생명과학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바로 농촌진흥청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익적 가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과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오히려 농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조직의 외청(外廳) 18개 중 유독 농촌진흥청만을 폐지의 대상으로 꼽은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인수위 측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자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농림부로 흡수하고 산하 연구기관들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으며,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의 존치여부는 우리 전라북도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전라북도는 전체 면적의 27%가 농경지이며 전체 인구의 20%인 36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도(農道)일 뿐만 아니라, 오는 2012년에 조성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패와 농촌진흥청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입주할 14개 공공기관의 과반수에 달하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부지 중 3분의2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농촌진흥청이 폐지될 경우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조성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인 시절에도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없지 않았는데, 민영화된 연구기관들이 선선히 지방 이전에 응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 더구나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마저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경우 토지공사의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마저 폐지되어 버린다면 전라북도의 혁신도시가 자칫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속해야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외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겪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심각한 과밀화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집권세력의 정치노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명박 당선인 본인도 후보시절부터 "혁신도시 건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각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물론이고 농업관련 연구단체들과 전국의 농업계대학 학장단들도 긴급히 모임을 갖고 농촌진흥청의 존치와 역할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아침을 열며 ▸▸▸

이광철 국회의원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다

농도 전북 쇠락 불보듯

산업화 이후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갈수록 정책의 쇠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으며, 특히 지난 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의 시장개방과 향후 비준·발효될 한미 FTA 등 외부적 충격으로 인하여 우리 농업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우리 농업의 자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첨단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농업을 고부가가치의 '생명과학산업'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 바로 농촌진흥청이다. 현행 농촌진흥청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다.

들론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에서 농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농업의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효율성만을 앞세워 공익적 기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환경과 농민의 생존권 문제를 감안하여 오히려 농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정부조직의 외청(外廳)) 18개 중 유독 농촌진흥청만을 폐지의 대상으로 꼽은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인수위 측은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농림부로 흡수하고 산하 연구기관들도 모두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으며, 필연적으로 대대적인 기능 축소와 인력 감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의 존치여부는 우리 전라북도에게 특히 중요한 사안이다. 전라북도는 전체 면적의 27%가 농경지이며 전체 인구의 20%인 36만 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도(農道)일 뿐만 아니라, 오는 2012년에 조성되는 전라북도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패와 농촌진흥청이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 연구기관 등 8개 기관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입주할 14개 공공기관의 과반수에 달하며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입주부지 중 3분의2 이상의 면적을 차지할 예정이다. 따라서 만에 하나 농촌진흥청이 폐지될 경우 전라북도의 혁신도시 조성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인 시절에도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내부 반발이 없지 않았는데, 민영화된 연구기관들이 선선히 지방 이전에 응할 가능성은 결코 높지 않다. 더구나 최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마저 거론되고 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을 추진 중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될 경우 토지공사의 전라북도 혁신도시 입주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진흥청마저 폐지되어 버린다면 전라북도의 혁신도시가 자칫 알맹이 없는 혁신도시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 지속해야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건설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발전으로 인하여 지방은 소외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겪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심각한 과밀화에 시달려왔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은 집권세력의 정치노선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명박 당선인 본인도 후보시절부터 "혁신도시 건설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당선될 경우 혁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의결번호	2008자심2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강원도민일보	(주)강원도민일보 / 강원 춘천시 후평1동 257-27 대표이사 안 형 순
심의대상기사	『정명 '강릉부' 700주년』(2008년 1월 24일자 19면)	
주 문	(주)강원도민일보가 발행한 강원도민일보 2008년 1월 24일자 19면 『정명 '강릉부' 700주년』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강원 강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강원도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명 '강릉부' 700주년

최욱철 / (주)강원랜드 상임이사

예부터 강릉은 산자수명한 땅으로 자연 환경적으로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일컬어져 왔다.

빼어난 자연 환경과 명승지가 많은 문화 예술적 유서 깊은 지역으로 아직도 국내 최대의 많은 문화 유적이 있으며 계곡, 호수, 바다와 인접해 있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에는 역사적 숨결이 느껴지는 경포 호수의 크고 작은 누대가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강릉의 유구한 문화유산은 신라의 향가인 '헌화가' '해가'에서 이미 옛 선인들의 문화적, 예술적 지혜를 예견하여 신선의 고을 강릉을 점지하였던 것이다.

이미 기원전으로부터 선사 역사의 뿌리가 내려온 신선의 고을에 '강릉부'가 설치된 지 올해로 700주년을 맞았다.

역사학자 사무엘골드원은 미래에 대해서는 일찍 예언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 바 있지만 옛 선인들은 이곳 강릉을 일찍 미래의 알프스, 문화의 발상지로 예견해 주었다.

하늘과 땅은 물론 시공을 초월한 산과 호수, 푸른 바다 및 계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이곳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준 특혜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물론 정자아래 흐르는 시냇물 굽이돌게 곡수로 만든 천혜의 자연적 공간은 동양사회의 누정문화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원동력이 조선시대의 최고 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 이이는 물론 최고의 개혁 사상가 허균 등 당대의 최고 걸출한 인재들

을 배출하게 되었다.

최근 강릉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종전 농림, 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가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의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면면히 이어지는 강릉의 위대한 역사적 문화유산의 정신적 혼이 아닐까?

강릉의 유·무형 문화유산은 이미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정신적 자산으로 찬란히 아로새겨져 있다. 즉 우리 강릉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선의 고을 강릉을 푸른 경포바다의 포효와 도도히 흐르는 남대천의 절개, 대관령에서 뻗어 내리는 힘찬 정기를 한데 어울려 새로운 화음을 이뤄내는 아리아를 함께 합창하여야 한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의 메아리치는 합창이 전 세계적으로 불리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강릉지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4.5명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유수한 인재를 배출한 교육 도시이기도 하다.

교육도시로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지표를 설정하여 옛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용도지역에 위배된 공장 및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공업지역에 이주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 특화업종 클러스터화하여 친환경 신소재 첨단 산업 도시를 조성하여 강릉에만 주어진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 생태도시로 탈바꿈되어 청소년 문화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하게 마련된 문화 공간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어서오세요 강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 전략이 정(定) '강릉부' 700주년을 맞아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전개될 것이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첨단 문화산업과 연계하는 경포바다의 화려한 빛 축제와 대관령의 광활한 새로운 테마형 관광코스, 경포호에서 뿜어내는 세계 최대의 음악분수 쇼, 동양최대의 전통문화 공간으로 이어지는 단오장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이 꿈틀거리는 강릉, 이제 곧 웅비의 로드맵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이테크(Hi-tech)와 하이아트(Hi-art)가 결합된 세계적 문화산업 및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무자년을 우리 다함께 강릉 아리아의 화음에 맞추어 힘차게 힘차게 불러보자.

정명 '강릉부' 700주년

| 이 아침에 |

최 욱 철

(주)강원랜드 상임이사

예부터 강릉은 산자수명한 땅으로 자연 환경적으로 영동지방의 절경으로 일컬어져 왔다.

빼어난 자연 환경과 명승지가 많은 문화 예술적 유서 깊은 지역으로 아직도 국내 최대의 많은 문화 유적이 있으며 계곡, 호수, 바다와 인접해 있는 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에는 역사적 숨결이 느껴지는 경포 호수의 크고 작은 누대가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주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강릉의 유구한 문화유산은 신라의 향가인 '헌화가' '해가'에서 이미 옛 선인들의 문화력, 예술적 지혜를 엿전하여 신선의 고을 강릉을 펼치하였던 것이다.

이미 기원전으로부터 선사 역사의 루리가 내려온 신선의 고을에 '강릉부'가 설치된지 올해로 700주년을 맞았다.

역사학자 사무엘굴드원은 미래에 대해서는 일찍 예언을 하지 말라고 충고한 바 있지만 옛 선인들은 아곳 강릉을 일찍 미래의 알프스, 문화의 발상지로 예견해 주었다.

하늘과 땅은 물론 시공을 초월한 산과 호수, 푸른 바다 및 계곡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이곳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신이 준 특혜일 것이다.

그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는 물론 정자아래 흐르는 시냇물 굽이돌게 곡수로 만든 천혜의 자연적 공간은 동양사회의 누정문화의 모태가 되었으며, 이러한 원동력이 조선시대의 최고 학자이자 경세가인 율곡 이이는 물론 최고의 계책 사상가 허균 등 당대의 최고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최근 강릉은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종전 농림, 어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가 문화, 관광 등 서비스업 위주의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면면히 이어지는 강릉의 위대한 역사적 문화유산의 정신적 혼이 아닐까?

강릉의 유·무형 문화유산은 이미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정신적 자산으로 찬란히 아로새겨져 있다. 즉 우리 강릉을 관망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신선의 고을 강릉을 푸른 경포 바다의 포효와 도도히 흐르는 남대천의 절개, 대관령에서 뻗어 내리는 힘찬 정기를 한데 어울려 새로운 화음을 이뤄내는 아리아를 함께 합창하여야 한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릉의 메아리치는 합창이 전 세계적으로 불리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강릉지역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4.5명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유수한 인재를 배출한 교육 도시이기도 하다.

교육도시로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지표를 설정하여 옛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용도지역에 위배된 공장 및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공장들을 공업지역에 이주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 특화업종 클러스터화하여 친환경 신소재 첨단 산업 도시를 조성하여 강릉에만 주어진 호수가 어우러진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 생태도시로 탈바꿈되어 청소년 문화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하게 마련된 문화 공간을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어서오세요 강릉'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 전략이 정(定) '강릉부' 700주년을 맞아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전개될 것이다.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첨단 문화산업과 연계하는 경포바다의 화려한 빛 축제와 대관령의 광활한 새로운 테마형 관광코스, 경포호에서 뿜어내는 세계 최대의 음악분수 쇼, 동양최대의 전통문화 공간으로 이어지는 단오장 이러한 무한한 잠재력이 꿈틀거리는 강릉, 이제 곧 웅비의 로드맵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이테크(Hi-tech)와 하이아트(Hi-art)가 결합된 세계적 문화산업 및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무자년을 우리 다함께 강릉 아리아의 화음에 맞추어 힘차게 힘차게 불러보자.

의결번호	2008자심3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아시아투데이	(주)아시아투데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대표이사 백 석 기
심의대상기사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2008년 1월 28일자 31면)	
주 문	(주)아시아투데이가 발행한 아시아투데이 2008년 1월 28일자 31면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종로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아시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유승희 /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정보통신부 폐지'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시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엔진으로 과속(過速)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재로 개편되는 120여 년 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면모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한 정보통신부의 노력 때문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 기능을 하나로 모아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IT정책기능 일원화라는 시스템이 호주, 일본 등 경쟁국들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폐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방송정책(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와 통신정책(산업자원부)이 분산되어 정책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궁금하다.

각 부처로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을 다시 일원화

시키기는 사후적으로 어렵고 방송위원회와의 방송통신 기구통합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IT방송통신미디어 고유의 '네트워크서비스 기기콘텐츠' 라는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 전통산업 육성에 떠밀려 발전 속도가 빠른 IT방송통신 산업의 수요(규제정책)와 공급(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정책기능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부처로 분산시킴으로써 효율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통합위원회 신설 구상), 호주(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일본(정보통신성 신설 구상) 등 방송통신관련 기구통합의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방송, 통신, 정보, 문화, 산업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전반 모두가 선순환적인 연결고리인 만큼 반드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속이 아닌 가속의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TU디지털기회지수(DP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등 글로벌 IT리더로 인정받을 정도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함의(含意)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해나가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T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고 그 결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척될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지 냉정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진경제', '부의미래' 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칼럼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유승희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세계 각국은 선진 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각기 다른 속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정보통신부 폐지' 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조직개편 안을 제시하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넘어선 강력한 엔진으로 과속(急速)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1884년 개화의 상징인 우정국으로 출발한 이래 체신부를 거쳐 지난 1994년 현 체제로 개편되는 120여년 동안 국가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IT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 면모를 정립할 수 있었던 것도 정보화의 물결에 대응한 정보통신부의 노력 때문이다.

특히 정부 각 부처에 흩어졌던 관련기능을 하나로 묶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시도해 성공한 IT 정책기능 일원화라는 시스템이 호주, 일본 등 경쟁국들의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 폐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방송정책(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과 통신정책(산업자원부)이 분산되어 정책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걸맞나 효과적으로 대응할지 의문이다.

각 부처로 분리된 방송통신 기능을 다시 일원화시키기는 사후적으로 어렵고 방송위원회와의 방송통신 기구통합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IT방송통신미디어 고유의 '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 라는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정책추진의 시너지 효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반 전통산업 육성에 떠밀려 발전 속도가 빠른 IT방송통신 산업의 수요(규제정책)와 공급(지원정책)의 유기적 연계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방송통신미디어의 정책기능을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수 부처로 분산시킴으로써 효율성이 현재보다 악화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통합위원회 신설 구상), 호주(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일본(정보통신성 신설 구상) 등 방송통신관련 기구통합의 세계적 추세에도 배치된다.

이에 따라 방송, 통신, 정보, 문화, 산업 등 정보통신 분야의 전반 모두가 선순환적인 연결고리인 만큼 반드시 통합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속이 아닌 가속의 해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ITU디지털기회지수(DPI)평가에서 2년 연속 1위 등 글로벌 IT 리더로 인정받을 정도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의 함의(含意)는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신성장동력 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해나가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폐지되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IT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다각도의 측면에서 심사숙고하고 그 결과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진척될지, 아니면 어느 방향으로 완성해 나가야 할지 냉정하게 사고하고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선진경제', '부의 미래' 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본문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결번호	2008자심37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우리일보	(주)우리일보 / 인천 연수구 연수2동 592 대표이사 김 유 석
심의대상기사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2008년 1월 30일자 4면)	
주 문	(주)우리일보가 발행한 우리일보 2008년 1월 30일자 4면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시흥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우리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조정식 / 국회의원

시화공단이 IMF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가동률이 30개 국가공단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IMF 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던 생산액과 수출액마저 9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화공단은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환율절상과 금리상승 등 외부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화공단의 발전을 선도해온 중견기업, 혁신기업들이 시화공단에 대한 재투자를 외면한 채 외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영세 · 임대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시화공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R&D, 생산성혁신, 마케팅 등 입주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기업지원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시화공단. 기업 관련 행정과 금융, 세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원스톱처리한다는 말은 먼나라의 동화에 불과합니다. 인력양성과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 · 훈련시스템도 취약합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대중교통마저 없습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던 중견기업, 혁신기업들이 줄지어 외부로 이전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화공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시화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민 · 관 · 학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읍시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 R&D와 마케팅, 기업 관련 업무의 원스톱처리, 교육 · 훈련, 구조고도화사업, 대표기업의 외부이전 방지 대책 등 시화공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업지원의 허브(Hub)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화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화공단의 활로를 개척합시다.

특별기고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조정식
(국회의원)

시화공단이 IMF이후 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가동률이 30개 국가공단 중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IMF이후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던 생산액과 수출액마저 9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화공단은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입니다. 이 때문에 원유와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 환율절상과 금리상승 등 외부 경제환경의 급속한 악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시화공단의 발전을 선도해온 중견기업, 혁신기업들이 시화공단에 대한 재투자를 외면한 채 외부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영세 · 임대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시화공단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습니다. 시화공단의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R&D, 생산성혁신, 마케팅 등 입주업체들의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할 기업지원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시화공단. 기업 관련 행정과 금융, 세무, 컨설팅 등의 업무를 원스톱처리한다는 말은 먼나라의 동화에 불과합니다. 인력양성과 재직근로자를 위한 교육 · 훈련시스템도 취약합니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데, 대중교통마저 없습니다. 시흥시를 대표하던 중견기업, 혁신기업들이 줄지어 외부로 이전하고 있지만 그들을 붙잡아 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화공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시화공단 구조고도화사업에 민·관·학 등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읍시다.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는 R&D와 마케팅, 기업 관련 업무의 원스톱처리, 교육 · 훈련, 구조고도화사업, 대표기업의 외부이전 방지대책 등 시화공단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업지원의 허브(Hub)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화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복합비즈니센터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시화공단의 활로를 개척합시다.

의결번호	2008자심3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인천신문	(주)인천미디어그룹 /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42 대표이사 김 민 기
심의대상기사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2008년 1월 30일자 18면)	
주 문	(주)인천미디어그룹이 발행한 인천신문 2008년 1월 30일자 18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인천 서 · 강화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인천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

김교흥/국회의원/인천 서구 · 강화갑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학교용지부담은 개발사업지역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한 것으로 2001년부터 5천600억원을 징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교육세를 내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취지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80%에 해당되고 금액으로도 4천억원에 달해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현안이다.

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약 3년간 계류돼오던 것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과정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달랐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는 국가 정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행위라는 데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납부자들이 '서민'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에는 파격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실천'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필자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결정되었으므로 학교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06년 조사한 바로는 인천은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낮

은 경북의 25.1명에 비해 무려 10명 가까운 학생이 한 학급에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숫자이다. 또한 과밀학급에 대한 시 · 도별 분석을 한 결과, 인천 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광주의 35.1%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이다.

인천의 특성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청라 ·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는 신설학교 설립의 재원이 국가 재정과 인천시의 교육채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교육채 발행이 3천6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필요한 학교 수는 약 130개로, 학교 하나를 짓는 데 드는 현재 비용인 250억원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3조2천500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방식으로 학교건설이 진행된다면 인천시교육청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은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초중등 교육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지만, 시 · 도교육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지역간 교육양극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교한 대책 없이 초중등 교육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학교 신설로 인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사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환급법안의 통과를 정부정책의 신뢰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이와 함께 학교신설 문제와 연관하여 인천교육의 백년지대계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갑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학교용지부담은 개발사업자와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0.8%를 부과한 것으로 2001년부터 5천600억원을 징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교육세를 내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취지의 위헌판결을 내렸고, 납부고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만 환급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납부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80%에 해당되고 금액으로도 4천억원에 달해 그동안 행정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현안이다.

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약 3년간 계류돼 오던 것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과정을 지켜보는 감회가 남달랐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는 국가정책에 순응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명제라는 데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납부자들이 '서민'이라는 데 그 의미가 더 있다. 서민을 위한 정치에는 파격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실천'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필자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결정되었으므로 학교 건설과 관련된 비용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이며, 이는 학교 신설과 관련된 문제와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2006년 조사한 바로는 인천은 학급당 학생수가 35.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낮은 경북의 25.1명에 비해 무려 10명 가까운 학생이 한 학급에 더 많이 배치돼 있는 숫자이다. 또한 과밀학급에 대한 시·도별 분석을 한 결과, 인천 중학교의 경우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6.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한 광주의 35.1%에 비해 20% 이상 높은 것이다.

인천의 특성이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천의 경우 청라·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학교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까지는 신설학교 설립의 재원이 국가 재정과 인천시의 교육채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11월 기준으로 인천시의 교육채 발행이 3천640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필요한 학교수는 약 130개로, 학교 하나를 짓는 데 드는 현재 비용인 250억원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3조2천500억원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방식으로 학교건설이 진행된다면 인천시교육청이 파산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은 그리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학교신설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를 공공시설 범위에 포함시키는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현재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인 추세가 초중등 교육 부분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시키는 것이지만, 시·도교육청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으면 지역간 교육양극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정교한 대책 없이 초중등 교육이 지방교육청으로 이관된다면 학교 신설로 인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인천의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

사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 환급법안의 통과를 정부정책의 신뢰와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이와 함께 학교신설 문제와 연관하여 인천교육의 백년지대계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의결번호	2008자심39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일간투데이	(주)일간투데이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0 대표이사 이 상 섭
심의대상기사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2008년 1월 30일자 15면)	
주 문	(주)일간투데이가 발행한 일간투데이 2008년 1월 30일자 15면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광주 북구갑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일간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5년 전 변화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했다. 더구나 선진사회를 진입하고자 하는 전환점에서 혁신의 길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했다.

재정은 그 동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 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대두는 지난 날의 재정운용방식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경제 · 사회변화에 대응해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선진화된 재정운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미래 국가발전을 고려한 거시적 · 전략적 재원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 전

략인 '국가비전 2030'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단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실천가능성도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졌다.

둘째, 부문별·부처별 전략적 재원 배분과 아울러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방식을 도입했다. 과거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재정당국이 적정성을 검토해 내역을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예산을 과대 요구하고 대폭 삭감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크게 축소된 반면, 자율적 세출 구조조정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08년간 총 16조원에 달했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업비관리·집행점검 등 집행과정관리,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재정운용은 사후적 성과관리와 환류노력이 미약해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재정지출의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각 부처가 명확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재정투입의 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를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예산편성·집행·성과정보 등 재정운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재정체계에 원가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일반 국민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각종 재정현황자료를 접할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4대 재정개혁을 포함한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도 큰 성과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상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98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4만 명

••• 특별기고 •••

재정·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5년 전 변화의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퇴보를 의미했다. 더구나 선진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전환점에서 혁신의 길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했다.

재정은 그 몸안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두어 고도성장을 뒷받침했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복지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끊임없이, 그리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분제의 대두는 지난 날의 재정운용방식에 안주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 왔다.

이처럼 경제·사회환경에 대응해 기획예산처는 2003년부터 선진화된 재정운용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스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재정사업 성과관리 △지방 예산회계시스템 등 4대 재정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용시스템의 혁신을 추진해 왔다.

우선, 비정 국가발전을 고려한 거시적·장期的 재원배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 시계에서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장기 정책인 '국가비전 2030'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단년도 예산과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서 실천가능성도 높아지고 체계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전략적 재원배분이 가능해졌다.

둘째, 부문별·부처별 전략적 재원 배분과 아울러 부처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방식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따라 세부 사업별로 재정당국이 적정성을 검토해 내역을 조정하는 상향식(bottom-up)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 예산을 과대 요구하고 대폭 삭감하는 관행이 반복됐다.

그러나 이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예산요구 증가율은 크게 축소된 반면, 자율적 세출 구조조정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서 2008년간 총 16조원에 달했다.

셋째,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타당성 평가, 총사업비관리·집행점검 등 집행과정관리, 성과목표관리 및 재정사업 자율·심층평가 등 사후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그간 재정운용은 사후적 성과관리와 환류노력이 미약해 한번 예산이 반영되면 재정지출의 성과와 관계없이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체계적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각 부처가 명확한 목표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재정투입의 효과를 크게 개선할 수 있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를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선진국형 프로그램 예산체계로 전환하고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수입·예산편성·집행·성과정보 등 재정운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재정체계에 원가정보 및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해져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일반 국민도 쉽고 일목요연하게 각종 재정현황자료를 접할 수 있어 재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제정해 4대 재정개혁을 포함한 재정운영시스템 혁신,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예산편성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한 점도 큰 성과다. 공공기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상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298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24만 명에 달하며, 총 자산은 약 627조원, 총 예산은 272조원으로 이 예산 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고용안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경직와 관행 타파를 보장했으며, 공정한 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몸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혁신평가를 새롭게 실시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유도했으며, 공공기관 '알리오(Alio)'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인사, 조직, 재무, 사업, 경가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 입찰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감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억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우리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일찍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비워 노력해 왔다. 자기중심 게을 벗은 420만 조각 내어 혁신의 바닷을 뿌리고 617만 아름 뜻실 속에서도 차별전에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고 이제는 혁신의 결실과 성과를 거두며 그 진정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혁신은 끊거행이거나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의 재정·공공운용시스템도 여전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하고 틀을 바꾸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끝끝게 유지하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에 달하며, 총 자산은 약 627조원, 총 예산은 272조원으로 이 예산 규모는 정부 재정의 1.1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그동안 도로, 철도, 항만, 수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지만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공기관 운영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부 감독 및 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보강했으며, 공정한 임원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 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혁신평가를 새롭게 실시하여 성과와 고객중심의 경영을 유도했으며, 공공기관 '알리오(Alio)'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별 인사, 조직, 재무, 사업, 평가는 물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용정보, 입찰정보 등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감시를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억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5년간 우리는 시대적 변화 요구에 앞장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쳐 노력해 왔다. 차가운 겨울 벌판 같았던 조직 내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고 따가운 여름 햇살 속에서도 치열하게 변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이제는 혁신의 결실과 성과를 거두며 그 진정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혁신은 과거형이거나 현재완료형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현재진행형이다. 현재의 재정 · 공공운용시스템도 여건변화에 따라 계속 보완하고 틀을 바꾸어야 한다. 다만, 한 가지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을 올곧게 유지하는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의결번호	2008자심4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경북일보	경북일보(주) /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12 대표이사 정 정 화
심의대상기사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년 2월 4일자 18면)	
주 문	경북일보(주)가 발행한 경북일보 2008년 2월 4일자 18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경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결번호	2008자심4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강원일보	(주)강원일보사 / 강원 춘천시 중앙로 1가 53 대표이사 이 희 종
심의대상기사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2008년 1월 22일자 7면)	
주 문	(주)강원일보사가 발행한 강원일보 2008년 1월 22일자 7면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강원 강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강원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최욱철 / 강원랜드 감사

지난해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해안에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지켜보며, 동해안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이번과 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동해안에서 발생해 아름다운 동해안 백사장이 기름띠로 뒤덮이고 완전회복까지 수십년이 걸리게 된다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동해안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부존자원이나 산업시설이 없는 강원도로서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우거진 산림 등의 자연 경관이야말로 도민들이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동해안 관광산업은 해안침식,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산림훼손 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의 관심부족과 이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관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서·남해안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가 해남과 영암에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의 경우, 2016년까지 약 35조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산업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역시, 2011년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관광지구 조성 중인 가운데,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서·남해안과 달리 침체일로를 겪고 있

는 동해안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해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활동과 주민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릉시, 동해시 등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20%로 전국 평균 53.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해안침식 등 동해안 자연경관 훼손에 대응하고 대규모 관광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해안에 인접한 6개 시·군은 너울파도에 따른 해안침식이나 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서해안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갖가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통합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6개 시·군이 미시적인 소지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온 동해안 지자체의 생존과 번영이 향후 동해안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나 새만금 국제관광지구조성 프로젝트와 같이 동해안 6개 시·군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 6개 시·군을 2~3개 지자체로 통폐합하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동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강원포럼

최욱철 강원랜드 감사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지난해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해안에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지켜보며, 동해안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만약 이번과 같은 기름유출 사고가 동해안에서 발생했다며 아찔한 동해안 백사장이 기름띠로 뒤덮이고 완전회복까지 수십년이 걸리게 된다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동해안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한 부존자원이나 산업시설이 없는 강원도로서는 동해안의 아름다운 백사장과 우거진 산림 등의 자연 관광이야말로 도민들이 잘 보전하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동해안 관광산업은 해안침식, 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산림훼손 외에도, 종합종부보부터의 관심부족과 이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인하여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관광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서·남해안과는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라남도가 해남과 영암에 추진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프로젝트)의 경우, 2016년까지 약 35조원을 투자하여 관광레저산업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역시, 2011년까지 약 3조9,000억원을 투자하여 국제관광지구 조성 중심 거점에,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돼 환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서·남해안과 닮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동해안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동해안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 지자체의 활동과 주민들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릉시, 동해시 등 6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약 20%로 전국 평균 53.6%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해안침식 등 동해안 자연경관 훼손에 대응하고 대규모 관광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동해안에 인접한 6개 시·군은 너울파도에 따른 해안침식이나 대형 산불 등의 자연재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서해안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이 단 한 번의 사고로 엄청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는 갖가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통합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6개 시·군이 미시적인 소지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온 동해안 지자체의 생존과 번영이 향후 동해안 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이나 새만금국제관광지구조성 프로젝트와 같이 동해안 6개 시·군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대규모 관광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동해안 6개 시·군을 2~3개 지자체로 통폐합하는 자구노력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동해안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의결번호	2008자심45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새전북신문	(주)새전북신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241-2 대표이사 임 용 진
심의대상기사	『설을 맞이하며』 (2008년 2월 6일자 12면)	
주 문	(주)새전북신문이 발행한 새전북신문 2008년 2월 6일자 12면 『설을 맞이하며』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전부 완산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새전북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설을 맞이하며

김광삼 / 변호사 · 도교육청 공직자 윤리위원장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본래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원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첫째, 설날을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날은 묵은해에서 분리되어 가는 전이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설날은 '선날' 즉 개시라는 뜻의 '선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 되어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섧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신일(愼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신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한편 설날은 원일(元日), 원단(元旦), 정조(正朝), 세수(歲首), 세초(歲初), 세시(歲時), 연두(年頭), 연시(年始) 등의 한자어로

도 불린다.

설날은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태양태음력을 받아들인 이후 태양력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려시대에는 설과 정월 대보름, 삼짇날, 팔공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였으니, 이미 이 시대에는 설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 민족의 중요한 명절로 확고히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는 차례, 세배, 설빔, 덕담, 문안비, 설 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 귀 쫓기, 청 참, 윷놀이, 널뛰기, 머리카락 태우기 등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례지내기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상 뒤에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놓는다. 조상의 신주, 곧 지방은 병풍에 붙이거나 위패일 경우에는 제상 위에 세워 놓고 차례를 지낸다.

둘째, 세배하기이다. 설날 차례를 마친 뒤 조부모, 부모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가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데, 이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온 사람이 어른일 때에는 술과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관례이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세뱃돈과 떡, 과일 등을 준다. 세배를 할 때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위에 놓아서 큰절을 한다.

셋째, 설빔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한다. 이 설빔은 대보름까지 입는 것이 보통이다. 〈열양세시기〉 원일조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새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歲庇陰)(설빔)'이라 한다 하였다.

넷째, 덕담이다. 덕담(德談)이란, 설날에 일가친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아들 낳기를 빕니다"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장유(長幼)의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일로 서로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올 설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행복을 나누는 명절이었으면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날 만큼은 가족 모두 모여 세시풍속을 즐기고, 덕담을 나누며 흥겹게 보내자. 서로 사랑으로 만나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설을 맞이하며

오늘과 내일

김광삼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우리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본래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 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설이란 새해의 첫머리란 뜻이고, 설날은 그중에서도 첫날이란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설날의 어른에 대해서는 대개 세 가지 정도의 설이 있다.

첫째, 설날을 '낯설다'라는 말의 어근인 '낯'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설음'이라는 의미와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낯'이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설날은 북한에서 분리되어 가는 것이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그러한 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둘째, 설날은 '선날'과 개시라는 뜻의 '섣다'라는 말에서 '새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풀으로 추석할 수 있다. 이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 되어 설날로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설날을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는 뜻의 옛말인 '설다'에서 그 어원을 찾기도 한다. 이는 설날을 한자어로 삼일(三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삼일이란 '삼가고 조심하는 날'이란 뜻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 질서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긴 말이다. 한편 설날은 원일(元日), 원단(元旦), 정조(正朝), 세수(歲首), 세초(歲初), 세시(歲時), 연두(年頭), 연시(年始) 등의 한자어로도 불린다.

설날은 적어도 6세기 이전에 중국에서 태양태음력을 받아들인 이후 태양력을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고려시대에는 설과 정월 대보름, 삼짇날, 팔공회, 한식, 단오, 추석, 중구, 동지를 9대 명절로 삼았으며,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한식, 단오, 추석을 4대 명절이라 하였으니, 이미 이 시대에는 설이 오늘날과 같이 우리민족의 중요한 명절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설날의 세시풍속으로는 차례, 세배, 설빔, 덕담, 문안비, 설 그림, 복조리 걸기, 야광 귀 쫓기, 청 참, 윷놀이, 널뛰기, 머리카락 태우기 등 그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례지내기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일찍이 각 가정에서는 대청마루나 큰 방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상 뒤에 병풍을 둘러치고 제상에는 설음식을 갖추어 놓는다. 조상의 신주, 곧 지방은 병풍에 붙이거나 위패일 경우에는 제상 위에 세워 놓고 차례를 지낸다.

둘째, 세배하기이다. 설날 차례를 마친 뒤 조부모, 부모에게 절하고 새해 인사를 올리며, 가족끼리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하는데, 이를 세배(歲拜)라 한다. 세배가 끝나면 차례를 지낸 설음식으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에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서 세배를 드린다. 세배하러 온 사람이 어른일 때에는 술과 음식을 내어놓는 것이 관례이나, 아이들에게는 술을 주지 않고 세뱃돈과 떡, 과일 등을 준다. 세배를 할 때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을 위에 놓아서 큰절을 한다.

셋째, 설빔이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새 옷을 입는데, 이것을 설빔(歲粧)이라고 한다. 이 설빔은 대보름까지 입는 것이 보통이다. 〈열양세시기〉 원일조에 따르면 남녀노소가 새옷을 입는 것을 '세비음(歲庇陰)(설빔)'이라 한다 하였다.

넷째, 덕담이다. 덕담(德談)이란, 설날에 일가친척들과 친구 등을 만났을 때 "과세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아들 낳기를 빕니다" 등과 같이 그 사람의 신분 또는 장유(長幼)의 차이에 따라 소원하는 일로 서로 축하하는 것을 말한다.

올 설날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롭게 행복을 나누는 명절이었으면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안타깝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고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날 만큼은 가족 모두 모여 세시풍속을 즐기고, 덕담을 나누며 흥겹게 보내자. 서로 사랑으로 만나는 행복한 명절 될 수 있도록!

/변호사 · 도교육청 중독자 올리위원장

의결번호	2008자심4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경북매일	(주)경북매일신문 /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로1가 60-14 대표이사 김 기 호
심의대상기사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2008년 2월 4일자 3면)	
주 문	(주)경북매일신문이 발행한 경북매일 2008년 2월 4일자 3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경북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08자심41 보도내용(263쪽) 참조〉

의결번호	2008자심47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매일신문	(주)매일신문사 / 대구 중구 계산동2가 71 대표이사 이 용 길
심의대상기사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2월 4일자 20면, 2월 5일자 34면)	
주 문	(주)매일신문사가 발행한 매일신문 2008년 2월 4일자 20면, 2월 5일자 34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08자심41 보도내용(263쪽) 참조〉

의결번호	2008자심4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영남일보	(주)영남일보사 / 대구 동구 신천동 111 대표이사 배 성 로
심의대상기사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2008년 2월 4일자 26면, 2월 6일자 5면)	
주 문	(주)영남일보사가 발행한 영남일보 2008년 2월 4일자 26면, 2월 6일자 5면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포항북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영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2008자심41 보도내용(263쪽) 참조〉

의결번호	2008자심50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괴산증평신문	(주)괴산증평신문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702-6 대표이사 김 준 섭
심의대상기사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2008년 2월 4일~11일자 4면)	
주 문	(주)괴산증평신문이 발행한 괴산증평신문 2008년 2월 4일~11일자 4면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괴산증평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등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김종률 국회의원이 우리지역과 관련한 의정보고를 냈다. 김 의원은 보고서를 내면서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몸을 던져서 일했다"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지역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일 잘하는 의원'으로 뽑히는 개인적인 영광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돌이켜 보면 가슴 한 켠에 아쉬움도 남아 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이 가장 컸다"고 밝혔다.

4개군 중 우리지역과 관련한 보고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군사학교 등 국책사업 유치에 앞장
괴산IC간 국도 확포장 추진

괴산-괴산 IC간 국도확포장 추진

괴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괴산~감물~괴산IC간 국도 19호선이 확장된다.

이 도로는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는데, 지난 2006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신규사업으로 10억원의 기본설계비를 어렵게 확보했다.

지난해 예산이 집행돼 올해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괴산-연풍 국도와 숙원사업비 지원
사리, 맨발숲길 조성, 괴산느티나무동산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괴산~연풍 간 국도 34호선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괴산~연풍2구간(칠성면 태성~연풍면 삼풍)은 243억원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해 올해까지 완공된다.

괴산~연풍1구간(괴산읍 대덕~칠성면 태성)도

예결위에서 15억원을 증액시켜 모두 87억원을 확보, 계획연도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사리면 맨발숲길 조성사업 2억원 △괴산읍 금산삼거리~느티나무 동산간 도로개설 5억원 △청천면 삼송1교 가설사업에 9억원을 확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안일대 농업용수 걱정 해결

청안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 농림부의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타당성 조사지구로 원남지구를 최종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원남저수지의 여유수량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중소규모 수리시설도 보강돼 재해위험을 해소하게 된다.

전국에서 2곳이 사업지구로 선정됐는데, 지난해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을 증액시켰다. 따라서 원남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 기본조사가 지역주민들의 열망대로 올해부터 추진된다.

군사학교 유치와 국책사업 확보 성과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학생중앙군사학교가 우리 지역에 둥지를 틀게 됐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유치에 힘을 보탰듯이 앞으로도 중앙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괴산읍 소도읍육성사업 유치노력이다.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관련 부처를 뛰어다녔다. 소도읍육성사업은 특산물인 고추를 브랜드화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마무리된다.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군사학교 등 국책사업 유치에 앞장
괴산IC간 국도 확포장 추진

김종률 의원, 일잘하는 의원 선정

증평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증평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증평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추진된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농촌위한 FTA대책 최선
서민경제위한 목소리 반영

업체 가동에 차질없도록 지원

남부우회도로 건설
증평읍사무소 확별교부금 지원

증평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 지원

괴산-괴산 IC간 국도확포장 추진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으로 칠성면 갈은권역이 선정된 것도 큰 보람이다. 갈은권역은 한번 탈락돼 2년에 걸친 노력 끝에 선정됐으며 마을경관개선과 소득확충 등의 각종 사업이 3개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군의 특산물인 고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적극 지원했다.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도 농림부의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종률 의원, 일잘하는 의원 선정

농촌위한 FTA대책 최선
서민경제위한 목소리 반영

원내부대표로 활동하면서 재경부와 협의해 농업용 면세유 혜택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관철시켰으며, 예결위원으로서 농업부문의 추가적인 FTA대책예산 확보에 앞장섰다.

또 올 예산에 수리시설개보수 200억, 대단위 종합개발사업비 190억, 중규모용수개발시설 200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농업생산시설 사업비 확보에 노력했다.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에 이어 지난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발의해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2005년 말 여당의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론을 뒤로한 채 WTO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했고 한 · 미 FTA협상에 따른 농업회생대책을 촉구하는 등 농업과 농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어르신들의 복지 확대 방안 마련
농어촌교육 지원에 앞장

원내부대표로 어르신들의 복지확대방안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9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7월부터 치매 ·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께 요양시설 입원비가 지원된다.

예산심의에서 농어촌지역 영유아 양육비지원 162억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한 민간 유아기본보조금 15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농어촌지역 학생을 위한 대입농어촌특별전형 대상이 시 단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도록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전문대학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원을 증액시켰고, 지방교육교부금 확보에도 노력했다. (예결위에서 451억원 증액 등 30조6387원 반영)

법안 통과 1위 김종률
'일 잘하는 의원' 으로 선정

경실련의 17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전체 의원 중 의원발의 법안 가결률 1위 의원으로 뽑혔다. 법안 가결률은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으뜸이 되는 기준이다.

시민단체가 선정한 2006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꼽히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증평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
국민체육센타 건립기금 지원

증평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역경제를 선도할 증평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보강천을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건설이 가장 큰 현안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원칙적으로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업을 지난 2005년 국비사업으로 확정한 데 이어 2006년에 3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올해는 예결위에서 20억원을 증액시켜 모두 8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앞으로 계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업체 가동에 차질없도록 지원

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폐수종말 조성과 관련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다. 2006년 행정절차 미완료로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비를 국회에서 10억원 확보했고, 올 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업체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

증평, 신활력 사업 선정 '경사'

2005년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증평이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증평은 인구밀도 등에서 선정기준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신생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증평군에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을 잘 추진해서 지난해에는 제2기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고, 앞으로 3년간 57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돼 연차 사업이 추진된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국민체육센타 건립 지원

증평군은 신생자치단체로 여러 가지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다. 편익시설 확충 노력의 결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내성리에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된다. 올해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공간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센터(수영장)를 건립하도록 국민체육기금 30억원을 지원했다. 송산리에 준공된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이 갖춰져 군민들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남부우회도로 건설
증평읍사무소 특별교부금 지원

보건복지타운과 청소년수련관 등을 연결하는 초중~장동간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군비로 추진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93억원이나 소요돼 특별교부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증평읍사무소 민원실과 증설되는 기구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군청사 신축사업비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신규사업으로 연천천 생태하천 정화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1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예산 8억원이 연차사업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재해대책 사업비로 6억원을 확보, 증평읍 덕상리 작동교 가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의결번호	2008자심51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예산신문	(주)예산신문사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406-3 대표이사 정 낙 규
심의대상기사	-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2008년 2월 4일자 1~2면) -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2008년 2월 4일자 2면)	
주 문	(주)예산신문사가 발행한 주간예산신문 2008년 2월 4일자 1~2면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2면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주간예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남 홍성 · 예산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의정실적, 향후 계획 등을 2개 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홍문표 국회의원은 무자년 새해 도청이전사업과 구도심 공동화 방안 등에 대한 법안제정 등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FTA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홍문표 국회의원으로부터 제17대 국회를 지난 4년간 일해온 소감과 새해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년간 의정활동중 보람된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지난 4년간 농림 해양 수산위 간사를 하면서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농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15개에 달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상정하여 각 부처에 경각심과 일을 할 수 있게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달래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30여 개의 농민 단체 및 각계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이 저에게는 과분하지만 큰 재산이자 보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 · 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1년에 2조 116억원의 농어민 부담을 절감시킨 법이 통과될 때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활동하면서 1월 29일 농림해양 수산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쌀 보전직불금을 5년간 17만 83원으로 동결시킴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노력 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야당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야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새정권의 기대감과 역동

성이 농림부에게도 쉽게 설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중략)

□ 인수위에 참여해 하는 일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0년만에 정권 창출의 새 역사를 열어 가게 되었습니다.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많은 7개분과 중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개월 기간 동안 현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명박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공약을 반영한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잘못 운영되어 온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고 미래의 농어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중략)

□ FTA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전략은?

우리 농업의 당면한 농업현실은 하루 자살자가 6~7명에 이르고 있고, 농가부채가 평균 2,816만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5배가 증가하는 등 그야말로 농업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분야 연간 약 6천7백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한EU FTA, 한중 FTA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 될 경우 수많은 농업인이 농어촌을 떠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농업개방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농어민 소득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중 한예로 식품관련 인·허가를 비롯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의 농림부로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체계를 일원화해야만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는 농민들도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산물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저 홍문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개방화의 거센 파고를 맞설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농업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가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홍문표 국회의원은 무자년 새해 도청이전사업과 주도심 공동화 방안 등에 대한 법안제정 등 현안해결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외함께 한FTA로 고통 받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보듬는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하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홍문표 국회의원으로부터 제17대 국회를 지난 4년간 일해온 소감과 새해설계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중 보람된 일이 있다면?

무엇보다 농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지난 4년간 농림 해양 수산위 간사를 하면서 현행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농민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15개에 달하는 법안을 낼 수 있게 백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달래서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30여개의 농민 단체 및 각계 기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이 저에게는 과분하지만 큰 재산이자 보람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1년에 235억원의 농어민 부담을 절감 시킨 법이 통과 된 뒤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번 대통령 인수위원회 활동하면서 1월 29일 농림해양 수산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쌀 보전 직불금을 5년간 17만 8천원으로 고정시킴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자 노력 한 것이 최고의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 아당을 하면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야당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이루지 못했던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는 새정권의 기대감과 역동성이 농림부에게도 쉽게 설득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결정이 없이나 우리 국민 들에게 큰 변화를 주고 기대와 실망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의 기회가 우리 예산 발전에 뜨거운 희망과 햇살이 비출 수 있을 거란 생각 됩니다. 홍문표 개인의 부귀영화 가 아닌 진정한 심부름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준 지난 4년은 정권 교체를 위해 온 국민이 노력해 주셔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2008년에는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희망과 햇살 같은 기회가 와 있기 때문에 개인, 우리 군민도 기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인수위에 참여해 하는 일은?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10년만에 정권 창출의 새 역사를 열어 가게 되었습니다. 10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인수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많은 7개분과 중 경제2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개월 기간동안 현 정부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인수 인계 받고 이명박 당선자가 향후 5년 동안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각종 공약을 반영한 국정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소외계층인 농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동안 잘못 운영 되어온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고 미래의 농어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어민, 여성,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일할 것입니다.

□ FTA를 극복하기위한 농업전략은?

우리 농업의 당면한 농업현실은 하루 자살자가 6~7명에 이르고 있고, 농가부채가 평균 2,816만원으로 10년전에 비해 1.5배가 증가 하는 등 그야말로 농업인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로 인해 농업분야 연간 약 6천7백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은 물론 한EU FTA, 한중FTA 등 농업개방이 가속화 될 경우 수많은 농업인이 농어촌을 떠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어려운 농업개방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실한 농어민 소득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중 한예로 식품관련 인·허가를 비롯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의 농림부로 일원화가 돼야 합니다.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일관된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체계를 일원화해야만 농가소득이 증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2면에 계속)

△ 2008년 2월 4일자 1면

□ 경제살리기… 국회의 역할?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는 파탄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절반이 청년들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울증이 사회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007만원, 가구당 3,156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무려 4.6% 증가한 수치이며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 해에만 무려 32조1000억원(전년 대비 24%) 급증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판탄으로 인해 자살률 증가율 세계1위, 이혼율 3위, 이혼증가율 2위로 나타나는 등 민생경제 파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대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을 고쳐 국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 예산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년여 간 의정활동 속에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면서 수많은 정책개발을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대전에서 더부살이하던 충남도청을 예산·홍성에 유치하는 큰 과업을 이루어 내었고, 예산을 행정,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충청권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지난날의 모든 앙금을 털어버리고, 나 보다는 낮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 2012년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쌀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2012년까지 5년간 현행 17만83원(80kg기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소득등의보장에관한개정법률」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85원(80kg)으로 5.2%(8,818원)낮아지게 되어 있어 농가소득이 감소될 전망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 통과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의(당시 후보자) 농어촌 10대 선거 공약에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공약을 건의하여 반영함은 물론 국회 및 농민단체들과 연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현행유지에 대해 년간 4천억원의 추가재원이 더 소요 되는 등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농민단체와 10만 명 목표로 대국민 서명 운동을 비롯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병행하였다.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전업농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국내 농업계 업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쌀값마저 하락 된다면 농업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며"앞으로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원안 되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1면에 이어

아울러 이제는 농민들도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산물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저 홍문표는 여러분들을 위해 개방화의 거센 파고를 맞설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농업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경제살리기… 국회의 역할?

나라가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서민경제와 지방경제는 파탄 상태입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그 절반이 청년들입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투자자도 모두 외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울증이 사회에 전염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007만원, 가구당 3,156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무려 4.6%증가한 수치이며 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 채무는 지난해에만 무려 32조1000억원(전년 대비 24%) 급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판탄으로 인해 자살률 증가율 세계1위, 이혼율 3위, 이혼증가율 2위로 나타나는 등 민생경제 파탄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회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경제 살리기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및 대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법을 고쳐 국민이 잘사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군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

희망찬 무자년(戊子年) 새해, 예산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4년여간 의정활동 속에서 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면서 수많은 정책개발을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불우이웃, 농어민, 축산인 등 사회 약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면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2년 동안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한 채 대전에서 더부살이하던 충남도청을 예산·홍성에 유치하는 큰 과업을 이루어 내었고, 예산을 행정, 교통, 문화, 경제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충청권의 중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에는 지난날의 모든 앙금을 털어버리고, 나 보다는 낮은 계층의 이웃들을 돌보며, 서로 합심하고 단결하는 자세로 우리 예산군의 발전과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새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 2008년 2월 4일자 2면

은 계층의 이웃들을 돌보며, 서로 합심하고 단결하는 자세로 우리 예산군의 발전과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 새해가 되도록 합시다.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2012년까지 17만83원으로 고정-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쌀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이 2012년까지 5년간 현행 17만83원(83kg 기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개정법률」을 여 · 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올해 쌀 목표가격은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161,265원(80kg)으로 5.2%(8,818원)낮아지게 되어 있어 농가소득이 감소될 전망이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쌀 목표가격 통과를 위해 이명박 당선인의(당시 후보자) 농어촌 10대 선거 공약에 목표가격 동결을 위한 공약을 건의하여 반영함은 물론 국회 및 농민단체들과 연계한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현행유지에 대해 연간 4천억원의 추가재원이 더 소요 되는 등 재정부담이 뒤따른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이러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농민단체와 10만 명 목표로 대국민 서명 운동을 비롯 국회 농해수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작업을 병행하였다.

쌀 목표가격이 5년 동안 동결될 경우 우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농지와 농기계 구입 등 규모화를 위한 장기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쌀 농업의 구조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농민들은 농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전업농 육성 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 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홍문표 의원은 "국내 농업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한 · 미FTA협상 타결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쌀값마저 하락된다면 농업을 포기하고 말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의결번호	2008자심5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익산신문	(유)익산신문사 / 전북 익산시 남중동 82-58 대표이사 박 종 규
심의대상기사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만들자"』 (2008년 2월 4일자 11면)	
주 문	(유)익산신문사가 발행한 익산신문 2008년 2월 4일자 11면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만들자"』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익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익산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선별하여 그의 도의회 활동 관련 내용을 인물사진과 함께 1개면 전체에 걸쳐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도의회 황현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만들자"

도의회 황현 민주당 원내대표(익산3선거구)는 24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당 대표연설을 가졌다.

황현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을 통해 대선공약 이행 점검 태스크포스팀의 효율적 운영과 새만금 도민상생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황 대표는 "토공과 주공 통합, 농진청 폐지 등으로 전북 혁신도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지역공약과 전북 현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이어 "궁시상성(弓矢相成)처럼 활과 화살이 서로 도와야 목적을 이루듯 새만금을 기회의 땅, 중동의 두바이를 능가하는 세계적 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새만금 도민상생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당 대표연설을 요약했다.

오늘,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서기까지, 지난 대선에서 겪었던 분노한 민심과 참혹한 대선참패라는 정치현실을 보면서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을 통감하고 많은 반성과 자기고백을 했습니다.

과연 대선을 향한 도민의 열망과 기대에 최선을 다했느냐는 반성을 했습니다. 통합의 실패, 후보 단일화의 실패에 대한 도민의 좌절과 절망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지 고백을 했습니다.

도민이 진정 바라는 정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 앞에 정중히 반성과 성찰의 석고대죄를 고합니다.

도민이 내리는 회초리를 달게 받겠습니다. 도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도민 앞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중략)

이제는 전북의 변화와 발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화해와 통합의 공동체 회복을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우리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이던 새만금특별법을 비롯한 무주태권도진흥법과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해왔고, 전북발전과 도민을 위해서라면 도와 여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새만금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도민의 총궐기 속에서, 두 번의 삭발은 저에게도 전북발전이라는 사명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이제 전북이 동북아와 세계를 향한 도약과 전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민주당은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일하는 전북, 행복한 전북도민'이라는 목표점으로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고 소외당한 이웃을 배려하는 '차별 없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의욕을 꺾지 않는, 일하는 복지제도를 통해 분배개선으로 이어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내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도민 통합과 전북 성장의 참 맛을 200만 도민이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농림부가 식품산업을 21세기 환황해권 거점 사업으로, 세계 5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장대한 계획 하에 공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선정에 지난 2007년 12월 30일 전라북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북 식품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전환점이자,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농도 전북으로서는 무엇보다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으며, 또 하나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민의 힘 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북 만들자"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 설치… 세계적 명소로
새정부 공약 · 전북현안 구체화할 TF팀 운영을

그러나, 장밋빛 희망 뒤에 어두운 그림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진행되는 현실은 낙관만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명박 신정부의 중앙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이었던 농업진흥청이 폐지돼, 당장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축소가 예상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출연기관으로 바뀔 경우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북으로 이전해 온다는 보장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청이 이전한다 해도 당초 전체 면적(10,145㎢)의 약 2/3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정부와 인적 · 물적 네트워크 형성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전라북도의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엊그제서야 새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개의 TF팀을 구성 · 운영하기로 하였다하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며, 신정부의 지역공약 내용과 지역현안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화 할 수 있는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대선공약 이행과 점검을 위한 T/F팀'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도내 정치권과 전라북도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전북 현안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난 십 수년간 지속되어 온 찬반 논쟁과 두 차례에 걸친 공사중단, 그리고 수질문제 등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이루어 낸 새만금 사업을 기필코 성공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새만금을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며, 중동의 두바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사업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국내 · 외 전문가와 사회단체, 도내 14개 시 · 군이 공동 참여하는 가칭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새만금 도민 상생위원회'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민의 통합된 힘을 한데 모아 새만금이 두바이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의결번호	2008자심55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경동신문	(주)경동신문 / 서울 광진구 능동 237-5 대표이사 구 직 회
심의대상기사	-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2008년 2월 16일자 8면) -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2008년 2월 16일자 8면)	
주 문	(주)경동신문이 발행한 경동신문 2008년 2월 16일자 8면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경동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광진갑 및 광진을지역)와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예정자 1인만을 각각 선정하여 그들의 출마 포부 및 선거공약 등을 밝히는 인터뷰 기사를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현장정치 · 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

권택기 한나라당 광진갑 예비후보

◆예비후보께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사표를 밝혀주십시오.=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갈등과 반목의 시대에 종언을 고하고 통합과 발전의 실용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특별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당선인께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실 때 홍보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시장후보 이미지 메이킹을 담당했고 지난해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경선 때는 기획단장으로, 대통령 선거 시에는 안국포럼 기획실장으로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습니다. 때문에 당선인의 생각과 국정 운영철학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당선인께서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일정석 이상을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특히 광진구 출마를 결심한 것은 제게 가장 힘든 시기였던 90년대 중곡동 지하 자취방에서 생활할 때 이웃주민들께서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기억에 꾸준히 광진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구민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경쟁 후보와 비교해 뛰어난 자신의 전문성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당선인의 국정 운영철학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민생정치 현장에서 차기 정부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 국민동의를 얻고 또 국민들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현장 정치, 실용 정치'를 펼치는 일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철학에 부합될 수 있도록, 광진구에서 구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장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략)

◆현재 광진구가 안고 있는 현안(선거구 중심으로)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 공천을 받았을 경우 제시할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

(중략)

현재 광진구 갑선거구(중곡1·2·3·4동, 군자, 능동, 광장, 구의2동)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립서울병원 이전·활용방안입니다. 세부적인 방안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국립 서울병원을 이전하고 이 부지를 중곡 1·2·3·4동과 연계해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광진구 랜드마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합니다. 상업적,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천호대로가 10차선이라는 큰 메리트를 갖고 있으나 상업지역은 군자역 일대밖에 없습니다. 이 상업지역을 군자교에서 아차산역까지 확대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이익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진구 전체적으로는 아차산, 어린이 대공원, 한강 수변자원 등을 적극 활용해 지리적·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저는 90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대원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한 동생과 함께 용곡초등학교 인근 반지하방에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 점이 너무 고마웠고 이러한 인연으로 광진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국회의원 출마도 주저 없이 광진구를 선택했습니다. 또 그동안 광진구 발전방안에 대해 확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구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국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정치·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

국립서울병원 이전으로 주민 이익 극대화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김흥권 한나라당 광진을 예비후보

◆예비후보께서 18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사표를 밝혀주십시오.=국민성공시대를 열 새 정부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실용정치가, 자치행정경험이 많은 인재가 절실합니다. 저는 서울시 산업국장, 문화국장, 행정국장 등 요직을 거치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특히 광진구의 현안들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는 청계천 복원과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완수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스타일을 잘 안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고 광진구를 발전

시킬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19회 행정고시 출신인 저는 2007년 말까지 30년간 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면서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일해왔습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잘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 잘하는 김흥권이 할 일 많은 광진에서 '일등 광진'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십시오. 당내 경선이나 본선에서 경쟁 후보와 비교해 뛰어난 자신의 전문성이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저는 서울시 산업국장, 문화국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을 두루 거친 '현장 행정전문가'라고 각종 언론에서 평가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며 서울시에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새 정부가 표방하는 실용주의를 이미 실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시정추진단을 주관해 '강소지방정부'의 기틀을 마련해 서울시 공무원 13%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인사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또 행정직이면서도 도시계획국, 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 등 기술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아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산업국장 재직시절에는 세계 우수 기업의 CEO와 학자들로 구성된 SIBAG(서울국제경제자문단)을 출범시켜 외자를 유치, 현재 여의도에 건립 중인 서울국제재정센터(SIFC)도 외자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진구가 안고 있는 현안(선거구 중심으로)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또 공천을 받았을 경우 제시할 주요 공약은 무엇입니까?=서울시 부시장 재직시절 서울시 현안을 다루면서 특히 광진구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재산세 공동과세를 추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진구도 올해 80억의 세수입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광진구 등 6개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 지난해 5월부터 광진구의 쓰레기가 강남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변개발이 관건입니다. 광진을 관광 및 레저스포츠 단지로 개발해 지역가치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저는 30년의 행정노하우와 강한 추진력으로 광진을 '한국의 베니스'로 만들겠습니다. 또 2호선(한양대-강변역)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자양로와 구의로를 확장해 병목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밖에 노유지역의 주거환경을 현대화 하고 동서울터미널과 인근 지역을 정비, 교통여건을 개선해 광진구가 명실공히 서울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나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간 서울시에서 간부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러 가지 숙원사업들을 성공리에 수행해왔습니다.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정책중심의 새로운 실용정치를 통해 새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을 지역구는 과거 20년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지역입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 4년 동안 대통령 당선인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경험과 서울시 부시장 출신으로서 새롭게 광진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결번호	2008자심5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중도일보	(주)중도매일 / 대전 중구 오류동 187-11 대표이사 김 원 식
심의대상기사	『세종시 그리고 李 당선인』(2008년 2월 18일자 7면)	
주 문	(주)중도매일이 발행한 중도일보 2008년 2월 18일자 7면 『세종시 그리고 李 당선인』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대전 유성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중도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종시 그리고 李 당선인

이상민 / 국회의원, 법사위 간사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즈음하여 매우 우려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 자신이 서울시장 재임시 "행정수도를 반드시 막겠다"고 했던 장본인이고, 수도권에 절대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사태이긴 하나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우리 충청지역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 분명하기에 우리 충청민의 비상한 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세종특별시 법안의 폐기 위기와 수도권 대폭 규제 완화가 바로 그것이다. 즉, 세종특별시 법안은 이미 작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행자위에서 표류 중에 있는데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충남도의 대립,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 등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협화음 물론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태도로 인해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급기야 2월 국회에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첨예한 대립으로 가려져 전혀 관심도 끌지 못하고 있고 곧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특히 충청민께 죄송할 따름이다.

그런 와중에 참여정부 후반기부터 이완된 틈을 비집고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론자들이 슬금슬금 기지개를 펴더니 이제 이명박 정권의 출범에 힘입어 경제살리기, 기업규제완화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규제 대폭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적 자원과 역량이 수도권이라는 블랙홀에 한 순간에 빨려들어가 지방은 그냥 붕괴되고 말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절체절명의 화급한 시대적 과제이다. 전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4%가 집중되어 있고, 금융은 3분의 2, 공공기관은 84%, 100대 기업 본사는 91%가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과밀되어 경쟁력은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도 매우 저급한 수준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 등 발전 기반은 이미 고사된 상태이고 주민들의 삶도 피폐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해법의 하나로 추진되었던 것이 행정수도였는데 서울 등 수도권의 막강한 저항에 좌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다. 서울공화국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였다.

그렇지만 국가균형발전 전력을 포기할 수 없는 일, 그래서 불완전하고 미흡하지만 임시 절충적 방안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정치권의 대체적 공감대 속에 마련된 행복도시이기에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의 부정적 태도, 중앙정부와 충남도, 인접 주민들의 의견 대립 등으로 세종특별시 법안이 좌초될 상황이고 이로 인해 행복도시 건설이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니 매우 안타깝다.

기고

이상민

세종시 그리고 李 당선인

이명박 당선인도 후보시절 세종특별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으므로 한나라당을 통해 그 약속이 지켜주길 바란다.

저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세종특별시법안이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되도록 그리고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수도권규제 완화시책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시와 제동을 거는 데 뜻을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아울러 우리 충청민들의 비상한 관심과 합일된 의지, 노력이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의결번호	2008자심57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시사저널	(주)독립신문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302 대표이사 심 상 기
심의대상기사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2008년 2월 26일자 44~45면)	
주 문	(주)독립신문사가 발행한 시사저널 2008년 2월 26일자 44~45면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양평 · 가평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시사저널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솟아올랐다

문화재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있어도 '무용지물' … 법규도 제대로 없어 화재 예방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시급

정 병 국 / 한나라당 · 문광위원

국보 1호 숭례문이 무너졌다.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뿐이다. 화재 현장을 방문했지만 한동안 멍하니 폐허 현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예방했다면,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처럼 비통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에 가슴이 저려왔다. 그동안 문화재 화재 대책은 끊임없이 수립되어 왔었다. 하지만 실제로 대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에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2005년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여러 부처와 함께 문화재 화재 대책을 내놓았다. 2005년 5월 문화재청, 문화관광부, 소방방재청 등은 정부합동으로 '낙산사 화재 복구 및 전통 사찰 화재 예방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전통 사찰 및 문화재 화재 방지 대책이었다. 당시 정부 대책에서는 문화재에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한다고 했다. 특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설치의 경우 문화재 훼손을 고려한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숭례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 관계 기관 합동 특별소방검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지만, 숭례문의 경우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주요 문화재의 경우에도 합동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이다. 결국 대책을 만들어도 시행하지 않았고, 이처럼 부실한 대처가 이번 숭례문 화재의 기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중략)

각 문화재 특성 잘 아는 전문가를 관리 · 예방에 투입해야

현재 주요 목조 문화재로서 '조기 화재 경보 시스템'과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곳은 해인사, 봉정사, 무위사, 낙산사 등 4곳뿐이다. 이번에 화재를 당한 숭례문은 화재 방재 시설 구축 대상 1백24곳 중 순위가 48위에 그쳐 방재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문화재 관리의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이었던 셈이다.

그동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없이 소속 의원들이 수년에 걸쳐 목조 문화재 방재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낙산사 화재, 2006년 수원시 화성 서장대 및 창경궁 문정전 방화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주요 목조 문화재의 방재 시설 및 방제 제도가 매우 부실함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목조 문화재는 한 번 소실되면 문화재적 가치가 상실되므로 예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필자도 국정감사 때마다 목조 문화재 화재 예방을 위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전통 사찰 및 목조 문화재의 경우 건축물의 특성상 일반 건물과는 다른 소방 시설 및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즉 옥외 소화전 설비, 화재 자동 탐지 설비, 방화 관리자 선임 등을 반드시 법적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법규정을 만들지 않았다.(중략)

무엇보다 먼저, 문화재 화재 예방 관련 법규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문화재청과 소방 당국이 합동 훈련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해서라도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문화재 관리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문화재 관리 업무의 소통 원활화 및 관리 일원화 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재 방재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재 방재 예산은 연평균 30억~40억원에 그치고 있어 제대로 된 방재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그동안 매년 방재 예산을 늘리라고 여야 의원 모두 주장했지만 기획예산처 등 정부에서는 예산을 늘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법규를 정해서라도 방재 예산을 증액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학예직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 문화재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학예직 공무원의 부족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예직 공무원이 많이 있다면 문화재 관리와 화재 예방은 더욱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은 6백60명에 이르는데, 문화재를 잘 아는 학예직은 겨우 43명, 즉 6.5%에 그치고 있다. 학예직이 전혀 없는 지역도 부산, 대구 등 다섯 군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를 올바로 관리 · 보존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예직 공무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대책은 말로만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바로 실행해 귀중한 우리 문화유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구멍 뚫린 법 위로 숭례문 불길 솟아올랐다

문화재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 있어도 '무용지물'…법규도 제대로 없어 화재 예방 위한 종합 시스템 구축 시급

의결번호	2008자심58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월간 중앙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 서울 중구 순화동 2-6 대표이사 김 진 용
심의대상기사	『바로 그 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렸다!』 [2008년 3월호 144~145면 사이(내지)]	
주 문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가 발행한 월간 중앙 2008년 3월호 144~145면 사이 『바로 그 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렸다!』 제하의 저술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서울 중구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의 광고는 그 광고가 저술의 정상적 판매 목적 외에 특정인의 인물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월간 중앙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저술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상업광고의 제한)제1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2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바로 그 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렸다!!
이제는 독자들이 열광할 차례!!!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솔직한 삶의 얘기에 감동 이어져

고려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청년 허준영은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한동안 외교관의 길을 가다 왜 갑자기 경찰의 길로 삶의 방향을 바꿨나?

"지휘관이 되려면 제너럴리스트가 돼라"고 강조하는 허준영 전 청장의 감동적 경찰 철학!

참여정부 386세대에 준엄한 평가

2003년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 전격 발탁된 허준영. 그는 이후 그는 청와대 386 참모들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들의 모순된 행동 등을 목격한다. 이후 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다가 이른바 '시위 농민 사망사건'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2005년 12월30일 눈물의 퇴임식을 치르며 경찰에서 떠나게 되기까지 386과의 갈등 전모. (후략)

의결번호	2008자심59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전남일보	(주)전남일보 / 광주 북구 중흥동 700-5 대표이사 박 기 정
심의대상기사	『정가 브리핑』(2008년 2월 25일자 5면)	
주 문	(주)전남일보가 발행한 전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5면 『정가 브리핑』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전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남도 내 예비 후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예정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가 브리핑

조영택, 7대 공약 발표

○…통합민주당 조영택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24일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국정운영 견제와 호남지역 낙후 탈피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정책선거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의정활동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제시하는 입법 활동과 통합민주당이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가는 대안 있는 원내 정책정당화에 기여하는 것 등도 의정활동의 주요 공약으로 설정했다.

장홍호 "공천 구태 탈피해야"

○…장홍호 통합민주당 서구을 예비후보는 24일 공천과 관련, "정치권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 등 구시대적 정치행태를 탈피해야 한다"며 "통합민주당이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4월 총선에서 국민의 표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지난주 박람회특별법이 국회를 통과, 2012 여수박람회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박람회 준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임홍채,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 임홍채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3시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구 빅마트) 5층에서 선거사무소를 열 예정이다.(중략)

송두영 "경로당-기업 자매결연"

○…통합민주당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24일 관내 경로당과 기업들이 자매결연하는 '1경로당-1사(社)'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광주 북갑 관내에 3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으나 지자체 지원금만으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관내 경로당과 국내 기업들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해, 경로당마다

매년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중략)

김경진, 개소식 성황

○…광주 북갑 예비후보자인 김경진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북구 두암동(동광주 약국 3층)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중략)

최경주, 지역구 민생투어

○…최경주 통합민주당 북구을 예비후보는 25일 지역구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운암동 지역 어르신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자립지원과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노력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윤정, 자장면 봉사활동

○…통합민주당 이윤정(KDN 감사)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주말을 이용, 효사랑 나눔의 샘터 자원봉사자들과 한전KDN 광주지부 한마음봉사단 10여 명과 함께 남구 자원봉사센터를 찾아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봉사활동을 벌였다.(중략)

이형석 "노 대통령 역사적 평가"

○…광주시의회 의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형석 통합민주당 광주북을 예비후보는 "25일 청와대를 떠나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있으나, 이는 우리 현대사가 그다지 정직하지 못했고 바른 길을 걷지 못함으로 인해 이를 정리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과정에서 생긴 수구주의자들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광일 "호남 의원 물갈이 해야"

○…통합민주당 함평 · 영광 · 장성 정광일(안중근 청년아카데미 대표) 예비후보는 "실패한 정치세력은 물갈이가 필요하다"며 호남 물갈이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홀대는 17대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 탓"이라면서 "그들이 민주당을 분당하고, 다시 통합하는 등 기득권에 눈이 먼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처참한 홀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략)

임성훈 "지역민심 반영한 공천을"

○…통합민주당 임성훈 나주 · 화순 예비후보는 24일 "지역민들의 구체적 민심이 반영된 공천만이 당이 살 길"이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기존의 관행으로는 이미 대선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았다"며 "명망가 또는 현역의원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극복하지 못하는 공천은 또 다시 지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즉생의 각오로 당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병근, 공정 경선 촉구

○…통합민주당 나주 · 화순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최병근 예비후보는 "최인기 의원이 나주 · 화순 선거구 후보자이면서 후보들의 공천을 심의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인기 후보는 공천심사위원을 사퇴하고 후보자로 공정한 경선을 하든지, 후보를 사퇴하고 공천심사위원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정범 "주민 의사반영 토론회 개최를"

○…담양 · 곡성 · 구례 김정범 예비후보가 통합민주당 공천신청 마감과 관련, 군민대토론회나 공청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의 공천신청이 마감된 만큼 이제 모든 눈은 공천심사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을 것인지에 쏠려있다"면서 공천심사에 대한 기준을 제안했다.(중략)

최형식, 농가 애로사항 청취

○…담양 · 곡성 · 구례 통합민주당 최형식 예비후보는 사료가격 및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가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관내 일반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민생투어를 최근 실시했다.

현재 농촌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전제한 최 예비후보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두고 품삯, 농자재가격, 사료가격, 농기계 대여료 등이 줄줄이 인상돼 농민들은 시름에 잠겨 한숨과 눈물만 흘리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농촌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 위기 시대에 맞선 우리 농업을 살리고, 비료를 포함한 각종 농자재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농자재안정기금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범태 "시민단체 · 원로 지지 받아"

○…김범태 통합민주당 고흥 · 보성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광주 · 전남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재야 원로 등 추천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공천경쟁에서의 자신감을 보였다.

김 예비후보는 "구태의연한 정치에서 벗어나 참신한 인물로 물갈이를 하자는 지역민의 공감대 속에 이돈명 변호사와 함세웅 신부,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중략)

정가 브리핑

조정택, 7대 공약 발표

장흥포 "관련 구체 할계획이"

임홍택, 오늘 선거사무소 개소

송무영 "공로당-기업 지속결연"

김경진, 개소식 성황

최형식, 농가 애로사항 청취

이정길, 깨끗한 선거 실천 다짐

성경일 "호남 의원 물갈이 해야"

김범태 "시민단체·원로 지지 받아"

김성균, 본격 프로갈이

최경주, 지역구 민생투어

임성훈 "지역인심 반영한 공천을"

이원정, 자원센 봉사활동

진종근, 무소속 출마 선언

윤목형, 사무실 개소

최병근, 공정 경선 촉구

김정범 "주민 의사반영 토론회 개최를"

양성철 "연고없는 지역 신청 안돼"

신홍섭, 공정 경선 촉구

이형석 "노 대통령 역사적 평가"

진종근, 무소속 출마 선언

○…지난해 대통합민주신당 고흥 · 보성군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종근 전 고흥군수는 통합민주당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진 전 군수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이 밀약에 의해 박상천 대표를 전략 공천하려는 의혹이 있어 통합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박상천 대

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지역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에 의해 정계은퇴를 요구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당선이 쉬울 것 같은 고향에 공천신청을 접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철 "연고없는 지역 신청 안도"

○…통합민주당 담양 · 곡성 · 구례 예비후보로 등록한 양성철 전 주미대사는 24일 성명을 내고 "통합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담양 · 곡성 · 장성 선거구가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고향인 장성을 저버리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담양 · 곡성 · 구례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한 것은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중략)

이정일, 깨끗한 선거 실천 다짐

○…18대 총선 출마여부를 놓고 그동안 고심했던 이정일 전 의원(해남 · 진도)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출마 권유에 따라 지난 23일 통합민주당에 공천신청을 하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나설 예정이다.

이 전 의원측은 "지난 1월부터 다각적인 지역인사를 만나 여론을 수렴했다"면서 "대체로 지역주민들은 이 전 의원의 출마여부에 관심이 많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출마해 달라는 여론이 높았다"고 밝혔다.(중략)

민상금, 본격 표밭갈이

○…민상금 통합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예비후보가 변화와 개혁을 골자로 하는 '비전의 정치'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했다.

민 예비후보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주민들이 얼마나 새로운 비전을 갖고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달렸다"면서 "30여 년을 꿈꿔왔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민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중략)

윤목현, 사무실 개소

○…윤목현 통합민주당 해남 · 완도 · 진도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4시 해남읍 해리 산림조합 인근 사무실에서 4 · 9총선 승리를 위한 개소식을 갖는다.(중략)

신홍섭, 공정 공천 촉구

○…신홍섭 통합민주당 광양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5일 오전 11시 공정한 공천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현명한 공천만이 통합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면서 "기회주의자와 박쥐 정치인, 선거철만 되면 돌아오는 연어 정치인 등이 공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후략)

의결번호	2008자심6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충남일보	(주)충남신문 / 대전 중구 오류동 154-4 대표이사 박 영 예
심의대상기사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2008년 2월 25일자 19면)	
주 문	(주)충남신문이 발행한 충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19면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충남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심대평 /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숭례문의 피눈물을 보았는가? 숭례문의 뜨거운 절규를 들었는가? 600여 년의 장구한 역사가 우리 눈 앞에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참으로 죄스럽다. 참으로 통탄스런 일이다.

숭례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건립 이래 도성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오가는 사람은 물론, 문명과 물질이 지나는 통로였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우리네 역사의 산 증인이었다. 숭례문은 우리의 역사, 생명이었다. 이 생명의 불씨를 꺼트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숭례문을 불태우고도 복원하면 된다는 방화범의 한마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국민세금 200억원을 들여 '새로 지어주겠다'는 정부의 무심한 발표나 국민성금을 모금해 복원하자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말 역시 지금 우리가 정신공황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00여 년 숨결을 잃고 복원될 숭례문은, 후대에 교육적 가치로 남을지언정 우리 국보 1호가 지녔던 역사성을 잃어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는 것을….

시대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다. 생명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외형적 형체만 존중되는 물질만능의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의 이런 의식부재는 이번 참사의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숭례문의 재 한줌도 그 자체가 유물이고 역사인 것을….

화재 직후 현장에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불도저였다. 불탄 나뭇조각, 깨진 기왓장, 하나하나를 털어내고 닦아내는 정성은 고사하고 숭례문의 잔해를 폐기물 취급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숭례문의 불도저를 바라보면서 지사 시절 방문했던 이태리가 생각난다.

7년째 호미로 긁어내고 붓으로 털어내고 있던 유적발굴 현장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불타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 그 현장에 들이닥친 불도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나라가 겨우 이런 나라였던가. 숭례문의 화재는 단순한 방화사고일 수 없다.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온 몸이 불에 타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숭례문의 절규를 들었는가!

TV화면을 통해 불 타는 숭례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었다. 숭례문의 무너져 내리는 기왓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와르르 무너졌고 활활 타오르는 숭례문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 무너진 민족정신을 통탄하고 오만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숭례문의 경고였다.

스스로 불타 대한민국의 액운을 막아내려는 헌신이었으며,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달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었다. 숭례문의 준엄한 경고와 가르침을 한 겹 휘장막으로 가리고 불도저로 걷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유적을 7년째 붓으로 털어내는 이태리처럼, 1400년된 고찰 호류지(法隆寺)에 큰 불이 나 많은 보물을 잃었으나 타다 남은 금당벽화 등 문화재의 잔해를 모두 수장고에 보관하는 일본처럼, 우선 불에 탄 숭례문의 잔해를 정성껏 모아야 한다. 한줌의 재까지 성심으로 모아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불탄 숭례문을 추모하자는 의미보다 대오각성을 하자는 뜻이다. '숭례문지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우리 정치인, 공직자들이 먼저 석고대죄를 하자. 숭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서야 한다.

이미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숭례문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와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일이다.

지금도 숭례문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숭례문의 눈물이 우리 역사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특별기고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

숭례문의 피는 물을 보았는가? 숭례문의 뜨거운 절규를 들었는가? 600여년의 장구한 역사가 우리는 앞에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다. 참으로 허망하다. 힘으로 통치스런 일이다.

숭례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건립 이래 도성을 지키는 수호신이었다. 오가는 사람은 들른, 문명과 물질이 지나는 팽팽였으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온 우리네 역사의 산증인이었다. 숭례문은 우리의 역사, 생명이었다. 이 생명의 불씨를 꺼트린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이 아닐 수 없다.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숭례문을 살펴무고도 허술하면 된다는 방화범의 한마디 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국민세금 2000억원을 들여 '새로지어 주겠다'는 정부의 무심한 발표나 국민성금을 모금해 복원하자는 정치인들의 부패없는 말 역시 지금 우리가 정신공황상태에 살아가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00여년 슬픔을 잃고 복원될 숭례문은, 후대에 교육적 가치로 남을지언정 우리 국보 1호가 지녔던 역사성을 잃어 이미 문화재가 될 수 없는 것을…

시대의식도, 역사의식도 없다. 생명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외형적 형체만 존중되는 물질만능의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의 이런 의식부재는 이번 참사의 사후처리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숭례문의 재 한줌도 그 자체가 유물이고 역사인 것을…

화재직후 현장에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불도저였다. 불탄 나뭇조각, 깨진 기왓장, 하나하나를 털어내고 닦아내는 정성은 고사하고 숭례문의 잔해를 폐기물 취급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숭례문의 불도저를 바라보면서 지사시절 방문했던 이태리가 생각난다.

7년째 호미로 긁어내고 붓으로 털어내고 있던 유적발굴 현장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었다. 불타 무너져 내리는 숭례문, 그 현장에 들이닥친 불도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우리가 살아왔고 살아갈 나라가 겨우 이런 나라였던가. 숭례문의 화재는 단순한 방화사고일 수 없다. 바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온 몸이 불에 타면서 우리에게 소리치는 숭례문의 절규를 들었는가!

TV 화면을 통해 불 타는 숭례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울었다. 숭례문의 무너져 내리는 기왓장과 함께 우리 국민의 자존심도 와르르 무너졌고 활활 타오르는 숭례문의 눈물은 우리 모두의 눈물이었다. 무너진 민족정신을 통탄하고 오만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숭례문의 경고였다.

스스로 불타 대한민국의 액운을 막아내려는 헌신이었으며,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어달라는 준엄한 가르침이었다. 숭례문의 준엄한 경고와 가르침을 한 겹 휘장막으로 가리고 불도저로 걷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유적을 7년째 붓으로 털어내는 이태리처럼, 1400년된 고찰 호류지(法隆寺)에 큰 불이 나 많은 보물을 잃었으나 타다 남은 금당벽화 등 문화재의 잔해를 모두 수장고에 보관하는 일본처럼, 우선 불에 탄 숭례문의 잔해를 정성껏 모아야 한다. 한줌의 재까지 성심으로 모아 '숭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불탄 숭례문을 추모하자는 의미보다 대오각성을 하자는 뜻이다. '숭례문지묘' 앞에서 가장 먼저 책임져야할 우리 정치인, 공직자들이 먼저 석고대죄를 하자. 숭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모두가 제대로 서야한다.

이미 우리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숭례문이 우리에게 남긴 경고와 가르침을 실천해가는 일이다.

지금도 숭례문은 우리를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숭례문의 눈물이 우리 역사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희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의결번호	2008자심69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광주매일신문	(주)광주매스컴 / 광주 남구 구동 1-21 대표이사 김 원 욱
심의대상기사	『4 · 9 총선마당』(2008년 3월 1일자 3면, 3월 3, 4, 5일자 각 4면)	
주 문	(주)광주매스컴이 발행한 광주매일신문 2008년 3월 1일자 3면, 3월 3~5일자 각 4면 『4 · 9 총선마당』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광주매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광주 및 전남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예정자들 위주로 선별하여 그들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 · 9총선마당

임현모, 교육특구 매니페스토 제시

○…임현모 예비후보(광주 북구 갑)은 29일 광주 · 전남 후보 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선거운동을 제안하면서 북구의 교육특구 공약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중략)

재야원로 등 100명, 남평오 후보 지지

○…남평오 예비후보(광주 광산구)는 29일 "광주지역 재야원로인 정해숙 씨(전 전교조위원장), 지선스님(고불총림 백양사 유나)과 재야원로와 이학영 씨(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삼태 씨(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의 인사 100명이 남평오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중략)

김승남 첨단 제방도로 환경정화 활동 참여

○…김승남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29일 광산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한 '광산구 첨단지역 제방도로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중략)

김경진 3 · 1운동 항쟁지 방문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3 · 1 운동 항쟁지 및 기념관 등을 방문했다.(중략)

이윤정,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구축 공약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9일 남구를 멀티미디어 핵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멀티미디어 제작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중략)

김재균 일용직근로자와 대화의 시간

○…김재균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새벽 북구 관내 일용직근로자대기소를 찾아 대화의 장을 가졌다.(중략)

김용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펼치자"

○…김용억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제18대 공천 신청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강조했다.(중략)

김동신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

○…김동신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두암동 소재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중략)

이영진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 건립"

○…이영진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그랜드 플랜을 보완, 3만여 명의 생활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산구 을 선거구 지역에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중략)

김영룡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1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중략)

정병호 해남 · 완도 · 진도 선거구 출마 선언

○…정병호 예비후보(해남 · 완도 · 진도)는 29일 해남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중략)

장병완 곡성군에서 감사패 수여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8일 곡성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곡성군민으로서 호남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면서 군의 명성과 군민들에게 곡성인의 자긍심을 심어줬던 공적을 기려 군민들의 정성을 담아 조형래 군수가 전달했다.(후략)

4·9총선마당

임현모, 교육특구 매니페스토 제시

○…임현모 예비후보(광주 북구 갑)은 29일 광주·전남 후보 중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참공약 실천) 선거운동을 제안하면서 북구의 교육특구 공약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

임 후보는 "영어·중국어 중심의 외국어교육 강화, 콘텐교육 강화, 디자인 교육 강화로 북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면서 "이 공약 실현에는 최근 3년 180억원이 예상되며 국비 외에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기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야원로 등 100명, 남경오 후보 지지

○…남편오 예비후보(광주 광산구)는 29일 "광주지역 재야원로인 정해숙씨(전 진로조위원장), 지선님(고문총림 백양사 유나)과 재야원로와 이학영씨(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배삼태씨(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의 인사 100명이 남평오 후보를 지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야원로와 시민사회단체 100명은 조만간 민주당 공천심의위원회에 남평오 후보 추천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남 첨단 제방도로 환경정화 활동 참여

○…김승남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전 진남대 총학생회장)는 29일 광산구 비로계실기념회회에서 주관한 '광산구 첨단지역 제방도로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리에서 "첨단지역은 앞으로 가주지역으로서 혼인아니라 광주의 첨단 R&D특구지역 또는 산업특구지역으로서 광주의 새로운 산업을 이끌어갈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첨단지역이 국내 혼인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3·1운동 항쟁지 방문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제일고등학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 3·1 운동 항쟁지 및 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아직도 지역갈등이 존재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계층적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매우 기형적 구조를 못 벗어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에 많은 국민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해줄 것을 기대하지만 현 정부의 상황을 보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윤경, '멀티미디어 클러스터' 구축 공약

○…이윤경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9일 남구를 멀티미디어 특임도시로 만들겠다는 "멀티미디어 제작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를 예향의 도시, 문화중심도시라고 하지만 멀티미디어 인프라는 너무나 빈약하다"며 "광주영상예술센터를 주축으로 유명 아카데미 및 프로덕션을 유치하고 명망있는 독립프로듀서 및 독립영화감독들도 적극 영입해 특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일용직근로자와 대화의 시간

○…김재균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새벽 북구 관내 일용직근로자대기소를 찾아 대화의 장을 가졌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근로자들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김 후보는 "말 흘려 일하는 서민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인력풀을 안정화하고 부당 대우를 없이 근절되도록 하는 서민중심의 경제, 복지 체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용억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펼치자"

○…김용억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 제 18대 공천 신청 후보자들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치자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광주 지역 공천신청 후보자는 광주의 선거 과정은 광주만의 선거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공명정대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며 "각 후보자는 심사위원 결정을 믿고 따르며 공천결과에 승복하고 통합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공천 받은 후보에게 모든 정력을 다하여 힘을 실어주자고" 주장했다.

김동신 노인복지회관 배식 봉사

○…김동신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9일 두암동 소재 북구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분의 있으신 분들이 나라의 근간을 만드시는데 힘으신 지난 열정은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대우받는 사회가 바른 사회"라고 피력했다.

이영진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 건립"

○…이영진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그랜드 플랜을 보완, 3만여명의 생활 체육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광산구 을 선거구 지역에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를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첨단지역에 있는 테드피한 강변클럽과 카드클럽 회원들과 만남을 가진 자리에서 "현재 광산구에 있는 많은 생활체육인에 비해 시설은 부족하다며 등 구 지역에 축공될 예정인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과 적을 이루는 '문화+체육 복합 클러스터'를 광산구에 건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룡 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1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김 후보는 이날 "유사시 재앙이 될 수 있는 단야고를 이전시키고 1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첨단권 교육 문화예술 디자인 및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며 "10년간 답보상태에 머무른 광주 서구 지역을 기꺼이 좋은 행복한 명품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병호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출마 선언

○…정병호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는 29일 해남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완도을 출신으로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인 정 후보는 "출신지인 완도가 해남·진도 선거구와 통합해 다시 출마를 선언하게 됐다"며 고향 완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장병완 곡성군에서 감사패 수여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28일 곡성군청 상황실에서 군민의 정성이 담긴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는 곡성군민으로서 호남을 위해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면서 군의 명성과 군민들에게 곡성인의 자긍심을 심어줬던 공적을 기려 군민들의 정성을 담아 조형래 군수가 전달했다.

장 후보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택해 고향과 호남을 위해 몸소 끊고 닦았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힘이 닿는데 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08년 3월 1일자 3면

심재민 '희망 심마니' 전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심재민 예비후보(광주 광산구갑)는 최근 '희망 심마니'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희망 심마니 운동'은 유권자와 국민이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정책제안 제도로 민생 정책을 중시하는 심 후보가 직접 구상했다.(중략)

정재훈, 노블리스 클럽 공약

○…동아병원장인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1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하나로 노블리스 클럽(noblesse club)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 정 후보는 노블리스 클럽에 대해 "사회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 정신과 실천을 지향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채, 시민참여 3 · 1만세 제안

○…변호사인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제89주년 3 · 1절을 맞아 광주천변과 수피아 여고에서 열린 광주 3 · 1만세 운동 재현행사에 참가했다.(중략)

김승남, 생활체육현장 방문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승남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2일 광산구 신가동 풍영초 체육관을 찾아 '풍영배구클럽' 회원들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중략)

이윤정 "광주 U-대회유치 앞장"

○…한국전력KDN감사인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기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중략)

이만영 "재래시장 활성화 최선"

○…이만영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지난 1일 북구지역 24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가 크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서방시장을 찾아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우선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재래시장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 장병완 지지선언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지역기업별택시(40개)노동조합, 선행운전기사 자생단체연합회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중략)

김영록, 해남에 선거사무실

○…김영록 예비후보(해남 · 완도 · 진도)가 지난 29일 해남읍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했다.(중략)

최형식 "관광객 천만명 시대"

○…최형식 예비후보(담양 · 곡성 · 구례)는 지난 29일 '곡성 심청이야기 마을'을 방문해 "담양 대나무, 곡성 섬진강, 구례 지리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각 군의 특성에 맞게 권역별로 나누고 '내륙형 관광레저연결벨트'로 만들어 연간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략)

지병문 "시장 활성화 힘쓰겠다"

○…지병문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오후 남

구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은 서민경제 회복에 달려 있는 만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서민들의 애환과 정이 서린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고속철 보고서 누가"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구을)는 2일 "건교부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호남홀대로 가는 정책 판도에 편승하는 부처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중략)

서정성 "남구 3無 해결하겠다"

○…안과 전문의인 서정성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남구에 없는 대표적인 공공시설 3개를 건립하겠다"며 이른바 '3無 공약'을 발표했다.

서정성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만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내에 문화 향유를 위한 극장,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인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남구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장홍호 "대형 · 영세상가 상생"

○…장홍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호지역 상가를 방문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4·9총선 후끈미당

심재민 '희망 심마니' 전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신재민 예비후보(광주 광산구갑)는 최근 '희망 심마니' 운동을 시작했다. '희망 심마니 운동'은 유권자와 국민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국민참여형 정책제안 제도로 민생 정책을 중시하는 십 후보가 직접 구상했다.

십 후보는 "민생 중심과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삶과 생활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라고 피지를 선명했다.

정재훈, 노블리스 클럽 공약

○…동아방송대학원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1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하나로 노블리스 클럽(noblesse club)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의미한다.정 후보는 노블리스 클럽에 대해 "시회 지도층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를 실천에 옮겨야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 정신에 실천을 지향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채, 시민참여 3·1만세 제안

○…변호사인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제90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정부와 수십여 이고에서 열린 광주 3·1만세 운동 재현행사에 참가했다.

이번 3·1절 행사에서 이 후보는 "남구민 달리기 행사에 '나도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다채로운 행사를 연출하고 '푸른 길 한마음 걷기'에 시민참여형 3·1만세운동을 재현하자"고 제안했다.

김승남, 생활체육현장 방문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승남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2일 광산구 신가동 황영초 체육관을 찾아 '황영배구클럽' 회원들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간담하를 가졌다.

김 후보는 "주일제 근무가 정착되면서 여가를 이용한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스포츠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주민공동체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정 "광주 U-대회유치 앞장"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KDN)산시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광주시가 추진중인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기원 10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민과 한 시람으로 광주시 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힘을 싱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바른 선거문화의 일환에 '홍기대의도 U대회 유치 서명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시민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

이만영 "재래시장 활성화 최선"

○…이만영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지난 1일 북구지역 3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이 대접받는 시회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가 고개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시림시장을 찾아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래시장이 우선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재래시장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택시조합 장병완 지지선언

○…광주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지역기업협력사(회장)노봉조합, 선명운전기사자생단체연합회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광주를 소외와 고립으로부터 견제하고 협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장병완 뿐이다"며 "이미 능력이 검증된 인물인 장병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해남에 선거사무실

○…김영록 예비후보(해남·완도·진도)가 지난 29일 해남읍에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표밭갈이에 돌입했다.

선거운동에 앞서 김 후보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의 인구가 18만에 달하고 3개 군에 이르는 만큼 큰 선거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이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전남도청, 일선 시군행정을 두루 경험하고 전남 행정부지사로 도정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을 호심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관광객 천만명 시대"

○…최형식 예비후보(담양·곡성·구례)는 지난 2일 "곡성 심청이야기 마을"을 방문해 "담양 대나무, 곡성 심청공, 구례 지리산 등 전해여 관광자원을 각 군의 특성에 맞게 관광벨트로 나누고 '내륙형 관광대체연경벨트'로 만들어 연간 천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정부, 도, 3개 군, 대형 여행사 등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해 기존 관광 상품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체험의 시심과의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병문 "시장 활성화 힘쓰겠다"

○…지병문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오후 남구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은 서민경제 회복에 달려 있는 만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재래시장 활성화 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서민들의 애환과 정이 서린 재래시장 상권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형배 "고속철 보고서 누가"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구을)는 2일 "건교부가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도 하기도 전에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의 호남 홀대로 가는 정책 판도에 편승하는 부처의 행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을 주무 부처가 부공석으로 검가한 발상은 이명박 정부의 입장 맞추기에만 급급한 시녀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며 "발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세 정부 논지보기에 급급했던 당시 장관의 행태를 광주 시민은 엄중한 잣대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정성 "남구 3無 해결하겠다"

○…안과 전문의인 서정성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남구에 없는 대표적인 공공시설 3개를 건립하겠다"며 이른바 '3無 공약'을 발표했다.

서정성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할 만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내에 문화 향유를 위한 극장,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인 어린이 도서관, 그리고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를 남구에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장홍호 "대형·영세상가 상생"

○…장홍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호지역 상가를 방문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붕괴에도 등 대형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형 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와 지역상가에 대한 지원 입법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진출해 대형상가와 지역 영세상가의 상생협력에 관련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검정고시 총동문 산행

○…강운태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무등산에서 열린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 정기산행에 참석해 "동문들의 왕성한 활동은 행려이 어려운 후학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다"며 "책을을 감당하는 모든 아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 후보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300여명의 검동고시 동문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광주를 찾은 전국의 동문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뜻을 표명했다.

김영진, 상가방문 등 민생탐방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상무동 상가를 잉따라 방문하는 등 지역 민생탐방을 계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상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해 대형유통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지역소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과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용 "탄약고 이전 적임자"

○…김영용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오는 4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이 특을 공군 탄약고 이전을 확실히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유사시 재앙이 될 수 있는 탄약고를 이전시키고 10만평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친환경 교육 문화예술 디자인 및 의료 복합단지를 조성,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할 계획이다.

김경진, 독립운동가 예방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1일 북한운동가 최승욱 할머니를 예방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시 온갖 고초와 희생을 감내하신 할머니·할아버지 덕분"이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

김 후보는 "당시 죽음을 무릅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일궈내신 우리 할머니·할아버지의 노력을 토대이 돼서는 안된다"며 "항은 역시을 만드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무등산, 세계 명소로"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는 2일 "첨체된 동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등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의 자존심인 무등산 일대를 지산유원지 관역과 의제도·중심상 관역을 비롯해 예술의 거리 광역 등 3대 관역으로 나눠 특화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며 "새로운 동구의 패러다임 구축과 관광을 에게로 한 지역경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흥채, 금당산 일대 자연보호

○…임흥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당산 일대에서 '광주의 아침' 희원과 지지자 100여명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임 후보는 "정치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의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건강한 국가·국민 일체형 공복의 새로운 전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 2008년 3월 3일자 4면

월드컵 롯데마트 등 대형상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와 지역상가에 대한 지원입법 등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진출해 대형상가와 자영 영세상가의 상생협력에 관련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운태, 검정고시 총동문 산행

○…강운태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2일 무등산에서 열린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 정기산행에 참석해 "동문들의 왕성한 활동은 형편이 어려운 후학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다"며 "배움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중략)

김영진, 상가방문 등 민생탐방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상무동 상가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지역민생탐방을 계속했다.(중략)

김영룡 "탄약고 이전 적임자"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오는 4일 서구 풍암동 유수빌딩 7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국방부 차관을 지낸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마륵동 공군 탄약고 이전을 확실히 끝내겠다"고 다짐한다.(중략)

김경진, 독립운동가 예방

○…김경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1일 독립운동가 최순덕 할머니를 예방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당시 온갖 고초와 희생을 감내하신 할머니 · 할아버지 덕분"이라며 거듭 머리를 숙였다.(중략)

박주선 "무등산, 세계 명소로"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는 2일 "침체된 동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무등산을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중략)

임홍채, 금당산 일대 자연보호

○…임홍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2일 서구 금당산 일대에서 '광주의 아침' 회원과 지지자 100여 명과 함께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임 후보는 "정치가 건강해야 우리 사회와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며 "건강한 국가 · 국민 일체형 공복의 새로운 전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4 · 9총선마당

유종필 "창의문화 놀이터 개설"

○…유종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3일 각 급 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어린이 창의문화 놀이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천편일률적인 놀이터보다는 예술, 환경, 놀이, 휴식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창의문화 놀이터를 개설해 어린이들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가족 놀이 쉼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모 "민주, 변화의 모습을"

○…임현모 예비후보(광주 북구갑 · 통합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 광주교대 총장)는 3일 "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선참패와 실패한 참여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참신한 인물, 지역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일꾼, 여당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중략)

박주선 후보 부인 '밥퍼' 봉사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의 부인 이현숙 씨는 3일 낮 동구 학동 남광교회를 방문, 사랑의 식당에서 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 퍼주기'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중략)

김영룡 "탄약고 무안으로 이전"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무안 공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중략)

민형배 '검증 토론회' 제안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3일 예비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중앙당에 제안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의 노력에도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같은 지역구내의 경쟁자들끼리의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원 · 목포시의원 박지원 지지

○…전남도의회 황정호 의원(민주 · 목포1)과 목포시의회 김영수 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중략)

배종호 "박지원 지지선언 실망"

○…배종호 예비후보(목포)는 3일 "목포에서 선출된 시·도의원들이 공천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너를수수 철회로 사법처리된 박지원씨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눈이 어두워 부동 비리자의 검은 손을 들어준 이들은 있으로 목포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박지원씨도 국민과 시민을 무릎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4·9총선 마당

유종필 "청의문화 놀이터 개설"

○…유종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3일 각 급 학교 입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장애문화 놀이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현존일률적인 놀이터 보다는 예술, 환경, 놀이, 휴식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장애문화 놀이터 개념의 어린이뿐이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가족 놀이 공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모 "민주, 변화의 모습을"

○…임형모 예비후보(광주 북구갑-풍암민주당 광무시당위원장·광주교대 총장)는 3일 "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대선경쟁에 집중한 참여정부로부터 자유로운 참신한 인물, 시대를 위해 봉사한 선수의은 일군, 야당에 대한 건강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앞에 광주에는 대선경쟁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현역 의원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 책임 있는 인사들은 무임승차를 허려는 태도를 보내고 있다"며 "참치인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후보 부인 '밥퍼' 봉사

○…박주선 예비후보(광주 동구)의 부인 이현숙씨는 3일 낮 동구 학동 남광교회를 방문, 사랑의 식당에서 노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퍼주기' 봉사 활동을 전개했다.

이씨는 이날 "어르신들이 배곯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맛있는 점심을 할 수 있도록 급식시설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열악한 동구지역의 노인복지 정책이 한층더 추진될 수 있도록 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룡 "탄약고 무안으로 이전"

○…김영룡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구 마륵동 공군 탄약고를 무안 공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탄약고 이전 사업이 정체는 여전할 부지를 확보하느냐에 여부를 달려 있다"며 "지금 국지시설 무안공항 유휴 부지에 탄약 이전을 마련해 놓았다"며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다.

민형배 '검증 토론회' 제안

○…민형배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3일 예비후보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중앙당에 제안했다.

민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들의 노력에도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판단하는데 충분한 근거와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같은 지역구내의 경쟁자들끼리의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의원·목포시의원 박지원 지지

○…전남도의회 황정호 의원(민주·목포1)과 목포시의회 김영수 의원 등 시의원 10명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목포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했다.

목포권 지방의원들은 이날 "종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을 지닌 박 후보가 서남권 중심도시 목포의 발전과 도약을 책임질 적임자다"며 "민형배 정부의 대북 정책을 조절하고 경제, 문화, 예술, 체육을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박 후보의 경험과 역량이 입체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배종호 "박지원 지지선언 실망"

○…배종호 예비후보(목포)는 3일 "목포에서 선출된 시·도의원들이 공천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너를수수 철회로 사법처리된 박지원씨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눈이 어두워 부동 비리자의 검은 손을 들어준 이들은 있으로 목포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박지원씨도 국민과 시민을 무릎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화진 무료급식 봉사활동

○…김화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남구 양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및 배식 활동을 펼쳤다.

김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교로 봉사 활동을 펼쳐 온 것을 계기로 '행사의 리더십'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재 "정동영 죽이기 그만"

○…박호재 예비후보는(광주 서구갑) "지난 대선 경과를 두고 이명박 정부와 정동영 죽이기 논점은 이제 그만 접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예비후보는 "정동영 전 대선 후보는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백의종군 하겠다는 결의와 새 정부에 전국 협조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도 계속되는 정동영 죽이기 대해는 반드시 근본되야 한다"고 강조에 주장하고 나섰다.

이용섭, 하남산단 현장 방문

○…이용섭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3일 광주 하남산단 내 목내동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일모엠 광통신'을 여르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생산 공정을 살펴본 후 "기업인과 근로자들과 오랜 존경하는 사회, 중소기업이 감되는 나라가 될 때 고용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오형근, 두암 1동 자치위 참석

○…오형근 예비후보(광주북갑)는 지난 2일 북구 두암1동 주민자치위원 참석,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장서서 구대정치의 폐해를 막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민주당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컴컴하고 권문적인 대 인물의 공천 물갈이가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 "문화수도 육성법 보완"

○…광주 동구에 출시프용 년 박행(대 정)에다 공보국장) 예비후보는 '2일 광주지역의 문화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수도 육성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구호와 겉돌린 있는 문화 수도가 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과 더불어 소득도 증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기남, 종합재난방지체계 구축

○…정기남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세력 간담중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최근 전국적으로 큰 화재 및 참사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재임지 규명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재난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 사건·사고예방에 힘쓰겠다"며 "방재 생활안전시고 및 재난방지 관련법의 제·개정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이형석 "지방자치 발전 헌신"

○…이형석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단 현역)내 비서관는 3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할 과제가 놓여있다"면서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내실화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갈등의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빈 실상부한 민주주의 확립장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선진 정치인상 제정키로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동이병원장)는 3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강력한 '선진 정치문화 확립'과 구체적 이행방안 등이 담겨 있을 것이기에 주목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당장서서 구대정치의 폐해를 막고,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면서 "민주당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컴컴하고 권문적인 대 인물의 공천 물갈이가 선행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민 책임정치 구현 역설

○…심재민 예비후보(광주 광산갑)는 3일 국회 F1특별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폐기, 동정부인 전교부의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완공 촉구를 보고서 작성 등 9개로 광주·전남 소외와 홀대에 대해 "광주·전남 시대를 경정할 핵심시안들이 포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자는 정작인이 없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걱정할 중대 현안에 대해 국회 위원이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광주과기원법개정안 폐기로 인해 의사과정 신설이 무산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예견된 비자에 국회의원의 반대를 이유로 삼는 것은 책임없는 정치인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정성, 공공질서 중요성 강조

○…서정성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자가용 대신 도보와 버스로 이동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서정성 후보의 차량 번호가 '3887'으로 10부제 에는 날에 해당한 것.

정작인의 기본자세로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는 서 후보는 도보 선거운동을 통해 "원작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10부제 놓이행 등 공공질서 무시를 꼬집는 기사를 종종 접한다"며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휴섭 노점 경제난 해결논의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오전 화단지역(광인장)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계형 노점상들의 경제난 해결대책을 논의했다.

김 후보는 또 청장권을 찾아 이 광단지역 책육관의시설관리에 대해 심경하고 비이지역 소규모 정보통 방문, 원체위 인증여이선과 날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홍기훈 "남구발전 견인차 역할"

○…홍기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광주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남구에 뛰다"며 의지를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역시의 그비 에이다 편명한 선택으로 역시의 분열기를 마무이 온 상속한 시민의식을 갖춘 남구민들과 함께 빛고을의 영광을 실현해 내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 2008년 3월 4일자 4면

출된 시 · 도의원들이 공천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된 박지원 씨 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계산에만 눈이 어두워 부정 비리자의 검은 손을 들어준 이들은 앞으로 목포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박지원 씨도 국민과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김화진 무료급식 봉사활동

○…김화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남구 양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양지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 및 배식 활동을 펼쳤다.(중략)

박호재 "정동영 죽이기 그만"

○…박호재 예비후보(광주 서구갑) "지난 대선 결과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정동영 죽이기 논쟁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이용섭, 하남산단 현장 방문

○…이용섭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3일 광주 하남산단 내 옥내용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글로벌 광통신' (대표 박인철)과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나영사업' (대표 고정주)을 방문하고 경영인 간담회에 이어 근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중략)

오형근, 두암 1동 자치위 참석

○…오형근 예비후보(광주북갑)는 지난 2일 북구 두암1동 주민자치위 참석,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표밭을 다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중략)

박현 "문화수도 육성법 보완"

○…광주 동구에 출사표를 낸 박현(전 청와대 공보국장) 예비후보는 3일 광주지역의 문화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문화수도 육성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구호와 건물만 있는 문화 수도가 아니라 지역민의 자긍심과 더불어 소득도 증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기남, 종합재난방지체계 구축

○…정기남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새벽 진월동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최근 전국적으로 큰 화재 및 참사가 이어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책임자 규명 및 처벌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재난방지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중략)

이형석 "지방자치 발전 헌신"

○…이형석 예비후보(광주 북구을 · 전 청와대 비서관)는 3일 "사회적 · 경제적 민주화를 통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이뤄야할 과제가 놓여 있다"면서 이를 위한 중요한 과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내실화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학습장으로서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선진 정치인상 제정키로

○…정재훈 예비후보(광주 남구 · 동아병원장)는 3일 매니페스토 선거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공약한 '선진 정치문화 정립'의 구체적 이행방안 중의 하나로 '선진 정치인상'을 제정키로 했다. 정 후보는 "선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큰 정치인을 해마다 5인씩 선정하여 시상하겠다"면서 "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선진 정

치문화 지수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할 때 부가하여 여론을 수렴,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재민 책임정치 구현 역설

○…심재민 예비후보(광주 광산갑)는 3일 국회 F1특별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 폐기, 행정부인 건교부의 호남고속철 2012년 조기 완공 불가능 보고서 작성 등 잇따른 광주 · 전남 소외와 홀대에 대해 "광주 · 전남 미래를 결정할 핵심사업들이 표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면서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략)

서정성, 공공질서 중요성 강조

○…서정성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자가용 대신 도보와 버스로 이동하며 유권자들을 만났다. 서정성 후보의 차량 번호가 '1083'으로 10부제 쉬는 날에 해당한 것.

정치인의 기본자세로 '신뢰와 소통'을 강조하는 서 후보는 도보 선거운동을 통해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 10부제 불이행 등 공공질서 무시를 꼬집는 기사를 종종 접한다"며 "신뢰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김휴섭 노점 경제난 해결논의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3일 오전 첨단지역(첨단2동) 노점상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계형 노점상들의 경제난 해결대책을 논의했다.(중략)

홍기훈 "남구발전 견인차 역할"

○…홍기훈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광주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 남구에 왔다"며 의지를 밝혔다.(후략)

4 · 9총선마당

이병화 본격 선거행보 돌입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이 4일 공식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마회견에서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 산업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 경제전문가로서 서민이 잘사는 부자광주, 주민이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국회의원, 예산을 만들어 오고 기업을 유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중략)

하승완, 남구 미래창조 여론수렴

○…하승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국제호텔에서 열린 남구 지역 발전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심과 남구의 미래창조를 위한 여론수렴에 주력했다.(중략)

오형근, 공천제외 기준마련 환영

○…오형근 예비후보(광주북갑)는 4일 "박재승 공심위원장이 밝힌 '뇌물죄,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중략)

유종필 "대학등록금 개혁 시급"

○…유종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매년 치솟는 대학 등록금이 가정 파탄과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어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중략)

장병완 "인물교체 없이 혁명없다"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광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 4월 총선에 대비한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중략)

박호재 "정치신인 진출 활발해야"

○…박호재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광주 · 전남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새로운 정치 신인의 참신한 정계입문을 도와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보여줬던 여권의 무책임과 정치형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실망을 안겨줬던 만큼, 반드시 각인시켜 자성하는 자세로 국민 앞에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호남고속도 구간 환수"

○…김동신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호남고속도로 광주 TG에서 동광주간 4.4km에 대해 도로공사로부터 광주시로 기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중략)

최경주 "고품격 교육 · 문화도시"

○…최경주 예비후보(광주 북구을)는 4일 북구 관내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취학 아동들과 함께 학교를 찾은 최 후보는

4·9총선 마당

이병화 본격 선거행보 돌입

○…이병화 전 광주시 정무부시장(광주 서구을 예비후보)이 4일 공식출마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전 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린 출마회견에서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생산, 신성도시로 탈바꿈 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대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역 경제전문가로서 시민이 참여는 부시장후, 주민이 행복한 서구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국회의원, 예산을 만들어 오고 기업을 유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전 부시장은 전국최광주(4선5개월) 정무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3000년 4월30여분이상인 광주시와 국비 예산 규모를 3000년 1조8천억억원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상설전차, 기아자동차등 380개의 기업과 2조 규모의 투자유치를 통해 광주를 소비도시에서 첨단산업문화도시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승완, 남구 미래창조 여론수렴

○…하승완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3일 국제호텔에서 열린 남구 지역 발전 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지역인심과 남구의 미래창조를 위한 여론수렴에 주력했다.

보상군수협 역임한 하 후보는 광주의 민주세력을 결집시킨 개혁공천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보상육차를 세계 명품으로 일진시킨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광주남구를 분화수도 중심지로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며 참석자들의 지지를 당부했다.

오형근, 공천제외 기준마련 환영

○…오형근 예비후보(광주북갑)는 4일 "개혁을 공심위원장이 밝힌 '낙물회, 탈선수재, 공금횡령, 폭지자금, 파행지방, 개인비리 등 모든 형사범을 포함해 공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공천 심사 기준에 대해 환영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후보는 "이번 구태정치의 재현을 막고 유능하고 참신한 일꾼이 필요하다"면서 "통합민주당이 수차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치문적인 새 인물로 공천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종필 "대학등록금 개혁 시급"

○…유종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4년 전보는 대학 등록금이 가장 피단과 청년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범이 되고 있어 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지난 2001~2007년까지 교육부의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주 전남지역 5개 국립대 등록금이 7년간 47%, 10년 동안 7%의 인상률이다"며 "교육재정의 대폭 확대, 학자금 무이자 대출제도, 등록금 상한제 등을 조속히 시행해 시민불이 고통을 정부가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인물교체 없이 혁명없다"

○…장병완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광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 창출과 인재육성 네트워크 구축 등 4월 총선에 대비한 주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장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강후신 시의원 부의장, 진선기 문화위원장 등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시의원 전원이 참석, 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호재 "정치신인 진출 활발해야"

○…박호재 예비후보(광주서구갑)는 4일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새로운 정치 실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를 적극 환영하며 "새로운 정치 신인의 참신한 정계입문을 도와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지난 참여정부시절 보여줬던 여권의 무책임과 정치형태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실망을 안겨줬던 만큼, 반드시 각인시켜 자성하는 자세로 국민 앞에 백의종군하면서 새로운 정치 신인들의 앞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신 "호남고속도 구간 환수"

○…김동신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호남고속도로 광주 TG에서 동광주간 4.4km에 대해 도로공사로부터 광주시로 기증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장성-대치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주시로의 진출입 외에는 도로와 기능이 반해 이제는 순환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이 도로의 관리자가 광주시로 이관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경주 "고품격 교육·문화도시"

○…최경주 예비후보(광주 북구을)은 4일 북구 관내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한 학부모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취학 아동들과 함께 학교를 찾은 최 후보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 고품격 교육·문화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동들에 교육, 문화, 복지, 건강 등 항상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희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정영식 "지역갈등 행위 중단을"

○…정영식 예비후보(북포)는 4일 지역 원로권과 김충섭의원 지지선언과 관련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보다는 오직 정략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며, 기회주의적인 줄대기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북한 이같은 북정부로 지지선언은 지역내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 선거문화에 역행하는 행위를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정 정책대결 거듭 촉구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4일 통합민주당의 공천결과가 당내혼돈에 따라 공천잡음에 나선 입지자간 신경전과 상대후보 흠집내기, 특정후보에 대한 마타도어 등 불행사나은 양상임이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재차 정책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최근 정세를 볼 때, 한나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통합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현상은 아직도 국민들의 타당이 민주당에 완전없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유일한 타개책은 '변화' 와 '혁신'으로 '골든크로스'를 이루는 데에 있으며, 그 시작은 정책대결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지역에 대한 애정 강조

○…김종식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동암동·마륵동·세형동 등 주민들과 접촉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지역발전을 일할 수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광산정치로 나아가 크게는 광주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작게는 생활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며 "여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가진 후보, 지역을 사랑하는 후보가 선택돼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용섭 "매니페스토 선거 앞장"

○…이용섭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앞장서겠다"며 "자치자 못할 일 공자 공약(선행)대다시, 지킬 수 있는 공약(선행)을 구체화해서 유권자가 후보자들이 재시한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발로 언제까지 어렵게 주민들 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이행기간과 방법, 재원조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광욱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60여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흥호, 교육특구 지정에 노력

○…장흥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화정남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광주가 한 차원 높은 교육 도시로서 가능을 더하기 위한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교육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옥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10여원 규모의 지역인재육성펀드를 설립, 지역인재를 키워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신안 지방의원 김홍업 지지

○…통합민주당 무안·신안지역 지방의원 10명은 4일 제18대 총선 무안·신안 선거구 김홍업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도의회 김석원(무안1)·김원주(무안2), 임금빈(신안1)·김상종(신안2) 도의원과 기초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업 의원은 그동안 10년이라는 짧은 재정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갑법활동, 지역구 민원처리, 지역 민주수립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김휴섭 소규모 상인과 간담회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4일 신창시장 소규모 점포와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형 소규모상인들과 경제난 해결대책을 논의했다.

김 후보는 이날 또 韓日통화 외환통과 신용지이 제휴협정시설 환전에 대해 경험하고 시민들과 광산지역 대미피고 전심공약에 대해 토론했으며 현재의 인큐베이션과 불경기에 대해 신랑지역 시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이만영 환경미화원 애로 청취

○…이만영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건국동 소재 금광공사를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다. 이 후보는 새벽부터 환노을 나서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힘입어 환경미화원의 정책복구가 이뤄질수 있다"고 위로했다. "서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어려분들 처럼 새벽부터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채 문화중심 명품도시 구상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을)는 4일 효천·송암동 중심의 남부권과 양림·백운동을 연계한 중부권을 남구 미래 성장축으로 삼는 범용 남구, 광사는 지역맞춤기 사업구상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호수공원 조성, 사업·공간·환경의 조화되는 개발도시 △천혜환경을 개발, 재개발지역 신림력지역으로 탈바꿈 △복합문화 행정타운을 건축해 일하·배움터·쉬터가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U대회 서구민대회 참석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갑)는 4일 김효휴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기원 서구주민대회에 참석해 "U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회, 경제, 정치 및 각계 모든 단체들과 시민들이 하나되 바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장은 생활체육과 스포츠이벤트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선수촌은 대회 후 천혜경적 후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등 서구는 자연친화적 문화, 체육 복합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8년 3월 5일자 4면

"지역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 육성하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개선, 고품격 교육 · 문화도시를 만들 것"을 약속하며 "아동들의 교육, 문화, 복지, 건강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북구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님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정영식 "지역갈등 행위 중단을"

○…정영식 예비후보(목포)는 4일 지역 정치권의 김홍업 의원 지지선언과 관련 "이는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보다는 오직 정략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며, 기회주의적인 줄대기라는 사실을 지적한다"고 비난했다. 정 후보는 "특히 이같은 특정후보 지지선언은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기며 민주주의 선거문화에 역행하는 행위일 것이고 지역 주민에게는 배신행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정 정책대결 거듭 촉구

○…이윤정 예비후보(광주 남구)는 4일 통합민주당의 공천결과가 임박해옴에 따라 공천경쟁에 나선 입지자간 신경전과 상대후보 흠집내기, 특정후보에 대한 마타도어 등 볼썽사나운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재차 정책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중략)

김종식 지역에 대한 애정 강조

○…김종식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풍암동 · 마륵동 · 매월동 등 주민들과 접촉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지역발전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중략)

이용섭 "매니페스토 선거 앞장"

○…이용섭 예비후보는 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앞장서겠다"며 "지키지 못할 빌공자 공약(空約)대신, 지킬 수 있는 공약(公約)을 구체화해서 유권자가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이른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중략)

장홍호, 교육특구 지정에 노력

○…장홍호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화정남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 "광주가 한 차원 높은 교육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하기 위한 교육특구 지정과 함께 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중략)

무안 · 신안 지방의원 김홍업 지지

○… 통합민주당 무안 · 신안지역 지방의원 16명은 4일 제18대 총선 무안 · 신안 선거구 김홍업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중략)

김휴섭 소규모 상인과 간담회

○…김휴섭 예비후보(광주 광산을)는 4일 신창지구 소규모 점포의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계형 소규모 상인들의 경제난 해결대책을 논의했다.(중략)

이만영 환경미화원 애로 청취

○…이만영 예비후보(광주 북구갑)는 4일 건국동 소재 금광공사를 방문해 환경미화원들을 격려했다. 이 후보는 새벽부터 청소를 나서는 환경미화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땀과 노고에 힘입어 환경친화적 청정북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저도 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여러분들처럼 새벽부터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채 문화중심 명품도시 구상

○…이승채 예비후보(광주 남구을)는 4일 효천 · 송암동 중심의 남부권과 양림 · 백운동을 연계한 중부권을 남구 미래 성장축으로 삼는 명품

남구, 잘사는 지역만들기 사업구상을 내놓았다.(중략)

김영진, U대회 서구민대회 참석

○…김영진 예비후보(광주 서구을)는 4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광주 유치 기원 서구 구민대회에 참석해 "U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사회, 경제, 정치 및 각계 모든 단체들과 시민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장은 생활 체육과 스포츠이벤트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선수촌은 대회 후 친환경적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등 서구는 자연친화적 문화, 체육복합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의결번호	2008자심70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전북일보	(주)전북일보사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 1동 710-5 대표이사 서 창 훈
심의대상기사	『선택 4 · 9 총선현장』 (2008년 3월 3, 4, 5일자 각 4면)	
주 문	(주)전북일보사가 발행한 전북일보 2008년 3월 3~5일자 각 4면 『선택 4 · 9 총선현장』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전북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전북 지역 예비 후보자들의 동정을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 소속 후보 예정자들만 선별하여 그들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정당 및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선택 4 · 9 총선현장

이무영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 전주완산 갑 이무영 예비후보가 지난달 29일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명성빌딩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오랜 침체와 낙후의 오명만을 남겼다"며 "이제는 잘사는 전북, 행복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진봉헌후보 공개검증 제안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진봉헌 예비후보는 2일 18대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진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앙당 차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각 후보의 신상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진 후보는 이어 "호남지역의 공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자칫 문제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본선거 과정에서 낙마하는 불행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승후보 "노인일자리 창출"

통합민주당 전주덕진 선거구 이창승 예비후보는 지난달 28일 전주 금암노인 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 "전문기술이 없거나 연령이 높아 차별받고 소외되는 노인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중략)

허영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허영근 前도의회 의장이 지난 달 28일 오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옆 사무실 현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황현 익산을 예비후보 및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고조시켰다.(중략)

장기철후보 방송인 격려받아

KBS 기자출신인 장기철 예비후보(통합민주당. 정읍)를 격려하기 위해 중앙 TV 방송에서 활동

선택 4·9 총선 현장

이무영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 전주 덕산 갑 이무영 예비후보가 지난달 25일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 명창생가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표몰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제까지 많은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전북을 발전시키고 주도성을 확보하시키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오랜 정체에 낙후의 오명만을 남겼다"며 "이제 깊시는 젊복, 평화한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허영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지난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허영근 前도의회 의장이 지난 달 28일 오후 익산시 남중동 북부시장 옆 사무실 현지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병곤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통합민주당 황현 익산을 예비후보 및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를 고조시켰다.

한 후보는 이리동중,이리고, 원광대 대학원을 졸업해 제6대 전북도의원, 민주당 익산갑 부위원, 대한박사, 익산 백제고 운영, 이리중앙로타리클럽 20대회장, 기획위원회 익산시 회장 등을 역임했다.

유성엽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통합민주당 유성엽 예비후보는 최근 정읍역전앞 명은빌 금융빌딩 2층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통합민주당 이은영 도당위원장과 유성엽후보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 신환철 교수를 비롯 김완철 도교육위원, 고영규 도의원, 안왕근·정병선·윤영희 시의원을 각계 인사와 지인등 1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성엽 후보는 이날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 국회에 진출하면 정읍시장직을 비롯한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더우욱도 보다많이 많은 관직, 일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역속했다.

진봉헌후보 공개검증 제안

통합민주당 전주 덕산을 진출한 예비후보는 2일 18대 총선 예비후보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공개검증을 제안했다.

진 후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양당 지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각 후보의 신상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 공개된 자료를 통해 시민단체와 언론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진 후보는 이어 "정당지역의 공천권자이 지명한 상황에서 자칫 문제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가 본선거 과정에서 낙마하는 불행한 결과가 일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철후보 방송인 격려받아

KBS 기자출신인 장기철 예비후보(통합민주당. 정읍)가 원활한 캠프운영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와 연예인들이 정읍을 찾아 유권자 표심잡기에 열심히 장 후보를 격려했다.

KBS 인기 아나운서 김병찬씨, 28일 개그맨 황기순, 김정열, 김명덕 씨 등이 정읍을 찾아 유권자 표심잡기에 열심히 장 후보를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돈승후보 의정목표 발표

제18대 김제·완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돈승씨(통합민주당)는 1일 일당 중심의 정치적 편향성 극복을 위해 '건전한 균형 정책'을 뼈대로 한 의정활동 목표를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어 "국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한 스상련은 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공 소지역경쟁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이 중요한 의정활동 요소라고 밝혔다.

이길용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김제·완주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길용(통합민주당) 후원회 사무실 개소식이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완주군 봉동읍 현지서 열렸다.

정동영 17대 대통령선택4·9 총선현장 후보가 명예회장, 신건 전 국정원장이 회장을 각각 맡은 이 후보 후원회 개소식에는 서울·전주를 비롯 김제와 완주지역의 후원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중략)

이창승후보 "노인일자리 창출"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선거구 이창승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본주 금암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발대식에 참석 "전문기술이 없거나 연령이 높아 차별받고 소외되는 노인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전북도가 올해 3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 노인 일자리 창출 목표 사업량을 1만 1000자리로 잡고 노인들의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에 나서기로 한 만큼 전북도와 연계해 이 같은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상대로 예산 확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최상현후보 지역비전 제시

통합민주당 김제·완주 최상현 예비후보는 2일 새천당 신정동 국제 무역교통의 중추적 할인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이날 김제자원을 통해 "새천당 신정은 풍부한 경제중심지로 도약한는데 최상 이프라이 만들 전단정민시스템을 갖비한 중앙시설로 건설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중국과 동남아 관광의 유지를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에도 많은 힘 제류"이라고 말했다.

지역종합

△ 2008년 3월 3일자 4면

이 예비후보는 이어 서민과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당면한 국가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에서의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이 중요한 의정활동 요소라고 밝혔다.

최상현후보 지역비전 제시

통합민주당 김제 · 완주 최상현 예비후보는 2일 새만금 신항을 국제 무역교류의 중추적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새만금 신항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핵심 인프라인 만큼 첨단항만시스템을 겸비한 항만시설로 건설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이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만금 내부개발과 관광기반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택 4 · 9 총선현장

심영배 "삼천 프로젝트 추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심영배 예비후보는 3일 선거공약 겸 지역정책발표를 통해 "삼천(세내) 프로젝트를 통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신시가지를 전주와 전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삼천의 연간 유지 유수량 확보, 수변지구에 산책로와 숲 조성, 문화체험장 및 전수관 설치, 소수력 댐건설, 모악산 완산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완성 등 21세기 복합문화하천형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완자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완자 예비후보는 3일 상대 후보들에게 성명을 통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선거 운동'을 공식제안했다.

김 후보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며 "모든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중략)

김광삼 "선명 야당 거듭나야"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광삼 예비후보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야당의 역할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일 뿐 여당과 야당의 개념이 과거처럼 극단적일 수는

선택4·9 총선현장

심영배 "삼천 프로젝트 추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심영배 예비후보는 3일 선거공약 겸 지역정책발표를 통해 "삼천(세내) 프로젝트를 통해 도청을 중심으로 한 서부신시가지를 전주와 전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삼천의 연간 유지 유수량 확보, 수변지구에 산책로와 숲 조성, 문화체험장 및 전수관 설치, 소수력 댐건설, 모악산 완산공원과 연계한 체육시설 완성 등 21세기 복합문화하천형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김완자 "깨끗한 선거운동을"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완자 예비후보는 3일 상대 후보들에게 성명을 통해 '깨끗하고 법을 지키는 선거운동'을 공식제안했다.

김 후보는 "일부 예비후보들이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며 "모든 후보들은 깨끗한 선거 문화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어 "모 후보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백과 3매입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철저선거운동 자체를 주문했다.

김광삼 "선명 야당 거듭나야"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김광삼 예비후보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민주당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후보는 "야당의 역할은 국정운영의 파트너일 뿐 여당과 야당의 개념이 과거처럼 극단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며 "무조건 반목감기식의 야당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국민 또한 원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통합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명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모든을 통해 과거 한나라당이 보여주지 못한 제대로된 야당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천관율 되찾아오는 바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공천결과 승복하자"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이은영 예비후보는 3일 논평을 내고 "모든 후보가 공천결과에 대해 경허한 마음으로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각자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심사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고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곳은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존폐가 달린 중대한 국면인 만큼 국민을 선기려했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만약 누구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라도 나오려는 후보가 있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앞으로 정계에 뜻을 담지 못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윤승용 후보 공개검증 제안

통합민주당 익산을 윤승용 예비후보는 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공개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이날 윤 후보는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일수록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국민에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검증받혀진이 된당 공천후보자의 적당성을 확보할수 있고 국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남기 "동학혁명 성지 조성"

통합민주당 고창·부안 선거구 정남기 예비후보는 3일 고창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창안 열정을 송지 못했던 고창발전에 앞장서는 젊은 활력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면서 "도덕성과 공신성 면에서 경쟁후보들보다 앞선다고 자신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는 △동학농민혁명 성지 조성 및 국가 기념일 제정 △서남권 종합관광개발 및 특산물 클러스터 사업단 추진 △부안갯벌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 2008년 3월 4일자 4면

없을 것이다"며 "무조건 발목잡기식의 야당은 한계에 봉착할 것이고 국민 또한 원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통합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명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과거 한나라당이 보여주지 못한 제대로 된 야당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정권을 되찾아오는 바른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공천결과 승복하자"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이은영 예비후보는 3일 논평을 내고 "모든 후보가 공천결과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각자 아쉬움과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심사를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승복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략)

윤승용 후보 공개검증 제안

통합민주당 익산을 윤승용 예비후보는 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후보자 공개 검증을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등을 주장했다.

이날 윤 후보는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검증될 때만이 정당 공천후보자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택4·9 총선 현장

김춘진 농촌지도자聯 감사패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4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위해 김 의원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 의원은 한농연 등 농민단체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폐지 반대를 위해 15명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농촌진흥청 존속을 위해 노력했다.

이상직 경제 성장정책 발표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이상직 예비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경제 성장을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밝힌 3대 정책은 스타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스타공기관 경영평가시 지역인재 채용점검제 스시민참여 시책적 합의기구 구성 등이다.

이 후보는 "도내 이전 공공기관 및 국제기관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만큼 신규 지원 채용과정에서 30% 이상 지역인재 뽑도록 하는 채용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이전 공공기관과의 채용목표제 양해각서 체결을 주장하였다"고 밝혔다.

김대곤 후원회장에 박천규씨

통합민주당 김대곤 전주 완산갑 예비후보(사진 왼쪽) 후원회 창립 총회가 4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 선거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천규 전주상모범운송(사진 오른쪽)을 후원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천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무터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대곤 예비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곤 후보는 이에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는 후원회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여러분의 뜻을 모아 과거 '10대 도시'로 손색없던 옛 전주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철, 최 방통위장 반대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을)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 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씨를 내리한 것과 관련 "최시중씨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사람'이다"면서 "특히 자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편파적인 이론조사가 문제가 되어 한국갤럽 사용직을 불러난만 사례를 보면,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양재원 "영상기 공장 유치"

양재원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갑 총선 예비후보는 4일 전주에 영상기계작공장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도 여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효자그룹과 일본전자관학공업이 공동투자해 설립키로 한 100억원 규모의 영상기계작공장을 전주에 유치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번 영상기계작공장은 영상에 필요한 렌즈와 점단 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라며 "전주에 들어서면 고용창출과 함께 연관 산업을 유치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웅 상인 애로사항 청취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김세웅 예비후보는 4일 전주 기린로 이곳 상가를 찾아 업주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경취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북한구에 발전을 위해 물복원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위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모래내 시장과 종합시장 등 재래시장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찬 AMF 설립 필요 주장

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4일 "환율에 경제공동체의 거점지역인 전북 IT와 산업벨트 활성화와 아시아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그동안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본, 중국, 대만,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2조원 달러의 외환 중 일부를 활용해 AMF(Asian Monetary Fund)를 설립함으로써 우리나 국가들이 통화안정은 물론, 보유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고, 지역 경제가 통폭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홍천 공천결과 승복 제안

통합민주당 이홍천 예비후보(봉동읍)는 4일 성명을 내고 " 정읍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경쟁선거 실천과 공천결과 승복'을 공개적으로 약속,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 공직한 진행을 위해 신문사와 시민사회단체나 특은 선관위에서 이러한 서약식을 주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 모든 후보자들은 메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당에 새신과 변화와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관승 "보육비 부담 감소를"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이관승 예비후보가 4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표지 참여 확대와 보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8여성대회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여성의 사회 진출과 평등권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야들이 나라지아 한다"며 "특히 육아보육의 부담을 분가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육아와 경제적 부담 경감, 안심하고 낳기는 보육시스템,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008년 3월 5일자 4면

선택 4 · 9 총선현장

김춘진 노동지도자 職 감사패

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 · 부안)이 4일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농촌진흥청 존속을 위해 김 의원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감사패를 수여했다. (중략)

이광철, 최 방통위장 반대

통합민주당 이광철 의원(전주 완산을)은 4일 이명박 대통령이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 씨를 내정한 것과 관련 "최시중 씨 스스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그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 데 생을 걸다시피 노력한 사람'이다"면서 "특히 작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편파적인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어 한국갤럽 사장직을 물러났던 사례를 보면,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채수찬 AMF 설립 필요 주장

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전주 덕진)은 4일 "환황해 경제공동체의 거점지역인 전북 T자형 산업벨트 활성화와 아시아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날 "그동안 세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일본, 중국, 대만, 한국과 중동 등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2조원 달러의 외환 중 일부를 활용해 AMF(Asian Monetary Fund)를 설립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이 통화안정은 물론, 보유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고, 지역 경제가 블록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경제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직 경제 성장정책 발표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을 이상직 예비후보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경제 성장을 위한 3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가 밝힌 3대 정책은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점검제 △시민참여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이다. (중략)

양재원 "영상기 공장 유치"

양재원 통합민주당 전주 완산갑 총선 예비후보는 4일 전주에 영상기 제작공장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효자그룹과 일본전자광학공업이 공동투자해 설립키로 한 100억원 규모의 영상기 제작공장을 전주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략)

이홍천 공천결과 승복 제안

통합민주당 이홍천 예비후보(정읍)는 4일 성명을 내고 "정읍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공명선거 실천과 공천결과 승복'을 공개적으로 약속,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치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공정한 진행을 위해 신문사와 시민사회단체나 혹은 선관위에서 이러한 서약식을 주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모든 후보자들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당의 쇄신과 변화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김대곤 후원회장에 박천규씨

통합민주당 김대곤 전주 완산갑 예비후보 후원회 창립 총회가 4일 전주 완산구 평화동 선거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후원회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천규 전주성모병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선출했다.

박천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낙후된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대곤 예비후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김세웅 상인 애로사항 청취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김세웅 예비후보는 4일 전주 기린로 인근 상가를 찾아 입주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지를 당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는 덕진구의 발전을 위해 팔복동 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위주로 리모델링해야 하고 모래내시장과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승 "보육비 부담 감소를"

통합민주당 전주 덕진 이관승 예비후보가 4일 논평을 통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보육비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3.8여성대회가 100주년이 되는 올해 여성의 사회 진출과 활동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약들이 사라져야 한다"며 "특히 육아보육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육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안심하고 맡기는 보육시스템, 아동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원칙으로 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결번호	2008자심75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호남매일	(주)호남매일신문사 / 광주 북구 유동 117-13 대표이사 구 양 술
심의대상기사	『4 · 9 총선 주자 인터뷰』(2008년 3월 7일자 3면)	
주 문	(주)호남매일신문사가 발행한 호남매일 2008년 3월 7일자 3면 『4 · 9 총선 주자 인터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호남매일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정 정당 공천(광주 동구 및 서구갑 지역)과 관련,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후보예정자를 각각 1인씩만 선정하여 그들의 이력, 출마 포부 및 선거 공약 등을 인터뷰 형식으로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 4 · 9총선 주자 인터뷰

18대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통합민주당의 경우 공천신청자 접수결과 광주지역에서 8.3대 1을 기록,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선보다 뜨거운 예선'을 치르고 있는 예비후보 가운데 광주 동구의 박주선 후보, 광주 서구 갑에 조영택 후보에게 공약 사항과 포부 등을 들어보았다.

박주선 예비후보(동구)
"국민의 눈물 닦아주는 정치인 될터"

1. 고향이자 지난 16대 총선 당시 지역구였던 화순 · 보성을 등지고 광주 동구로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 1월 광주에서는 민주당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광주시장과 동구청장을 비롯, 시의회 의원과 동구의원들로부터 차기 호남의 대표정치인으로서 낙후된 동구의 발전과 광주의 미래를 위해 동구 지역구를 맡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광주시민과 동구 지역민들이 국회출마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 분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와 동구의 자존심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지역민들의 깊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2.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합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과 함께 큰 기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통합민주당 탄생에 대한 감회를 얘기해 달라.

=중도개혁평화민주세력은 당 차원의 합당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는 일념에서 끝까지 민주당에 남아 통합신당과 조건 없는 통합을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더불어 물밑에서 통합을 위해 양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았고 결과적으로 통

합의 극적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정치적 이익을 찾아 당적을 철새처럼 바꾸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원칙과 지조를 지켜온 만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맞서 국정 견제를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최일선에 서서 호남 소외 내지는 배제 정책을 타파하는데 앞장서겠다.

3. 국회의원은 풍부한 국정 경험과 함께 인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 관계 뿐만 아니라 재계와 학계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끈끈한 인맥을 갖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김대중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으로서 행정 각부의 장 · 차관과 국영기업체 사장의 임명을 추천하고 행정부 3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담당하면서 정부 고위공직자와 교분을 갖게 됐다. 현재 이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지난 16대 선거에서 화순 · 보성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당시 전국에서 많은 지인들이 몰려와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주었다. 그 결과 압도적 표차로 당선 신화를 이끌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4. 16대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달라.

=우선 지역구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예를 들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할 48개 시 · 군가운데 화순 · 보성에 끌어온 예산이 전체의 23%를 차지해 군민들이 크게 놀랐었다.

전국 읍단위 최초로 화순읍에 도시가스를 공급했으며 화순전남대병원과 암센터, 생명농업기술지원센터를 유치했다.

또한 소도읍 가꾸기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역할을 했으며 보성-목포간 철도 건설과 각종 도로 및 터널공사도 현역시절 이뤄냈다.

5. 동구발전을 위한 비전과 공약은?

=중앙 무대에 나가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입법활동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잘사는 동구를 만들겠다.

구체적인 발전 계획으로는 ▲충장로 금남로 국제쇼핑장소 조성 ▲초일류 건강도시 조성 및 R&D센터 동구 유치 ▲무등산 관광 명소화 추진 ▲동구 재개발 ·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립 중앙도서관 광주분소 동구 유치 ▲노인복지사업 실버타운 조성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국민스포츠센터 건립 등을 임기 내 완성하겠다.

■ 4 · 9총선 주자 인터뷰

박주선 예비후보(동구)

조영택 예비후보(서구 갑)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 될터"

"국정운영 경험 살려 서구발전에 이바지"

조영택 예비후보(서구 갑)
"국정운영 경험 살려 서구발전에 이바지"

1. 조영택 예비후보께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고향분들의 말없는 성원 덕분이었다.

지난 2006년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는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맡았을 때에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난항을 겪던 종합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다. 이제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았던 과분한 사랑을 시민들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삶으로 갚아나가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호남 홀대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고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야당, 강력한 원내 견제세력이 필요하다.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참 일꾼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일을 제가 하겠다.

2. 조 예비후보께서 출마지역으로 서구갑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면.

=서구는 제가 공직에 들어가 전남도청으로 첫 부임했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다. 어머니는 제가 중앙부처로 옮긴 뒤에도 줄곧 서구에서 사셨고 집안의 형제들도 서구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매우 인연이 깊은 곳이다.

이번 총선에서 서구를 택한 이유는 이 같은 개인적인 인연과 제가 그동안 공직생활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크게 작용했다. 서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은 신 · 구도심간 양극화를 저의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3. 말씀하셨듯이 서구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서구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공약이 있다면.

= 서구를 비즈니스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웰빙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상무 신도심은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구도심은 주거개선사업 등을 통해 교육문화 복합단지와 친환경적 웰빙 주거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 양동시장은 호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주상복합 쇼핑공간으로 육성하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4. 타 후보들과 비교해 본인이 갖는 장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 · 감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저는 22개 중앙부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풍부한 국정운영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 저의 국정운영 경험은 국회의원으로서 준비된 후보라 하기에 충분하다 생각한다. 또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능력과 개혁성을 갖추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저는 통합민주당이 진보정당으로 태동해 나가는 데 정책전문가로 적임자다. 국민의 대표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지역의 몫을 찾아내는 길을 아는 후보라는 점 등이 타 후보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한다.

5. 민주당은 현재 공천 배제 기준을 확정하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후보께서 출마한 서구 갑 경선을 전망한다면.

=서구갑에는 민주당 예비후보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은 후보 공천의 기준으로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저는 이 기준에 가장 부합한 후보라 생각한다.

민주당의 공천심사는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후보가 선정되리라 믿는다.

저는 지난 2006년 광주시장 출마와 그동안 예비후보로서 다양한 지지층 확보에 노력해 왔다. 제가 그동안 만난 유권자들은 후보 지지의 이유로 정책과 능력을 꼽았다. 정책전문가로서 저의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지지층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공고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결번호	2008자심76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남해신문	남해신문(주)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변리 460-6 대표이사 정 문 석
심의대상기사	『세 가지 품성(品性)』 (2008년 3월 7일자 21면)	
주 문	남해신문(주)이 발행한 남해신문 2008년 3월 7일자 21면 『세 가지 품성(品性)』 제하의 칼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남해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세 가지 품성(品性)

정 상 권

- 1959년 남해출생
-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
- 한중 친선협회 사무총장 역임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한나라당 노원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수성가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 워렌버핏은 주변에 사람을 둘 때 1) 성실성, 2) 에너지, 3) 지능을 갖추고 있는 지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한다.

그 중 첫째가 없다면 뒤의 두 가지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한다.

자회사의 경영자가 성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게으르고 우둔한 쪽이 더 낫다는 것이다.

성실함이 없다면 자신의 에너지와 지능 때문에 파멸하고 만다. 분명히 에너지와 넘치는 열정은 중요한 성품이고 지능이나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성실함,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 에너지와 지능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조직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함께 할 다른 사람을 택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갈 때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에너지와 지능에 혹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스스로 에너지와 지능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에 더해 성실성을 갖추도록 몇 배 힘써야 할 것이다.

나는 이동면 금평에서 태어나 성남국민학교 2학

년을 마치고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하여 외삼촌 집에서 성장하였다.

3학년 때에는 주위 친구들이 촌놈이라는 멸시 아닌 멸시를 많이 받았다.

또한 그들의 가정환경과 나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을 때 열등감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하면서 남해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

또한 나는 남해인의 자부심을 "성실성"에서 찾고 싶다.

"동양의 유대인" 내가 남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다.

나는 요즈음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세가지 품성에 대해서 특히 "성실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

향우기고

세 가지 품성(品性)

정 상 권

- 1959년 남해출생
- 동아대 경영학과를 졸업
- 한중 친선협회 사무총장 역임
-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 정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 한나라당
  노원 병 국회의원 예비후보

자수성가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으며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실천한 워런버핏은 주변에 사람을 볼 때 1) 성실성, 2) 에너지, 3) 지능을 갖추고 있는 지 살펴보고 판단한다고 한다.

그 중 첫째가 없다면 뒤의 두 가지 때문에 죽게 된다고 말한다.

자회사의 경영자가 성실하지 않다면 차라리 계으르고 우둔한 쪽이 더 낫다는 것이다.

성실함이 없다면 자신의 에너지와 지능 때문에 파멸하고 만다. 분명히 에너지와 넘치는 열정은 중요한 성품이고 지능이나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성실함.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 에너지와 지능만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조직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함께 할 다른 사람을 택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 나갈 때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에너지와 지능에 혹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스스로 에너지와 지능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에 더해 성실성을 갖추도록 몇 배 힘써야 할 것이다.

나는 이동면 금평에서 태어나 성남국민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하여 외삼촌 집에서 성장하였다.

3학년 때에는 주위 친구들이 촌놈이라는 멸시 아닌 멸시를 많이 받았다.

또한 그들의 가정환경과 나의 가정환경을 비교했을 때 열등감도 많이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나는 성장하면서 남해에서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고 있다.

또한 나는 남해인의 자부심을 "성실성"에서 찾고 싶다.

"동양의 유대인" 내가 남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이다.

나는 요즈음 언론에 오르내리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세가지 품성에 대해서 특히 "성실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게 된다.

의결번호	2008자심77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영암신문	21세기영암신문(주)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50-2 대표이사 문 배 근
심의대상기사	『故 차일혁 총경이 그립다』 (2008년 2월 22일자 2면)	
주 문	21세기영암신문(주)이 발행한 영암신문 2008년 2월 22일자 제324호 2면 『故 차일혁 총경이 그립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 장흥 · 강진 · 영암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영암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故 차일혁 총경이 그립다.

유인학 /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문이 불탔다. 대한민국 국보1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의해 불더미가 됐다. 돈만 아는 탐욕인에 의해 국민의 자존심이 폭삭 주저앉았다.

600년 역사를 간직하면서 임진왜란 때 왜구인들에게도, 병자호란 때 오랑캐들도 태우지 않았던 숭례문이 천민자본주의 만연한 대한민국 돈 욕심 앞에서 자국인에 의해 방화돼 잿더미로 변했다. 불지른 자, 왜인만도 못하고 오랑캐만도 못하다. 방화범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도 숨쉴 자격도 없다.

돈이 없으면, 부처님은 돌아앉고 예수님은 두 눈 감고 공자님은 고개 돌려, 인류의 성인들마저 외면해버린다는 소위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천박한 흐름 속에서 우리들은 돈만을 위해 숨가쁘게 살아왔다. 새마을운동 당시에는 초가집을 포함, 전통을 부셔버리더니 아파트 건립 유행 속에서는 고인돌도 파묻고 의병비와 열녀비도 파괴했다.

급기야 삽으로 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는 청계천 신화에 이어 한반도 대운하를 최대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 이상을 '붓 아닌 삽'을 앞장세워 왔다. 석유 한방울 나지 않은 부존자원 빈약한 국가 최대 경제논리로 말이다.

이제 중단돼야 한다. 남대문이 불탄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갈길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삽으로 조국강토를 부자로 만들겠다는 어리석음은 대폭 수정해야 한다. 목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이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진행은 매장 문화재부터 건져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한다.

남대문은 언제나 촌사람 서울사람 차별하지 않고 민초들의 발길과 숨결이 총집합하는 서울역 광장 앞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오고가는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것 못볼 것 죄다 보아오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 어머니처럼 혹은 할머니처럼 장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수더분한 낯빛으로 우리들과 눈길을 맞췄다.

민족의 자랑이자 생활의 상징으로서 역사의 증언자로서 언제까지나 함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사라져 버렸다. 말없는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말 많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단 말인가.

'빨치산 온상지'였던 구례의 화엄사도 남대문처럼 역시 목조 문화재다. 화엄사에는 고 차일혁 총경의 지엄한 정신이 면면히 깃들고 켜켜이 새겨져 있다.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경찰간부로서 화엄사 각황전(覺皇殿)의 문짝만 태워 화엄사란 고찰을 지금까지 보존되게 했다고 한다. 일부만 소각했으니 지엄한 상부명령에도 복종하고 천년고찰 화엄사 대웅전은 보존했으니 지고지순한 민족정신에도 순응하는 고결한 삶을 차 총경은 반세기 전에 실천했다.

"이 절을 태우는 데 한 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며 강경파 부하들을 설득한 차일혁 총경이 지금 너무도 그립다. 그가 환생해 필자를 포함한 현대인을 종아리 터지도록 매질해 주었으면 분이 풀릴 것 같다. 죄를 지었으니 매는 의당하다.

특별기고

유인학

재계기식문화협회 총재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대문이 불타다. 대한민국 국보1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의해 불타버리기 됐다. 원인 이는 탐욕인데 의해 국민의 자존심이 폭삭 주저앉았다.

600년 역사를 간직하면서 일천 여덟 왕국(王國)에게도, 일기초한 때 오랑캐들도 태우지 않았던 숭례문이 정민자본주의 민연한 대한민국 본 채심 앞에서 자국인에 의해 방화에 댓대이로 번했다. 불가한 지, 용납안되도 못하고 오랑캐만도 못한, 방화범은 또한, 대한민국에서 살 자격도 숨쉴 자격도 없다.

문이 없으면, 부처님은 들어올 고 예수님은 두 눈 감고 못가실 곳은 고개 젖어, 인류이 성인들이 재부터 건져낸 다음 생각해봐야 한다.

남대문은 언제나 촌사람 서울사람 차별하지 않고 민초들의 발길과 숨결이 총집합하는 서울역 광장 앞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오고가는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것 못볼 것 죄다 보아오며 그 자리를 지켜왔다. 어머니처럼 혹은 할머니처럼 장엄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수더분한 낯빛으로 우리들과 눈길을 맞췄다.

민족의 자랑이자 생활의 상징으로서 역사의 증언자로서 언제까지나 함께할 줄 알았다. 그러나 이제, 사라져 버렸다. 말없는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나서야, 말 많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단 말인가.

'빨치산 온상지'였던 구례의 화엄사도 남대문처럼 역시 목조 문화재다. 화엄사에는 고 차일혁 총경의 지엄한 정신이 면면히 깃들고 켜켜이 새겨져 있다. 상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경찰간부로서 화엄사각황전(覺皇殿)의 문짝만 태워 화엄사란 고찰을 지금까지 보존되게 했다고 한다. 일부만 소각했으니 지엄한 상부명령에도 복종하고 천년고찰 화엄사 대웅전은 보존했으니 지고지순한 민족정신에도 순응하는 고결한 삶을 차 총경은 반세기 전에 실천했다.

"이 절을 태우는 데 한 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라며 강경파 부하들을 설득한 차일혁 총경이 지금 너무도 그립다. 그가 환생해 필자를 포함한 현대인을 종아리 터지도록 매질해 주었으면 분이 풀릴 것 같다. 죄를 지었으니 매는 의당하다.

故 차일혁 총경이 그립다

의결번호	2008자심82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충청투데이	(주)충청투데이 / 대전 서구 둔원1길 50 대표이사 정 남 진
심의대상기사	- 『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2008년 3월 20일자 1면) -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2008년 3월 20일자 3면) -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2008년 3월 20일자 4면)	
주 문	(주)충청투데이가 발행한 충청투데이 2008년 3월 20일자 1면 『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3면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4면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충청투데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지역)와 관련하여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심규철 · 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 충북 보은 · 옥천 · 영동

보은 · 옥천 · 영동 선거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2파전 양상의 선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충청투데이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보은 · 옥천 · 영동 선거구의 민심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후보별 지지율은 통합민주당 김서용 예비후보 3.4%,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 24.7%,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20.5%, 평화통일가정당 지준범 예비후보 0.2%, 무소속 박인수 예비후보 0.2%로 심 후보와 이 의원이 오차범위 내인 4.2%포인트의 근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51%인데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도 58.3%로 조사돼 이들이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 선택 4·9총선 D-20 대전·충남북 선거구별 여론조사

심규철·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충북 보은·옥천·영동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면서 2파전 양상의 선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충청투데이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의 민심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을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하루 동안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후보별 지지율은 통합민주당 김서용 예비후보 3.4%,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 24.7%,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 20.5%, 평화통일가정당 지준범 예비후보 0.2%, 무소속 박인수 예비후보 0.2%로 심 후보와 이 의원이 오차범위 내인 4.2%포인트의 근접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51%인데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도 58.3%로 조사돼 이들이 어떤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2008년 3월 20일자 1면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당적 바꾼 이용희의원 근소한 차 2위
1위 심규철 '4년전 패배' 설욕 벌러

보은 · 옥천 · 영동 선거구는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를 결정짓지 않은 부동층이 51%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고 있어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정치거물인 이용희 의원은 금고 이상 비리전력 때문에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최근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이 통합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바꿔 타면서 이향래 보은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정구복 영동군수가 동참했고, 김인수 충북도의원과 8명의 기초의원들도 합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당적변경에 따른 이 선거구의 판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20.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는 비록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정치거물 이용희 의원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용희 후보에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심 후보의 약진은 20일 후에 치러질 본선에서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향후 50%가 넘는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또 3개 군 복합선거구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소지역주의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후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심규철 후보가 영동, 이용희 의원과 김서용 후보가 옥천이며, 보은은 후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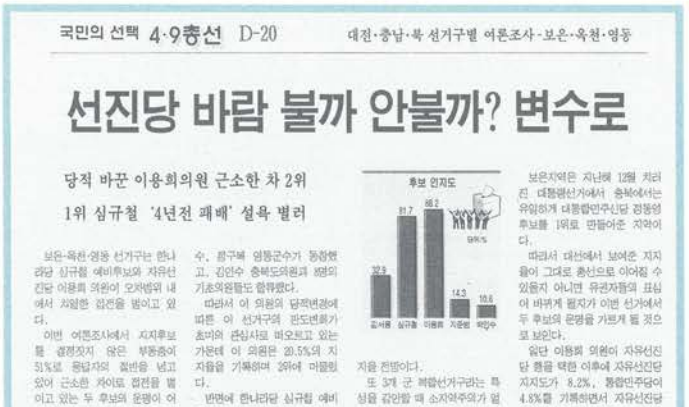
두 명의 후보가 있는 옥천에서의 표 분산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 출신 후보가 없는 보은지역 유권자 표심이 당락의 결정적인 키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은지역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는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1위로 만들어준 지역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보여준 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바뀌게 될지가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용희 의원이 자유선진당 행을 택한 이후에 자유선진당 지지도가 8.2%, 통합민주당이 4.8%를 기록하면서 자유선진당 지지도가 타 선거구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이용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선거일까지 이용희 의원이 얼마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느냐와 심규철 후보가 자유선진당 바람을 차단하고 1위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선택 4·9총선 D-20 대전·충남·북 선거구별 여론조사 - 보은·옥천·영동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당적 바꾼 이용희의원 근소한 차 2위

1위 심규철 '4년전 패배' 설욕 벌러

후보 인지도

32.9 21.7 20.5 14.5 10.6

김서용 심규철 이용희 지준범 위인수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와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를 결정짓지 않은 부동층이 51%로 응답자의 절반을 넘고 있어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부의장까지 오른 정치거물인 이용희 의원은 금고이상 비리전력 때문에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최근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바꿔 총선을 치르게 됐다.

이 의원이 통합민주당에서 자유선진당으로 말을 바꿔 타면서 이향래 보은군수, 한용택 옥천군수, 정구복 영동군수가 동참했고, 김인수 충북도의원과 8명의 기초의원들도 합류했다.

따라서 이 의원의 당적변경에 따른 이 선거구의 판도변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20.5%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2위에 머물렀다.

반면에 한나라당 심규철 예비후보는 비록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정치거물 이용희 의원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이용희 후보에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던 심 후보의 약진은 20일 후에 치러질 본선에서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향후 50%가 넘는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당락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또 3개 군 복합선거구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소지역주의가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

후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심규철 후보가 영동, 이용희 의원과 김서용 후보가 옥천이며, 보은은 후보가 없다.

두 명의 후보가 있는 옥천에서의 표 분산이 예상되고 있고, 지역 출신 후보가 없는 보은지역 유권자 표심이 당락의 결정적인 키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은지역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1위로 만들어준 지역이다.

따라서 대선에서 보여준 지지율이 그대로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표심이 바뀌게 될지가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용희 의원이 자유선진당 행을 택한 이후에 자유선진당 지지도가 8.2%, 통합민주당이 4.8%를 기록하면서 자유선진당 지지도가 타 선거구보다 높은 것으로 볼 때 이용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선거일까지 이용희 의원이 얼마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느냐와 심규철 후보가 자유선진당 바람을 차단하고 1위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2008년 3월 20일자 3면

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선거일까지 이용희 의원이 얼마나 지지 세력을 규합하느냐와 심규철 후보가 자유선진당 바람을 차단하고 1위의 자리를 지켜낼 것인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지역구별 평균 50~60%…각당 지지율 하락세 뚜렷
공천파동 인한 정치혐오증 투표율 악영향 우려도

정당의 방향과 총선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이슈로 뜨지않아 어느 한 곳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안갯속 표심이 선거 막판까지 표류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부동층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천파동의 여파가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돼도 정치혐오증에 잠긴 부동층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안정론 · 정권견제론 · 정치대안론 등 3자 구도로 펼쳐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공약 논의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는 공천파동에 눌려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도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만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한 셈이다.

정책과 인물 대결 등 포지티브 경쟁구도보다는 공천탈락에 따른 반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네거티브적인 왜곡된 정치이슈만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번 선거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이번 선거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척도라기보다 사상 최악의 기권율로 정치혐오증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구태와 함량미달에 기인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은 충청투데이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전 · 충남 · 충북 등 충청권 각 선거구별 부동층이 평균 50~60%에 이르고 있다.

대선 당시 충청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벌어들였던 한나라당 지지율(37%)은 20%대에 머물러 있고 통합민주당(정동영 후보)과 자유선진당(이회창 후보) 지지율도 10% 이상 빠진 상황에서 부동층이 증가했다.

시민 이 모(34 · 유성구 노은동) 씨는 "정치권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무엇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후보들이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하기만 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충청투데이 4·9총선

D-20

지역구별 평균 50~60%…각당 지지율 하락세 뚜렷

공천파동 인한 정치혐오증 투표율 악영향 우려도

정당의 방향과 총선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정책공약이 이슈로 뜨지않아 어느 한 곳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안갯속 표심이 선거 막판까지 표류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 부동층이 움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천파동의 여파가 네거티브 선거전략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막상 선거운동이 본격화돼도 정치혐오증에 잠긴 부동층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일찌감치 이번 총선을 정권안정론 · 정권견제론 · 정치대안론 등 3자 구도로 펼쳐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공약 논의가 '그들만의 리그'에서 펼쳐지는 공천파동에 눌려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한나라당의 독주를 견제할 야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도 아니면 전혀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만 놓고 선택을 강요당하는 입장에 처한 셈이다.

정책과 인물 대결 등 포지티브 경쟁구도보다는 공천탈락에 따른 반발, 탈당과 무소속 출마 등 네거티브적인 왜곡된 정치이슈만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번 선거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상태라면 이번 선거가 우리사회의 미래에 대한 민의를 반영하는 척도라기보다 사상 최악의 기권율로 정치혐오증이 얼마나 큰지를 각인시키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구태와 함량미달에 기인한 유권자의 정치무관심은 충청투데이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각 선거구별 부동층이 평균 50~60%에 이르고 있다.

대선 당시 충청권에서 이명박 후보가 벌어들였던 한나라당 지지율(37%)은 20%대에 머물러 있고 통합민주당(정동영 후보)과 자유선진당(이회창 후보) 지지율도 10% 이상 빠진 상황에서 부동층이 증가했다.

시민 이 모(34·유성구 노은동) 씨는 "정치권이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무엇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라면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후보들이 무슨 낯으로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하기만 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 2008년 3월 20일자 4면

의결번호	2008자심85	결정유형 / 경 고
언 론 사	담양주간신문	담양주간신문(주)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270-3 대표이사 장 기 두
심의대상기사	『사교육비 20조 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2008년 3월 17일자 8면)	
주 문	담양주간신문(주)가 발행한 담양주간신문 2008년 3월 17일자 제249호 8면 『사교육비 20조 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담양주간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사교육비 20조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최순영 의원 / 민주노동당, 비례

통계청이 사교육비 실태를 발표하였다. 사교육비 20조400억원(국가예산의 12%), 초중고생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평균 지출액은 22만2천원, 소득별 편차는 8.8배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사교육 비용은 4370만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교육비와 관련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공교육 예산을 추월할 것이라는 말이 소문처럼 떠돌았는데 이로써 소문이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교육비 20조 시대의 의미는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공교육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고통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더욱 심한 고통일 수밖에 없다.

셋째는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부의 대물림,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통계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소득간 사교육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화, 계층이동, 부의 재분배는 더욱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교육은 사고력, 창의력을 키우고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여야 하는데 사교육은 시험 중심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사교육은 선행학습, 중고등학교는 입시 중심이 되다보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 개발, 인간관계 형성 학습 등이 어렵게 되는 점도 길게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사교육의 원인으로 부모들이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중심사회(기업채용시 학벌중시)를 꼽았다. 매우 본질적인 원인을 그대로 드러낸 조사결과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입시제도의 개선 등으로는 사교육비가 절대로 줄어들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20조 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대학서열구조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단계적으로 대학평준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에 의해 형성된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학벌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셋째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책임 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덥고 추운 교실, 콩나물 교실, 학부모 부담 의존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공교육이 불가능하다.

물론 교육을 바꾸는 것은 오랜기간의 실패를 통해 경험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부재정의 많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영어교육강화, 대입자율화 등 사교육비 절반 정책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두배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비 40조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선이 아닌 혁명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사교육비 20조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 비례)

통계청이 사교육비 실태를 발표하였다. 사교육비 20조400억원(국가예산의 12%), 초중고생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월평균 지출액은 22만2천원. 소득별 편차는 5.8배로 나타났다.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는 사교육비용은 4370만원이라고 한다.

그동안 사교육비와 관련 정확한 통계가 없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공교육예산을 추월할 것이라는 말이 소문처럼 떠돌았는데 이로써 소문이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사교육비 20조시대의 의미는 몇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공교육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은 공교육의 부실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고통이 참말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이를 낳아 대학까지 보내려면 수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만큼 서민들에게는 더욱 심한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사교육 의존도가 늘어지는 것은 부의 대물림, 사회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이다. 통계를 통해 확인 되었듯이 소득간 사교육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어로 인해 교육을 통한 기회의 균등화, 계층이동, 부의 재분배는 더욱 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사교육비의 증가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초중고 교육은 사고력, 창의력을 키우고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여야 하는데 사교육은 시험 중심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사교육은 선행학습, 중고등학교는 입시중심이 되다보니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 개발, 인간관계 형성 학습 등이 어렵게 되는 점도 길게 보면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의 원인으로 부모들이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중심사회(기업채용시 학벌중시)를 꼽았다. 매우 본질적인 원인을 그대로 드러낸 조사결과이다. 따라서 부분적인 입시제도의 개선 등으로는 사교육비가 절대로 줄어들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비 20조시대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대학서열구조를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단계적으로 대학평준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부모의 재력과 사교육에 의해 형성된 학벌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평가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로 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학벌 차별을 해소하여야 한다. 이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셋째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재정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가책임교육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덥고 추운 교실, 콩나물 교실, 학부모 부담 의존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공교육이 불가능하다.

물론 교육을 바꾸는 것은 오랜기간의 실패를 통해 경험했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부재정의 많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은 시장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영어교육강화, 대입자율화 등 사교육비 절반 정책이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두배 정책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비 40조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이제부터라도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개선이 아닌 혁명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3. 주 의

의결번호	2008자심2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울산제일일보	(주)울산제일일보 / 울산 남구 신정2동 661-1 대표이사 임 채 일
심의대상기사	-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2007년 12월 28일자 2면) -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2007년 12월 28일자 2면)	
주 문	(주)울산제일일보가 발행한 울산제일일보 2007년 12월 28일자 각 2면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울산제일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울산지역)와 관련하여 객관적 기준 제시 없이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예정자 2인에 대해서만 그들의 의정실적을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기현 의원, '여천천 준설 및 하상 정비'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 을)은 27일 남구 여천교~울산항에 이르는 2.3km 구간에 '여천천 준설 및 하상 정비' 예산 6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천천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남구청(구청장 김두겸)과 협의해 행자부로부터 '재해 예방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으며 국회예결위 심의에서도 여천천 정비 예산이 추가로 반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고래특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한 바 있다.

그동안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여천천은 하천의 기능보다는 우·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하류는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왔다.

이때문에 악취발생과 유해 곤충 서식으로 하천 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으로 하천에 퇴적된 오염 물질을 준설하고 하상을 정비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회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커다란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천천 정화 및 정비사업은 남구의 오랜 숙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라며 "여천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두환 의원, 동해남부선철도 조기착공 확정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은 2008년도 예산을 심의 중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동해남부선철도(울산-포항) 공사비 20억을 신규 반영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합의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원안통과하는 것이 국회관례인 만큼 마침내 동해남부선철도 울산부분의 조기착공이 확정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남부선 공사비 20억은 당초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되었던 것이지만 윤 의원이 지난 11월 9일 건교위에서 신규 반영시켰던 예산이다.

윤 의원은 "동해남부선은 2008년에 80억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는 것과 동시에 설계가 완료된 울산시 관내 1.2공구 구간에 대해서 20억의 예산으로 용지매수 등 공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는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억 공사비 반영에 대해 "동해남부선(울산-포항)철도는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매우 시급한 사업인 점을 고려해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조기공사착공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 '여천천 준설 및 하상 정비'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남구·울주·사진)은 27일 남구 여천동-울산항역 이르는 2.3km 구간에 "여천천 준설 및 하상 정비" 예산 6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천천 정비와 관련한 예산 확보를 위해 남구청(구청장 김두겸)과 협의해 행자부로부터 "재해 예방 특별교부세" 6억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고 덧붙여 국회예결위 심의에서도 여천천 정비 예산이 추가로 반영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도 "고래특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11억을 확보한 바 있다.

그동안 울산의 대표적인 도심 하천인 여천천은 지천의 기능보다는 우·오수를 배출하는 하수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악취는 심할때서 유입된 오염 물질이 퇴적되어 있다.

이재민에 막대발생과 유해 곤충서식으로 하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지원된 예산으로 하천에 퇴적된 오염 물질을 준설하고 하상을 정비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회복 및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커다란 개선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천천 준설 및 정비 사업은 남구의 오랜 숙원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일"이라며 "여천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 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두환 의원, 동해남부선철도 조기착공 확정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사진)은 2008년도 예산을 심의중인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동해남부선철도(울산-포항) 공사비 20억을 신규 반영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합의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원안통과하는 것이 국회관례인 만큼 마침내 동해남부선철도 울산부분의 조기착공이 확정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남부선 공사비 20억은 당초 정부예산에는 미반영되었던 것이지만 윤 의원이 지난 11월 9일 건교위에서 신규 반영시켰던 예산이다.

윤 의원은 "동해남부선은 2008년에 80억의 예산으로 설계를 완료하는 것과 동시에 설계가 완료된 울산시 관내 1.2공구 구간에 대해서 20억의 예산으로 용지매수 등 공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오는 2009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억 공사비 반영에 대해 "동해남부선(울산-포항)철도는 2000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매우 시급한 사업인 점을 고려해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을 통해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조기 공사착공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의결번호	2008자심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무등일보	(주)하나로문화 / 광주 서구 치평동 1180 대표이사 전 용 준
심의대상기사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2008년 1월 10일자 19면)	
주 문	(주)하나로문화가 발행한 무등일보 2008년 1월 10일자 19면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무등일보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남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

유 인 학 / 세계거석문화협회 총재

바야흐로 국제관광시대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호텔인 '크루즈' 관광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바다 위 호텔은 어제는 중국 오늘은 한국 내일엔 일본에 갈 수 있다.

100년도 못사는 삶의 노정에서,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다는 점에서 삶의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삶의 길이뿐만 아니라 삶의 깊이까지도 동시에 심원하게 할 수 있다.

시시각각 개발돼 나오는 장수 관련 의약품으로, 수치적은 사람의 수명은 늘릴 수 있어도, 문화적인 수명은 늘릴 수 없을 것 같다. 감성적인 안테나와 인간적인 마인드는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단해 보면, 여행이란 사람을 장수시키는 비결이자 삶의 활력소가 분명하다. 닫힌 마음을 활짝 열 수도 있다.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정보망이 늘어나기도 한다.

일본이란 국가는 우리 나라와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허구적 사실로 자국의 입장에서 한일 양국간 나아가 동북아 과거지사를 해결하려 든다.

우리 호남지방은 한반도 내에서 일본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가장 다양한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 백제땅이었던 호남과 충남지방 중심에서 건너간 문화가 일본문화의 대부분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지방을 찾는 일본관광객은 그동안 뜸해 왔다. 신라 왕도였던 경주를 찾던 일본 여고생 관광객도, 경복궁과 한강을 찾던 일본 역사 탐방단도, 백제도읍 부여를 찾던 수학여행 관광단도 거의 없다시피 해왔다.

혹자들은 이에 대해, 경주는 개발독재시대에 관광지로 잘 개발됐고, 서울권은 대한민국 상징인 수도가 있고, 부여는 백제의 수도가 있었으니 일본 관광객들은 수도를 주로 찾지 시골을 왜 찾겠느냐고, 주장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어도, 실속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에게 호남권에서 '일본과 호남' 관련 역사와 관광자원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면, 호남을 찾는 일본관광객이 과거처럼 드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남 특히 우리 전남지방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미개지인 일본에 한문을 가르치고 유교예절을 가르쳤던 왕인 박사의 영암 유적지, 일본인에게 주자학을 전하여 일본문예부흥 단초를 제공한 수은 강항의 영광 유적지, 임진왜란과 한말의병 등의 한일간 다툼의 전쟁 흔적들도 많기만 하다.

실제로 영암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왕인축제에서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찾아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왕인박사의 흔적을 찾고 있다.

필자는 삼국 이전 역사를 포함하면 일본인들이 전남을 찾을 이유가 더욱 많음을 알고 있다. 800년 동안이나 역사가 길었던 마한문화와 벼농사 문화, 고인돌 문화 등이 이유들의 대강적 근원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역사유적이며, 옹관묘로 대표되는 마한문화 역시 영산강 유적만이 갖는 남도의 고유한 문화 유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고대사 조작, 중국의 동북공정, 러시아의 팽창주의 등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다. 역사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강해져야 한다. 약육강식의 논리 역시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이 일본 관련 박물관을 지어야 될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가득 담을 국립박물관 한 곳 없는 전남 포함 호남이 차라리 연민의 정으로 다가온다.

특별기고

유인학
세계가석문화협회 총재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

비아호로 국제관광시대다. 비다 위를 비다니는 호텔인 '크루즈' 관광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비다 위 호텔은 어제는 중국 오늘은 한국 내일엔 일본에 갈 수 있다.

100년도 못사는 삶의 노정에서, 여행은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다는 점에서 삶의 깊이를 넓힐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이다. 삶의 깊이 뿐만 아니라 삶의 넓이까지도 동시에 심화하게 할 수 있다.

시시각각 개발돼 나오는 관수 관련 의아 품으로, 수치적은 사람의 수명은 늘릴 수 있어도, 문화적인 수명은 늘릴 수 없을 것 같다. 감성적인 인테나와 인간적인 미인드는 세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진단해 보면, 여행이란 사람을 관수시키는 비결이자 삶의 활력소가 분명하다. 단한 마음을 활력 넣 수도 있다. 견문이 넓어지기도 하고 정보통이 늘어나기도 한다.

일본이란 국가는 우리 나라와 옛날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려 한다. 할 수만 있다면 한국적 사실도 자국의 입장에서 한일 당국간 나아가 몸뚱아 과거지사를 해결하려 든다.

우리 호남지방은 한반도내에서 일본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기도 하지만, 가장 다양한 역사적 유대를 갖고 있다. 백제왕자였던 호남과 충남지방 중심에서 건너간 문화가 일본문화의 대부분일 정도다.

그렇에도 불구하고 호남지방을 찾는 일본관광객은 그동안 몰해 왔다. 심지 광도 였던 경주를 찾던 일본 여고생 관광객도, 정복군과 한강을 찾던 일본 역사 탐방단도, 백제도읍 부여를 찾던 수학여행 관광단도 거의 없다시피 해왔다.

호자들은 이에 대해, 경주는 개발독재시대에 관광지로 잘 개발됐고, 서울권은 대한민국 상징인 수도가 있고, 부여는 백제의 수도가 있었으니 일본 관광객들은 수도를 주로 찾지 시골을 왜 찾겠느냐고, 주장들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역사에 관심을 기울였어도, 실속적인 관광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에게 호남권에서 '일본과 호남' 관련 역사와 관광자원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면, 호남을 찾는 일본관광객이 과거처럼 드물지는 않았을 것이다.

호남 특히 우리 전남지방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많은 인연을 갖고 있다. 미개지인 일본에 한문을 가르치고 유교예절을 가르쳤던 왕인 박사의 영암 유적지, 일본인에게 주자학을 전하여 일본문예부흥 단초를 제공한 수은 강항의 영광 유적지, 임진왜란과 한말의병 등의 한일간 다툼의 전쟁 흔적들도 많기만 하다.

실제로 영암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왕인축제에서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찾아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왕인박사의 흔적을 찾고 있다.

필자는 삼국 이전 역사를 포함하면 일본인들이 전남을 찾을 이유가 더욱 많음을 알고 있다. 800년 동안이나 역사가 길었던 마한문화와 벼농사 문화, 고인돌 문화 등이 이유들의 대강적 근원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문화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역사유적이며, 옹관묘로 대표되는 마한문화 역시 영산강 유적만이 갖는 남도의 고유한 문화 유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충분한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의 고대사 조작, 중국의 동북공정, 러시아의 팽창주의 등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고립돼 가고 있다. 역사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강해져야 한다. 약육강식의 논리 역시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이 일본 관련 박물관을 지어야 될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가득 담을 국립박물관 한 곳 없는 전남 포함 호남이 차라리 연민의 정으로 다가온다.

의결번호	2008자심7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경기신문	(주)경기신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5-19 대표이사 박 세 호
심의대상기사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2008년 1월 16일자 3면)	
주 문	(주)경기신문사가 발행한 경기신문 2008년 1월 16일자 3면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경기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파주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의 의정활동 실적을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이재창 의원, 파주지역 56 · 78번 국지도 기공식 참석

파주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조리~법원(56번 국지도), 고양~광탄(78번 국지도) 간 도로가 4차선으로 확 · 포장되는 기공식이 16일 오후 4시 파주시 조리읍 파주오산지방산업단지에서 열린다.

해당 지역은 파주시내 상습정체구역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많던 곳이었으나, 참여 정부 들어 국가기간산업(SOC)예산이 계속 줄어 도로개설 등 전국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하지만 56, 78번 국지도 확 · 포장 공사의 시급성을 느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교하 및 운정신도시 등 파주지역 내 급증하는 교통량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큰 불편을 겪어 왔음을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 결산위원회 소속위원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가 지속적으로 설득한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게된 것. 특히 56번 국지도 4차선 계획의 경우 201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으로 양주지역만 확 · 포장이 조기계획 됐었고, 이에 파주출신 이 의원이 양주시만 도로가 확장될 경우 사업성이 미미함을 강력 주장해 조리~법원까지를 확 · 포장 계획에 포함시키는 데 막후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파주시의 상습정체구역이었던 조리~법원(56번 국지도), 고양~광탄(78번 국지도) 간 도로가 4차선 확 · 포장되는 기공식을 갖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번 17대 임기 내에 공사가 시작되어 무척 감회가 깊다"면서, "올해는 확 · 포장과 관련된 토지보상부터 이뤄지는 만큼 향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후략)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이재창 의원, 파주지역 56·78번 국지도 기공식 참석

의결번호	2008자심14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오마이뉴스	(주)오마이뉴스 / 서울 종로구 내수동 167 대표이사 오 연 호
심의대상기사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2008년 1월 18일자 11면)	
주 문	(주)오마이뉴스가 발행한 오마이뉴스 2008년 1월 18일자 11면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오마이뉴스가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상록을지역)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예정자가 공저한 저서의 수록 내용을 그의 인물사진 및 책 표지사진과 함께 과도하게 부각 보도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임종인 · 장화식,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 펴내다

처음으로 '김앤장'의 실체를 드러낸 〈법률사무소 김앤장〉(후마니타스, 임종인 · 장화식 공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법은 기본적으로 '정의'(칼)와 '공평무사'(저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은 권위주의 시기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수단으로만 작동했던 법이 민주화 이후에 그 바탕을 회복하리라 믿었다. 하지만 87년체제가 20년이 지났건만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대와 현실이 어긋난 접점에 거대 법률권력 김앤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앤장은 법률 아이템을 상품화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스카덴:권력과 돈 그리고 법률제국의 등장〉을 쓴 링컨 카플란이 지적한 것처럼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이 이제 법률 비즈니스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의 부제가 알려주듯, 김앤장은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며 도입된 신자유주의를 사업아이템으로 만들어 성공했다. 그들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민주파 정부 시기에 황금기를 구가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김앤장은 4000억원에 가까운 연매출을 기록했고, 김앤장의 창업자인 김영무 대표변호사는 2005년 연소득 570억원을 신고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삼성권력의 총수 이건희 회장을 제치고 국내 소득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앤장 모델'로 불릴 만한 급성장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는 김앤장이 국내 재벌과 투기자본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철저하게 복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벌과 투기자본의 편에 서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며 '자본'까지 축적한 것이다. 이는 김앤장의 자문 · 변호 목록에 론스타, 골드만삭스, 삼성, SK그룹, 진로그룹, 정몽구(현대차그룹 회장), LG그룹, 현대

자동차그룹 등 외국투기자본이나 대기업이 즐비한 점이 잘 보여준다.

책을 출간한 후마니타스측은 보도자료에서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김앤장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입법자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1장에서는 김앤장의 유래, 핵심인물, 인력구성, 사건수임 정도, 연봉수준 등을 짚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총 5곳인 사무실이 서초동 법조단지가 아닌 권부(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와 가까운 종로쪽에 밀집해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2장에서는 김앤장의 '기형적 조직형태'를 파헤쳤다. 김앤장은 형식적으로는 합동법률사무소이지만, 국세청에는 '공동사업자'로 신고했다. 2005년 기준으로는 대표자 112명이 모인 하나의 단일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김앤장은 이러한 기형적 조직형태를 통해 법망(변호사법 · 세법 등)을 피하며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법에서 금지한 쌍방대리까지 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했다.

이어 3장에서는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적했다. 김앤장의 정확한 매출액은 현재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국회와 언론 등에서 추적해 알려진 김앤장의 매출액은 연 3500억~3700억원이다.

김앤장이 이렇게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는 김앤장이 기업 인수 ·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에 관여하거나 수임액수가 큰 대기업 소송과 재벌총수사건을 전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4장에서는 김앤장이 법률자문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다. 노동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75건(100%), 정통부는 총 62건(38.2%), 환경부는 43건(33.8%)의 법률자문을 김앤장에 맡겼다.

저자들은 "금융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자문은 때로는 그대로 정부의 견해로 채택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3년 외환은행 매각시 김앤장이 정부당국(재경부와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에 관해 자문해준 경우"라고 지적했다.

5장에서는 김앤장(법률엘리트)을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임종인 · 장화식, 김앤장 해부서 〈법률사무소 김앤장〉 펴내다

김앤장 변해을 해부한 공저자 장화식 부기자변감사대사 장학위원장위원과 임종인 의원. 오마이뉴스

정점으로 하는 '정부관료-투기자본'과의 삼각동맹을 분석했다. 김앤장은 거액의 연봉을 주고 퇴직한 고위관료들을 영입한다. 특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관료들의 상당수가 돈을 다루는 부서인 재경부(9명) · 국세청(22명) · 관세청(5명) · 금융감독원(6명) · 공정거래위(7명) 출신이라는 점은 김앤장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김앤장은 세 번에 걸친 국내 은행 매각에 관여하면서 투기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임료를 챙겼다. 투기자본은 김앤장의 막강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김앤장은 거액의 수임료와 함께 국제적 명성까지 얻는 이점이 있다.

6장에서는 김앤장이 관여한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쳤다. 진로와 골드만삭스, SK와 소버린,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외환은행과 론스타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헐값으로 사들일 때마다 김앤장은 법률자문은 물론이고 불법인 쌍방대리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에버랜드사건(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다루며 삼성과 김앤장의 관계도 짚었다.

끝으로 7장에서는 '김앤장 권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저자들은 ▲로비스트법 제정 ▲변호사 수임료 상한선 ▲변호사 수임건수, 금액 등 변협 신고 및 일반 공개 ▲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사건의 철저한 수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김앤장은 투명한 운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에는 그 규모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 경제관리를 담당하는 공적 권력과 사적 이익이 거래되는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사실상 시작된 것이나 다름 없다. 이 책도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최고의 영향력와 이익을 쌓아온 김앤장에게도 책임에 대한 추궁은 어떤 형태로든 부과될 수밖에 없다."

의결번호	2008자심24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한겨레	한겨레신문(주) /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서 형 수
심의대상기사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2008년 1월 22일자 33면)	
주 문	한겨레신문(주)이 발행한 한겨레 2008년 1월 22일자 33면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 제하의 칼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전북 덕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8. 1. 10. ~ 4. 9.)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은 자칫 그 칼럼이 특정인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고, 칼럼의 특성상 저자의 주관적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는 바, 그 내용의 공정여부를 불문하고 게재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한겨레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후보예정자의 칼럼을 독자기고 형식으로 게재한 것은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외부기고 등) 제2항,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

채 수 찬 /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많은 정책과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운하 조기 착공,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나랏돈을 동원한 신용불량자 구제, 정부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다. 정책방향이 타당하냐는 것도 따져볼 문제이지만, 하나같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추진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인수위 눈치만 보면서 '코드'를 맞추고 있다. '정권 인수위'가 아니라 '인수위 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나는 1997년과 2002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97년말~98년초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하나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이었다. 특히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는 물론 각국 정부에서 김대중 당선인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당시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던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인사들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도우면서 국제통화기금 지원, 외채 만기연장, 개혁프로그램 추진 등에 조력했다. 정권 인수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인사가 만사'이니 인수위는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진용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것과, 둘째, 당선인은 일상적 국정운영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두어가지 꼭 챙겨야 할 일을 구상해 취임 6개월 안에 밀어붙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수위는 결국 정부 기능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었고, 김대중 당선인도 차분히 국정을 준비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는 국정운영을 챙길 만한 경륜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사실상 '권력의 핵'으로 정권 출범 전부터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이는 집권 이후 국가전략의 부재와 국정 혼선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도 이런 불행한 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여론수렴도 없이 당장 착공하겠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또 정부 관료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인수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수위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섣부른 판단과 정책결정으로 국정 혼선이 초래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챙기고 있는데, 과거 김대중 당선인에게 건넸던 조언을 똑같이 하고자 한다. 새 정부 출범때까지만이라도 국정 구상에 집중하라고.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폐해는 넓고도 깊다. 인수위가 원활한 정권인수와 차기 정부 운영을 준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새 정부의 출범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정권 인수위'지 '인수위 정권' 아냐

재수찬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많은 정책과 밑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운하 조기 착공,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나랏돈을 동원한 신용불량자 구제, 정부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다. 정책입안이 바람하나는 것도 따져볼 문제이지만, 하나같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추진할 수 있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이다.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이미 다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자세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인수위 눈치만 보면서 '코드'를 맞추고 있다. '정권 인수위'가 아니라 '인수위 정권'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나는 1997년과 2002년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다. 97년 말~98년 초 김대중 정부의 인수위는 두 가지 특수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하나는 선거를 통한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이었다. 특히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국제통화기금(IMF) 관계자는 물론 각국 정부에서 김대중 당선인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당시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고 있던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인사들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도우면서 국제통화기금 지원, 의제 단기연장, 개혁프로그램 추진 등에 조력했다. 정권 인수와 새 정부 출범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인사가 만사'이니 인수위는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갈 진용을 준비하는 일에 집중할 것과, 둘째, 당선인은 일상적 국정운영에 끌려들어가지 말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두어가지 꼭 챙겨야 할 일을 구상해 취임 6개월 안에 밀어붙일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두 가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수위는 결국 정부 기능을 사실상 대신하게 되었고, 김대중 당선인도 차분히 국정을 준비하는 '여유'를 갖지 못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인수위는 국정운영을 챙길 만한 경륜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사실상 '권력의 핵'으로 정권 출범 전부터 정부정책을 좌지우지했고, 이는 집권 이후 국가전략의 부재와 국정 혼선의 원인이 됐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도 이런 불행한 선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밀어붙이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대운하를 여론수렴도 없이 당장 착공하겠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무시한 채 통일부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또 정부 관료들을 불러 호통을 치는 인수위,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인수위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섣부른 판단과 정책결정으로 국정 혼선이 초래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인수위에 대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챙기고 있는데, 과거 김대중 당선인에게 건넸던 조언을 똑같이 하고자 한다. 새 정부 출범때까지만이라도 국정 구상에 집중하라고.

'권력의 단맛'에 중독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폐해는 넓고도 깊다. 인수위가 원활한 정권인수와 차기 정부 운영을 준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새 정부의 출범을 조심스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걱정과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대운하·통일부 폐지·금산분리 완화…
밀어붙이면 안될 게 없다는 식이지만
모두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할 일
섣부른 판단 국정 혼선만 초래한다

의결번호	2008자심25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경산자치신문	(주)경산자치신문 / 경북 경산시 중방동 883-2 대표이사 김 문 규
심의대상기사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 · 청도지회 광고』 (2008년 1월 23일자 1면)	
주 문	(주)경산자치신문이 발행한 경산자치신문 2008년 1월 23일자 1면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 · 청도지회 광고』 제하의 의견광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북 경산 · 청도지역)와 관련하여 선거를 앞둔 시점(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2007. 10. 12. ~ 4. 9.)에서 특정 정당의 의견광고는 그 광고가 의견 공표의 목적 외에 특정 정당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음에도 경산자치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특정 정당 명의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여타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의견광고),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 도화의 배부 · 게시등 금지) 제1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의결번호	2008자심81	결정유형 / 주 의
언 론 사	내일신문	(주)내일신문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55 대표이사 장 명 국
심의대상기사	『천정배 41.5%-허숭 22.2%』(2008년 3월 20일자 3면)	
주 문	(주)내일신문이 발행한 내일신문 2008년 3월 20일자 3면 『천정배 41.5%-허숭 22.2%』 제하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 유	내일신문이 위 심의대상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기 안산 단원구갑지역)와 관련하여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후보별 지지율 및 정당별 지지율 등을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게 잘못 판단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여론조사 보도) 제2항,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4항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천정배 41.5%-허숭 22.2%

이명박 정부 견제론 49% … 이 안정론 39.3%
경기 안산단원갑

경기도 안산 단원갑은 4선에 도전하는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2배 가까운 표차로 (주)메디코 대표이사인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 19일 하루동안 안산단원갑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통합민주당 천정배 예비후보 41.5%,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 22.2%, 박미진 민노당 예비후보 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과 무응답은 32.3%였다.

4·9총선 관심지역 여론조사

천정배 41.5%-허숭 22.2%

이명박 정부 견제론 49% … 이 안정론 39.3%

경기 안산단원갑

안산 단원갑 후보 지지율

경기도 안산 단원갑은 4선에 도전하는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2배 가까운 표차로 (주)메디코 대표이사인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누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내일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디오피니언(소장 안부근)에 의뢰, 19일 하루동안 안산단원갑지역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에서 드러났다.

안산 단원갑 국회의원으로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통합민주당 천정배 예비후보 41.5%, 허숭 한나라당 예비후보 22.2%, 박미진 민노당 예비후보가 4%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름과 무응답은 32.3%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천 예비후보(46.7%)는 허 예비후보(25.4%)를 크게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대에서 천 예비후보가 허 예비후보를 앞섰고 남녀 구분 없이 천 예비후보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역시 학생층에서 허 예비후보가 앞섰을 뿐 모든 직업군에서 천 예비후보가 앞섰다.

총선 기본구도인 안정론과 견제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득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제론(49%)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39.3%)을 능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3.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1.8%이었다.

천 예비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7.8%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수도권의 지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이 23.4%로 2위, 민주노동당 3.9%, 자유선진당 2.0%, 창조한국당 1.7% 기타 0.1%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거나 무응답은 30.6%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서도 천 예비후보(46.7%)는 허 예비후보 (25.4%)를 크게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연령대에서 천 예비후보가 허 예비후보를 앞섰고 남녀 구분 없이 천 예비후보가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 역시 학생층에서 허 예비후보가 앞섰을 뿐 모든 직업군에서 천 예비후보가 앞섰다.

총선 기본구도인 안정론과 견제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견제론(49%)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39.3%)을 눌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53.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31.8%이었다.

천 예비후보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7.8%로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다른 수도권의 지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통합민주당이 23.4%로 2위, 민주노동당 3.9%, 자유선진당 2.6%, 창조한국당 1.7% 기타 0.1% 등이 뒤를 이었다. 없다거나 무응답은 30.6%였다.

제2장 시정요구심의

1. 사과문 게재

사건번호	2008시심2	결정유형 / 사과문 게재
시정요구인	김 태 홍	
피시정요구인	세계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이 동 한
시정요구대상기사	『민주, 낙천 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칵'』(2008년 3월 3일자 6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세계일보 1면에 〈별지1〉「사과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시정요구 대상기사의 부제목(본지,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과 같고, 본문활자 크기는 시정요구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세계일보 2008. 3. 3.자 6면에서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지병문, 김태홍, 김홍업 의원이, 전북지역 장영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이 낙천대상리스트에 올랐는데, 이는 호남권 지역구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의정활동 평가, 재출마 호감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작업을 종합평가한 결과여서 공심위의 낙천의원 선정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지역의 지병문, 김태홍 의원, 전북의 장영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 등은 지지도 하락이 제1의 교체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긴급 브리핑을 통해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고, 피시정요구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기초자료는 루머를 취합한 '괴문서'였으며, 공천후보 적합성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 내용 또한 공심위 위원장에게 보고되지도 않아 낙천명단의 윤곽이 잡혔다는 보도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 보도한 이 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통합민주당 및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호남 의원공천과 관련한 공식 평가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자료작성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피시정요구인은 시정요구대상 기사를 통해 "호남 '물갈이' 예상 지역구"를 적시하면서 해당 지역구의 후보예정자의 실명과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관련자료가 마치 통합민주당의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한 만큼 당 공천과 선거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시정요구인을 비롯하여 낙천대상자의 명단에 오른 후보예정자들에게 이 건 보도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 유	비록 피시정요구인이 이 건 기사를 보도한 다음 날 「"공천 살생부 사실이냐…"」 제하의 기사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는 미공개'라는 당 관계자의 발언과 '보도내용은 공심위에 전달된 여론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고 공식문건이 아니다'는 공심위 관계자의 반박성 주장을 보도하였으나, 이러한 반박보도만으로는 시정요구대상기사가 당과 공심위의 공식적인 평가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지 않았음을 밝혀주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한 조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사 과 문

1. 제목 : 사과문

2. 내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자료는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자료가 당의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의결번호	2008재심2	결정유형 / 일부인용
재심청구인	세계일보	주식회사 세계일보사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1 대표이사 이 동 한
주 문	1. 당 위원회의 2008시심2 결정에 의해 세계일보에 대한 〈별지1〉「사과문」 게재 명령을 취소한다. 2. (주)세계일보사는 2008. 3. 13.까지 〈별지2〉「사과문」을 세계일보 2면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 크기는 재심청구 대상기사의 부제목(본지, 민주 '30%물갈이' 기초자료 입수)과 같고, 본문활자 크기는 재심청구 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재심청구인측이 입수한 자료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민주당의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사과문 게재의 이유로 삼았으나 이는 시정요구인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기사는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고 그 신뢰성 검증을 위해 후속취재를 진행한 후 당의 공식자료라는 확신을 갖고 보도를 한 것인 만큼 해당보도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2008시심2 결정은 지나치다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재심청구인은 관련 자료가 당의 공식자료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도한 것으	

이 유	로 이에 대한 사과문게재 결정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 관련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표 내지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토대로 하여 기사가 작성된 것처럼 보도한 점과 낙천예상자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공천과정은 물론 본선거에서 해당 후보예정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과문 게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결정에 의한 제재의 수위가 결코 과하지는 않다 할 것이다. 다만, 재심청구인이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고 이 건 관련 보도에 대한 신뢰성을 일부 인정해 원심의 결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재심청구인의 일부주장을 받아들여「사과문」의 문안과 그 게재할 면 등을 조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사 과 문

1. 제목 : 사과문

2. 내용 :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발표자료는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자료가 당이 발표한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보도내용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

본지,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지병문 · 김태홍 · 장영달 지지도 낮아 위태
공심위 마지막 결정남아 살아남을 수도

통합민주당 공천 뇌관인 '호남권 의원 30% 낙천' 대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 · 전남 지역 의원 중 지병문(광주남), 김태홍(광주북을),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 신안)이, 전북 지역의 장영달(전주 완산갑), 이광철(전주 완산을), 한병도 의원(익산갑)이 낙천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하나(전남 해남 진도 완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영호(강진 완도), 채일병 의원(해남 진도) 중 한 명도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심위의 현역 의원 면접 조사에 앞서 호남권 지역구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의정활동 평가, 재출마 호감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작업을 종합 평가한 결과여서 공심위의 낙천 의원 선정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 지역의 지병문, 김태홍 의원, 전북의 장영

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 등은 지지도 하락이 제1의 교체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단순 인지도 조사에서는 경합 후보를 앞섰으나 의정활동 평가와 재출마 여부를 묻는 호감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 낙천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상대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있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주선 전 의원 등이 각각 도전장을 내민 전남 목포(이상열), 광주 동구(양형일 의원)가 그런 곳들이다. 정균환 전 의원이 재기전을 도모하는 전북 고창 부안지역구의 김춘진 의원도 같은 처지다.

최대 관심 지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전남 무안 신안 지역구다. 이곳은 김홍업 의원의 비리 사건 연루 사실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어서 공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전북 지역은 공심위가 예고한 1차 낙천 의원이 3명에 불과한 데다 이미 김원기 전 국회의장(전북 정읍)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현재 낙천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 중 일부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도 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18대 총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자로서 세계일보 3월 3일자 『민주, 낙천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 게재를 요청한다.

세계일보는 위 보도에서 '민주당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라고 밝히며 지지도가 낮은 호남지역의 공천탈락 예상의원과 경합지역 의원의 명단을 실명 보도했는데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박경철 간사와 우상호 당 대변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기사임이 확인됐다. 간사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 이후 새로운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나온 바 없고, 과거 통합 전에 나온 결과도 이런 형태의 괴문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공심위 박재승 위원장이 직접 확인했다'고 밝혀, 세계일보가 입수한 기초자료가 루머를 취합한 '괴문서'임을 확인해 주었다. 공천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역시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 완료된 지역 결과는 밀봉된 채 박 위원장에게 단독 보고되는 것으로 아직 위원장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은 사항임을 밝혔다.

시정요구인은 이 보도에서 낙천대상 예상명단에 거론됨으로써 지지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어 심각한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경쟁상대 후

낙천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칵'

본지,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지병문·김태홍·장영달 지지도 낮아 위태

공심위 마지막 결정남아 살아남을 수도

봄철민주당 공천 뇌관인 '호남권 의원 30% 낙천' 대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민주당의 호남지역 의원 평가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의원 중 지병문(광주남), 김태홍(광주북을), 김홍업 의원(전남 무안 신안)이, 전북지역의 장영달(전주 완산갑), 이광철(전주 완산을), 한병도 의원(익산갑)이 낙천 대상 리스트에 올랐다.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지역구가 하나(전남 해남 진도 완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경호(강진 완도), 채영병 의원(해남 진도) 중 한 명도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민주당이 공심위의 현역 의원 면접 조사에 앞서 호남권 지역구를 대상으로 인지도와 의정활동 평가, 재출마 호감도 등을 묻는 여론조사와 현지 실사작업을 종합 평가한 결과여서 공심위의 낙천 의원 선정 과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광주 지역의 지병문, 김태홍 의원, 전북의 장영달, 이광철, 한병도 의원 등은 지지도 하락이 제1의 교체 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은 단순 인지도 조사에서는 경합 후보를 앞섰으나 의정활동 평가와 재출마 여부를 묻는 호감도 조사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 낙천 대상자가 됐다는 것이다.

상대 후보의 경쟁력이 높아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있었다.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주선 전 의원 등이 각각 도전장을 내민 전남 목포(이상열), 광주동구(양형일 의원)가 그런 곳들이다. 정균환 전 의원이 재기전을 도모하는 전북 고창 부안지역구의 김춘진 의원도 같은 처지다.

최대 관심 지역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의원의 전남 무안 신안 지역구다. 이곳은 김홍업 의원의 비리 사건 연루 사실이 본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어서 공심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의원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전북 지역은 공심위가 예고한 1차 낙천 의원이 3명에 불과한 데다 이미 김원기 전 국회의장(전북 정읍)이 불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어서 현재 낙천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 중 일부가 막판에 구제될 가능성도 있다.

** 호남 '물갈이' 예상 지역구

지역구	평가 결과	지역구 의원
광주 북	경합	장영일
광주 서을	〃	정동채
광주 남	현역 의원 탈락 가능성	지병문
광주 북갑	경합	강기정
광주 북을	현역 의원 탈락 가능성	김태홍
전남 해남 진도 완도	〃	이경호, 채영병
전남 무안 신안	〃	김홍업
전남 목포	경합	이상열
전남 고흥 보성	〃	신중식
전북 전주 완산갑	현역 의원 탈락 가능성	장영달
전북 전주 완산을	〃	이광철
전북 익산갑	〃	한병도
전북 익산을	경합	조배숙
전북 김제 완주	〃	하규성
전북 고창 부안	〃	김춘진

* 김원기(전북 정읍), 염동연(광주서갑) 의원 불출마 선언

보들이 본 기사를 이용, 지역민의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공천심사 과정에 큰 불이익을 보게됐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3일자 6면『민주, 낙천 명단 윤곽…호남의원 '발칵'』제하의 기사에서 호남지역 공천 관련 기사를 통해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명보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는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의 공식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위 기사를 통해 피해를 당한 후보자들에게 거듭 사과드립니다.

결정 후 보도문

〈340쪽 별지2 사과문 내용 참조〉

사과드립니다

본지는 2008년 3월 3일자 6면 "민주, 낙천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칵'" 제하의 기사에서 본지가 자체적으로 입수한 공천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호남지역 공천탈락 예상의원 명단을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가 입수한 호남의원 평가기초자료가 공천심사위원회와 통합민주당이 공식 발표한 자료가 아니었음에도 '지역구 의원 평가결과 도표'를 게재하고 "민주 '30% 물갈이' 기초자료 입수"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자료가 당이 발표한 공식자료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게 한 점에 대해 김태홍 의원 등 관계된 후보예정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 2008년 3월 12일자 2면

2. 정정보도문 게재

사건번호	2008시심9	결정유형 / 정정보도문 게재
시정요구인	배 진 교	
피시정요구인	한국일보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18 대표이사 이 종 승	
시정요구대상기사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을 /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2008년 4월 2일자 5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한국일보 5면에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시정요구대상기사의 코너제목(열전지 이곳) 크기와 같게 하고, 본문활자는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본문크기와 같게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국일보 2008. 4. 2.자 5면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을 /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무소속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양상이다. 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이 후보가 조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 후보가 이 후보를 눌렀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은 조선일보 · SBS 여론조사 결과와 MBC · KBS 여론조사 결과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나 MBC · KBS 여론조사 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배진교 후보와 이호웅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10.7%와 6.0%로 나타나 해당기사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8대 총선과 관련한 인천 남동구을 지역민들에 대한 후보자 지지율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진교 후보와 이호웅 후보가 조선일보 · SBS 조사의 경우 각각 7.5%와 7.7%이고, MBC · KBS 조사의 경우 10.7%와 6.0%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두자리를 경합하고 있는 조진혁 후보와 이원복 후보를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고 보도함으로써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이호웅 후보가 배진교 후보에 비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정정보도문

1. 제 목 : 정정보도문
2. 내 용 : 지난 4월 2일자 5면 인천 남동을 여론조사 기사에서 "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이원복(21%) 후보가 조전혁(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후보가 이(22.8%) 후보를 눌렀으며,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월 27일 조선일보 · SBS의 지지율 조사에서는 이원복 21%, 조전혁 19.6%, 이호웅 7.7%, 배진교 7.5% 등으로 나타났으며, 3월 30일 실시한 MBC · KBS의 조사에서는 조전혁 28.1%, 이원복 22.8%, 배진교 10.7%, 이호웅 6.0% 등으로 나타났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보도내용

열전지 이곳 / 인천 남동을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통합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양상이다. 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이(21%) 후보가 조(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후보가 이(22.8%) 후보를 눌렀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열전지 이곳 ● 인천 남동을

조전혁·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통합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홍역을 치른 가운데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양상이다. 3월 27일 조선일보·SBS 조사에서 이(21%) 후보가 조(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후보가 이(22.8%) 후보를 눌렀다.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15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원복 후보와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호웅 후보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거머쥔 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조 후보는 "한나라당 조직표의 우위 속에 무소속 후보 2명에 머물러 있던 표심도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복 후보는 20여년간 지역에서 인맥을 쌓아온 '토박이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며 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웅 후보는 '1번 후보 없는 이유 아시나요'라는 파격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막판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조 후보는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사업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원복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앞장서 보상 문제 등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선거구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한국일보 2008년 4월 2일 수요일 『열전지 이곳 인천 남동을 조전혁 · 이원복 혼

전 속 이호웅 "막판 역전"』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한다.

한국일보는 보도에서 조선일보-SBS 여론조사 결과와 MBC, KBS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인천일보 여론조사 '3월 26일자 이호웅 3.4% 배진교 3.2%', 조선일보-SBS 여론조사 '3월 26일 이호웅 7.7% 배진교 7.5%', 경인일보 여론조사 '3월 31일 배진교 8.9% 이호웅 3.6%', MBC-KBS 여론조사 '3월 31일 배진교 10.7% 이호웅 6.0%' 등 이호웅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시정요구인이 누락되고, 이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을 획득한 것처럼 되어 있어 시정요구인이 여론조사 결과 뒤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기사 제목 일부를 『이호웅 "막판역전"』으로 달고, '17대 총선 결과' 표를 덧붙임으로써 시정요구인이 입는 피해는 더욱 크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조전혁 · 이원복 혼전속… 〈배진교 · 이호웅 "막판 역전" 다짐〉 (17대 총선표 삭제)

인천 남동을은 한나라당 조전혁 후보와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원복 후보가 접전을 펼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도 혼전 양상이다. 3월 27일 조선일보 · SBS 조사에서 이(21%) 후보가 조(19.6%) 후보를 앞섰지만 30일 MBC · KBS 조사에서는 반대로 조(28.1%) 후보가 이(22.8%) 후보를 눌렀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가 10%,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호웅 후보가 8%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고 있다.

당초 이 지역은 15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원복 후보와 16대, 17대 의원을 지낸 이호웅 후보의 리턴매치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한나라당 공천을 거머쥔 조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 조 후보는 "한나라당 조직표의 우위 속에 무소속 후보 2명에 머물러 있던 표심도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복 후보는 20여 년 간 지역에서 인맥을 쌓아온 '토박이론'을 내세운다. 이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권자를 일일이 찾아가며 발품으로 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웅 후보는 '1번 후보 없는 이유 아시나요'라는 파격 캐치프레이즈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통한 막판 대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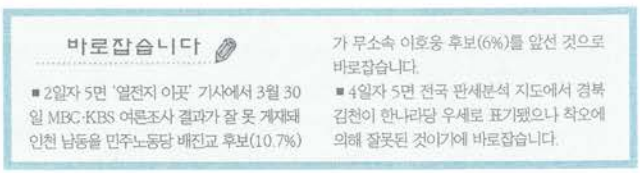
유권자의 최대 관심은 진행 중인 도시 재개발 사업이다. 조 후보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뽑아야 사업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이원복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앞장서 보상 문제 등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김석우 후보는 교통 문제 해결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는 생태환경벨트 조성을 공약했다.

결정 후 보도문

바로잡습니다

■ 2일자 5면 '열전지 이곳' 기사에서 3월 30일 MBC · KBS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 게재돼 인천 남동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10.7%)가 무소속 이호웅 후보(6%)를 앞선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바로잡습니다

■ 2일자 5면 '열전지 이곳' 기사에서 3월 30일 MBC·KBS 여론조사 결과가 잘 못 게재돼 인천 남동을 민주노동당 배진교 후보(10.7%)가 무소속 이호웅 후보(6%)를 앞선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 4일자 5면 전국 판세분석 지도에서 경북 김천이 한나라당 우세로 표기됐으나 착오에 의해 잘못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2008년 4월 5일자 5면

3. 경고문 게재

사건번호	2008시심1	결정유형 / 경고문 게재
시정요구인	강 기 갑	
피시정요구인	경남일보	주식회사 경남일보사 / 경남 진주시 상평동 237-4 대표이사 황 인 태
시정요구대상기사	『이젠 관광 사천으로 新 성장동력 만들 터』(2008년 2월 25일자 13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은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경남일보 13면에 〈별지〉 「경고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시정요구대상기사의 부제목(광포만 매립으로…) 활자 크기로, 본문은 시정요구 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로 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경남일보 2008. 2. 25.자 13면에서 "사천지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10년 이상 지연되었던 국도3호선 공사 예산이 당초 요구안보다 많이 배정되는 등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는데, 이는 모두 이방호 총장 덕분으로 이 총장에게 힘이 있을 때 사천에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는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내용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국도3호선 예산은 이방호 의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민주노동당 소속의원인 자신도 역시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시정요구인이 국도3호선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증감 심사대상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배정을 위해 힘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방호 의원 한 사람의 역량으로 해당 예산이 배정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었다며 정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구하는 정정보도는 그 다툼이 되고 있는 보도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정요구인의 시정요구서에 기재된 진술 및 제출된 '국도3호선 확장공사 예산증액 요청 건'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건 기사는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형식을 빌어 사천시의 염원인 국도3호선 공사관련 예산의 배정이 전적으로 특정 후보예정자의 공로인 것처럼 단정하여 주장하는 특정인의 발언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지극히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특정 후보예정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을 비롯한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적절한 조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경 고 문

1. 제 목 : 경고문

2. 내 용 :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13면 『경남 자치단체장 신년대담-김수영 사천시장,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경남일보가 위 기사에서 제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사천지역)와 관련,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형식을 빌어 특정 후보예정자의 노력으로 국도3호선 공사 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터

경남 자치단체장 신년대담
④ 김수영 사천시장

사천시는 요즈음 물 만난 고기와 같다. 사람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실감하는 요즈음이다. 이 지역 국회의원인 이방호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 10년 이상 끌어오고 있는 국도 3호선 공사만 해도 그렇다.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도 더많은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나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렇게 빨리 공사를 끝낼 수는 없다고 한다. 예산이 없어서 늦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쓰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 모두 다 이방호 총장 덕분이다. 이 총장이 힘이 있을 때 사천에 기념비적인 것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종합체육관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국제규모의 체육관이 없어 사천에서 아직 도민체전 한번 열지 못했다고 한다. 시로서는 부끄러운게 사실. 그래서 매립지를 활용해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했다. 약 1천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게 김 시장의 내심이다. 1천억원이라는 게 사천시 규모에서는 큰 돈이지만 정부예산에서야 코끼리 비스킷아닌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 봐야 겠다는 의욕을 내보인다.

사천은 이제 인구도 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줄곧 줄기만 했었는 데 드디어 늘기 시작한 것. 진사공단도 이미 분양이 다 되어 공장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다. 공장들이 다 입주하면 인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지금은 오히려 주거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이 더 문제이다. 공장부지 마련도 큰 과제 중의 하나이다. 옮겨 오려는 공장은 많은 데 정작 부지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사천에 대한 기업들의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반증이다.

내년이면 사천도 골프장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곤양에 '타니'라는 브랜드를 가진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인허가를 완료하고 분양을 대기 중이다. 3월부터 분양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큰 걱정을 안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골프장이 들어서

면 사천은 본격적인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후략)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경남 사천에 출마할 예정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서 보도내용에 언급한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과는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예정이다.

기사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도3호선 예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되었는데,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원으로 예산을 확정한 바 있는 시정요구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증감 심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증감요구가 있거나 예결위 위원의 증감요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시정요구인의 요구대로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한달 넘게 진행된 정부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도 시정요구인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천시장을 인터뷰하면서 이방호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 되자 모든게 잘 풀리고 있다며, 국도3호선 예산도 이방호 총장 덕분으로 많이 내려왔고, 이방호 의원의 힘이 있을 때 1,000억짜리 종합체육관도 만들어 달라고 할까 고민 중이라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천지역 총선 출마예정자 중 한명인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5일자 경남 사천시 김수영 시장과의 신년대담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기사를 작성하였으며, 총선 시기에 공정해야 할 언론의 책무를 어긴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독자여러분께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시 기사에는 김수영 사천시장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여 '한나라당 이방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이 되자 모든 게 쉽게 풀리고 있다'며, 국도 3호선 예산을 예로 들어 이 또한 이방호 총장 덕분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

국제규모 종합체육관 계획 중

골프장·전지훈련장으로 승부

광포만 매립으로 공장용지 부족난 해결할 것

통합 신청사 구심점 주민화합·지역균형 개발

확인결과 국도 3호선 예산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예결위에서 결정되었으며, 예결위원(51명)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13명)으로 예산을 확정한 바 있는 강기갑 의원의 역할 또한 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증감 심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상임위의 증감요구가 있거나 예결위 위원의 증감요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예결위원이자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강기갑 의원의 요구로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한달 넘게 진행된 정부예산계수조정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예결위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이방호 의원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을 통해 힘을 보탰으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이방호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 국도 3호선 예산이 확보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이번 신년대담 기사는 특정 후보만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사로써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총선 시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의 국도 3호선 예산 관련 부분은 물론이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방호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기념비적인 것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고 기자가 묻는가 하면, '1000억원에 달하는 종합체육관 예산도 이방호 의원에게 부탁하여 만들어 달라고 할 계획이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는 사천시장의 답변내용까지 게재한 것은 명백히 특정 후보를 홍보한 기사이기에 사과드리고자 합니다.

본지는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총선시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로 독자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결정 후 보도문

〈347쪽 경고문 내용 참조〉

경 고 문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변화석)는 경남일보 2008년 2월 25일자 13면 『경남 자치단체장 신년대담-김수영 사천시장, "이제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조치한다.

경남일보가 위 기사에서 제 18대 국회의원선거(경남 사천지역)와 관련, 김수영 사천시장과의 대담형식을 빌어 특정 후보예정자의 노력으로 국도 3호선 공사 예산이 배정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등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지극히 우호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예정자들에게 불리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공정성), 선거기사심의기준 제2조(형평성),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각 위반】 공직선거법 제8조의3제3항,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한다.

△ 2008년 3월 7일자 13면

4. 경 고

사건번호	2008시심5	결정유형 / 경 고
시정요구인	김 희 선	
피시정요구인	시민일보	주식회사 시민일보사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233-22 충호빌딩 대표이사 최 정 호
시정요구대상기사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2008년 3월 14일자 4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시민일보 2008. 3. 14.자 4면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시민일보 2008. 3. 14.자 4면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대법원의 무죄판명에도 불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2002년 동대문구청장 당내 경선 당시 송 모 씨에 대한 공천대가로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 의원에게 무죄확정판결을 내리면서 1억원에 대해 김 의원과 송 씨 사이의 채권재무관계를 인정한 바 있는데, 김 의원이 이를 변제하지 않자 송씨가 이를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고, 김 의원측은 이에 맞서 지난 재판과정에서 차용금을 공천대가로 제공한 금원이었다고 주장했던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금원에 대해 대법원은 공천대가성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확정판결을 내렸던 만큼 이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시정요구인이 해당기사를 통해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다시 일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공천대가' 관련 사항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안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도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해 기사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고 있으나, 해당보도의 취지는 송씨가 차용금 1억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정요구인측에서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발언한 상황이라면 개인간 채권채무액으로 결론지었던 1억원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이건 보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할 만큼 잘못 보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정정보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시정요구인측이 차용한 금원을 송씨에게 사정상 갚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비록 시정요구인측에서 송씨가 소송을 제기하면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이 건 기사의 제목을 통해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부적절한 자금인 양 부각 보도한 것은 선거보도가 갖춰야 할 고도의 객관성과 정확성, 그리고 공정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무죄판명 불구 송모씨 "돈 못받았다" 소송 가능성
김의원측 "위증죄 고소할것"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대법원의 무죄판명에도 불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 구청장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구청장 공천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바 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송 씨는 공천대가로 김 의원 측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 측은 단지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

그러나 김 의원은 12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송씨는 김희선 의원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씨는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희선 의원이 법정에서 1억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의 탁양삼 보좌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1억원을 차용해준 게 아니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한 송씨가 이제 와서 빌린 돈 1억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김희선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닌가" 반문하면서 "물론 갚아야 할 돈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탁 보좌관은 또 "그렇다면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송씨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증죄로 송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탁 보좌관은 '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매사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선 의원은 4.9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에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김희선 의원과 지영호 전 시의원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무죄판명 불구 송모씨 "돈 못받았다" 소송 가능성

김의원측 "위증죄 고소할것"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대법원의 무죄판명에도 불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 구청장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송모 씨로부터 구청장 공천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바 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송 씨는 공천대가로 김 의원 측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 측은 단지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았던 것.

그러나 김 의원은 12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송씨는 김희선 의원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씨는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희선 의원이 법정에서 1억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의 탁양삼 보좌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1억원을 차용해준 게 아니고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거라고 주장한 송씨가 이제 와서 빌린 돈 1억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김희선 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닌가" 반문하면서 "물론 갚아야 할 돈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탁 보좌관은 또 "그렇다면 송씨는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송씨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증죄로 송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탁 보좌관은 '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매사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선 의원은 4.9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에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김희선 의원과 지영호 전 시의원을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4 · 9총선 통합민주당 동대문갑 예비후보자로서, 시민일보 2008년 3월 13일자 『김희선 의원, '공천대가' 뒤늦게 논란. 대법원 '무죄판명' 불구…송 모씨 민사소송 움직임』 제하의 기사가 고등법원, 대법원의 무죄판결 취지와 다른 허위의 사실을 담고 있어 총선에 출마한 시

정요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한다.

위 기사는 제목에서는 물론 본문에서도 마치 공천대가 문제 자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하고, 송 모 씨가 이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공천대가' 문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사실무근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부분은 시정요구인 보좌관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년간 재판을 받았는데 또 송사를 벌일 경우 4년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못할 정도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고 기자도 "의정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말이죠?"라고 확인했던 것을 마치 시정요구인측이 재판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도했으며, 본문에서는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고서도 제목에서는 『송 모씨 민사소송 움직임』이라고 한 부분, 『으름장을 놓았다』는 표현 등 기사 여러 곳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 『김희선 의원 '공천대가' 뒤늦게 논란』 기사는 사실과 다르기에 정정합니다.

본지가 3월 13일자로 보도한 김희선 의원 관련 '공천대가' 논란은 이미 지난 2006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서명수 판사)에서 '송 모 씨의 말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무죄판결되고 2007년 9월 20일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기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독자와 당사자에게 정중히 사과합니다.

사건번호	2008시심10	결정유형 / 경 고
시정요구인	임 성 대	
피시정요구인	당진시대	주식회사 주간 당진시대 /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61-4 대표이사 이 준 섭
시정요구대상기사	-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2007년 12월 31일자 1면)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2007년 12월 31일자 2면) -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2008년 3월 10일자 1면) - 『4·9총선 현장을 가다 - 당진의 20~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2008년 3월 10일자 1면) - 『정덕구 후보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 항의』 (2008년 3월 10일자 11면) -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2008년 3월 17일자 4면) -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2008년 3월 31일자 1면) - 『"김 후보 참석은 우연이었다"』 (2008년 3월 31일자 2면) -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2008년 3월 31일자 2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당진시대의 별지기재 각 기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당진시대의 별지기재 각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의 출판기념회', '정덕구 후보 명의의 특별기고문', '정덕구 후보의 타 매체보도에 대한 해명성 반론보도', '한나라당 공천확정 관련 내용', '총선현장에서의 유권자 생각',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관련 내용' 등에 대해 각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이력 및 행보 등을 여타 경쟁후보에 비해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시정요구인을 포함한 여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고문게재를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주간 당진시대가 선거일전 120일인 2007. 12. 11. 부터 2008. 4. 4.사이에 게재한 제18대 총선 관련 기사를 분석하면 정덕구 후보 관련내용이 40여 건, 김낙성 후보 관련내용이 30여 건, 시정요구인 관련내용이 10여 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덕구 후보의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는 2007. 12. 31.자 1면 상단에 게재한 후 2008. 1. 14.자에 재차 게재하면서도 손창원 예비후보에 대한 출판기념회 기사는 2007. 12 10. 자 11면 하단에 1회 게재한 것은 선거기사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또한, 피시정요구인은 주간 당진시대 2007. 12. 31.자 2면 전체 지면을 할애하여 정덕구 후보 명의의 특별기고문인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제하의 글을 게재한 것은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려 한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 공천 시 '철새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고, '당진이 고향이 아니다'는 항간의 소문과 한나라당 공천 시 논란이 된 '철새공천'에 대한 정덕구 후보의 해명성	

이 유	반론기사를 2008. 3. 3.자, 2008. 3. 10자, 2008. 3. 17.자 등 3회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여타 후보에 비해 부각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각 정당별 공천관련 보도에 있어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 관련 기사는 2008. 3. 10.자 1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면서 자유선진당 김낙성 후보 관련 기사는 2008. 3. 17.자 4면 하단에 게재하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개별기사 없이 2008. 3. 24.자에 「각 당 공천 마무리, 당진선거구 표정」 제하의 기사로 일괄 처리하여 후보자간 공평성 및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특히, 피시정요구인은 2008. 3. 31.자 1면 상단의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 고발」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 당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동일자 2면 상단에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인터뷰기사를 크게 싣고 바로 하단에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것은 특정후보에게 지극히 불리한 영향을 끼치도록 기사가 작성·편집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는 선거보도가 갖춰야 할 고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형평성에 있어 부족함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지지율, 주요정당 소속여부 등을 감안한 언론사의 후보자별 차별보도가 온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차별은 상대적이고 합리적 차별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오는 1월8일, 설악가든서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어린 시절의 추억과 당진의 미래에 대한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책 '나의 인생, 나의 고향'을 펴냈다. 출판기념회는 오는 8일 설악가든 신관 5층 컨벤션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정덕구 전 장관이 펴낸 '나의 인생, 나의 고향'은 10년 전 IMF 외환위기 당시, 외채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막아내 'IMF 해결사'로 불리는 정덕구 전 장관은 이 책에서 '미국의 허드슨 강에 빠져 죽고 싶었던' 당시의 숨 막히는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총 6부로 구성된 인터뷰와 흥미로운 자료들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정 전 장관은 "당진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의 상황에서 당진은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인 물류 도시로 갈 수 있지만, 교육과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쾌적도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후략)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오는 1월8일, 설악가든서

△ 2007년 12월 31일자 1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꿈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21일 정부는 3개의 새로운 경제 자유구역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당진이 포함되어 있는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이다.

대구의 경우 3000만평에 이르는 규모가 큰 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내륙이라는 한계와 산업화된 도시와의 연계성 등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부족하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은 이제 겨우 물막이 공사를 끝내 육지와 바다 사이에 기본 환경조성에 필요한 공사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지도를 바꾸기에는 현재 역부족이다.

그런데 당진이 포함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은 3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2000만평이지만 이 지역이 중부권의 물류기지로서 한국의 서해안과 중국의 동해안을 연결할 수 있고 중부권의 산업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인프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시급히 착수되어야 하고 조기에 완성되어야 하는 대형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는 막중한 부담과 책무를 안고 그 실행계획을 갖추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있다. 이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당진의 대역사가 바야흐로 시작되는 것이다.

당진군의 미래운명이 걸린 역사의 변환점

지난 1200년 동안 당진은 내륙지역으로서, 농경사회로서, 충청권으로서 그 면면한 역사를 이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역사의 변환점에 서있다. 우리는 이제 내륙권보다 해양권에 편입되어가고 있고 충청권보다는 수도권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농경사회보다는 개방된 지식사회로 진전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과거 1200년 동안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온 정신세계와 가치체계는 큰 폭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 세대에 부여된 역사적 임무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로운 경제지도를 작성하는 역사적인 과업에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뛰어드는 것이며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이 포용하고 있는 지역은 당진군 뿐만 아니라 화성시, 평택시, 아산시, 서산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도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당진군의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된 이 운명적인 한판 승부에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어떻게 그 성공을 보장할 것인가?(중략)

①첫번째 요건 : 비전과 꿈

비록 현재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꿈은 200년, 300년 앞을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꾸어야 한다. 우선 당진의 모든 개발계획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큰 틀 속에서 중국과 한국이라는 국제적인 시야를 가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중국의 동부해안과 한국의 서해안은 해상거리에 있어서 지척과도 같이 가깝다. 그런데 중국의 동부해안에는 대형 물류항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해의 푸동항과 칭따오항 사이에 대형 항구가 없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진과 평택항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적인 물류항이 될 수 있다. 당진항은 중국의 방대한 물류시스템을 전제로 꿈의 스케일을 넓혀야 한다.

②두번째 요건 : 독자적인 그림

아산만은 대한민국의 중부권을 가르며 깊숙이 들어와 있는 깔대기형의 물길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당진항 앞바다에

두텁게 깔려있는 뻘과 퇴적물들을 준설해서 해로를 정리하면 20만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천혜의 무역항이 될 수 있다. 또한 당진항과 평택항을 중심축으로 한 물류수송 체계를 갖추게 되면 군사적 활용가능성이 높은 평택항보다는 당진항이 컨테이너 수송면에서 일반무역항으로서 더욱 우수한 여건을 갖출 수 있다. 우리가 그리는 당진항의 그림은 평택항과 보완적이면서도 세계적인 물류무역항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되어야 한다.

③세번째 요건 : 자원동원 역량

이러한 역사적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으로는 국비를 중심으로 민자, 외자를 포함한 다양한 자원 조달 방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국내 · 국제 금융 기법을 총망라한 개발 금융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불가피할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Finance:재원)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기동부대)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비와 민자, 외자의 배합비율은 투자수익의 배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치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④네번째 요건 : 전문적 인재

당진에도 항만건설이나 운영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재의 풀이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인재 발굴과 투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진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당진 출신의 인재들이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 전면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주인이 있는 항만 문화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성된 항만을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한 전문적 인재의 풀 또한 필요하다.(후략)

특별기고 | 환황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부쳐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꿈을 현실에 옮기기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 2007년 12월 31일자 2면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총선후보진영 정덕구 · 김낙성 양강구도로 출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당진선거구 총선 후보자로 공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역민의 관심 속에 한 달여간 끌어온 한나라당의 공천 경쟁은 일단락됐다.

통합민주당이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총선 후보진영은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와 자유선진당 김낙성 현 의원의 양강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덕구 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했으나 당진출신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철새 정치인을 공천했다고 강력히 반발해 이틀만인 5일 최고위원회로부터 '심층조사'를 요청받았다가 하루만에 공천을 확정지었다.

정 후보는 지난 6일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자신의 경력을 잘못된 정권에 부역한 것처럼 폄하하고 소신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포기한 자신을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총선후보진영 정덕구 · 김낙성 양강구도로 출발

한나라당은 지난 6일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당진선거구 총선 후보자로 공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지역민의 관심 속에 한 달여간 끌어온 한나라당의 공천 경쟁은 일단락됐다.

통합민주당이 아직까지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어 총선 후보진영은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와 자유선진당 김낙성 前 의원의 양강구도로 급속히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 위원회는 지난 3일 정덕구 후보를 공천자로 내정했으나 당진출신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 철새 정치인을 공천했다고 강력히 반발해 이틀간진 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심층르사'를 요청받았다가 하루만에 공천을 확정지었다.

정 후보는 지난 6일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 경제를 책임지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한 자신의 경력을 잘못된 잣대에 부여한 것처럼 몰아하고 소신을 자키기 위해 국회의원직까지 포기한 자신을 철새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의의 폐해로 인해 십수년 간 당진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37년간 중앙에서 쌓아온 정 · 학계 관료 사회의 인맥을 총동원해 당진이 해양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와 공천을 놓고 경쟁했던 김용기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손창원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간 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천결과 발표에 따른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2008년 3월 10일자 1면

철새로 규정한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의의 폐해로 인해 십수년 간 당진이 성장할 기회를 놓쳤다면서 37년간 중앙에서 쌓아온 정 · 학계 관료 사회의 인맥을 총동원해 당진이 해양시대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 후보와 공천을 놓고 경쟁했던 김용기 후보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며 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손창원 후보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삼간 채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천결과 발표에 따른 여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 9총선 현장을 가다– 당진의 20~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정치인에게 할말 하려면 투표해야죠"

편집자주 /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선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젊어질 20~30대 젊은층은 선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공약이 후보 선택의 기준

당진 조향빌딩 4층 한솔교육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경(29) 씨. 모든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했던 그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소지를 잠시 옮기는 바람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선거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씨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의견을 보이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대선을 거치며 한나라당의 평가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인지 최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덕구 후보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애경 씨는 "동화읽는 어른모임에서 활동한지 5년째인데 고산초등학교에서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당진에 너무 부족한 듯 한데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당진의 교육정

■ 4.9 총선 현장을 가다 – 당진의 20~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정치인에게 할말 하려면 투표해야죠"

●편집자주 | 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선거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젊어질 20~30대 젊은층은 선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좋은 공약이 후보 선택의 기준

당진 조향빌딩 4층 한솔교육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애경(29) 씨. 모든 선거에서 빠짐없이 투표했던 그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소지를 잠시 옮기는 바람에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선거에는 꼭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애경 씨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보다 대통령 선거에 더 많은 관심을 뒀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고 의견을 보이기보다는 주변인들의 평가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대선을 거치며 한나라당의 평가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인지 최근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덕구 후보의 소식을 알고 있었다. 애경 씨는 "동화읽는 어른모임에서 활동한지 5년째인데 고산초등학교에서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당진에 너무 부족한 듯 한데 새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당진의 교육정

△ 2008년 3월 10일자 1면

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위해 당진청소년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진영(26) 씨는 "솔직히 그동안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었다"며 "TV에 나오는 대선후보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치인들에게서 '주민들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더 챙기는 국민의 대표자'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소외된 이들을 더욱 많이 챙겨주고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잘못도 아닌데 소외되어 어렵게 사는 이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씨는 "당진이 발전하고 발전의 혜택은 모두가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좋은 공약을 내거는 후보에게 표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가 화두, 당진경제 살릴 수 있는 후보 필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당진신협에 취직해 이제 6개월째라는 강병설(24) 씨는 "한나라당 공천을 놓고 한동안 뜨거웠는데 최근 정덕구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치에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았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는 지금은 더 큰 관심을 둬야겠다"고 말했다.

"저는 외근을 나가 시내 곳곳을 돌고 있는데 만나는 가게 사장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다른 가게의 사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너무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다른 집도 이렇게 어려운지 궁금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경제의 어려움이 피부에 와 닿죠."

병설 씨는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묻자 "후보를 선택하고 싶어도 후보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의 창구가 없어 답답하다"며 "TV에도 중앙일간지 어디를 봐도 당진의 후보에 대해 알려주는 곳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진시대'와 같은 지역언론이 꼭 필요한 것 같다"며 오히려 지역신문의 활발한 역할을 부탁하기도 했다.(후략)

정덕구 후보 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 항의

정덕구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이 지난 5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덕구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채택하고 중앙당을 방문해 항의했다.

정덕구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원 모임의

강선철 고문단 대표가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밝히고 있다.

정덕구 후보 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 공식 항의

정덕구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원들이 지난 5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정덕구 후보가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인명진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채택하고 중앙당을 방문해 항의했다.

정덕구 후보를 지지하는 한나라당 당원 모임의 강선철 고문단 대표와 김영수 자문위원회 대표, 장동오 협의회장 대표 등 10여명의 당원들은 당원들의 서명을 받은 항의서한을 지난 5일 중앙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의 올해성 비난과 이를 침소봉대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덕구 후보는 그동안의 오랜 공직 경험과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미래의 국회의원으로서 새롭게 용비하는 당진에 가장 적합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덕구 후보는 여론조사의 등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천자로 확정된 것이며 인명진 위원장이 지역의 특정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다 그가 낙마를 하자 그와 같은 발언으로 공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퍼진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덕구 후보는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친 공직자였을 뿐 정치인은 결코 아니었다"며 정 후보에 대한 '철새 정치인' 논란을 대해 부인했다.

△ 2008년 3월 10일자 11면

강선철 고문단 대표와 김영수 자문위원회 대표, 장동오 협의회장 대표 등 10여 명의 당원들은 당원들의 서명을 받은 항의서한을 지난 5일 중앙당에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문에서 "최근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된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인명진 당윤리위원장의 음해성 비난과 이를 침소봉대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며 "정덕구 후보는 그동안의 오랜 공직경험과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미래의 국회의원으로서 새롭게 웅비하는 당진에 가장 믿음직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덕구 후보는 여론조사 등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아 공천자로 확정된 것이며 인명진 위원장이 지역의 특정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원하다 그가 낙마를 하자 그와 같은 발언으로 공심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 지역 정가에 파다하게 퍼진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덕구 후보는 재경부 차관, 산업자원부 장관을 거친 공직자였을 뿐 정치인은 결코 아니었다"며 정 후보에 대한 '철새 정치인' 논란에 대해 부인했다.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자유선진당, 김 의원 등 1차 공천내정자 15명 확정 발표

자유선진당은 지난 12일 4 · 9총선에 출마할 1차 공천 내정자를 확정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예산 · 홍성에, 심대평 대표를 공주 · 연기로 공천을 확정하는 등 15명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 발표했다.

당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낙성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자유선진당은 또 대전 중구에 권선택, 보령 · 서천에 류근찬, 천안을에 박상돈 의원 등 현역의원 5명도 현 지역구에 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몰린 대전, 충남권 3~4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 오는 17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자유선진당, 김 의원 등 1차 공천내정자 15명 확정 발표

자유선진당은 지난 12일 4·9 총선에 출마할 1차 공천 내정자를 확정 발표했다.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를 예산·홍성에, 심대평 대표를 공주·연기로 공천을 확정하는 등 15명에 대한 공천자를 확정 발표했다.

당진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낙성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자유선진당은 또 대전 중구에 권선택, 보령·서천에 류근찬, 천안을에 박상돈의원 등 현역의원 5명도 현 지역구에 공천했다.

자유선진당은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몰린 대전, 충남권 3~4군데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종합, 오는 17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낙성 국회의원

△ 2008년 3월 17일자 4면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26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혐의 인정

"송악면 관내 전직 이장 등 22명에 음식제공" 혐의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방웅환)는 지난 3월 26일 오전 자유선진당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인 편종범 씨를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편씨는 선거구민인 전직 이장 25명에게 직접 전화로 통화, 3월18일 12시경 송악면 소재 ○○식당으로 모이게 한 뒤 이날 참석한 22명에게 22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김낙성 후보를 참석하게 하여 인사를 하도록 한 혐의다.

당진군선관위는 문제가 된 모임이 있고 이틀 뒤인 20일,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

전직 이장들을 통해 이날 모임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도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도 선관위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도 특별단속반을 파견,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편씨가 김 후보를 이 자리에 오도록 했는지 여부와 선거운동을 했는지의 여부 등은 아직 밝히지 못했으나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일의 당사자가 현직 선거사무장이라는 사실과 후보자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행위임을 짐작할 만한 충분한 정황적 근거가 된다고 판단,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후략)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26일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혐의 인정

"송악면 관내 전직 이장 등 22명에 음식제공" 혐의

△ 2008년 3월 31일자 1면

"김 후보 참석은 우연이었다"

(전략)

"면장재직시 이장단 종종 만나온 사이"

편종범 사무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조치된 지난 26일 밤 9시경,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모임이 의례적인 개인모임이었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김낙성 후보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도 우연일 뿐 김 후보는 잠깐 앉았다가 바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평소처럼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다소 무거운 말투로 편 사무장은 이날 심경에 대해 '그냥 그렇다'고 말했다가 '착잡하신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편종범 사무장과 일문일답

□ 3월26일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는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가?

-선관위 고발내용은 알고 있다.

□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렇다.

□ 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선관위 조사에서도 진술했듯이 송악면장 재직 당시 같이 일하던 이장님들과는 퇴직하고 나서도 종종 만나 소주 한잔 하는 모임을 더러 가졌었다. 정식모임이라기보다는 생일이나 서로에게 일이 있을 때 주거니 받거니 식사를 해왔다. 이번 일도 그런 가운데 하나였다.(중략)

□ 김낙성 후보가 자리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김 후보는) 예비후보로서 모임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다니는 중이었다. 다른 곳을 돌고 옆에 있는 식당도 먼저 들르고 왔다. 식사가 다 끝난 뒤 (참가자) 절반 정도가 남았을 때 들어와 5분쯤 앉아서 옆사람이 FTA얘기를 하는 중이라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나갔다. (모임에 동석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 선관위는 서로 연락이 닿아서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 사실이 아니라면 선관위가 무고한 사실을 고발한 것인가?

-(선관위 주장이) 내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지금 심경은?

-그냥… 그렇다.

□ 착잡하신가?

-그렇다

□하고 싶은 말씀은?

-가까운 분들께 걱정을 끼쳐 여러모로 죄송스럽다.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선관위는 이번 김낙성후보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4조를 적용해 고발했다. 관련조항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청도군사건으로 사회적인 관심사가 된 바 있는 쌍방처벌원칙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혐의가 주어지는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항간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본사 자문변호사인 박기억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혐의 입증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또한 선거사무장 등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을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단, 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면장으로 있던 지역의 전직 이장 22명을 불러 22만 4천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것은,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선거사무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음식을 대접한 시점이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선거사무장이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대접한 것으로 의혹을 살 여지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05. 8. 19.선고, 2005도2245판결등)고 판시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혐의

"김 후보 참석은 우연이었다"

"면장재직시 이장단 종종 만나온 사이"

변종범죄는 누구?

선거법 위반, 관련법 함께보기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 2008년 3월 31일자 2면

기부행위가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사결과 선거사무장이 특정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것이 의례적인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김낙성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은 무효가 된다.(후략)

시정요구 이유

피시정요구인의 2007년 12월 31일자 1, 2면, 2008년 3월 10일자 1, 11면, 2008년 3월 17일자 4면, 2008년 3월 31일자 1, 2면 등의 각종 기사는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에 대한 이력 및 행보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 언급되지 않은 후보인 시정요구인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어 경고문게재토록 할 것을 요구한다.

1. 제18대 총선 출마자 관련 기사에서 정덕구 후보에 대한 기사가 다른 후보들에 대한 기사에 우선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거일전 120일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4월 4일까지 보도된 당진시대의 기사에서 정덕구 한나라당 후보, 김낙성 자유선진당 후보, 임대성 진보신당 후보를 각각 검색한 결과 정 후보는 42건, 김 후보 30건, 임 후보 17건의 기사가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김낙성 후보 이름으로 검색된 기사 중 상당수는 정덕구 후보를 다룬 기사에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 게재된 것이다.

2. 2007년 12월 31일자 1면에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정 후보 측에서 보낸 보도자료를 게재한 것으로 기사의 가치를 볼 때 1면 상단에 게재하는 것은 전형적인 '띄워주기식 보도'다. 같은 출판기념회 기사인 손창원 한나라당 예비후보의 기사는 11면 하단에 작은 분량으로 1회 게재했다. 피시정요구인은 '정덕구 전 장관 출판기념회 열려'라는 제목으로 또 다시 게재하는 등 출판기념회 기사에서 불공정 보도를 했다.

3. 2007년 12월 31일자 2면에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의 특별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가 실렸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기고를 굳이 당진군 지역구 예비후보인 정덕구 후보에게 받은 것도 그렇고 통상 기고가 게재되는 15면 '여론광장'에 싣지 않고 2면에, 그것도 한 면 전체를 할애해서 싣는 것은 전형적인 편파보도다. 통상적인 15면 '여론광장'의 기고나 칼럼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4. 정덕구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당진이 고향이 아니다", "산자부 장관 재직시 고향사람들을 문전박대했다"라는 소문이 돌았었다. 또한 한나라당 공천시 인명진 윤리위원장으로부터 '철새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실기사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해명하는 기사만을 게재했다.

5. 2008년 3월 10일자 1면 우측 상단에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3월 17일자 4면 하단의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기사, 아예 별도의 꼭지로 뽑지 않고 3월 24일자 '각 당 공천 마무리, 당진선거구 표정'의 기사에 뭉뚱그려진 임성대 후보의 공천관련 기사와 비교할 때 분량이나 지면배치가 편파적이다.

6. 2008년 3월 10일자 1면 톱기사로 게재한 '4.9 총선현장을 가다-당진의 20~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목의 기사는 20~30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생각을 다뤘는데 다른 후보

에 대한 언급 없이 유독 한나라당 정덕구 후보의 이름만 두 차례 언급하고 있다.

7. 2008년 3월 31일자 1, 2면에 '김낙성 후보의 선거사무장 고발' 관련 기사가 게재됐는데 2면에서 해당 선거사무장에 대한 자세한 인터뷰와 함께 하단에 '선거법 위반시 3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 무효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한 면 전체를 할애해 다루고 있다. 이는 마치 김낙성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도 당선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사이다.

5. 권 고

사건번호	2008시심7	결정유형 / 권 고
시정요구인	김 재 천	
피시정요구인	동아일보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 재 호	
시정요구대상기사	- 『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사』 (2008년 3월 24일자 A1면) - 『(경북-경남) 무소속 이인기 10.4%P차 1위 … 최구식 오차범위내 선두』 (2008년 3월 24일자 A6면)	
주 문	피시정요구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008. 3. 24.자 A1면 및 A6면의 여론조사 관련보도에 대해 「권고」 조치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이 동아일보 2008. 3. 24.자 A1면 「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진주 갑선거구의 경우 후보 지지도가 '최진덕 34.4%, 최구식 32.2%' 라고 보도했고, 동 신문 동 일자 A6면 「총선 D-16, 관심지역 15곳 여론조사」 제하의 기사에서는 '후보 지지도가 최진덕 34.4%, 강일만 4.7%, 최구식 32.2%, 태도유보 28.6%' 라면서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후 조사 하루 전인 21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공천자인 최진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 후보가 34.4%, 최 의원이 32.2%였고, 창조한국당 강일만 후보는 4.7%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 피시정요구인이 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진주 갑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정요구인을 제외하고 진주 을선거구 예비후보인 강일만을 포함하여 진행한 것으로 해당조사는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그 결과에 근거해 보도한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로 인해 시정요구인은 해당선거구에서 심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피시정요구인이 해당보도와 관련하여 사과하고 정정보도하도록 시정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시정요구인이 MBC와 공동으로 실시한 진주 갑선거구 여론조사에 시정요구인을 배제하고 타지역의 후보를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그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예상된다 할 것인바,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시정요구인이 선거에서 시정요구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의도 없이 착오에 의한 단순한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시정요구인이 해당 여론조사의 오류를 인지하자마자 동일자 후속판부터 해당기사를 수정한 점, 2008. 4. 2.자 A6면 「본보 1일자 A8면 여론조사 종합표 정정-추가명단」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점, 2008. 4. 4.자 A10면 및 A12면에 시정요구인을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시정요구인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본보 -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사

(단위 : %)

△ 2008년 3월 24일자 A1면

무소속 이인기 (고령-성주-칠곡) 10.4%P차 1위… 최구식(진주갑) 오차범위내 선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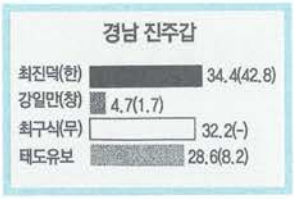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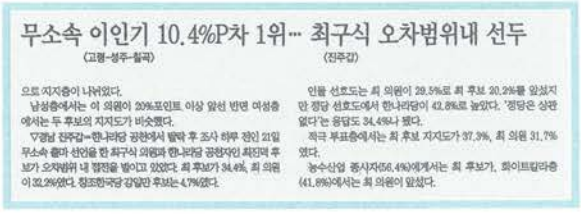
▽경남 진주갑=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후 조사 하루 전인 21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공천자인 최진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 후보가 34.4%, 최 의원이 32.2%였다. 창조한국당 강일만 후보는 4.7%였다.

인물 선호도는 최 의원이 29.5%로 최 후보 20.2%를 앞섰지만 정당 선호도에서 한나라당이 42.8%로 높았다. '정당은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 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최 후보 지지도가 37.3%, 최 의원 31.7%였다.

농수산업 종사자(56.4%)에게서는 최 후보가, 화이트칼라층(41.8%)에서는 최 의원이 앞섰다.




무소속 이인기 10.4%P차 1위… 최구식 오차범위내 선두

(고령-성주-칠곡) (진주갑)

으로 지지층이 나뉘었다.

남성층에서는 이 의원이 20%포인트 이상 앞선 반면 여성층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도가 비슷했다.

▽경남 진주갑=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 후 조사 하루 전인 21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최구식 의원과 한나라당 공천자인 최진덕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었다. 최 후보가 34.4%, 최 의원이 32.2%였다. 창조한국당 강일만 후보는 4.7%였다.

인물 선호도는 최 의원이 29.5%로 최 후보 20.2%를 앞섰지만 정당 선호도에서 한나라당이 42.8%로 높았다. '정당은 상관없다'는 응답도 34.4%나 됐다.

적극 투표층에서는 최 후보 지지도가 37.3%, 최 의원 31.7%였다.

농수산업 종사자(56.4%)에게서는 최 후보가, 화이트칼라층(41.8%)에서는 최 의원이 앞섰다.

△ 2008년 3월 24일자 A6면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은 3월 24일자 1, 6면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선거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 이 여론조사결과는 진주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시정요구인을 제외하고, 진주시(을) 선거구 강일만(창조한국당) 후보를 넣어 실시한 것으로서 다른 보도를 부각시키기 위한 명백한 편파 왜곡보도이다. 특정 선거구의 당선유력 후보자를 제외하고 타 선거구의 후보자를 넣어 여론조사를 한 후 타 후보자를 부각시켜 양자구도로 보도한다면 당선유력 후보자는 아예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투표권을 왜곡되게 할 것이다. 또한, 피시정요구인은 동 일자 A6면의 상단 도표의 결과와 중간의 소제목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무엇보다 공정하게 보도해야 할 선거기사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한 피시정요구인에게 사과문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신청 후 보도문

본보 1일자 A8면 여론조사 종합 표 정정-추가 명단

경기 연천-포천	김영우(한)	박윤국(무)	장명재(민)	MBC-KBS 30일
	30.0	28.8	13.5	
경기 여주-이천	이규택(박)	이범관(한)		KBS 24일
	21.7	16.5		
경남 진주갑	최진덕(한)	최구식(무)	김재천(무)	MBC-KBS 30일
	36.7	27.7	11.0	
울산 중	정갑윤(한)	천병태(노)		울산방송 23일
	43.6	10.2%		

민: 통합민주당, 한: 한나라당, 노: 민주노동당, 박: 친박연대, 무: 무소속, 날짜는 3월.
경남 진주갑 김재천 후보는 22일 본보 2차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었음.

△ 2008년 4월 2일자 A6면

진주갑 (안정론:48.3, 견제론:33.8)

최진덕(한)	30.0	31.3	16.8	43.4
차태선(평)	2.3	1.4	0.9	14.0
김동철(무)	0.4	0.4	0.6	25.0
김재천(무)	9.4	9.0	9.8	
최구식(무)	29.2	31.2	27.8	
테도유보	28.8	26.7	44.1	17.5

△ 2008년 4월 4일자 A10면

최진덕 60대 이상-주부층 최구식 화이트칼라층 우세

경남 진주갑

경남 진주갑에서는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최구식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진덕 후보의 지지율은 30.0%로 조사됐고, 최구식 후보의 지지율은 29.2%였다. 무소속 김재천 후보는 9.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진덕 후보는 60대 이상과 주부층에서, 최구식 후보는 3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도 최진덕, 최구식 후보가 각각 31.3%, 31.2%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 다만 정당 기준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3.4%로 무소속(25.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최진덕 60대 이상-주부층
최구식 화이트칼라층 우세

경남 진주갑

경남 진주갑에서는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와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최구식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진덕 후보의 지지율은 30.0%로 조사됐고, 최구식 후보의 지지율은 29.2%였다. 무소속 김재천 후보는 9.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진덕 후보는 60대 이상과 주부층에서, 최구식 후보는 30대와 화이트칼라층에서 우세를 보였다. 적극적 투표 의사층에서도 최진덕, 최구식 후보가 각각 31.3%, 31.2%로 박빙의 승부를 보였다. 다만 정당 기준 후보 선호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3.4%로 무소속(25.0%)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 2008년 4월 4일자 A12면

6. 기 각

사건번호	2008시심3	결정유형 / 기 각
시정요구인	오 성 섭	
피시정요구인	중앙일보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 서울시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송 필 호	
시정요구대상기사	- 『차령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가능성』 (2008년 2월 20일자 8면) -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 (2008년 3월 4일자 5면)	
주 문	이 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하여 중앙일보 2008. 2. 20.자 8면 및 2008. 3. 4.자 5면에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부국장과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 등이 맞서 싸우고 있다",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위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중이다"고 각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피시정요구인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피시정요구인측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명을 취재원으로 하여 충분히 확인한 내용으로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거나 관련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 위원회가 시정요구인의 주장에 기해 피시정요구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정정보도 청구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의 직접적인 목적이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 후 한나라당이 해당지역의 공천후보자를 이미 확정한 만큼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은 정정보도의 차선책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 위원회의 소관업무 밖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보도내용

"차령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가능성"

한나라 공심위, 충청 지역 2~4배수 압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 19일 충청 지역 후보군을 압

"차령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가능성"

한나라 공심위, 충청 지역 2~4배수 압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가 수도권과 강원을 지나 19일 충청 지역 후보군을 압축했다.

김학원(부여-청양)·홍문표(홍성-예산) 의원과 강창희(대전 중)·심규철(보은-옥천-영동) 전 의원이 단독 신청한 네 곳을 빼곤 나머지 20곳 모두 2~4배수로 줄였다고 한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사무부총장은 "후보군이 추려진 만큼 앞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전략 공천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충청 지역 전체를 아예 전략 지역으로 선포하는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이 고심하는 건 충청의 상황이 썩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충청 자체가 한나라당엔 원래 까다로운 지역이다. 게다가 올해는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났다. 자유선진당을 이끄는 이회창 총재다. 이 총재는 대선 때 이 지역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박빙의 승부를 벌였다. 충남의 득표율은 불과 1%포인트 차이가 났다.

그나마 지난해 대선에서 선전한 천안·아산·당진 등엔 제법 사람들이 모였다.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충남 당진에서, 이훈규 전 인천지검장은 아산에서 뛰고 있다. 천안을에선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경합 중이다.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부국장과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 등이 맞서 싸우고 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입' 역할을 했던 김병일 전 서울시 대변인도 청주 흥덕갑에서 뛴다.(후략)

△ 2008년 2월 20일자 8면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

공천 내정 37명 추가 발표
충남 아산 이진구 의원 대신
이훈규 전 대전지검장 선정

한나라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첫 지역구 의원 탈락자가 나왔다.

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3일 이훈규(충남 아산) 전 대전지검장을 포함, 충청·호남 지역 등에 37명의 공천 후보 내정자를 발표했다. 아산의 이진구(68) 의원은 탈락했다.

내정자 중엔 충남 당진에 나서는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포함됐다. 충북 충주의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처럼 당 지도부가 진작부터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구엔 윤석만 전 대전지검 특수부 검사, 충남 보령-서천엔 김태흠 전 충남부지사, 충북 청주 상당엔 한대수 당협위원장, 제천-단양엔 송광호 전 의원이 나선다. 이로써 한나라당은 충청 24곳 중 13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나머지 지역 가운데 충남 천안을에선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정준석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이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

3일 확정된 한나라 공천 후보 37명

공천 내정 37명 추가 발표

충남 아산 이진구 의원 대신

이훈규 전 대전지검장 선정

△ 2008년 3월 4일자 5면

2파전을 벌인다.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위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 중이다. 청주 흥덕갑에선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할 때 '입' 역할을 했던 김병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윤경식 전 의원과 다투고 있다.(후략)

시정요구이유

피시정요구인이 2008년 2월 20일자 『차령산맥 이남엔 전략 공천 가능성』 제하로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부국장과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 등이 맞서 싸우고 있다", 2008년 3월 4일자 『한나라 지역구 의원 첫 탈락』제하로 "충북의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선 김현일 전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김경회 당협위원장,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경합 중이다"라고 보도했으나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결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시정요구인은 이 기사가 명백한 오보인 것을 확인한 후 피시정요구인에게 전화로 3번에 걸쳐 사실확인 요청 통화를 했다. 그러나, 피시정요구인은 기사 내용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명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으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공천심사위원 신분을 밝혀달라는 시정요구인의 요청에는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시정요구인은 이 기사로 인하여 연일 유권자로부터의 확인전화에 답변하느라 선거관련 모든 업무가 마비되었으며, 공천경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기사는 공천경쟁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시키면서 타 후보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된 기사이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저희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확인한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경쟁의 시급성 때문에 귀하가 소속된 중앙일보사의 신속한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만일 위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귀하가 제보 받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2명의 신분을 떳떳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은 개인의 사익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예비후보 즉, 공익간의 충돌 사안으로 당연히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사)의 신속한 정정보도나, 공천심사위원 2명의 실명을 알리는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여부도 달라질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신속한 정정보도나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나라당 오성섭 예비후보는 끝까지 공명선거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줄입니다.

사건번호	2008시심4	결정유형 / 기 각
시정요구인	오 성 섭	
피시정요구인	중부매일	주식회사 중부매일신문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150-1 대표이사 박 성 규
시정요구대상기사	『한나라 충청권 7곳 공천 확정』 (2008년 3월 4일자 1면)	
주 문	이 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중부매일 2008. 3. 4.자 1면을 통해 한나라당 공천과 관련하여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김현일 전 언론인, 김경회 진천 군수 등 3명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상대결 후보로 압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나라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문의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 후 피시정요구인측에 항의를 하였으나 피시정요구인측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충분히 확인한 내용으로서 오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거나 관련 취재원을 명확히 밝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은 해당보도가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주장하며 그 정정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거나 소명할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 위원회가 시정요구인의 주장에 기해 피시정요구인에게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는 정정보도 청구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의 직접적인 목적이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후보 공천과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시정요구인의 이 건 신청 후 한나라당이 해당지역의 공천후보자를 이미 확정한 만큼 시정요구인의 이건 신청은 그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시정요구인은 정정보도의 차선책으로 해당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 위원회의 소관업무 밖에 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인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이에 심의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한나라 충청권 7곳 공천 확정

청주 상당 한대수 · 제천 단양 송광호 등 타지역 경합 치열…여론조사 실시키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3일 회의를 열어 청주 상당구에 한대수 전 청주시장을 제천 · 단양에 송광호 전 국회의원을 오는 4월 9일 총선에 나갈 당내 공천후보자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또 대전 동구에 윤석만 전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대덕구엔 이창섭 충남대 교

한나라 충청권 7곳 공천 확정

청주 상당 한대수·제천 단양 송광호 등
타지역 경합 치열 - 여론조사 실시키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3일 회의를 열어 청주상당구에 한대수 전 청주시장을, 제천·단양에 송광호 전 국회의원을 오는 4월9일 총선에 나갈 당내 공천후보자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또 대전 동구에 윤석만 전 대전지검특수부 부장검사를, 대덕구엔 이창섭 충남대 교수를, 그리고 충남은 아산에 이준규 전 대검고검장을, 당진은 정덕구 전 산자장관을, 보령·서천은 김태흠 충남부지사 최종 공천자로 결정 했다. <관련기사 2면>

한나라당은 이날 충청권 전 지역에 대해 공천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이들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예비후보가 경합이 치열, 상대 당후보를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를 통한 '가상대결'로 공천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충북의 경우 청주흥덕갑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일 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과 윤경식 전 의원이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후보자로 각각 결정 됐으며, 청주흥덕을은 송태영 이명박 당선인 부대변인과 안재헌 전 여성부차관이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을 대상으로 역시 가상대결 후보로 결정됐다.

청원은 오성균 변호사와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이 통합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후보자로 결정 됐고, 증평·진천·괴산·음성은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김현일 전 언론인, 김경회 진천군수 등 3명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상대결 후보로 압축 됐다. / 특별취재반

수를, 그리고 충남은 아산에 이준규 전 대검고검장을, 당진은 정덕구 전 산자장관을, 보령·서천은 김태흠 충남부지사를 최종 공천자로 결정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충청권 전 지역에 대해 공천자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이들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예비후보가 경합이 치열, 상대 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최종 여론조사를 통한 '가상대결'로 공천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의 경우 청주 흥덕갑은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김병일 전 서울시 경쟁력강화본부장과 윤경식 전 의원이 통합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후보자로 각각 결정됐으며, 청주 흥덕을은 송태영 이명박 당선인 부대변인과 안재헌 전 여성부차관이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을 대상으로 역시 가상대결 후보로 결정됐다.

청원은 오성균 변호사와 서규용 전 농림부 차관이 통합민주당 변재일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대결 후보자로 결정됐고,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은 경대수 전 제주지검장과 김현일 전 언론인, 김경회 진천군수 등 3명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상대로 하는 가상대결 후보로 압축됐다.

시정요구이유

〈369쪽 2008시심3의 시정요구이유 참조〉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369쪽 2008시심3의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참조〉

7. 각 하

사건번호	2008시심8	결정유형 / 각 하
시정요구인	고 경 화	
피시정요구인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 데일리서프라이즈 /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371-19 대표이사 서 영 석	
시정요구대상기사	『4·9총선 민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 구로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 청주서 홍재형 우세』 (2008년 3월 28일자 18:19)	
주 문	이 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데일리서프라이즈 2008. 3. 28.자 보도를 통해 제18대 총선과 관련, 구로을 지역에서 박영선 후보가 고경화 후보를 역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한국갤럽 등 많은 곳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고경화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면서 해당 기사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사실관계를 바로잡도록 정정보도를 구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의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3제3항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시정을 요구한 매체인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신문법상 정기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에 해당보도에 대한 공정성 위반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4·9 총선, 민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 구로 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 청주서 홍재형 우세

박영선 통합민주당 후보가 총선 출마 5일 만에 고경화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구로을 지역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6-27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29.4%의 지지율을 얻은 박 후보가 고 후보(26.3%)를 3.1%포인트 차로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포인트 차이고 부동층도 35%로 비교적 높게 집계됐으나 박 후보의 '역전'은 향후 민주당 총선 가도의 탄력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미가 크다.

서울 노원 병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주춤하고 있다. 노 후보(30.5%)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9.9%)와 0.6%포인트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환 민주당 후보는 12.3%로 집계됐다. 은평 을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44.5%)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29.5%)를 여전히 큰 격차로 따돌리며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돌풍을 서서히 잠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서구에서는 이종현 한나라당 후보(34.0%)가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31.6%)에 역전했고, 경남 통영 고성에서도 이군현 한나라당 후보(33.4%)가 김명주 무소속 후보(26.7%)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40%에 이르는 높은 부동층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 사하 을에서는 최거훈 한나라당 후보(33.4%)가 지역구 현역의원인 조경태 민주당 후보(28.9%)를, 광주 북 갑에서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50.1%)가 무소속 출마한 한화갑 후보(10.0%)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박지원 무소속 후보(25.1%)가 정영식 민주당 후보(24.8%)와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 무안 신안에서는 황호순 민주당 후보가 20.4%로, 이윤석(15.2%) 무소속 후보와 김홍업 후보(13.0%)를 앞서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는 친박계 한선교 무소속 후보가 32.7%로, 23.6%의 윤건영 한나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해당 선거구 주민 500명씩을 대상으로 이틀간 전화조사를 벌였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다.(후략)

4.9 총선, 민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

구로 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 창투서 홍재형 우세

박영선 통합민주당 후보가 총선 출마 5일 만에 고경화 한나라당 후보를 꺾고 구로을 지역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6-27일 YTN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29.4%의 지지율을 얻은 박 후보가 고 후보(26.3%)를 3.1%포인트 차로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포인트 차이고 부동층도 35%로 아직까지 높게 집계됐으나 박 후보의 '역전'은 범주 민주당 총선 가도의 탄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미가 크다.

서울 노원 병에서는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주춤하고 있다. 노 후보(30.5%)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29.9%)와 0.6%포인트 차이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환 민주당 후보는 12.3%로 집계됐다. 은평 을에서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44.5%)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29.5%)를 여전히 큰 격차로 따돌리며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경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친박연대 돌풍을 서서히 잠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서구에서는 이종현 한나라당 후보(34.0%)가 친박연대 홍사덕 후보(31.6%)에 역전했고, 경남 통영 고성에서도 이군현 한나라당 후보(33.4%)가 김명주 무소속 후보(26.7%)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30-40%에 이르는 높은 부동층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 선거구(구로을)관리서치의 [illegible]

부산 사하 을에서는 최거훈 한나라당 후보(33.4%)가 지역구 현역의원인 조경태 민주당 후보(28.9%)를, 광주 북 갑에서는 통합민주당 강기정 후보(50.1%)가 무소속 출마한 한화갑 후보(10.0%)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목포에서는 박지원 무소속 후보(25.1%)가 정영식 민주당 후보(24.8%)와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전남 무안 신안에서는 황호순 민주당 후보가 20.4%로, 이윤석(15.2%) 무소속 후보와 김홍업 후보(13.0%)를 앞서고 있다. 경기도 용인 수지에서는 친박계 한선교 무소속 후보가 32.7%로, 23.6%의 윤건영 한나라당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해당 선거구 주민 500명 씩을 대상으로 이틀간 전화조사를 벌였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플러스마이너스 4.4%포인트다.

한편 민주당의 선전은 충청북도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YTN과 청주방송 C채가 공동 실시한 충북 지역 5곳의 여론조사(선거구 주민 500명씩 대상 전화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4.4% 포인트) 결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홍재형 민주당 후보가 40.3%의 지지율을 얻어 한대수 한나라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흥덕갑에서 민주당 오제세 후보가 한나라당 경권식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으며 충북통에서 역시 노영민 민주당 후보가 송대영 한나라당 후보에 7%포인트 가량 앞서고 있다.

충주시 제천시 민주당 후보는 윤진식 한나라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고 청원군에서는 민주당 변재일 후보가 한나라당 오성규 후보를 7.8%포인트의 우세를 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평, 진천, 괴산, 음성에서는 한나라당 경쟁력 후보와 통합민주당 김종률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 제천 단양 출마후 후보가 자유선진당 심우택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은, 옥천, 영동의 4곳에 한나라당 후보도 오차범위 안에서 이광희 자유선진당 후보를 앞도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제18대 총선 구로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로 인해 공명선거와 득표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

피시정요구인의 보도는 동일한 시기에 발표된,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선거판세를 확정 보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성이 짙은 편향적 보도라고 판단된다.

피시정요구인은 기사 부제목과 기사 첫머리에 '구로을 박영선 고경화에 역전'이라고 표현하였고 '박영선 통합민주당 후보가 총선 출마 5일 만에 고경화 한나라당 후보를 제치고 구로을 지역 지지율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한국리

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29.4%의 지지율을 얻은 박 후보가 고 후보(26.3%)를 3.1% 포인트 차로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기사의 근거가 된 'YTN 여론조사'의 발표일과 동일한 28일 오전에 발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 결과에는 '박영선 후보가 고경화 후보를 앞섰다'는 YTN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고경화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7.3%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기사는 동일한 날짜에 조사되고 발표된 두 여론조사 결과를 공정하게 함께 언급하지 않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선거판세를 확정 보도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의 득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편파적 보도이므로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지난 2008년 3월 28일자 『4 · 9 총선, 민주당 상승세 심상치 않네』(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7575) 제하의 기사에서 18대 총선 구로을에서 박영선 후보가 고경화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다른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는 고경화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으며 해당 기사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사건번호	2008시심11	결정유형 / 각 하
시정요구인	한 경 남	
피시정요구인	데일리서프라이즈 주식회사 브레이크뉴스 /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1-7 대표이사 문 일 석	
시정요구대상기사	『박근혜의 저주 ⇒ 親李후보 3인방 운명은』 (2008년 4월 4일자 17:31)	
주 문	이 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시정요구인은 피시정요구인이 운영하는 브레이크뉴스 2008. 4. 4.자 보도를 통해 제18대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 전여옥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해 온 박사모는 서울 영등포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18대 영등포 갑선거구 친박연대 국회의원 후보인 시정요구인은, 박사모는 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면서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구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조의2제6항 및 제8조의3제6항에 의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8조의3제3항에 의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시정요구인이 시정을 요구한 매체인 브레이크뉴스는 신문법상 정기간행물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해당보도에 대한 공정성 위반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당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내용

박근혜의 저주 ⇒ 親李후보 3인방 운명은?

박사모가 심판하겠다는 '친이' 3인방…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박사모, 낙선운동 전개…한나라 "정치적 후진행위" 맹비난

4.9 총선이 종료휘슬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의 저주'가 총선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인 '박사모'가 심판하겠다고 나선 3인방의 생환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그 3인방들이 '박근혜의 저주'의 희생양이 될지 보기 좋게 비웃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으로 회원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는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나라당 후보를 겨냥한 낙선 운동이 총선 막판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박사모가 "하늘을 대신해 심판하겠다"고 지목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3인방의 총선 당락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중략)

이재오는 성공했다?

박사모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을 두고 '친박 죽이기'의 배후라고 주장하며 낙선에 발벗고 나섰다. 이재오 후보는 '3인방' 중 총선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저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근혜의 저주 →靴亭후보 3인방 운명은?

이미 공천갈등 과정에서 '내우외환'에 시달려온 이 후보가 실제 총선결과에서 낙선으로 이어질 경우 이는 단순히 이 후보 개인의 타격이 아니라 '친이'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오 후보가 은평을을 내주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당내에서도 극심한 권력투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중략)

이방호가 되면 나라 결딴…차라리 강기갑?

공천과정에서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방호 사무총장도 박사모의 심판론 대상이 되고 있다.

경남 사천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이방호 후보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와 한때 30%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3%까지 좁혀지는 등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현재는 10%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일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후보가 5% 포인트 차까지 추격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이틀 후 지난 3일, 발표된 MBC-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13% 포인트로 격차를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방호 후보 측은 당선을 자신하고 있지만, 강기갑 후보 역시 "이미 대세는 내게로 넘어오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박사모까지 노골적으로 강기갑 후보를 밀고 나서며 막판 변수로 작용될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로 박사모는 지난 2일, 경남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공천

파동의 책임자인 이방호 사무총장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대적인 낙선 운동에 돌입하겠다"며 "강기갑 민주노동당 후보 한 사람이 당선된다 해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이방호가 당선되면 나라가 결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중략)

전여옥 후보도 배신자로 낙인…한나라 "정치적 후진행위"…야권만 어부지리?

박사모는 은평을과 경남 사천을 비롯해 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영등포갑을 '특별 관심지역구'로 선정해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선언했다.

박사모 측은 지난해 경선 때 박 전 대표 쪽에서 이명박 대통령 지지로 돌아선 전여옥 의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상대 후보를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인들에게 낙선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지역에 출마한 친박연대 한경남 후보를 밀면서 보수표가 양분되는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방호 후보를 잡고, 박근혜 전 대표를 배신한 전여옥 후보도 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부터 전 후보 낙선운동을 해 온 박사모는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박사모는 이들 3인방의 지역 외에도 정두언(서대문을), 박형준(부산 수영) 등을 낙천운동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시도별로 1~2곳을 선정해 '친박연대' '무소속 연대' '자유선진당'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후략)

시정요구이유

브레이크뉴스 2008년 4월 4일자 17:31 『박근혜 의저주=>친이후보 3인방 운명은?』 제하의 보도기사 중 '또한 지난 달부터 전 후보 낙선운동을 해 온 박사모는 지난 주말 서울 영등포에서 집회를 갖고 민주당 김영주 후보의 지지를 공식선언하기도 했다'라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즉각적인 정정보도와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청하고 향후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하여 2008년 4월 6일 17:00까지 정정보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

8. 취 하

사건번호	2008시심6	처리결과 / 취 하
시정요구인	김 동 철	
피시정요구인	광산저널 (주)어등문화 / 광주 광산구 장덕동 992-15 대표이사 조 영 문	
시정요구대상기사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2008년 3월 21일자 2면)	

보도내용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조영문 / 대표이사 · 발행인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외치며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갑, 을로 나뉘면서 갑 선거구는 김동철 후보가 을 선거구는 이용섭 후보가 각각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다.

우선 2배수에서 최종 탈락하고도 공천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민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갑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은 김동철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얼굴 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다.

가끔 지인들 중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면 한 끼 식사비가 5천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며 참석 자체를 거절할 정도로 선거법을 아주 잘 지키는(?)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청렴성이 지역구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광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상당수가 17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죽 지역구에 대한 무관심이 지나쳤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차기에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전망 아닌 전망까지 나왔을까.

과거 虎父 밑에 犬子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청렴한데 측근은 청렴하지 않아 2005년 취업 미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기다가 사무국장과 수행비서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손학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손학규 계보로 분류돼 있는 김동철 후보의 공천은 공천심사 시작부터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후보를 보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대/표/칼/럼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조 영 문
대표이사 · 발행인

통합민주당은 공천혁명을 외치며 대폭적인 물갈이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 선거구가 갑, 을로 나뉘면서 갑 선거구는 김동철 후보가 을 선거구는 이 용섭 후보가 각각 민주당 공천장을 받았다.

우선 2배수에서 최종 탈락하고도 공천결과를 깨끗하게 승복한 것으로 알려진 심재민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갑 선거구에서 공천을 받은 김동철 후보는 17대국회의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얼굴 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다.

가끔 지인들 중 식사나 한번 하자고 하면 한 끼 식사비가 5천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며 참석 자체를 거절할 정도로 선거법을 아주 잘 지키는(?) 후보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청렴성이 지역구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실제 광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상당수가 17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잘 모를 정도로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죽 지역구에 대한 무관심이 지나쳤으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차기에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하지 않겠냐"는 전망 아닌 전망까지 나왔을까.

과거 虎父 밑에 犬子가 없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은 청렴한데 측근은 청렴하지 않아 2005년 취업 미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 챙기다가 사무국장과 수행비서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손학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손학규 계보로 분류돼 있는 김동철 후보의 공천은 공천심사 시작부터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후보를 보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모름지기 국회에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대표기관이다.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후보가 그리고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후보가 국회로 진출한다면 과연 지역사회의 발전은 누구에게 맡기고 기대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민주당의 굴절된 공천이 특히 무소속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지켜 볼일이다.

동철 후보의 공천은 공천심사 시작부터 지역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후보를 보면서 '속빈 강정'이라는 지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란 모름지기 국회에서 지역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대표기관이다.

지역사회에 무관심한 후보가 그리고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잘 모르는 후보가 국회로 진출한다면 과연 지역사회의 발전은 누구에게 맡기고 기대해야 하는지 유권자들은 곰곰히 생각해 볼 일이다.

민주당의 굴절된 공천이 혹시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시정요구이유

시정요구인은 18대 국회의원선거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지역 통합민주당 후보로서, 주간 광산저널 2008년 3월 21일자 2면 『대표칼럼-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청한다.

"지역사회에서 얼굴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다"고 기술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이유로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고, 유권자 상당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물론 이름도 잘 모른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한 끼 식사비가 5천원 이상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며 지인과의 식사 자리를 거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더구나 지인과의 식사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한 것임에도 이러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 할 것이다.

둘째, 피시정요구인은 "유권자 상당수가 지역구 국회의원 얼굴은 물론 이름도 잘 모른다"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역에서 얼굴이나 이름을 알리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왜곡된 인식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시정요구인은 일주일에 2~3차례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고, 그런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언론과 유관기관들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지역 신문과 방송은 물론 전국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지역 내에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통합민주당 공천과정에서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경선에서도 상대 경선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아 공천이 확정되었다.

또한 민주당 공천에 대해 '속빈 강정', '굴절된 공천'이라 비하하면서 시정요구인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을 적시하여 특정 후보(무소속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민주당 공천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호남의 경우 30% 이상을 공천에서 탈락시켰고, 나머지 경합지역에 대해서는 후보를 2배수로 압축하여 여론조사경선 방식으로 공천후보를 확정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공천과정으로 인해 '공천혁명'이라 불릴 만큼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시정요구인이 지난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통령 경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것은 사실이나, 공천심사위원회의 의정활동 평가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계보' 운운하며, 마치 특정인의 도움을 받아 공천된 것인 양 유권자들에게 오인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에 사과문 및 정정보도를 요청한다.

시정요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본지는 2008년 3월 21일 본지 2면에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이라는 제목으

로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 및 김동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통합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후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얼굴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 광주지역의 통합민주당 현역의원 교체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전폭적이라는 상황과, 현역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②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360여 차례 걸쳐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쳤고, 언론과 유관기관,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성된 칼럼이었습니다. ③ 뿐만 아니라 김동철 국회의원은 광산구를 위해 호남고속철도 조기착공,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군용비행장 이전, 광주과학고등학교 첨단 이전, 하남산단 교통혼잡 해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개 사업 포함,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의 일을 추진하여 왔다는 점을 간과하였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던 바, 근거없는 사실로 김동철 국회의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취하 후 보도문

정정보도문

본지는 2008년 3월 21일 본지 2면에 〈민주당 공천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씁쓸함〉이라는 제목으로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 및 김동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칼럼을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민주당의 공천과정이 '속빈강정'에 불과하며, 통합민주당 김동철 국회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삼아 '공천혁명에 전혀 영향을 맞지 않은 후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얼굴없는 국회의원'으로 통하고 있으며, '자신을 선출해 준 유권자들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형이상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① 광주지역의 통합민주당 현역의원 교체율이 절반을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전폭적이라는 상황과, 현역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와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② 또한 김동철 국회의원은 4년간의 의정활동 동안 360여 차례 걸쳐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의정활동을 펼쳤고, 언론과 유관기관, 국회의장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작성된 칼럼이었습니다.

본사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정확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던 바, 김동철 국회의원 및 관련자 여러분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언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할 것을 독자여러분께 다짐드립니다.

정정보도문

△ 2008년 4월 4일자 2면

제3장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

• 취 하

사건번호	2008반심1	처리결과 / 취 하
청 구 인	이 낙 연	
피청구인	호남일보 (주)호남일보사 / 광주 북구 우산동 518-90 대표이사 김 덕 천	
청구대상기사	- 『민주당 호남석권 '발등의 불'』 (2008년 4월 4일자 1면) - 『지역민 정당보다는 인물 선호 뚜렷』 (2008년 4월 7일자 1면)	

보도내용

민주당 호남 석권 '발등의 불'

총선 D-5
20곳 석권에 비상… 당 지도부 '무소속 흔들기'
함평 · 영광 · 장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속'

4 · 9 총선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면서 광주전남 지역 4, 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통합민주당이 다급해졌다.

광주전남지역 20곳의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잡았던 민주당이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되자 지원유세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일부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광주 남구, 광산구 갑, 전남 목포, 무안 · 신안 등지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며 난공불락의 민주당 텃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또 그 동안 민주당 무풍지대였던 함평 · 영광 · 장성 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인 이낙연 후보가 함평과 장성 지역민들에게 호응도를 얻지 못한 반면 무소속 이상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새로운 안개권역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격전지로 부상한 광주 북구 갑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호남 석권 '발등의 불'

총선 D-5

20곳 석권에 비상… 당 지도부 '무소속 흔들기'

함평·영광·장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속'

4·9 총선이 종반전을 향해 치달으면서 광주전남 지역 4·5곳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통합민주당이 다급해졌다.

광주전남지역 20곳의 선거구 석권을 목표로 잡았던 민주당이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후보들에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되자 지원유세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일부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결과 광주 남구, 광산구 갑, 전남 목포, 무안·신안 등지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이 앞선 것으로 나타나며 난공불락의 민주당 텃밭을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또 그 동안 민주당 무풍지대였던 함평·영광·장성 지역의 경우 현역 의원인 이낙연 후보가 함평과 장성 지역민들에게 호응도를 얻지 못한 반면 무소속 이상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 새로운 안개권역으로 등장했다.

게다가 격전지로 부상한 광주 북구 갑도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몸배때지면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담초 광주전남 20곳 선거구 석권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전국 100석 이상을 노렸던민주당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따라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선거구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함에 비롯이어 나서고 있다.

지난 2일 통합민주당 광주지역 공동선거대책위원회는 광주 남구 광주공원 앞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갖고 '4·9 총선'에서 광주 시민들의 결대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발족식에 지원유세차 방문한 박상천 민주당 공동대표는 한나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40~50석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면 한국의 정치구도는 한나라당의 독주로 굳어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빛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무소속 후보들을 겨냥 "어제 당 최고위원회는 당에 몸담고 있다가 경선을 치른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지역 8명의 후보들도 연일 무소속 후보 때리기에 동참하며 내부 집안 단속에 들어갔다.

민주당 광주시 선거대책위원회는 3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 당원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신속히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선대위는 또 "탈당 후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복당을 일절 불허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에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도 "일부 지역에서 탈당후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무소속 후보를 돕고자 탈당한 당원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2008년 4월 4일자 1면

팽배해지면서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광주전남 20곳 선거구 석권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전국 100석 이상을 노렸던 민주당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부 선거구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며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후략)

4 · 9총선 함평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지역민 정당보다는 인물 선호 뚜렷

4 · 9총선을 불과 이틀 남기고 그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겨져 적수가 없다고 장담하던 일부 지역에서 대이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판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장 치열 경합 지역으로 떠오른 곳은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구다.

그 동안 이낙연 후보의 민주당 공천장에 힘입어 안전지역으로 계산됐던 이 지역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상선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대이변 가능성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5 · 31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고 무소속 군수 후보가 모두 승리한 지역. 이 때문에 민주당 대 무소속 후보간의 가장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최대의 관심거리다.

4 · 9총선 함평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지역민 정당보다는 인물 선호 뚜렷

총선 D-2

'일 잘할 사람 뽑자' 일꾼론 대세

이낙연 후보, 강력한 야당론 호소

이상선 후보, 지역발전 적임자 대변

△ 2008년 4월 7일자 1면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현역 의원이란 프리미엄에다 민주당 공천장이라는 막강한 뒷심을 배경으로 후보자 등록 때까지도 무난한 국회 입성이 예상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무소속 군 출신인 이상선 후보의 지지도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민주당 위험지구로 등장했다.

영광 출신인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출신 도의원과 군의원들을 대거 앞세워 유세몰이를 하고 있으나 실제 민심은 이런 흐름과 달리 냉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또 강한 야당을 위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누가 되더라도 호남은 호남당'이라는 의식이다.

한마디로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면 될 것 아니냐는 표심들이다.

실제로 6일 영광읍장 유세장에서 만난 유권자 조 모 씨(62)는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된 핵 방폐장 거부는 영광 발전에 엄청난 실수였다.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매년 수천억씩 지원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함평 출신인 이상선 후보는 20년 동안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함평군민들의 애정에 호소, 전폭적인 지지를 예상하고 있다.

장성에서도 상무대를 중심으로 한 군인들의 표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무소속 출신 군수 진영의 표심들에 호소, 거대한 무소속 연대 기류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영광에서는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군의장 차량을 동원해 함평 지역까지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는 사진 장면을 영광군 공무원 노조 홈피에 올려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공무원인 장 모 씨(42)는 "도 · 군 의원들이 국

회의원 선거전에 뛰어들어 유세장에 도열하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지역을 위해 누가 되든지 성실하게 일해줄 사람을 원할 뿐"이라고 지역 정서를 대변했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 4월 4일자 1면『함평 영광 장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속'』과 4월 7일자 1면『4 · 9총선 함평영광장성, 대이변지 급부상』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한다.

위 기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편파보도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중앙언론사의 판세분석에서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구는 청구인의 절대우세 또는 우세가 예상된다고 보도됐음에도 '안개속', '돌풍', '대이변지' 등의 표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호도하고 청구인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구인이 원하는 보도문

1. 제목 :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보도 관련
2.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4월 4일자 1면에 "함평 · 영광 · 장성 무소속 돌풍지대 등장 '안개속' ", 4월 7일자 1면에 "4.9총선 함평 · 영광 · 장성, 대이변지 급부상"이라는 제목으로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구에서 무소속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거대한 무소속 연대기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이낙연 후보측은 "해당 기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부각시킨 편파보도가 아닐 수 없다"며 "실제로 중앙언론사(문화일보 4월 3일자 6면, 조선일보 4월 5일자 종합 5면 등)의 판세분석에서 함평 · 영광 · 장성 선거구는 이낙연 후보의 절대우세 또는 우세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음에도 '안개속', '돌풍', '대이변지' 등의 표현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보도하는 것은 지역민심을 크게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